

도시연구

Korean Journal of
Urban Studies

2022 통권 제21호

권두언

국제 이주의 확대와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는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한국 사회도 이미 빠르게 증가하는 국제 이주와 함께 다문화사회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다양한 민족과 인종이 함께 살아가는 세계화 현상은 민족과 인종 사이의 경계는 물론 공간 차원의 국가적 경계도 조금씩 허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인 이주민을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주민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인정하지 못하는 사회는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이주민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사회적 관심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이주민과 외국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이주민 정책이 필요하며, 관련 연구도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주민 정책의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체계적 연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한국 사회의 변화 방향을 이해하고 준비한다는 점에서 이번 호의 기획논단은 ‘이주민의 도시’로 구성하여, 두 편의 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첫 번째 기획논문은 국제 이주와 관련된 연구로, 독특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단계 판매업에 참여하는 중국계 이주자를 중심으로 ‘국제 이주자 경제 활동의 관계적 스케일’을 분석하는 논문입니다. 특정 현상이나 활동이 일어나는 장소에 대한 위계적 공간 분류 범주로 이해되는 ‘스케일’이라는 개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주자의 국제 이주에 의한 수직적인 스케일 확장, 정착지에서 다양한 사회·경제적 활동에 참여

하는 수평적 스케일 확장, 그리고 기업의 글로벌 성장 전략에 기반한 수직적 스케일 확장에 대하여 관계적 스케일 접근을 통해 그 교차 지점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과 이 과정이 갖는 의미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재를 다루고 있다는 점과 연구 진행 구조가 체계적이라는 점에서 흥미는 물론 의의를 찾기에 충분한 연구입니다. 특히, 중국계 이주자의 스케일을 ‘다단계 판매업체’와의 관계에서 해석한다는 점이 매우 색다른 접근입니다.

두 번째 기획논문에서는 상호문화실천과 임파워먼트를 중심으로 ‘결혼이주여성의 공동체 활동 경험’을 연구하였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결혼이주자 중 결혼이주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82%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이주여성은 단기 이주자인 노동자나 유학생과 다르게 가족 형성과 함께 영구적인 이주자라는 점에서 복합적인 사회성을 보여주고 있어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만들고 크고 작은 공동체를 형성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있으며, 결혼이주여성 공동체는 이주국에서의 적응과 소통, 사회적 연대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이주여성 공동체가 많아지고 있고, 활동도 활발해진 만큼 관련 연구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결혼이주여성 공동체 관련 선행연구들이 주로 특정 공동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것과 달리 여러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상호문화실천과 공동체 활동 과정에서 이주여성들이 경험하는 임파워먼트에 대한 탐색적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호의 일반논문은 총 7편이 실렸습니다. 직주락(職住樂) 센터 이론에 기반한 「마포·용산·성동(마용성) 현상의 이해」, 「가로주택정비사업

의 시행이 지역민의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인천시민대학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교육 요구 분석」, 「서울 청년의 행복격차」, 「시민들의 정부 대응성 인식이 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 팬데믹 기간 인천시 가계부채 동향의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 그리고 「인천지역 청년층의 일자리 특성 및 고용의 질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시의성은 물론 관심을 끄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도시연구』가 등재지로 선정된 이후 투고논문의 양적 증가는 물론 질적 수준의 향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론의 깊이와 정책의 실용성을 아우르면서 도시정책연구의 학술적 체계화를 선도하는 유수의 학술지로 성장시키겠다는 초심을 다시 한번 다지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연구지에 투고해 주시는 많은 연구자와 지속적인 관심을 아끼지 않는 독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독자 여러분의 고견을 충실히 답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6. 30.

편집위원장 이 왕 기

목 차

기획논단

- 국제 이주자 경제 활동의 관계적 스케일:
다단계 판매업에 참여하는 중국계 이주자를 중심으로 박준영 11
- 결혼이주여성의 공동체 활동 경험 연구:
상호문화실천과 임파워먼트를 중심으로 김기화 45

일반논문

- 마포·용산·성동(마용성) 현상의 이해:
직주락 센터의 형성을 중심으로 모종린·강예나 93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이 지역민의 주거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천호동 320과 천호동 321-18을 중심으로 고은정·박지혜 141
- 인천시민대학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교육 요구 분석
..... 김명랑·윤초롱·김월용·김종윤 179
- 서울 청년의 행복격차:
잠재프로파일분석의 적용 이민주·박민진 227
- 시민들의 정부 대응성 인식이 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
인천광역시 도시환경과 환경 문제를 중심으로 왕혜진 273

• 코로나 팬데믹 기간 인천시 가계부채 동향의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 서봉만·최태림·김다애	315
• 인천지역 청년층의 일자리 특성 및 고용의 질 분석 황광훈	357

서 평

• 평화의 관점으로 바라본 초국적 이주-난민 정진현	393
『이주와 정치: 다문화사회의 이민정치와 이주평화학의 모색』, 한준성 지음, 2022, 서울: 당대.	

『도시연구』 휘보

• 『도시연구』 발간연혁.....	405
• 『도시연구』 편집위원회 활동	408
• 『도시연구』 학술행사 보고	409

『도시연구』 규정

• 『도시연구』 편집 및 발간 규정	413
• 『도시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424
• 『도시연구』 논문심사 규정	427
• 『도시연구』 연구윤리 규정	434

『도시연구』 편집위원회

• 『도시연구』 편집위원회	446

기획논단

| 국제 이주자 경제 활동의 관계적 스케일:

다단계 판매업에 참여하는 중국계 이주자를 중심으로
박준영

| 결혼이주여성의 공동체 활동 경험 연구:

상호문화실천과 임파워먼트를 중심으로
김기화

국제 이주자 경제 활동의 관계적 스케일:

다단계 판매업에 참여하는 중국계 이주자를 중심으로

박준영*

박
준
영

I. 서론

II. 관계적 스케일 접근과 스케일 확장

III. 사례 소개

1. 중국계 이주자
2. 다단계 판매업

IV. 스케일 확장의 교차와 불안정성

1. 글로벌 시장 진출과 안정적인 경제력
2. 윤리와 불안정성

V. 결론

I. 서론

국제 이주의 규모가 확대되며 관련 현상은 복잡해지고 있다. 사람과 자본은 국경을 넘나들며 다양한 층위에서 상호작용한다. 이 상호작용은 사람과 자본이 이전보다 더 멀리,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통신 기술을 발달로 인해 촉진되고 있다. 국제 이주의 초국적 상황에서 이주

*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박사과정(E-mail: disciple0411@snu.ac.kr)

<http://doi.org/10.34165/urbanr.2022..21.11>

투고(접수)일 2022.4.20. 심사(수정)일 2022.5.11. 게재확정일 2022.6.20.

자들은 이주 이후 개선된 정치·경제·사회적 상황을 추구한다. 또한 자본주의의 초국적 상황에서 기업은 새로운 글로벌 이익 창출·확대 기회를 모색한다. 이 과정에서 국제 이주자와 기업의 글로벌 스케일은 확장·교차된다. 본 연구는 특정 사례를 통해 스케일 확장·교차 과정을 설명하고 이 과정이 갖는 의미를 드러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국제 이주자와 기업은 각각 중국계 이주자¹⁾와 다단계 판매 업체이다. 중국계 이주자들은 사회·경제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으로 이주하여 다단계 판매업에 판매원으로 참여하고, 다단계 판매 업체는 글로벌 시장 진출 및 확장을 위해 중국계 이주자들을 글로벌 판매원으로 모집한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스케일 확장의 두 행위자는 한국 사회에서 문제적으로 인식된다. 먼저 중국계 이주자는 한국의 이주자 집단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한국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중국계 이주자의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경제 활동이 알려지며 사회적으로 비판받았고, 이는 다양한 미디어 수단을 통해 수행적으로 확산된다. 나아가 중국계 이주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중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도 연관되며 확대된다. 한편 다단계 판매업은 기존 전통적인 판매 방식과 구별되는 판매 방식(구매 의사가 없는 예비 구매자에게 판매자가 먼저 접근)을 실시하는데, 이 과정에서 업체-판매자, 혹은 판매자-구매자 간 갈등이 발생하며 일부는 불법적인 과정이 포함되어있다. 이러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알려지며 다단계 판매업은 사회적 비판을 받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논쟁적인 이주 집단과 기업의 스케일 확장과 교차 과정을 분석하고 이 과정이 갖는 의미를 드러낸다.

1) 본 연구에서는 다단계 판매업에 종사하는 중국계 이주자를 대상으로 분석한다. 이들은 국적, 민족 등의 기준에서 다양한 배경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사회·문화적 자본을 활용하여 다단계 판매업에 참여하는 글로벌 판매원 모두를 일컫는 표현으로 '중국계 이주자'를 사용한다.

스케일은 국제 이주 현상을 설명하는 주요 개념 중 하나이다(Samers 2010; 박배균 2009; 정현주 2008). 특히 최근 스케일은 정적이고 고정된 개념이라기보다 유동적이고 관계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이 증가하고 있다(장세훈 2013; 이상현 외 2014; DeGenova 2015; 박규택 2016). 이에 따라 국제 이주 현상의 관계적 스케일 접근이 요구된다(박배균 2009; 박규택 2016; Samers 2010). 본 연구에서는 국제 이주자와 기업의 글로벌 스케일 확장과 그 교차 과정에 집중한다. 즉, 초국적 상황에서 국제 이주 맥락의 스케일 확장 간 (비)의도적으로 교차하는 다층적인 지점의 관계성을 분석한다.

스케일을 활용한 국제 이주 연구를 살펴보면, 주요 주제는 국제 이주 현상에서 (관계적) 스케일 분석의 필요성을 언급한 연구(박배균 2009; Schiller·Caglar 2009), 구체적인 이주자 및 이주 집단의 스케일적 맥락을 검토한 사례 연구(Tyner 2000; Gu 2021; 정현주 2008; 이현재 2009) 등이 있다. 또한 국제 이주 맥락에서 거주 지역의 집적과 분산의 정도를 기술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드러내는 연구도 존재한다(Jones et al. 2015; Wei 2002; Parsi et al. 2011). 한편 기업 경영에서는 이미 존재하는 기업의 성장 전략을 스케일업(scale-up)으로 표현하고 구조화하여 논의한다(홍대웅·전병훈 2019; 조달호·유인혜 2019). 일반적으로 스케일업은 규모의 확장을 의미하며, 이를 기업에 적용할 경우 글로벌 시장 진출 및 확장 등 기업의 규모 확장을 통한 성장을 의미한다(조달호·유인혜 2019). 이상과 같이 국제 이주자와 기업의 글로벌 스케일 확장은 개별 영역에서 분석되며 국제 이주자와 기업의 글로벌 전략과의 스케일적 상호작용을 사회·문화적으로 검토한 논문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본 연구는 기존에 주로 별도의 영역에서 분석된 두 스케일 확장의 교차를 관계적 스케일 접근으로 분석하고 그 의미를 드러낸다. 따라서 국제 이주자와 기업의 스케일 확장의 관계적 측면을 분석하는 본 연구는 관련 연

구의 영역을 확장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심층 면담과 현지 조사를 주요 조사 방법으로 활용한다. 심층 면담은 다단계 판매 업체에 판매원으로 참여하는 중국계 이주자 3명(아래 중국계 이주자 1~3)과 중국계 이주자 단체(언론사, 종교 단체 등)의 대표자 3명, 총 6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중국계 이주자 단체 대표자는 중국계 이주자 생활 전반과 다단계 판매업과 중국계 이주자 판매원에 대한 이주 사회의 인식을 파악하고 당사자(다단계 업체에 판매원으로 참여하는 중국계 이주자)의 면담 답변 내용을 교차 검증하기 위해 면담 대상으로 포함했다. 심층 면담은 평균 약 1시간 ~ 1시간 30분이 소요됐으며, 피면담자의 선호와 상황에 따라 대면 면담 또는 비대면(전화) 면담이 이루어졌다. 면담의 질문지는 사전에 전달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추가 질문으로 확장하며 면담이 진행됐다. 현지 조사는 다단계 판매 업체의 스케일 확장 전략을 분석하기 위해 다단계 판매 업체가 진행하는 공개 교육, 세미나 등에 참석하여 진행했다. 이와 같은 행사는 약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됐으며, 연구자는 두 업체의 행사에 총 세 차례 참석했다. 연구자가 참석한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행사로 진행됐다. 이상의 방법을 주된 조사 방법으로 하되, 문헌 조사를 부가적으로 실시했다. 문헌조사를 위해 다단계 판매 업체의 홈페이지, 홍보 자료, 관련 선행 연구 및 보고서 등을 참고했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 틀을 제시하기 위해 스케일 개념을 설명한다. 먼저 관계적 스케일 접근을 설명하고 이를 국제 이주자와 기업의 스케일 확장에 적용하는 방식을 제시한다. 이어서 3장에서는 본 연구의 사례인 중국계 이주자와 다단계 판매업에 대해 개괄적으로 소개한다. 4장은 본 연구의 본론으로, 중국계 이주자와 다단계 판매업의 스케일 확장(스케일업)과 스케일 확장의 교차 과정을 설명하고 그 의미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5장은 본 연구의 결론으로, 연구 결과를 요약하

고 이 결과가 갖는 의미를 서술한다.

II. 관계적 스케일 접근과 스케일 확장

본 연구는 국제 이주와 자본주의의 초국적 맥락에서 개인(이주자)과 기업의 스케일 확장과 교차를 관계적 스케일의 관점으로 접근한다. 이번 장은 관계적 스케일 접근을 설명하고 국제 이주와 기업의 글로벌 전략을 분석하는 스케일 확장 개념을 소개한다. 지리학에서 전통적인 의미의 스케일은 상이한 규모의 닫힌 공간들의 수직적으로 중첩된 위계를 의미한다(Cresswell 2012; 장세훈 2013). 스케일은 특정 현상이나 활동이 일어나는 무대(장소)들을 그 넓고 좁음에 따라 구분한 위계적 공간 분류 범주로,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어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여겨진다(장세훈 2013; Smith 2012). 이처럼 위계적으로 닫힌 범주인 스케일에서 사회적 행위자들은 스케일 사이를 옮겨 다닐 뿐 그 범주를 바꿔놓기는 어렵다고 인식된다(장세훈 2013). 이에 따라 스케일은 지리적 분화를 조직하거나 이해하는 데 유용한 개념으로 활용됐다(Smith 2012). 지리학에서는 전통적으로 국가나 초국가 기구, 혹은 공동체(사회)와 같은 대규모 집단의 스케일에 집중했지만, 최근에는 신체나 집과 같은 규모의 스케일도 논의 주제로 다뤄진다(Valentine 2001).

이상으로 설명한 바와 같이 전통적 의미의 지도학적 스케일은 세계(글로벌)/지역(로컬), 초국가/국가, 고정/유동, 국외/국내와 같이 기계적인 이분법을 정당화하며 보편성과 특수성의 위계적 질서를 설명한다(박경환 2012; 박배균 2009; Cresswell 2012). 그러나 전통적 의미의 스케일은 최근 관계적 사고에 의해 도전받는다(박배균 2009; 장세훈 2013; 이상현 외 2014; 박인옥 2020). 스케일에 대한 관계적 사고는 지역들이 위

계적으로 닫혀있기보다 상이한 순간과 맥락의 산물이라는 이해에서 비롯된다(이상헌 외 2014; Valentine 2001). 즉, 관계적 스케일 접근은 스케일에 대해 분리되어 고정된 지리적 실체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가변적이며 유연하고 유동적인 사회적 구성물로 사고할 것을 제안한다(Cresswell 2012; DeGenova 2015; 박규택 2016). 여기서 스케일은 관계의 매개적 장치로 인식되며 위치, 경계, 이동, 관계, 영토 등과 같은 공간의 구성 요소들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박규택 2016). 관계적 스케일 접근은 스케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행위자들의 생각을 파악할 수 있고 스케일을 위계보다는 연결적 흐름과 운동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유익하다(Cresswell 2012). 이 과정에서 행위자들은 다양한 관계를 맺고 경쟁과 대립의 과정을 거치며 스케일은 (재)구성된다(박배균 2009; 장세훈 2013; 이상헌 외 2014). 이처럼 관계적 스케일 접근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상상의 스케일, 다중스케일 분석, 스케일의 정치 등이 제안되고 있다(박배균 2009; 장세훈 2013; 박인옥 2020).

이와 같은 스케일 개념에 대한 논쟁을 통해 스케일이 다소 모호하게 정의되는 논쟁적인 개념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스케일 개념을 적용하는 분석 사례에 따라 사용하는 스케일의 의미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국적 상황에서 개인(국제 이주자)과 기업의 수직·수평적 스케일 확장을 분석한다. 수직적 스케일 확장은 기존의 전통적 스케일 이해에 따라 스케일 간 위계적 질서를 가정하는데, 이를 설명하기 위해 ‘스케일 상승, 업스케일링, 스케일업’ 등의 표현이 사용된다. 그러나 스케일 확장은 각 스케일의 고정불변한 위계적 질서 속에서 수직적 확장만 발생하지 않고 각 층위에서 수평적인 확장도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행위자들은 기존에 공간적 배경으로 존재하는 스케일의 영역을 넘나들거나 자신의 개별적 스케일을 능동적으로 확장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과 기업이라는 두 사회적 행위자의 수직·

수평적 스케일 확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차 지점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관계적 스케일 접근을 활용한다.

먼저 국제 이주자들은 국경을 넘으며 스케일의 확장을 경험한다. 이동 통신 기술의 발전은 인간과 자본의 초국적 이주를 촉진하며 스케일 확장의 기회를 선사한다(Urry 2007; Samers 2010). 기존 스케일 이해에서 로컬, 글로벌의 위계적 구분을 가정했을 때, 이주자의 국제 이주는 수직적 스케일 확장으로, 이주 정착국 또는 정착 지역에서 사회·정치·경제 활동 참여 확대는 수평적 스케일 확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Cresswell 2012). 국제 이주자들은 이주 과정에서 매우 다양한 스케일을 포함하고 그것들을 가로지른다(Samers 2010; 이태정 2019). 국제 이주자들은 동시에 여러 유형의 권리와 권한의 범주를 유연하게 중첩하면서 살아가는 경향을 보인다(Samers 2010; 이태정 2019; 전경숙 2021). 이주 과정에 포함되는 지리적 스케일 내에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의 중첩과 복수성, 그리고 이들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성과 상호의존성은 긴장과 갈등의 원천으로, 이주 현상의 원인이 되고 이주 현상을 이해하는 분석 틀이 되기도 한다(Valentine 2001).

이처럼 이주자가 국경을 넘는 이주 과정에서 개별적이고 집단적인 활동은 다양한 지리적 규모에서 이질적인 개인 및 제도적 행위자의 범위와 복잡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이주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관계적 스케일 접근이 필요하다(박배균 2009; 박경환 2013). 국제 이주와 정착의 과정은 다양한 지리적 스케일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과정들에 대한 종합적인 해석과 보다 정교한 공간 분석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이해·설명될 수 있다(Park 2005; 박배균 2009; Samers 2010). 관계적 스케일 개념은 다양한 (국제) 이주 사례 연구에 적용되고 있다. 관련 연구에서는 국제 이주자의 경제·정치·사회·문화 활동에서 다양한 행위 주체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분석하며 여러 층위와 규모의 스케일을 넘

나들거나 조정하는 역할을 강조한다(정수열 2013; 엄미옥 2021; 김영경·이정향 2014; DeGenova, N. 2015; Gu 2021). 이와 같은 연구에서는 국제 이주 사례가 유연하고 가변적인 관계적 스케일을 통해 분석되며 기원국(지역)과 정착국(지역), 혹은 국내와 국외라는 제한된 이분법적 분석틀을 넘어선다. 이를 통해 이주자 행위성의 의도와 과정, 그리고 결과가 보다 입체적으로 드러난다.

한편 기업은 기업 성장을 위해 스케일의 확장을 추구한다. 일반적으로 기업 규모의 확장은 기업 성장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이해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 성장을 위한 규모 확장 전략 중 글로벌 확장(진출)에 집중한다. 기업 경영에서는 이미 존재하는 기업의 성장(규모 확장) 전략을 스케일업(scale-up)으로 표현하고 구조화하여 논의한다(홍대웅·전병훈 2019; 조달호·유인혜 2019). 스케일업은 일반적으로 규모의 확장을 의미하며, 이를 기업에 적용할 경우 기업의 규모 확장을 통한 성장을 의미한다(조달호·유인혜 2019). 스케일업을 통해 기업은 실질적 고용과 성장을 달성한다(홍대웅·전병훈 2019). 스케일업은 기업 규모의 확대뿐만 아니라 혁신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의미하며, 최근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고성장 기업을 의미하는 용어로도 사용된다(김충현·이재강 2020). 기업의 규모, 성장을 등의 기준으로 스케일업 기업을 평가하기도 하지만 아직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통일된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 스케일업은 규모를 기준으로 위계적인 기업 등급을 구성하고 각 단계에서 보다 상위의 기업, 혹은 상승 전략과 같은 수직적인 스케일 확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업의 성공적인 스케일업 환경 구축에 필요한 구성 요소로는 정책, 시장, 지원, 문화, 금융 등이 있는데, 여기서 글로벌 진출은 '시장' 스케일업 요소에 포함된다(홍대웅·전병훈 2019; 조달호·유인혜 2019).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다단계 판매 업체 또한 글로벌 시장 진출 및 확대를 통한 스케일업을 도모한다.

이상으로 최근 대안적 스케일 이해로 제안되는 관계적 스케일 접근과 초국적 상황에서 개인과 기업의 스케일 확장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다. 초국적 상황에서 국제 이주자와 기업은 다양한 관계(스케일)에서 상호작용한다. 본 연구는 이상으로 설명한 이주자의 수직적(국제 이주), 수평적(정착지에서 다양한 사회·경제적 활동에 참여) 스케일 확장, 그리고 기업의 수직적 스케일 확장(글로벌 성장 전략으로서 스케일업)을 관계적 스케일 접근을 통해 그 교차 지점에서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이 과정이 갖는 의미를 분석한다.

III. 사례 소개

1. 중국계 이주자

중국계 이주자는 한국 사회에서 주요 이주 집단이다. 2019년을 기준으로 한국에서 상주하는 15세 이상의 중국 국적 이주자는 약 63만 명이며, 이는 전체 15세 이상 상주 외국인의 절반 이상인 약 50.6%를 차지한다.²⁾ 중국 국적이 아닌 한국 상주 중국계 이주자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에서 중국계 이주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 증가한다. 아래에서는 본 연구의 대상인 중국계 이주자들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중국계 이주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중국 동포 등)의 현

2) 2019년 말 감염이 시작되어 한국에서는 2020년 1월 첫 확진자가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했으며, 이 확산은 연구 진행 시점(2021년 11월)까지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과 방역을 위해 사람과 물자의 이동, 특히 국외 이동이 제한됐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특수한 상황을 배제한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산 직전의 이주 통계(2019년 5월)를 활용한다. 구체적 수치와 내용은 통계청과 법무부가 2019년 12월 발표한 ‘2019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참고하였다.

황을 소개한다.³⁾

2000년 이후부터 2010년대 후반까지 한국계 중국인의 이주는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이들의 불법 체류 비중은 감소했다. 이러한 흐름은 2007년 발급되기 시작한 방문취업비자(H-2)의 영향을 받았다. 방문취업비자는 기존 재외동포비자(F-4)보다 발급 절차가 간소하고 취·창업 가능 영역이 넓어 한국계 중국인들의 경제적 이주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처럼 한국과의 인적교류 확대는 중국의 연변조선족자치주 입장에서 송금 경제를 기대할 수 있는 기회 요인이면서 인구 유출로 인한 위기 요인이기도 하다(최우길 2005). 한국에 정착한 한국계 중국인은 2000년대 초·중반에는 30~40대의 여성 이주자가 주를 이뤘지만, 2010년대 이후 성비는 상대적으로 균형이 잡혔다. 한편 한국계 중국인 이주자들의 연령대는 고령화되었고, 거주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다. 한국계 중국인들이 종사하는 직종은 제조업과 건설업 종사자로부터 서비스업이나 자영업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이종구·임선일 2011). 또한 최근에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고학력 한국계 중국인의 이주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이현욱 2014; 박경숙 2019). 이러한 직종의 다양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서비스업이나 식당 운영(자영업), 돌봄 노동 등 대면을 전제로 한 한국계 중국인의 경제 활동이 주로 가시화된다는(이해웅 2014; 손인서 2020). 이러한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한국계 중국인들은 종종 불안정한 사회경제적 환경에 노출되고, 경제 범죄와 연관되기도 한다(김창규 2018; 임광순 2015). 이로 인해 한국 사회에서 한국계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되어있고 이는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통해 확산하기도 한다(아이잔 외 2020).

한국계 중국인들은 취업을 위한 비자 발급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한

3) 이 내용은 다음 자료를 참고하였다. 박경숙, 2019. 『중국동포 인구구조 변화와 정책과제』, 경기도: 이민정책연구원.

국과 중국의 문화 자본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이주자 집단에 비해 쉽게 다단계 판매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다단계 판매 업체에서도 이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한다. 본 연구는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계 이주민의 다단계 판매업 참여를 분석한다. 국제 이주를 통해 수직적 스케일 확장을 경험한 중국계 이주자들은 다단계 판매업에 참여하며 경제적 스케일을 확장(수평적 스케일 확장)한다. 중국계 이주자의 확장된 스케일은 다단계 판매 업체의 글로벌 스케일 확장 의도 및 실행과 교차한다. 아래에서는 한국에서 다단계 판매업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사례 업체를 소개한다.

2. 다단계 판매업

다단계 판매는 제조, 도매, 소매, 소비 순으로 진행되는 유통 경로가 아닌 제조 이후 특정 판매원이 판매망(판매 조직, 네트워크)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다단계 판매에서는 상위·하위 판매원으로 이어지는 단계가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판매 조직이 있다. 다단계 판매는 판매자가 구매 의사가 없는 구매자에게 상품 구입을 권유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판매 방식과 구분된다. 다단계 판매 업체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등록되어 정상 영업하고 공제조합(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가입된 업체들을 의미하며, 2020년 기준으로 총 122개의 업체가 등록되어있다.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미등록 다단계 판매 업체는 불법 업체로 간주된다. 122개 업체 중 97개 사업자가 서울에, 8개 사업자가 경기도 소재하여 수도권에 소재하는 사업자 수의 비중이 86.06%에 달한다. 다단계 판매업의 주요 취급 품목은 건강식품, 화장품, 통신상품, 생활용품, 의료기기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하는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공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다단계 판매 업체의 수는 120~130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의 매출액 합계는 5조 원 초반을 유지하다 최근 기록인 2020년에는 4조 9,850억 원으로 소폭 하락했다(공정거래위원회 2021/8/4).

2020년 5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자에 등록되어있는 전체 판매원은 약 827만 명이며, 후원수당을 받는 판매원은 약 144만 명이다. 그러나 이 수치는 여러 업체에 가입된 판매원 수가 중복으로 집계된 수치이다. 2016년 이후 판매원의 수는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다. 비록 판매원의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진 않았지만, 판매원 수의 감소 추세는 다단계 판매 업체에게 새로운 판매 시장 확대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계기로 작용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020년에 판매원들에게 돌아간 총 후원수당은 약 1조 6,820억 원이다. 이를 전체 매출과 비교해보면 약 33.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중 후원수당 지급 상위 1% 판매원들에게 지급된 후원수당은 전체의 약 55.5%인 9,339억 원으로, 1인당 평균 6,491만 원을 수령했다. 지급액 기준 상위 1~6%의 판매원(72,217명)은 평균 609만 원을 수령했고, 상위 6~30%의 판매원(346,735명)은 평균 67만 원을 수령했다. 나머지 70%의 판매원(1,011,914명)은 평균 7만 원을 수령했는데, 이는 주로 판매보다는 자가 소비 목적으로 거래했기 때문이다. 후원수당을 받은 판매원 중 연 3천만 원 이상을 받은 판매원은 9,724명(0.67%)이며, 이 중 상위 10개 사업자 소속 판매원은 7,765명으로 79.85%를 차지하였다. 연 1억 원 이상의 초고액 수당을 받은 판매원은 전년(2,022명)보다 85명이 감소한 1,937명이었고, 이는 전체 수령자 중 0.13%를 차지하였다. 이와 같은 수치를 통해 다단계 판매업의 판매원 간 후원수당 수령액수에는 상당한 불평등이 존재하며, 대다수의 다단계 판매업의 판매원들이 다단계 판매업을 본업보다는 부가적 수입을 기대하는 부업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단계 판매 업체 중 매출액 기준 1, 2위 업체는 2018년 이후부터 A, B 업체이다. 2020년 두 업체의 매출액을 합치면 전체 다단계 판매업 매출액의 약 46.1%이며(각 24.9%, 21.3%), 3위 업체와 비교하면 약 두 배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3위 업체가 약 8.7%). 등록 판매원 중 후원수당을 수령하는 판매원의 수는 상위 두 업체가 약 40만 명인 데 반해 3위 업체는 8만 명 이하로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타 업체들과는 매출액, 후원수당 수령 판매원 규모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1, 2위를 유지하고 있는 A, B 업체를 분석한다.

먼저 A 업체는 1959년 미국 미시건 주에서 창업하여 생활용품(세제 등)을 판매했으며, 1962년 캐나다 온타리오와 영국 런던에 지사를 설립하며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다. 1970년대 이후 A 업체는 생활용품에서 식품, 가전제품 등으로 판매 제품 종류를 확장하고 유럽과 아시아 국가로 판매 지역도 확장한다. 1990년대 이후에는 다단계 판매 전략의 고도화를 시도하고 진출 시장도 꾸준히 확대해왔다. 이를 통해 A 업체는 현재(2021년 12월) 100개국 이상에 진출해있다. 한국에서는 1980년대 후반 법인을 설립하여 1991년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중국에는 1990년대에 진출했다. A 업체의 홈페이지 소개에 따르면 현재 약 400명의 직원이 있고 판매원은 약 114만 명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는 2020년 A 업체 등록 판매원 수는 약 117만 명이며,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판매원 수는 약 43만 명이다. 2020년 매출액은 약 1조 2,400억 원이다.

B 업체는 2009년 한국에서 창립했으며, 판매 제품은 생활용품, 식품 등으로 A 업체와 비슷하다. 2021년 12월 현재 B 업체는 전 세계 22개국에 진출했고, 중국에는 2020년 진출했다. B 업체의 온라인 홍보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판매자와 구매자를 합친 회원 수는 약 1,500만 명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B 업체의 등록 판매원 수는 약 385만 명이며,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판매원 수는 약 40만 명에 달한다.

2020년 기준 매출액은 약 1조 615억 원이다. A, B 업체의 한국 판매 시작 시기는 각각 1991년과 2009년으로 차이가 있고, 각 업체의 홍보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수치들은 집계 기준의 차이에 따라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다단계 판매업의 규모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후원수당을 받는 판매원 수와 매출액의 측면에서는 두 업체는 비슷한 규모의 업체라고 이해할 수 있다(2020년 기준).

두 업체의 글로벌 시장 진출 및 확대는 주요 스케일업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각 지역에서 판매 홍보와 판매원 모집에 활용되기도 한다. 두 업체 모두 진출국, 매출 규모를 수치와 지도 등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여러 수단(홈페이지, 전단지, 영상 등)에 홍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단계 판매 업체의 스케일 확장은 중국계 이주자들의 스케일 확장과 교차한다. 두 업체의 구체적인 스케일업 전략, 그리고 이주자들의 스케일 확장과의 교차 과정은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분석된다.

IV. 스케일 확장의 교차와 불안정성⁴⁾

1. 글로벌 시장 진출과 안정적인 경제력

이번 장에서는 관계적 스케일 접근을 활용하여 중국계 이주자와 다단계 판매 업체의 스케일 확장과 교차 과정, 그리고 이 과정이 갖는 의미에 대해 설명한다. 먼저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중국계 이주자들은 더 나은 사회·경제적 상황을 기대하며 한국으로 이주했다. 이와 같은 이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계 이주자들은 한국에서 여러 차례 직업을

4) 이번 장에서 별도의 언급 없이 사용하는 '중국계 이주자'는 한국에서 다단계 판매업에 참여하는 중국계 이주자를 의미한다.

변경하거나 복수의 경제 활동에 동시에 참여하기도 한다. 이는 중국계 이주자들이 글로벌 스케일 확장 이후 정착 지역(한국)에서 다양한 경제적 스케일로 확장되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계 이주자들은 이러한 경제 활동이 자신들이 희망하는 수입 수준에 못 미치거나 수입의 변동성이 불안정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에 만족하지 않는다. 기존 경제 활동에 대한 불만은 중국계 이주자들에게 새로운 경제 활동의 추가나 전환을 모색하게 하고 이에 대한 결과로 다단계 판매업에 참여한다.

중국계 이주자들은 주로 지인의 소개로 다단계 판매업을 시작한다. 중국계 이주자들의 다단계 판매업 참여는 한국으로 이주하여 충분한 정착 기간이 지난 이후 시작된다. 이는 다단계 판매업 활동이 한국의 문화적 자본에 관한 이해(학습)를 전제로 하고, 충분한 신뢰 관계에 있는 지인의 소개를 계기로 참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계 이주자들은 신뢰하는 지인의 소개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다단계 판매업 참여를 주저한다. 이에 대한 주된 원인은 다단계 판매업의 부정적인 인식이다. 또한 다단계 판매업 제품 특성상 직접 섭취하거나 신체에 사용하기 때문에 판매를 위한 제품 사용을 주저한다. 그러나 다단계 판매업을 소개하는 지인의 지속적인 설득에 제품을 사용해보고 제품 사용 만족에 따라 다단계 판매업 참여에 관심을 둔다. 다단계 판매업 참여는 우선 제품과 판매 전략에 대한 다단계 판매 업체가 진행하는 교육에 참여하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 시기는 기존 중국계 이주자들이 다단계 판매업에 대한 경계심을 해소하는 기간으로 작용한다.

“지인을 통해서 정보를 받았고 또 정보를 알아보는 과정도 있었고요. 알(게되)다 보니까 저와 저희 가족들도 먹어보고 섭취해보고 하다 보니 현재 나와 있는 건강식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좋았어요. 뛰

어났어요. 제가 이걸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죠.” (중국계 이주자 3, 2021/10/27)

“그 누나(다단계 판매업을 소개한 지인) SNS 지켜보고, 처음에 반지하에서 살다가, 빌라도 싸고, 빌라 살다가 아파트도 사고, 지금은 별장 2개, 4층짜리 ... 처음에 누나하고 같이 사업하는 파트너를 만나서 조금씩, 내가 생각이 복잡하니까 계속 지켜봤지 ... 내가 잘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 나도 그렇게(잘 사는 방법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선택) 한 거야.” (중국계 이주자 2, 2021/9/13)

이와 같이 지인의 설득과 다단계 판매 업체의 교육을 통해 중국계 이주자는 다단계 판매업 참여에 대한 경계심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한다. 다단계 판매업 참여를 설득하는 지인들은 주로 다단계 판매업을 통해 경제적 상황이 개선한 경험 이 있고 이 경험을 설득에 활용한다. 또한 다단계 판매 업체의 교육에서는 다단계 판매업을 통해 큰 후원수당을 받는 이들의 경험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중국계 이주자들은 다단계 판매업 참여 이후 사회·경제적으로 개선된 자신의 미래 상황을 구체적으로 상상한다. 중국계 이주자들은 처음에는 다단계 판매업 참여를 기존 경제 활동(본업)에 대한 부가적 수입원으로 기대한다. 다단계 판매업의 후원수당 지급 구조상 초반에는 판매망에 많은 사람이 모집할 수 없기 때문에 수입이 낮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판매망에 다른 판매원을 많이 모집하여 수입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따라서 중국계 이주자들은 부업으로 시작한 다단계 판매업이 점차 수입이 증가하여 현재의 불안정한 경제 활동을 대체하는 본업이 되길 희망한다.

이처럼 다단계 판매업은 중국계 이주자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현

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한다. 즉, 다단계 판매업 참여 초기 낮은 수익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정당화된다. 특히 최근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특수한 상황은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정당화하는데 활용되며 이 상황이 해결되면 이들의 다단계 판매업 참여를 통한 기대가 실현될 것이라 기대한다. 이러한 다단계 판매업의 이익 창출 구조를 중국계 이주자들은 ‘정직한’ 이익 창출 수단으로 생각한다.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의 창출 조건인 제품 판매와 판매원 모집 확대는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는 다단계 회사의 판매원 모집 전략이기도 하다.

“돈하고 시간에서 다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방법이 없었어 ... (다른 일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되잖아. 퇴직하고 나서는 그냥 할아버지 되잖아. 그런데 OOO(A 업체)는 늙을수록 가치가 높아져 ... 일반 기업(창업)은 자본금 있어야 되고, 노하우 있어야 되잖아. 일반 사람들 자본금 없잖아 ... 내가 없어도 수입돼, 다 필요 없어, 이거보다 더 좋은 기업 어디 있어.” (중국계 이주자 2, 2021/9/13)

“한 두 달에 내가 수입을 벌 수 있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물론 힘들었지만, 이게 또 힘든 만큼 하다 보니 재미가 있어요. ... 네트워크는 멤버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만나야 하고 인맥이 중요한 것 같아요. ... 제가 (기존에) 하는 일(마사지)도 솔직히 손님들도 별로 없고 하다보니까 수입도 많이 줄고 해서 이 찰나에 차라리 애를 그만두고 전업을 하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30% 투자하는 걸 100% 투자하면 그래도 한 달에 내가 지금 버는 만큼 벌지 않을까 ... 제 마음 속 생각으로는 중국에서 살고싶다는 마음이 더 많아요. 하지만, 현재까지 우리가 이렇게 한국에 있다보니, 스펙도 없고

이것(자본)도 없을 경우에 중국에 들어갔을 때 솔직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 제가 (중국에 다시 돌아가) 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현재는 한국에서 이렇게 있는 게 좋습니다.” (중국계 이주자 3, 2021/10/27)

이처럼 중국계 이주자들은 다단계 판매업에 성실히 참여하여 현재의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을 보완하거나 대체하길 기대한다. 이를 통해 중국계 이주자들은 한국 생활을 개선하거나 일부는 중국이나 싱가포르 등 기원국(지역)으로 귀환하길 희망한다.

또한 중국계 이주자들은 다단계 판매업 참여를 통해 사회적 신분(지위) 상승을 기대한다. 다단계 판매 업체는 판매원들을 개인 사업자로 대우하며 ‘사업자님, 리더님’ 등의 지위를 부여한다. 이러한 지위(호칭) 부여는 한국으로 이주하기 전이나 한국으로 이주한 이후 불안정한 사회·경제 상황을 경험한 중국계 이주자에게 사회적 신분 상승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이와 같은 의도(기대)로 다단계 판매업에 참여한 중국계 이주자들의 구체적인 활동은 다음과 같다. 중국계 이주자들은 주로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계 이주자들을 대상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판매원을 모집한다. 가족과 지인은 물론, 다단계 판매업 이전에 참여한 경제 활동에서 형성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제품을 판매한다. 또한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 우연히 만난 중국계 이주자들을 억양과 생김새 등으로 중국계 이주자임을 파악하고 접근하여 판매를 시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은 중국 시장 진출을 더 큰 수익 창출을 위한 기회로 여기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이주 이전 지역에 남아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하거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하여 제품을 홍보하는 방식을 시도한 중국계 이주자도 있었다.

이상으로 설명한 중국계 이주자들의 다단계 판매업 참여는 다단계 판매 업체의 글로벌 스케일 확장 과정에 참여를 의미한다. 다단계 판매업의 특

성상 다단계 판매 업체의 스케일 경계는 판매원의 판매 범위에서 설정된다. 따라서 다단계 판매업은 판매원의 판매 범위 확장으로 스케일 확장(스케일업)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다단계 판매 업체는 기존 판매원을 활용하여 구매자와 새로운 판매원을 모집한다. 이처럼 구매자와 판매원의 두 갈래 모집 방식은 ‘바이너리(Binary) 구조’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나 두 모집 대상 중 다단계 판매업의 입장에서 판매원이 단순 구매자에 비해 수익 창출에 더 능동적인 행위자이기 때문에 이들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데 더 많은 공을 들인다. 앞서 설명했듯이 중국계 이주자 또한 이러한 전략을 통해 기존 판매원(지인)의 소개로 판매원이 됐다. 다단계 판매 업체는 기존 판매원과 잠재적인 판매원을 대상으로 세미나, 교육 등을 개최하고 여기서 해당 업체의 높은 수익성을 강조하며 스케일 확장(판매원 모집)을 시도한다.

국내 다단계 판매업의 선두 업체인 A, B 업체는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해 글로벌 판매원 모집에 적극적이다. 이는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한 스케일업(수직적 스케일 확장)의 한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두 업체는 홈페이지와 홍보물 등에 업체가 진출한 국가를 수치와 지도 등을 활용하여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판매원 모집은 이들을 활용한 직접적 수익 창출뿐만 아니라 추가 판매원을 모집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되며 이중의 효과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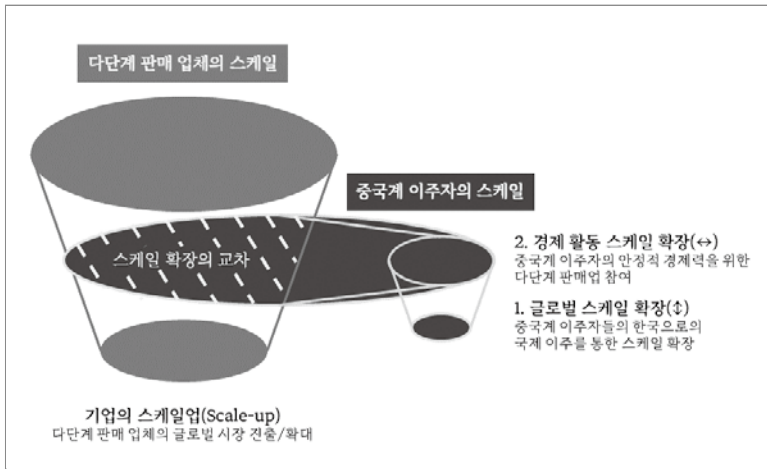
“지금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와 지역에 진출해서 전 세계 1등 직접 판매 회사이고요. 단 한 곳도 철수한 곳이 없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년 넘게 적자거든요. ... 그런데 OOO(A 업체)는 철수를 안 해요. 왜죠? 창업자분들이 대를 이어서 그 약속을 했거든요, 저희들한테. 뭐냐하면, “그 나라에 OOO(A 업체)를 좋아하는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절대로 철수하지 않겠

습니다”라는 약속을 지금 60년 넘게 대를 이어서 지키고 있죠.” (A 업체 교육, 2021/10/18)

이상의 교육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다단계 판매 업체에게 글로벌 시장 진출은 주요 스케일업 전략이다. 한국의 다단계 판매 업체의 글로벌 시장으로의 스케일 확장 과정에서 중국계 이주자들은 특히 매력적인 판매원 모집 대상이다. 중국계 이주자들은 한국과 중국에서 습득한 문화 자본을 활용하여 장기적으로는 단일 국가로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 시장 진출 및 확장에 기여하고, 일차적으로는 한국의 중국계 이주 커뮤니티 시장 진출에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계 중국인들의 경우 방문취업비자(H-2)나 재외동포비자(F-4)를 소지하고 있으면 판매원 등록에서도 다른 글로벌 판매원들보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적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인 두 업체 모두 중국어 및 중국 문화를 활용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원들의 조직인 ‘중국 팀(중국 그룹, 세계 팀 등)’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 조직은 장기적으로는 중국 시장 진출 확장을 위한 조직이지만, 일차적으로는 국내에 있는 중국 관련 이주자들을 대상으로 제품 판매, 판매원 모집을 위한 조직이다. 중국계 이주자들은 이 조직을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판매 및 판매원 모집 전략을 공유하고 개발하기도 한다.

이처럼 중국계 이주자들은 다단계 판매 업체에게 글로벌 시장 확대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중국계 이주자들은 자신의 초국적 문화 자본을 활용한다. 즉, 다단계 판매 업체의 판매 스케일은 중국계 이주자와의 스케일 확장 교차를 통해 확장되고 있다. 이상으로 중국계 이주자와 다단계 판매 업체의 스케일 확장 교차 과정을 설명했다. 먼저 중국계 이주자의 스케일은 두 차례 확장된다. 한국으로 이주하며 확장된 스케일(수직 확장)은 안정적인 경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단계 판매업에 참

여하며 한 차례 더 확장(수평 확장)된다. 다단계 판매 업체는 글로벌 시장(본 연구에서는 중국 시장과 한국의 중국계 이주자 커뮤니티) 진출 및 확대를 통해 스케일업(스케일 확장)을 추구한다. 두 행위자의 스케일 확장은 교차되는 데,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다단계 판매 업체의 스케일 확장 전략에 중국계 이주자들이 참여하며 이 교차는 달성된다. 이를 요약하면 [그림 1]과 같다. 다음 절에서는 이와 같은 스케일 확장의 교차가 갖는 의미를 분석한다.



[그림 1] 스케일 확장의 교차

2. 윤리와 불안정성

이상으로 중국계 이주자와 다단계 판매 업체의 스케일 확장 및 교차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서 이번 절에서는 이 과정이 갖는 의미를 분석한다. 이 분석은 스케일 확장과 교차에 대한 두 행위자(개인과 기업)의 의도와 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며 진행된다. 앞서 설명했듯이 중국계 이주자들은 사회·경제적 상황을 개선하고자 한국으로 이주했고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다단계 판매업에 참여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다단계 판매업 참여 동기는 보편적인 이주자의 경제 활동 참여 동기이다. 이번 절에서는 중국계 이주자들이 다단계 판매업에 참여하는 보다 특별한 동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계 이주자들이 다단계 판매업에 참여하는 보다 특별한 동기에는 윤리적인 동기가 있었다. 이들은 소속된 다단계 판매 업체와 제품을 ‘좋은(착한) 기업과 제품’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업체와 제품에 대한 신뢰는 제품을 직접 사용한 경험과 교육에 근거한다. 중국계 이주자에게 다단계 판매업 참여를 권유한 지인들은 설득 과정에서 업체의 제품 성분과 성능의 우수성을 강조하며 사용을 권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우수하다고 여겨지는 경쟁 업체 제품과 비교하며 성능과 가격 경쟁력에서 해당 업체 제품의 비교 우위를 강조한다. 제품 사용 경험에 만족한 이들은 업체에서 주최하는 교육(설명회, 세미나 등)에 참여하는데, 여기서 업체와 제품의 우수성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강조된다. 또한 이 교육에서는 기업의 윤리적 경영에 대해 설명한다. 윤리적 경영은 우선 우수한 제품의 합리적 가격으로 설명되고, 나아가 사회적 공헌 사례(기부, 기증 등)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좋은 성분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고, 이로 인한 수익으로 사회적 공헌까지 하는 윤리적인 업체라는 인식이 만들어진다.

또한 중국계 이주자는 다단계 판매업의 수익 창출 구조가 윤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앞서 설명했듯이 이들은 다단계 판매업의 후원수당 지급 구조가 ‘노력한 대가를 정직하게 보상’하는 구조라고 인식한다. 또한 다단계 판매 업체는 후원수당이 판매망 내에서 공유(분배)되기 때문에 동료 판매원들과 경쟁 관계가 아닌 협력 관계를 맺는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중국계 판매원들은 함께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을 나누는 다단계 판매업의 구조를 ‘서로 돕는’ 구조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다단계 판매업

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로 인식한다. 중국계 이주자들의 다단계 판매 업체와 제품, 그리고 수익 창출(후원수당 분배) 구조가 윤리적이라는 믿음은 다단계 판매 업체의 교육을 내재화한 결과이다.

“회장님 너무 멋지셔가지고, 기부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해외 가서가지고 ... 제품이 싸고 좋은 게 되게 많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 이거 제가 좀 써봤어요. 괜찮아요. 기초(화장품) 진짜 괜찮아요 ... 면세점 제품 많이 팔다 보니까 디올, 샤넬꺼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스킨, 로션을 여기(B 업체)꺼 쓰고 있는데, 기초 괜찮아요. 흡수 잘되고, 가격도 저렴하고 ... ” (중국계 이주자 1, 2021/9/12)

“처음에는 그냥 돈만 봤는데, 그것만 생각했는데, 알아보니깐 아, 이거 돈만 버는 기업 아니고 사람을 도와주는 기업이야. 왜냐하면 누나(소개한 지인)도 돈 많잖아. 돈을 더 줘도 쓸 데가 없어. 쓸 시간도 없는데 나를 도와주려고 도와주는 거야 ... 누나가 10년 동안 한 경험을 100% 나한테 다 가르쳐 줘 ... 내 밑에 나를 믿고 지지해주는 파트너를 도와줘야 돼. 그분들도 직장 안 다니게 될 때까지 도와줘야 돼.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대로 수입이 되는 거야.” (중국계 이주자 2, 2021/9/12)

이처럼 중국계 이주자들이 경제력과 사회적 신분(지위) 상승에 대한 기대와 함께 다단계 판매업에 참여하는 주요 동기에는 윤리적 동기가 있다. 그러나 중국계 이주자들의 다단계 판매업 참여 동기는 쉽게 실현되지 않는다. 중국계 이주자들은 상당 기간 다단계 판매업에 참여했지만, 기대한 만큼의 수익을 얻지 못한다. 따라서 이들은 다단계 판매업을 본업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기존 경제 활동과 병행하며 여전히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다. 다음으로 사회적 지위 상승에 대한 의도 역시 실현되지 않았는데, 다단계 판매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이들에게 덧씌워지기 때문이다. 다단계 판매업에 참여하는 중국계 이주자들은 중국계 이주 사회에서 ‘멀리해야 할 위험한 존재’나 ‘다단계 판매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설득해야 할 애물단지’와 같이 취급받는다 (중국계 이주자 단체 대표자 1, 2021/11/17). 따라서 다단계 판매 업체에서 이들에게 주는 직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개인적인 만족감을 얻을 수 있지만, 타인으로부터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신분 상승에 대한 의도는 실현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윤리적 경제 활동 참여라는 의도 역시 실현되지 않는다. 중국계 이주자 판매원들의 인식과 같이 다단계 판매 업체와 제품이 실제로 윤리적인지에 대해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지만, 수익 창출 구조가 윤리적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중국계 이주자들은 다단계 판매 업체에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지만, 다단계 판매 업체는 이와 같은 중국계 이주자들의 역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계 이주자들은 새로운 판매 시장과 판매원 모집에 기여한다. 중국계 이주자의 다단계 판매 업체 스케일 확장에 대한 기여는 다단계 판매 업체의 교육에서 언급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다단계 판매 업체는 (잠재적) 판매원 대상 교육에서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여러분 중국어 할 줄 알아요? ‘니하오(你好)’만 아시죠? 그런데 중국에서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우리 네트워크 안에 중국어 잘하는 리더님들 (판매원) 때문에 중국에서도 OOO(B 업체)의 제품이 팔립니다 ... 그 수익은 리더님들이 다 나눠갖는거예요 ... 우리가 중국어도 못하면서 중국에서 수입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 (예를 들어)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처음에 인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옆 채널에서 OOO(인기 남성 연예인)가 옷통을 벗고 저랑 똑같은 콘텐츠를 찍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누구 채널 볼까요? OOO(인기 남성 연예인) 채널 보겠죠. 제 구독자 다 뺏어갑니다 ... 경쟁이죠. 레드 오션입니다. 그렇지만 OOO(B 업체)는 어떻습니까. OOO(인기 남성 연예인)이 벌어오는 수익, 우리가 다 공유하는 겁니다. 함께 잘 되는 거예요. 경쟁이 아니고 협력입니다.” (B 업체 교육, 2021/10/12)

이처럼 다단계 판매 업체는 중국계 이주자를 통해 글로벌 시장 확대의 기회를 갖고 이를 다른 판매원을 모집하는 전략으로 활용한다. 위 인용에서 다단계 판매 업체의 교육자가 비유로 설명한 ‘인기 남성 연예인’은 판매 수완이 좋은 판매원으로 경쟁 관계에서는 위협적인 경쟁자지만 협력 관계에서는 유익한 동료 판매원을 의미한다. 중국계 이주자는 새로운 시장으로 확대가능성을 가진 판매원이라는 점에서 위 인용에서 예시로 설명한 ‘인기 남성 연예인’에 해당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중국계 이주자(인기 남성 연예인)는 경쟁 관계에서는 위협적이지만, 다단계 판매업과 같이 판매망의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 관계에서는 기회로 여겨진다. 이처럼 중국계 이주자 판매원이 판매망 전체에 기여한 기회는 판매망에 속한 판매원들에게 분배되며, 이러한 구조는 위 인용에서와 같이 다단계 판매 업체의 교육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기도 한다. 이는 ‘인기 남성 연예인’이 아닌 판매원들을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전략이지만, 중국계 이주자(인기 남성 연예인)의 입장에서는 정당하지 않은 보상 구조를 의미한다. 중국계 이주자는 다단계 판매업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판매원 교육에서도 활용되지만, ‘동등한 수익 배분’이라는 미명하에 이들의 역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중국계 이주자들이 다단계 판매업을 지속하는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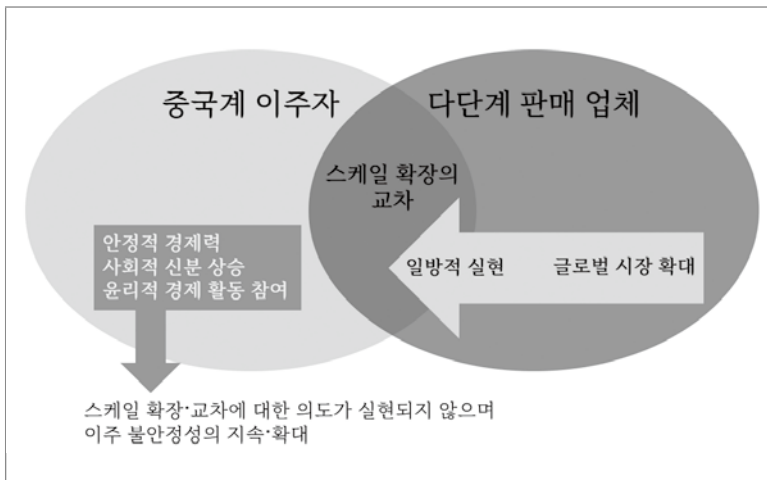
인 중 하나인 윤리적 경제 활동이라는 믿음은 다름 아닌 자신들의 희생으로 유지되고 있는 불공정한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국계 이주자들은 ‘윤리적’ 경제 활동 참여를 통해 자신의 불안정한 사회·경제적 이주 상황을 개선하고자 스케일 확장 교차에 참여하지만, 이 의도는 실현되지 않는다. 이들은 이러한 상황의 원인을 자신의 능력과 노력 부족에서 찾는다. 또한 다단계 판매업 참여에 대한 주변의 부정적인 인식은 이로 인한 피해를 개인적으로 감당하도록 하고 다단계 판매업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여하며 기존 경제 활동(본업)에까지 지장을 준다.

중국계 이주자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스케일 확장으로 다단계 판매업에 참여하며 업체의 스케일 확장(스케일업)에 기여하지만, 자신들의 목표는 이루지 못하고 소외된다. 또한 이런 희생은 윤리적 경제 활동이라는 믿음으로 인해 이들이 다단계 판매업에 참여하기 이전 처해 있었던 이주 상황에서의 경제적 불안정성(여러 직업의 잦은 교체 혹은 동시 수행)을 망각하며 유지된다. 따라서 다단계 판매 업체가 이와 같은 수익 창출 구조에 대한 ‘공평한 구조’라는 표현은 일부 부당한 수익 분배 구조를 은폐하려는 수사(修辭)에 불과하다. 다단계 판매 업체의 판매 행위(제품 생산, 판매원 모집 및 관리 과정)와 수익 분배(후원수당 지급)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은 기존 연구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다(곽관훈 2017; 공병기 2015; 이종구 2017). 본 연구 조사에 참여한 중국계 이주 사회 단체장들도 다단계 판매업을 불법성과 가까이 있다고 언급하는데, 이로 인해 판매원들도 불법적 문제의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서 이주자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위험에 대해 우려한다. 이처럼 스케일 확장의 교차로 인해 중국계 이주자들의 사회·경제적 불안정성은 지속되거나 확대된다.

한편 스케일 확장 교차에 대한 다단계 판매 업체의 의도는 실현됐다고 판단할 수 있다. 글로벌 판매원들을 통해 새로운 판매 기회를 모색하

러는 업체의 의도는 중국계 이주자들의 스케일 확장과 교차하며 실현된다. 비록 중국 현지 시장 진출이라는 최종 목표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이는 여전히 장기적인 목표로 존재하며, 이 목표가 실현되지 않더라도 '새로운 시장'이었던 한국의 중국계 이주자 커뮤니티에서 판매원과 구매자가 새로 모집되며 넓은 의미의 글로벌 시장이 확대됐다. 따라서 두 행위자의 스케일 확장 교차에 대한 의도는 다단계 판매 업체의 의도만 실현되며 일방적으로 실현됐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상으로 중국계 이주자와 다단계 판매업의 스케일 확장 교차가 갖는 의미를 분석했다. 먼저 중국계 이주자들은 한국으로 이주(글로벌 스케일로 수직적 확장)한 이후 주로 부업으로 다단계 판매업(경제 활동 스케일의 수평적 확장)에 진출한다. 이는 다단계 판매업의 글로벌 시장으로의 스케일 확장(스케일업) 과정의 참여이다. 스케일 확장 교차에 대해 중국계 이주자들은 안정적인 경제력과 사회적 신분(지위) 상승, 그리고 윤리적 경제 활동 참여라는 의도가 있었으며, 다단계 판매 업체는 글로벌 판매 시장 확대라는 의도가 있었다. 그러나 두 행위자의 의도 실현은



[그림 2] 스케일 확장 교차의 의도와 의도의 일방적 실현

일방적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중국계 이주자의 의도는 실현되지 않거나 그 실현 속도가 매우 더뎠지만, 다단계 판매 업체의 의도는 상당 부분 실현됐고, 추가적인 실현을 기대할 수 있다(그림 2 참조). 이로 인해 중국계 이주자들이 극복하고자 했던 사회·경제적 불안정성은 지속되고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분석은 여러 규모와 층위의 스케일 변화와 교차 과정을 분석하는 관계적 스케일 접근을 통해 이루어졌다.

V. 결론

본 연구는 중국계 이주자와 다단계 판매 업체의 스케일 확장의 교차 과정을 관계적 스케일 접근으로 분석했다. 중국계 이주자는 사회·경제적 상황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국으로 이주하고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다단계 판매업에 참여하며 자신의 스케일을 확장한다. 한편 다단계 판매 업체는 스케일업 전략 중 하나인 글로벌 시장 진출 및 확대를 위해 중국계 이주자를 비롯한 글로벌 판매원을 모집하며 스케일을 확장한다. 두 스케일의 확장은 서로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교차한다. 중국계 이주자는 안정적인 경제력, 사회적 지위 상승, 그리고 윤리적 경제 활동에 참여를 동기로 다단계 판매업에 참여하고 다단계 판매 업체는 글로벌 시장으로부터 수익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 판매원을 모집한다. 그러나 스케일 교차 과정에서 다단계 판매 업체의 동기만 일방적으로 실현된다. 중국계 이주자들의 동기(목표)는 실현되지 않으며, 이에 관한 결과로 이들이 해소하고자 했던 이주 상황에서의 불안정성은 지속된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갖는 본 연구는 국제 이주 현상의 실제 사례를 관계적 스케일 접근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관련 선행 연구

에서는 주로 별도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국제 이주자의 스케일과 기업 경영 스케일은 본 연구에서 동시에 관찰되며 다층적 스케일의 관계적 측면을 분석했다. 개인과 기업의 다층적 스케일 확장·교차의 관계성을 분석하며 국제 이주자 개인의 불안정성 지속 및 확대라는 해석에 도달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론과 같이 중국계 이주자들이 다단계 판매업에 참여할 때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 이들의 권리 보장 문제는 취약하다. 이처럼 관계적 스케일 접근을 통해 이주자의 불안정성과 권리 보장 문제는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본 연구가 갖는 이와 같은 의미로부터 국제 이주와 글로벌 기업 경영의 초국적 상황에서 다양한 행위자의 스케일 확장(축소) 과정의 관계적 측면에 대한 분석의 확대가 요구된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의미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정된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분석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확대 적용하는 데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이후 관련 연구에서는 다양한 이주 집단과 기업의 다층적인 스케일 확장과 우발적인 교차 과정에 대한 다각적인 관점의 분석이 이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제 이주자의 경제 활동에서 스케일 확장·교차의 다양한 행위자와 관계성을 드러내고 그 결과가 갖는 의미의 교차 증명을 기대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공병기. 2015. 「'X 社'를 통해 분석한 합법적 다단계판매의 문제점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KHU 글로벌법무리뷰 8(2): 89-120.
- 곽관훈. 2017. 「다단계판매산업 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유통법연구 4(1): 35-62.
- 김영경·이정향. 2014.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자본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0(2): 163-175.
- 김정규. 2020. 「주변국 선호도와 한국 사회의 갈등 - 미국, 일본, 중국, 북한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이론 57: 73-123.
- 김충현·이재강. 2020. 「지역 중소기업의 스케일업(Scale-up)을 위한 성공요인에 대한 연구: Triple Helix 모형을 중심으로」. 경영건설탐구 20(2): 11-22.
- 박경숙. 2019. 『중국동포 인구구조 변화와 정책과제』. 경기도: 이민정책연구원.
- 박경환. 2012. 「The Multi-Scaled Connectedness of the Institutional and Organizational Actors in Transnational Migration」. 문화역사지리 24(1): 95-117.
- 박규택. 2016. 「사이공간으로서 로컬리티: 수행적 관계성, 미결정성, 관계적 스케일의 정치」.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9(3): 1-12.
- 박배균. 2009.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을 바라보는 공간적 관점에 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5(5): 616-634.
- 박인옥. 2020. 「갈등의 공간적 전이와 다중스케일적 연구: 한국화약의 시흥·소래 지역 공유수면매립 갈등 사례」. 도시연구 17: 135-170.
- 밸런타인, 질(Valentine, Gill). 2001. 『공간에 비친 사회, 사회를 읽는 공간』. 박경환 역. 한울아카데미.
- 새머스, 마이클(Samers, Michael). 2010. 『이주』. 이영민·박경환·이용균·이현욱·이종희 공역. 푸른길.
- 손인서. 2020. 「중국동포 돌봄노동자의 경력이동: 연령화·인종화된 인식과 이주민 불평등」. 경제와 사회 128: 312-344.
- 아이잔, 카니베코바·선봉규·아이잔, 무하마드. 2020. 「한국 영화의 조선족 재현과 사회적 인식: 「청년경찰」과 「범죄도시」 사례」. 인문사회21 11(4): 365-378.
- 어리, 존(Urry, John). 2007. 『모빌리티』. 강현수·이희상 공역. 아카넷.
- 엄미옥. 2021. 「탈북 여성이주 서사에 나타난 행위자성과 장소의 재구성 - 『절

- 레꽃』과 『큰돈과 큰돈』을 중심으로, 리터러시 연구 12(1): 491-518.
- 이상현·이정필·이보아. 2014. 「다중스케일 관점에서 본 밀양 송전탑 갈등 연구」, 공간과 사회 24(2): 252-286.
- 이종구. 2017. 「다단계판매의 새로운 유형과 피해구제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5(3): 239-272.
- 이종구·임선일. 2011. 「재중동포의 국내 정착과 취업네트워크」, 산업노동연구 17(2): 309-330.
- 이태정. 2019. 「안산시 이주노동자의 문화생산활동과 문화적 공유지의 가능성」, IDI도시연구 16: 211-227.
- 이해웅. 2014. 「중장년 조선족 여성 이주노동자의 몸 아픔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 30(1): 213-252.
- 이현욱. 2013. 「20-30대 조선족의 초국가적 이주의 특성: 화이트칼라를 중심으로」, 디아스포라연구 7(1): 103-129.
- 이현재. 2009. 「여성의 이주, 다층적 스케일의 장소 열기 그리고 정체성 저글링」, 여성문학연구 22: 7-36.
- 임광순. 2015. 「국내 조선족 범죄의 실제와 방향성」, 역사비평 111: 358-384.
- 장세훈. 2013. 「포항제철 설립의 정치사회학 '스케일'의 정치」를 통해 본 사회세력 간 역학관계를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23(2): 201-230.
- 전정숙. 2021. 「이주민 집중 거주 지역 주민의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연구」, 도시연구 19: 309-368.
- 정수열. 2013. 「계획 이주와 자발적 이주 간 연계 -베트남 닥락 성 커피 생산에서 이주의 역할-」,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6(3): 344-358.
- 정현주. 2008. 「이주, 젠더, 스케일 : 페미니스트 이주 연구의 새로운 지형과 쟁점」, 대한지리학회지 43(6): 894-913.
- 조달호·유인혜. 2019. 『창업 초기 기업 스케일업 위한 서울시 창업지원정책 개선방향』,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 최우길. 2005. 「중국 소수민족정책의 진화: 민족구역자치제도의 변용과 개혁개방 초기 조선족 사회에의 적용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내학술회의 발표자료집: 243-267.
- 크레스웰, 팀(Cresswell, Tim). 2013. 『지리사상사』, 박경환·류연택·심승희·정현주·서태동 공역, 시그마프레스.
- 홍대웅·전병훈. 2015. 「글로벌 창업기업 스케일업(Scale-up) 지원 정책 분석을 통한 국내 스케일업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4(6): 11-27.

- DeGenova, N. 2015. "Border struggles in the migrant metropolis," *Nordic Journal of Migration Research* 5(1): 3-10.
- Gu, M. 2021. "Identity construction and scale making of migrant university students in multilingual settings: a scalar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Bilingual Education and Bilingualism* 24(3): 357-372.
- Jones K., Johnston, R., Manley, D., Owen, D., and Charlton, C. 2015. "Ethnic Residential Segregation: A Multilevel, Multigroup, Multiscale Approach Exemplified by London in 2011," *Demography* 52(6): 1995-2019.
- Mezzadra, S., and Neilson, B. 2013. *Border as Method, or, the Multiplication of Labor*, Duke University Press.
- Parisi, D., Lichter, D. T., and Taquino, M. C. 2011. "Multi-scale residential segregation: Black exceptionalism and America's changing color line," *Social Forces* 89(3): 829-852.
- Park, B. 2005. "Globalization and Local Political Economy: The Multi-scalar Approach," *Global Economic Review* 34(4): 397-414.
- Schiller, N. G. and Caglar, A. 2009. "Migrant Incorporation and City Scale: Towards a Theory of Locality in Migration Studies,"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35(2): 177-202.
- Smith, N. 2012. *Homeless/global: scaling places*, Routledge.
- Tyner, J. A. 2000. "Migrant labour and the politics of scale: gendering the Philippine state," *Asia Pacific Viewpoint* 41: 131-154.
- Wei, Y. D. 2002. "Multiscale and Multimechanisms of Regional Inequality in China: Implications for regional policy,"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11(30): 109-124.
- “2019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통계청·법무부. 2019.12.19.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3/4/index.board?bmode=read&bSeq=&aSeq=379451&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검색일: 2022년 6월 10일\)](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3/4/index.board?bmode=read&bSeq=&aSeq=379451&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검색일: 2022년 6월 10일))
- “2020년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공개.” 공정거래위원회. 2021.8.4. [https://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9203\(검색일: 2022년 6월 10일\)](https://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9203(검색일: 2022년 6월 10일))

국 문 초 록

국제 이주자 경제 활동의 관계적 스케일:

다단계 판매업에 참여하는 중국계 이주자를 중심으로

박준영(서울대학교 지리학과 박사과정)

국제 이주와 기업 경영의 초국적 상황에서 국제 이주자와 글로벌 기업의 스케일은 활발히 교차한다. 본 연구는 관계적 스케일 접근을 통해 중국계 이주자와 다단계 판매업의 스케일 확장 및 교차 과정을 분석한다. 중국계 이주자들은 안정적인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 상승, 그리고 윤리적 경제 활동 참여를 목적으로 다단계 판매업에 참여하고, 다단계 판매 업체는 글로벌 시장 진출 및 확대를 위해 글로벌 판매원인 중국계 이주자 판매원을 모집한다. 그러나 스케일 교차에 대한 중국계 이주자의 의도는 실현되지 않거나 그 속도가 더딘 반면, 다단계 판매 업체의 의도는 상당 부분 실현된다. 이로 인해 중국계 이주자들의 이주 상황에서 불안정성은 지속·확대될 우려가 있다.

주제어: 관계적 스케일 접근, 중국계 이주자, 다단계 판매업, 불안정성

Abstract

A Relational Scale Approach to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Migrant Economic Activity:

Focusing on Chinese migrants participating in multilevel sales

Park, Junyoung (Ph. D. Program, Department of Geogra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intersecting process of scale expansion of Chinese migrants and multilevel sales companies using a relational scale approach. Chinese migrants experience scale expansion during cross-border migration and participation in new economic activities, and companies seek scale expansion (scale-up) to enter and expand the global market. Both actors participate in the intersection of scale expansion for their respective purposes. Chinese migrants participate in multi-level sales with the motivation of improving socioeconomic conditions and participating in ethical economic activities, and multilevel sales companies recruit global salespeople to increase profits from the global market. However, only the motivation of multilevel sales companies is unilaterally realized in the scaleintersecting process. The motivations of Chinese migrants are not realized, and as a result, precarity in the migration situation continues and expands.

Key words: Relational scale approach, Chinese migrants, Multilevel sales, Precarity

결혼이주여성의 공동체 활동 경험 연구:

상호문화실천과 임파워먼트를 중심으로*

김기화**

김
기
화

I. 서론

II. 연구 방법

1. 연구참여자
2. 자료수집 및 분석

III. 연구 결과

1. 다문화 공동체의 의미: 안정과 성장의 장
2. 상호문화실천: 다문화 공존
3. 어머니로서 정체성 형성: “우리는 다문화 어머니”
4. 주체성 획득: 주변인에서 주인공으로

IV. 논의 및 결론

I. 서론

다양한 민족과 인종이 공존하는 다문화사회화는 세계적 추세이며 한국도 이미 다문화사회로 접어들었다. 한국의 다문화사회 형성의 주요

.....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B5A17088337).

** 인하대학교 아동심리학과 초빙교수(E-mail: k-hwaa@hanmail.net)

<http://doi.org/10.34165/urbanr.2022..21.45>

투고(접수)일 2022.4.22. 심사(수정)일 2022.5.12. 게재확정일 2022.6.20.

배경은 국제결혼으로 인한 ‘여성의 이주’이며, 이는 다문화가족 증가로 이어졌다. 2022년도 2월 기준 혼인귀화자는 149,029명이며, 국제결혼 이민자는 169,005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인다. 국제결혼 이민자 중 여성은 136,752명으로 80.9%를 차지한다(법무부 2022/3/23). 국제결혼은 이주여성에게 한국 남성의 ‘배우자’라는 자격을 부여하고 이주의 수단으로 작용한다. 결혼이주여성의 이주는 노동이나 학업과 같은 이유로 단기적인 이주를 선택한 근로자나 유학생과 다르게 한국에서 가족형성과 이주의 영구성으로 사회적 맥락에서 복합적인 문제를 내포한다. 단일 문화권의 특성이 있는 한국에서 결혼이주여성은 인종적·성적 편견에 노출될 수 있으며, 미시적 차원에서는 가부장적 가족 규범으로 가족 갈등이나 해체를 경험하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 정부는 2008년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및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정책이 가족 지원 정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초기 다문화가족 정책에서 결혼이주여성은 한국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지원과 수혜의 대상이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이루어진 서비스 전달체계는 일반가족과 다문화가족을 이분화 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에 있어 패러다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원화된 서비스 전달체계를 가족센터로 통합하였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3차 다문화가족 정책에서는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사회·경제 활동 참여를 핵심 과제로 두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결혼이주여성들을 사회구성원으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능동적 주체로 인정하려는 사회적 노력이며, 주체성을 지닌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량 존중과 더불어 공존할 수 있는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의미 있는 변화이다.

결혼이주여성은 가정 안에서의 역할 수행과 함께 사회적 활동에 대

한 욕구가 높으며, 이러한 사회참여와 자아실현 욕구는 같은 목적이 있는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크고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 내고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이 맺는 사회적 관계는 목적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며, 기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형성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이주 초기 가족 중심적이었던 관계는 점차 사회적으로 확대된다. 결혼이주여성 공동체는 2차 사회화기관으로서 이주국에서의 적응과 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다문화사회를 위한 사회적 연대의 출발점이 된다. 연대는 사회적 관계의 일종으로 사회나 집단에서 보이는 통합의 종류나 정도를 의미한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연대는 혈족이나 이익공동체의 상징에서 벗어나 '사회적 연대'라는 의미로 발전하게 된다 (Jary and Jary 1995). 즉, 공동체는 사회적 연대의 장으로 기능하며, 결혼이주여성과 같은 소수집단의 연대는 사회적 고립을 예방한다.

결혼이주여성 공동체 경험 연구 7편에 대한 질적 메타분석을 실시한 결과 참여자의 활동 태도에 있어 책임의식, 자발성과 적극성, 주체적 행동과 책임감, 협력적 태도, 자원의 자발적 탐색, 능동성, 자발적인 실천으로 나타났다(오은주·고진호 2021). 공통적으로 나타난 결혼이주여성들의 공동체 활동 태도는 모두 임파워먼트와 관련성이 있다. 임파워(empower)는 자기 스스로 힘을 얻고(to gain), 힘을 발전시키고(to develop),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는 것(to enable)으로 자기 자신의 주체적 행동을 통해 성취되는 능동적 의미이다(김안나·최승아 2013, 194). 최명민·김기덕(2013)은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보다 나은 환경으로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로 본다. 임파워먼트 개념을 종합하면 자신의 힘을 증진 시키고, 주변 사람들과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통해 힘을 증대시킬 수 있다(라순주·이희수 2015). 즉, 임파워먼트는 자신이 처한 환경을 통제하고 행동하는 능동적 주체자로서의 힘을 갖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의 능동적인 공동체 활동은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고 집단의식을 통해 주어진 환경을 극복해 나가는 원동력이 된다.

결혼이주여성 공동체는 규모나 활동 양상에 있어 변화를 보이는데, 초기에는 개인적인 욕구나 문제해결을 위해 형성된 소규모의 에스닉 자조모임이 중심을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다국적인 형태로 확대되고 있다. 다양한 국가의 출신으로 구성된 다국적 결혼이주여성 공동체에서는 제3의 문화가 공존하게 된다. 공동체는 상호문화실천의 공간으로 기능하며, 모국문화와 다른 구성원의 출신 국가의 문화 교류 과정에서 결혼이주여성은 상호문화실천의 주체로서 상호문화 형성에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상호문화실천 과정이 한국의 다문화사회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공동체 활동의 주체인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참여와 역량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공동체 활동에 대한 학문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결혼이주여성 공동체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공동체 구성 주체에 따라 에스닉 집단과 다국적 집단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 관습, 생활방식이 같은 문화공동체인 에스닉 집단 관련 연구이다. 베트남의 대표적 에스닉 공동체는 직업 분야(임선우·윤황 2017), 문화적 분야(정의철·정미영 2018), 사회적 네트워크(김혜선 2019)와 같이 거시적 맥락의 특성을 보인다. 한편, 필리핀 에스닉 집단 관련 연구에서 최미경(2018)은 종교 공동체를, 김정선(2009)은 A 공동체에서의 경험을 귀속(belonging) 요인으로 분석하였는데, 주목할 것은 두 공동체 모두 결핍된 친밀감 충족과 같은 개인적 차원의 욕구로 인해 공동체가 형성되는데, 이후 외연 확장의 단계로 발전되며 사회적 활동이 증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조선족 결혼이주여성 공동체 연구로는 서태실·이윤정(2017)이 초등학교 자녀교육

경험을 탐색했는데, 자조모임은 자녀교육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다국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다국적 공동체는 정서적 유대감 형성(정성미 2010)을 위해 자조모임이 형성되기도 하며, ‘톡투미’와 같이 ‘나눔’과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을 목적으로 한 사회적 활동이 중심을 이루기도 한다(이진이 2011). 한편, 결혼이주여성들에게 공동체의 의미를 탐색한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공동체 활동은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다. 이은지(2017)가 수행한 ‘한울림 공동체’에 관한 연구에서는 가족적 의미와 다문화 교육적 차원으로 의미가 나타났으며, 김영옥(2010)의 연구에서 공동체는 정체성과 한국 사회로의 주체적 통합의 의미를 가진다. 선행연구들을 공동체 구성 주체에 따라 유형화한 결과 에스닉 공동체는 개인적 문제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체를 형성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주여성들의 모국문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는 수단으로 기능한다. 하지만 에스닉 공동체의 활동은 점차 확대되어 사회적 네트워크가 확장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다국적 공동체는 다문화 인식개선이나 교육과 같은 거시적인 사회적 차원의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에스닉 공동체나 다국적 공동체 모두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의 활동이 교차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결혼이주여성 공동체 관련 선행연구들은 주로 특정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단일사례 연구로 특정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 결혼이주여성들의 공동체 활동 경험을 상세하게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공동체에서 상호문화실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활동 과정에서 이주여성들이 경험하는 임파워먼트 형성의 맥락을 탐색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파편적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관련 선행연구를 확장 시키고자 한다. 공동체 활동으로 결혼이주여성은 자율성을 획득하고, 사회적으로는 상호문화 형성에 기인한다면 결혼이

주여성의 공동체에 대한 총체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공동체가 다양화되고 확장되고 있는 시점에서 상호문화실천적 관점으로 탐색하는 것은 결혼이주여성의 임파워먼트 과정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귀납적 방법을 활용해 결혼이주여성 공동체에서 상호문화실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와 임파워먼트 형성 경험은 무엇인지 심도 있게 탐색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해석학적 질적 연구 방법(Interpretive Qualitative Research)을 활용하였으며, 자료수집을 위해 초점 집단 면담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활용하였다. 질적 연구의 특성은 경험 당사자인 내부자의 시각을 중요시하며, 현상이나 행동이 발생한 맥락을 이해하는 점이다(Bryman 1992). 본 연구는 공동체 활동의 당사자인 결혼이주여성들의 목소리를 통해 상호문화실천과 임파워먼트 경험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을 이루고자 한다.

1. 연구참여자

질적 연구 방법 활용 시 연구참여자 경험의 동질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모두 결혼이주여성으로 공동체 구성원 간의 밀접한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체성을 경험한 당사자들이다. 이들은 결혼이주여성 공동체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전달하는 데 적합하며, 생생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총 19명이며,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20대 4명, 30대 10명, 40대 4명, 50대 1명이며, 모두 기혼이다. 출신 국가는 베트남 10명, 중국 9명이다. 공동체 활동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하 10명, 2년 이상 3년 이하 4명, 3년 이상 5명이다. 직업은 다문화 관련 직종(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 및 프리랜서 활동)이 8명, 전업주부 9명, 사무직 2명이다. 연구참여자들의 인구학적 특성과 구체적인 공동체 활동기간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참여자의 특성

그룹	구분	연령	출신 국가	직업	자조모임 활동기간	자녀	학력	체류 기간
그룹 1	1	31세	베트남	이중언어코치	1년 7개월	남/8세	전문대학 졸업	8년 9개월
	2	27세	베트남	전업주부	2년 10개월	여/8세 남/6세	고등학교 졸업	8년 3개월
	3	32세	베트남	회사원	2년 10개월	여/10세 남/8세	전문대학 중퇴	10년 3개월
	4	52세	중국	다문화이해강사	1년 9개월	남/11세	고등학교 졸업	12년 1개월
그룹 2	5	38세	중국	전업주부	2년	남/9세	대학교 졸업	12년 4개월
	6	29세	베트남	다문화이해강사	3년	남/10세 남/6세	고등학교 졸업	10년 1개월
	7	36세	중국	다문화심리상담사	1년	남/6세	박사수료	11년 9월
	8	38세	중국	중국어강사	1년	남/11세	대학교 졸업	11년 6월
	9	44세	중국	중국어강사	2년 10개월	남/16세 여/9세	대학교 졸업	16년 6월
그룹 3	10	42세	중국	통·번역	6년	남/16세 여/13세	대학교 졸업	16년 5개월
	11	42세	중국	중국어강사 다문화이해강사	6년	남/14세 남/10세	대학교 재학중	15년 1개월
	12	40세	중국	전업주부	6년 6개월	여/11세 여/3세	대학교 졸업	11년 9개월
	13	34세	중국	전업주부	6년 6개월	남/14세	고등학교 졸업	13년 7개월

그룹	구분	연령	출신 국가	직업	자조모임 활동기간	자녀	학력	체류 기간
그룹 4	14	28세	베트남	전업주부	1년 9개월	남/3세	고등학교 졸업	7년 3개월
	15	27세	베트남	회사원	1년	남/3세	대학교 졸업	5년 2개월
	16	30세	베트남	전업주부	1년	여/5세 여/3세	전문대학 졸업	5년 8개월
	17	30세	베트남	전업주부	1년	남/7세 여/4세	고등학교 졸업	7년 10개월
	18	39세	베트남	전업주부	1년 3개월	여/2세	대학교 졸업	5년
	19	35세	베트남	전업주부	1년 8개월	여/5세 남/4세	대학교 졸업	6년 4개월

2. 자료수집 및 분석

자료수집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3월 말까지 실시되었으며, 자료수집 이전에 기관 IRB 심의를 거쳐 연구승인(승인번호: 211227-1A)을 받았다. 본격적인 자료수집이 이루어지기 전 연구자는 인천시 00구 소재 가족센터를 방문하였다. 2021년 현재 가족센터에서는 현재 총 9개 자조모임(다국적 5개, 에스닉 4개)이 운영되고 있으며, 59명(중국 20명, 베트남 32명, 일본 2명, 필리핀 3명, 우즈베키스탄 1명, 태국 1명)의 결혼이주여성들이 활동하고 있다. 자조모임 구성 시 출신국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자조모임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주로 에스닉 집단이 구성된다. 연구자는 센터장에게 연구목적과 개요를 설명하고, 공동체에서 대표로 활동하는 결혼이주여성 3명을 소개받았다. 대표 3명에게 본 연구의 취지와 자료수집 과정에 대해 안내하였으며, 함께 활동하는 구성원을 대상으로 연구 참여 의사 확인 및 섭외를 요청하였다. 연구참여자의 표집은 목적적 표본 추출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참여자 기준은 한국에서의 거주기간 5년 이상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현재 자조모임에서 구

성원으로 활동하는 결혼이주여성이다. 최종적으로 총 4개의 공동체에
서 활동하는 19명의 결혼이주여성이 연구참여자로 선정되었으며, 출신
국가는 베트남 10명과 중국 9명이다. 자조모임 활동을 하는 소수의 다
른 국적 출신의 결혼이주여성들은 연구 참여에 대한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으며, 연구윤리 준수를 위해 연구참여자에 포함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공동체 활동 경험을 탐색하기 위해 초
점 집단 면담법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활용하였다. FGI는 연
구참여자들의 상호작용과 융통성 있는 비공식적 집단의 토의를 중시하
는 연구방법이다(Morgan 1997). 초점집단 FG(Focus Group)의 특성은
첫째, 유사한 경험을 한 집단으로 특정 주제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나눈
다(Schwandt 2007). 본 연구참여자 집단은 결혼이주여성 공동체 구성
원으로서 '공동체 활동'이라는 주제에 대해 집중적인 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둘째,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경험과 인식을 발
견하게 되어, 풍부한 이야기를 생성하게 된다(David 1997).

Morgan and Scannell(1998)는 FG의 수와 관련해 다각화라는 측면
에서 하나의 초점집단보다 둘 이상의 초점집단을 활용하는 것을 권장했
다. 본 연구에서는 4개의 FG를 구성하였으며, 2개의 FG은 에스닉 공동
체, 2개의 FG은 다국적 공동체로 형성하였다. 공동체에서 대표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구성원이 단체카톡방을 만들고 연구참여자들과 단톡방
을 통해 소통이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와 관련된 질의응답이 이루어지
기도 하였으며, 면접과 관련된 일정 확인과 같은 정보교환이 수시로 이
루어졌다. 자료수집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단톡방에서의 소통
을 통해 연구참여자들과 라포를 형성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연구참여자의 안전을 위해 자료수집은 실시간
ZOOM 영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집단면접은 그룹별로 평균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연구윤리 준수와 연구참여자의 권리 확보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첫째, 면접 전에 연구목적에 관한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본 연구가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이며,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 개인정보의 비밀보장 및 면접 질문에 대답하기 힘든 경우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과 면접을 중단시킬 수 있는 참여자의 권리를 고지하고 면접이 녹화되는 것에 대해 동의를 얻었다. 또한, 연구참여자 섭외가 공동체 대표자들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구자는 연구 참여의 자발적 의사를 재확인하였다. 면접 시작 시 일상적인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며 라포를 형성하였다. 주요 면접 질문은 개방형 질문을 사용했는데 연구참여자의 좀 더 주관적인 경험에 초점을 둘 수 있기 때문이다(Seidman 2009). 질문은 “공동체 활동으로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졌나?”, “공동체 활동 중에 의미 있는 경험은 무엇인가?”이다. 연구참여자의 대답에 따라 즉시 세부적인 부가 질문이 이루어졌다. 질적 연구 방법의 순환적 과정에 따라 자료수집과 분석이 교차로 이루어졌으며, 새로운 면접내용을 추가로 보완해 나갔다. 면접 종료 후 질문이 생기면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추가 자료를 보완해 나갔다.

수집된 자료는 1차 그룹 내 분석(group level analysis)을 통해 의미 단위를 도출한 후, 그룹 간 분석(across-analysis comparison)을 통해 중심 주제를 구조화하였다. 또한, 2차 분석으로 CQR(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방법을 활용하여 질적 연구 분석과정에서 우려되는 객관성 확보의 문제점을 보완하였다. CQR방법은 사례를 종합하여 수치화할 수 있어 전체적인 패턴과 개인 사례에 대한 특수성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CQR의 세부 자료 분석은 영역분류, 중심 주제 구성, 교차분석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영역분류는 전사된 원자료를 반복하여 읽으며 유사한 주제들을 묶어 분류하는 과정이다. 다음은 핵심 개념 구성으로 전사본을 바탕으로 적은 개수의 핵심 단어

를 포착하였다. 마지막은 교차분석으로 자료의 유사성을 비교·분석하였다. 영역에 대한 중심 주제를 범주화시키는 과정으로 지속적인 수정을 거쳐 원자료가 의미하는 가장 적합한 범주로 분류하였다. 모든 연구 참여자 또는 1명만을 제외한 참여자로 구성되었을 때 ‘일반적’이라고 하며, 절반 이상의 참여자에게서 나온 자료로 구성된 범주는 ‘전형적’이며, 2명 이상에서 절반에 이르는 참여자들에게서 나온 자료들로 구성된 범주는 ‘일반적이지 않은’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해 첫째, 참여자 검증(member check) 실시로 연구참여자들에게 경험의 맥락과 의미에 대하여 질문하는 과정을 통해 실재를 파악하려 노력하였다. 자료 분석 과정에서는 연구자가 이해하고 해석한 내용이 연구참여자의 의미와 부합되는지에 대해 검토하는 과정이 진행되었다. 둘째,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자의 선입견이나 편향이 연구에 반영되는지 지속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연구주제와 관련된 선이해를 검토하고 자료수집과 분석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연구수행 과정 중에는 성찰일지(reflexive journal)를 작성하여 연구 과정을 검토하였다. 셋째, 동료 지지 집단(peer support group)을 구성하였다.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문화 복지 분야에서 질적 연구 수행 경험이 있는 연구자들로부터 해석과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으며, 마지막으로 자료수집과 분석과정에 대한 감사자료를 남겨 신뢰성을 확보하였다(Padgett 1998). 전사 자료와 메모를 포함하며, 분석과정에서 어떻게 범주화가 이루어졌는지 감사 가능한 흔적들을 모두 남겼다. 또한, 면접 직후에는 신뢰도 결정에 출발점이 되는 현장노트(Kirk & Miller 1986)를 기록하여 분석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Ⅲ. 연구 결과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4개의 주제영역과 9개의 소주제로 도출되었다. 4개의 주요 영역은 구체적으로 1) 다문화 공동체의 의미: 안정과 성장의 장 2) 상호문화실천: 다문화 공존 3) 어머니로서의 정체성 형성: “우리는 다문화 어머니” 4) 주체성 획득: 주변인에서 주인공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주제영역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공동체는 한국 사회에서 삶을 재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안정과 성장의 장’이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소주제로 ‘가족 기능 수행: 친밀한 가족애’, ‘성장의 디딤돌: 자기효능감’, ‘한국 사회에서 공존’으로 도출되었다. 두 번째 주제영역은 ‘상호문화실천: 다문화 공존’으로 공동체 활동에서는 내외적으로 상호문화실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주제로 ‘모국문화 유지 및 전파’, ‘새로운 문화 접촉’이 나타났다. 세 번째 주제영역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어머니로서 겪는 양육 과정에서 공동체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도출되었으며, 주제는 ‘어머니로서 정체성 형성: “우리는 다문화 어머니”’이며, 소주제는 ‘함께 양육하기: 품앗이’, ‘모국문화 자녀에게 전수’, ‘어머니로서 양육효능감’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주제영역은 공동체 활동으로 이루어진 긍정적 변화의 결과로 ‘주체성 획득: 주변인에서 주인공’으로 도출되었고, 소주제는 ‘경계를 넘어서기: 나를 드러내기’로 나타났다. 결과를 표로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표 2] 결혼이주여성의 공동체 활동 경험

주제	소주제	핵심 개념	범주	빈도
다문화 공동체의 의미: 안정과 성장의 장	가족 기능 수행: 친밀한 가족애	• 동질성을 바탕으로 한 유대감 • 심리·정서적 지지	일반적	18
	성장의 디딤돌: 자기효능감	• 능동적 자아 발견: 자신감 형성 • 함께 성장하기	일반적	19
	한국 사회에서 공존	• 사회적 관계 확장 • 정보교류 • 역경을 함께 극복하기	일반적	18
상호문화실천: 다문화 공존	모국문화 유지 및 전파	• 모국문화를 인정받음: 문화적 자긍심	전형적	14
	새로운 문화 접촉	• 문화적 이해의 확장	전형적	12
어머니로서 정체성 형성: “우리는 다문화 어머니”	함께 양육하기: ‘품앗이’	• 선 이주여성의 양육 경험 공유 • 교육 정보공유	일반적	17
	모국문화 자녀에게 전수	• 모국어 교육과 문화소개	전형적	13
	어머니로서 양육효능감	• 자녀의 성장과 변화	전형적	15
주체성 획득: 주변인에서 주인공으로	경계를 넘어서기: 나를 드러내기	• 다문화 드러내기	전형적	11

1. 다문화 공동체의 의미: 안정과 성장의 장

결혼이주여성 공동체는 ‘안정과 성장의 장’으로 의미가 도출되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새로운 가족관계 형성, 문화 적응과 같은 삶의 변화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가족과 같은 친밀감을 형성하며 공동체를 발전시켜 나간다. 공동체 활동으로 낯선 한국 사회에서 위축된 심리적 자신감이 회복되며, 성장을 이루어간다. 한편, 결혼이주여성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구성원들과의 교류는 이주로 축소된 사회적 관계를 확장 시키는 계기가 되며, 한국 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역경은 공동체 안에서 타자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것으로 공유되며 함께 극복해 나간다.

1) 가족 기능 수행: 친밀한 가족애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 남성과의 결혼으로 모국의 가족과 친족, 친구들과 물리적으로 분리된다. 이주로 인한 모국과의 물리적 거리는 익숙한 생활문화의 단절과 모국의 사적 지지체계의 기능이 상실되거나 약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결혼이주여성 공동체 구성원들은 서로에게 정서적 지지와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주로 원 가족과 분리되며 경험하는 모국과의 단절감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구참여자 결혼이주여성들이 구성원들을 가족으로 개념화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힘든 상황에서 타인으로부터 받았던 따뜻한 수용과 돌봄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족처럼 왜냐하면 저한테 가족 같아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친구도 없고. 한국말도 잘 안 통하고 잘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많아서 수다도 떨고 스트레스도 쉽게 풀 수 있고 그래서 이 모임은 저한테 아주 소중한 모임 생각하고요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구참여자 #11)

친구도 언니도 “너무 과하게 하지 말고 좀 자기한테 시간을 좀 줘라”, 그런 마음들을 얘기해 주고, 또 병원 가는데 원래는 그냥 혼자 가는 거예요. 근데 회원들이 식구처럼 챙기는 거예요. 오늘 병원 가는데 “너 몸이 어떠냐?”고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저도 아프지만 그런 말 듣고 나는 좀 많이 나은 거 같고 그런 걸 느꼈어요. (연구참여자 #14)

한국에서는 남편, 아기뿐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자조모임에 참여하고

동생들 만났고 어려운 문제 이야기하고, 동생들은 우리 가족 같은 느낌이 생겨서 행복하고 만족해요. (연구참여자 #18)

(1) 동질성을 바탕으로 한 유대감

공적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형성된 공동체에서 가장 사적인 관계에서 느끼는 “가족애”와 같은 친밀감이 공유되는 것은 결혼이주여성이란 동질성이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동체 구성원들은 국제결혼으로 인한 이주 배경과 여성이라는 공통성이 있다. 우선, 이주 배경은 한국 생활에서 능숙하지 않은 태도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자신감을 상실시키고 한국 사회에서 주체적인 삶을 실천하는 데 방해가 된다. 자신감 상실과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같은 상황에 있는 결혼이주여성과의 교류는 상호작용을 증대시킨다. 또한, 여성이란 동질성은 가정 안에서 아내이자 어머니란 공통적인 지위를 갖게 하고 역할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동질성은 유대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제 입장에서는 일단 똑같은 결혼이민자이고 똑같은 다문화가정이니깐. 뭔가 친밀감을 느끼고. (연구참여자 #4)

저한테도 그러니까 친정 언니들 같은 존재인 거죠. 저도 똑같이 이렇게 한국에 올 때는 되게 어려웠거든요. 어린 나이에 아이도 낳게 됐고 그래서 되게 많은 어려움 있었는데 이 언니들 만나고 나서 고민되는 부분은 물어보기도 하고, 어려울 때 달래 주기도 하고 가족 같은 존재인 거죠. (연구참여자 #13)

(2) 심리·정서적 지지

공동체를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은 개인적으로 당면한 문제나 어려움을

함께 공유한다. 집단 안에서 공유된 개인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지만 공유함으로써 부정적인 정서가 완화되며, 문제에 대한 관점에 있어 변화를 보이기도 한다. 개인적인 문제를 토로할 수 있는 집단분위기 조성은 구성원 간의 상호 신뢰감을 바탕으로 한다. 공동체 안에서 다루어지는 문제나 어려움은 타자의 것이지만 한국 생활에서 경험한 나의 문제이기도 하다. 집단 안에서 당사자들은 위로와 지지를 주고받는데, 이때 개인이 받은 힘은 집단으로 확장된다. 나머지 구성원들은 함께 힘을 실어 주기도 하고, 힘을 받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집단응집력이 형성된다.

저도 특히 다른 언니들을 만나서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집에서 다른 언니들 똑같은 입장이니까. 애들 얘기하고, 한국 사회 대해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니까. 마음도 편해지고 뭐 제가 궁금해하는 거 언니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럼 마음도 편해지고 좋아진 거 같아요. (연구참여자 #2)

한국 생활하면서 어려운 점 서로 이렇게 공유하고 고민도 털어놓고. 왜냐면 다 결혼이민자이다 보니까, 여기에 친척이나 뭐 친구 이렇게 있는 분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서로 의지도 하면서 가족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연구참여자 #10)

2) 성장의 디딤돌: 자기효능감

결혼이주여성들은 공동체 활동 이후 자신들의 변화에 대해 ‘심리적 자신감’이 생겼다고 표현하였다. 이는 결혼이주여성들이 문제나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자기효능감 같은 내적 자원의 형성을 의미한다. 결혼이주여성 공동체는 구성원들 간에 상호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

하고 발전하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동체 활동 과정에서 경험한 문제해결과 성취 경험, 지지적 협력 관계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 능동적 자아 발견: 자신감 형성

공동체 활동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에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내적 역량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공동체와 같은 소규모집단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은 빈번하게 자신을 노출 시키게 되며, 다른 구성원의 피드백에 따라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 한국 사회에서 편견이나 차별에 노출되었던 결혼이주여성들은 공동체 안에서 '다름'을 정상적인 것으로 온전하게 인정받는다. 공동체 집단에서 이루어진 긍정적인 상호 존중과 수평적인 관계는 상실된 자신감을 회복하게 한다. 결혼이주여성들은 공동체 활동 참여로 주체적인 자신의 힘을 확인하고 있으며, 그 힘을 사회활동으로 확장 시키려는 능동적인 욕구를 보인다.

자신감 생겨야 제가 또 어디 가서 직장 같은 거 또 일할 수 있구요. 그
쪼 아니면 어디에서 뭐 취직할 수 있는데, 제가 자신감 없으면 또 못 하
잖아요. 도전하지 못하잖아요. 같이 하면서 이제 자신감이 생겼어요.
(연구참여자 #11)

이렇게 여러 명 앞에서 대화하는 것도 배웠고, 시켜도 말 안 하는 편인
데 이렇게 자조모임에 참여하게 돼서 여러 사람 앞에 말하는 것도 자신
감을 키우고 또 물론 아직은 여기까지는 제가 바라는 거는 아직은 많이
떨었지만 그래도 전과 비교하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회원들에게 너
무 감사하다는 말도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연구참여자 #14)

(2) 함께 성장하기

연구참여자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성장의 의미는 한국어 능력, 학력 향상 및 직업 역량과 같은 자기계발 차원이기도 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한국 사회에서 능동적인 삶을 실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한국어는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경제 활동 시 갖추어야 할 필수요인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한국어 향상에 공동체 활동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 공동체 구성원들의 공통적인 목표는 한국 사회에서 안정적인 삶을 이루는 것이며, 이를 이루기 위해 공동체를 통해 필수 역량을 성취해 나간다. 지역사회에서 미숙한 한국어 사용은 다문화 배경을 드러내는 것이고, 편견과 차별의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공동체에서는 능숙하지 않은 한국어는 일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뿐만 아니라, 상호교류 시 편안한 의사소통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학습환경으로 작용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결혼이주여성들은 혼자 이루기 어려운 과업을 공동체를 통해 성취해 나감으로써 성장을 촉진하고 있고, 구성원들이 함께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점이다.

저는 사실은 자조모임에 가입하는 목적이 있죠. 좀 뚜렷하게 저는 10년 만에 한국어 능력 시험 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목적으로 이거(자조모임) 했거든요. 저희는 따로 만나고 토론하고 하면서 오히려 같이 성장했죠. (연구참여자 #8)

자조모임은 한 마디로 글로벌 맘 모임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다 글로벌 맘이잖아요. 그죠! 글로벌 맘들이 서로 이렇게 교류하고, 성장하고 공부하고 같이 발전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구참여자 #9)

자조모임 만나서 동생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제가 검정고시도

다시 공부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 때문에 한국어 능력 많이 올라갔거든요. 올해는 검정고시 중학교 졸업했고, 지금은 고등 검정고시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토픽 저번에 스피킹을 봤는데 지금은 5급 토픽을 받았고, 저번에는 자신감이 없는 사람인데 지금은 자조모임 때문에 제가 자신감을 가지고 저는 성장 해지고 있어요. (연구참여자 #17)

3) 한국 사회에서 공존

결혼이주여성들은 공동체 활동으로 협소했던 사회적 관계를 확장 시키며, 연대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공존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 연구참여자 #6은 공동체 활동에 대해 “한국에서 다 같이 힘 합쳐서 잘 살기 위해서 있는 모임”이라고 이야기하였다. 결혼이주여성 공동체는 소수자들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는 기능을 하며, 궁극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한다.

(1) 사회적 관계 확장

결혼을 목적으로 한 이주는 가족이란 사적 체계를 형성한다. 결혼이주여성 대부분은 한국으로 이주 후 바로 경제 활동을 하기보다 자녀 출산 및 양육 시기 동안 가정에 머무르기 때문에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어렵다. 공동체는 사회활동을 하기 이전인 자녀 출산 및 양육 시기 동안 결혼이주여성들에게는 유일한 사회적 네트워크가 되며, 사회활동을 하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는 사회적 관계를 확장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와 보니까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 말도 못하고 친구이지만, 친척 같은 느낌을 느낄 수 있어서 뭐 어려운 문제

있으면 다 이렇게 좋은 조연도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말도 들을 수 있으니까. 저에게는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연구참여자 #14)

저는요 이 공동체 활동하면서 저는 정말 새로운 친구도 많이 늘어났어요. (연구참여자 #16)

(2) 정보교류

집단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활동은 공동체의 형성 배경이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공통적으로 구성원들 간의 정보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정보의 내용적 측면에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소한 정보뿐만 아니라 육아나 직업정보와 같이 생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교류되고 있다. 필요한 서비스나 자원을 얻기 위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방법적 차원이 공유되기도 하고, 다양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빠르게 공유되기도 한다. 한편,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 생활에서 문화 차이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고 토로하였는데, 정보습득은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공동체에서 획득하게 되는 다양한 정보는 한국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고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 사회에 대한 정보획득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다.

모르는 정보도 서로 대화하고 교류하고 이야기하고, 우리 한국 사람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솔직히 우리 이민자라서 한국에서 오래 살아야요. 남편, 자녀들이 다 한국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기 알아야 해요. (연구참여자 #5)

정보도 많이 얻었어요. 언제 어디에서 다문화 강사 교육 있다는 거, 어디에서 사람 모집한다. 그런 정보도 많이 얻었어요. 지금 집에서 놀고 있는 알바하고 싶은 친구한테 어디 있다는 거(구인정보) 전달해 주고, 그런 거 도움이 완전히 많이 돼요. (연구참여자 #9)

친구들과 더 친해지게 되고 육아나 사회생활 등에 대한 좋은 정보, 경험을 서로 나눠서 한국 일상생활에 빨리 익숙해집니다. (연구참여자 #19)

(3) 역경을 함께 극복하기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 생활에서 자녀 양육과 문화적응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게 된다. 우선, 가족 확대기에 이루어지는 자녀 출산 및 양육 과정에서 결혼이주여성은 어머니 역할부담으로 양육 스트레스를 겪는다. 이때 양육 스트레스는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족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문화적응에 있어 낮은 한국문화와 모국문화의 통합과정에서 혼란스러움에 직면하게 된다. 결혼이주여성들이 겪는 문화적응과 양육 문제는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의 공통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깊은 공감을 이루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자신의 역량으로 다른 구성원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저는 00씨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네 00씨는 우리를 많이 도와주시고 모르는 거 너무 많아요. 진짜 그 어디서 누구도 믿을 수 없는데.. 00씨 믿고, “00씨, 나 이거 문제 생겼어요.” 계속 와서 해결해 주고 엄청 도움 많이 받았어요. (연구참여자 #12)

한국 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거 문화 차이랑 음식 같은 거 그런데 이 모임 통해 도움 많이 받았어요. (연구참여자 #16)

3년 전에 아기 낳았는데 초보 부모라서 제가 스트레스 많이 받고 남편과 사이 관계가 안 좋더라고요. 맨날 싸우고, 근데 여기 참여하면서 친구들이 도와주어 어려운 문제들이 풀릴 수 있었고, 남편과 관계도 좋아졌어요. (연구참여자 #18)

2. 상호문화실천: 다문화 공존

결혼이주여성 공동체에서는 한국문화, 이주여성 출신국의 모국문화 그리고 다른 구성원의 문화가 교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스닉 집단에서는 모국문화가 더 빈번하게 구현되며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반면, 다국적 집단에서는 자신의 모국문화와 다른 구성원의 문화가 상호 교차해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에스닉 집단과 다국적 집단에서는 주류사회인 한국의 문화가 공통적으로 교차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결혼이주여성 공동체의 집단 구성에 따라 교차문화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나지만, 모든 공동체 집단 안에서는 소규모의 다문화적 생활세계가 구현되고 있다.

1) 모국문화 유지 및 전파

결혼이주여성들은 공동체 활동 과정에서 모국의 전통음식을 함께 만들어 먹기도 하고, 모국어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특히, 에스닉 집단에서는 비공식적인 교류나 모임이 있는 경우 주로 모국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해소하고 모국문화의 정체성을 유지 시키게 된다. 공동체에서 모국의 전통춤을 함께 배

우고 지역사회에서 공연 활동을 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은 적극적인 문화 매개의 역할 수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은 공동체 활동을 통해 모국문화를 발현하기도 하고, 적극적으로는 한국 사회에 전파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희가 친구네 집에 가서 중국 요리를 휘귀도 먹고, 만두도 빚어서 같이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했었어요. (연구참여자 #10)

나라마다 다 문화 있잖아요. 우리 중국문화 한국 사람한테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소수민족이잖아요. 한국 사람에게 많이 알려주기 위해서 춤 만드는 거예요. 반응 좋아요. 그냥 모르는 거 우리가 알려주는 거 너무 신기하다 중국도 이런 거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연구참여자 #12)

모국문화를 인정받음: 문화적 자긍심

결혼이주여성들은 문화를 전파하는 공동체 활동 과정에서 모국에 대한 문화적 자긍심을 경험하게 된다. 주류사회의 문화가 지배적인 환경에서 소수자인 결혼이주여성들의 모국문화는 소외되거나 인정받기 어렵다. 개인적으로 모국문화를 재현하고, 한국 사회와 공유하는 것이 힘든 상황에서 공동체의 집단활동은 모국문화 실천을 가능하게 한다. 한국에서 모국문화가 결혼이주여성 자신들을 통해 전달되었을 때 긍정적인 반응과 정서적 교류가 이루어진다. 모국문화가 한국 사회에서 긍정적으로 수용되는 경험은 결혼이주여성에게는 낯선 주류사회에서 자신이 인정받고 수용되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국의 경로당이요. 어르신 대상으로 중국문화, 중국노래 이런 거 해 드

렸어요. 어르신들 엄청 즐거웠어요. 어르신들이 그 중국 침밀밀 노래 엄청 좋아했어요. 저도 너무 기뻐요. 자신감도 생기고 자랑스러웠어요.
(연구참여자 #4)

관객들이 다 좋아하시고, 중국에도 이런 춤도 있고, 의상도 있구나! 되게 신기해하고 많이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다들 평가를 좋게 해주시더라고요. (연구참여자 #10)

우리 무대에서 공연 끝내고 한국 사람들이 다 박수쳤잖아요. “잘했다” 그때 한국에서도 우리 중국문화도 인정받는구나! 하는 느낌 많이 들었습니다. (연구참여자 #11)

2) 새로운 문화 접촉

문화적 이해의 확장

공동체에서는 다른 국가 출신의 이주여성들과의 상호교류 과정에서 새로운 문화를 접촉하게 된다. 결혼이주여성 공동체는 새로운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상호문화 교류는 주로 다국적 집단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결혼이주여성들의 이러한 상호문화 경험은 문화적 이해를 확장 시킨다. 타인에 대한 수용성은 그 사람의 문화를 알고 있거나 함께 경험했을 때 더 많이 나타난다. 구성원들 간의 상호 긍정적인 관계는 문화적 이질성에 대한 개방적 태도와 수용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문화적 이질성을 낮설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 새롭고 흥미롭게 여기고 있으며, 공동체는 상호문화존중 분위기가 조성된다.

제가 느낄 때는 우리나라 의상도 멋지지만 다른 나라 의상도 너무 멋지

고 예쁘잖아요. 다른 나라 의상 입어본 적 있는데, 한글날 그때는 기념 때문에 저희가 다 자기 나라 의상 입고 활동했거든요. 너무 멋있었어요. 네 신기하죠. (연구참여자 #1)

베트남 옷 입으면 다른 나라 언니들이 예쁘다고 베트남 사람 진짜 예쁘다. 베트남 전통 옷 개발해서 편하게 입고 화려하게 만들어요. 또 다른 나라 옷들 보니까 화려하고 진짜 나라마다 특징이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더 존중해 주어야 하고 가끔 입고 싶어요. (연구참여자 #2)

음식대회에서도 같은 두부인데 요리 방법 이렇게 다르구나! 되게 신기했어요, 그 내용이 너무 재밌어요. 서로 이렇게 만나니까 공감하고, 다른 나라 문화 다 공감하니까 그래서 서로 다 이해하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6)

나라별 요리 다 만들어서 서로 먹어 봤어요. 베트남 친구들 많이 만났는데 과일 먹을 때 소금 찍어서 먹는대요. 그리고 과일 깎을 때 안쪽으로 칼을 쓰잖아요. 근데 베트남은 칼 바깥쪽으로 과일 깎아요. 베트남 문화 알게 됐어요. 신기하고 재밌어요. (연구참여자 #9)

3. 어머니로서 정체성 형성: “우리는 다문화 어머니”

결혼이주여성들은 다문화 자녀의 어머니로서 다른 양육 경험을 하게 된다. 연구참여자 #2의 “언니들도 똑같은 다문화 엄마 입장이니깐요”라는 언어적 표현에서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자녀 양육에 있어 일 반가정과는 차별성이 있으며, 다문화가정만의 공통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결과 다문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나

양육지원이 공동체 안에서 해결되고 있다. 공동체에서 구성원들은 상호 양육지원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집단에서 이루어진 양육지원은 문제해결이나 완화와 같은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다문화 자녀의 어머니로서 겪었던 양육 어려움은 공동체의 도움으로 완화되거나 해결을 통해 더 발전적인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양육효능감 성취는 ‘다문화 어머니’로서 긍정적인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게 된다.

1) 함께 양육하기: ‘품앗이’

결혼이주여성들은 서로의 자녀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리양육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유아기 자녀는 주 양육자가 밀착해서 돌보아야 하는 특성이 있는데, 결혼이주여성들의 자녀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결혼이주여성 중에 친정어머니가 한국에 와서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사례들이 있었는데, 경제 활동을 하는 결혼이주여성에게 친정어머니의 양육지원은 도움이 되지만, 언어적 제약으로 완전한 양육자 역할 수행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병원 진료 시 한국어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친정어머니를 대신해 한국어가 능숙한 다른 구성원이 자녀의 병원 진료에 보호자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 밖에도 공동체 구성원들은 자녀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의 자녀를 돌봐주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병원 진료 동행이나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서 연계해 주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양육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내가 지금 직장 다니는데, 아기 아팠어요, 아기 아프면 병원 바로 가야 하니까 친정엄마 계신다 하더라도 한국말 못해요. 병원 가더라도 그래

서 친척도 없고 누구도 없기 때문에 00씨한테 전화해서 아기 아파요. 그러면 친절엄마하고 아기 데리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병원에 가 주고, 너무 고맙고 진짜 감동 진짜. (연구참여자 #12)

애들 문제 생기면 언니한테 부탁하고요. 그 언니 바쁘면 다른 언니한테, 애들도 한 시간 두 시간 봐주고 좋아요. 토요일이나 일요일 시험 볼 때 아니면 진짜 바쁘데 보낼 데 없어, 그래서 언니들한테 부탁해요. (연구참여자 #16)

(1) 선 이주여성의 양육 경험 공유

자녀 양육을 먼저 수행한 결혼이주여성은 공동체에서 어머니로서 좋은 역할모델이자 양육지원자가 된다. 양육환경은 양육자의 문화적 신념에 따라 결정되는데, 결혼이주여성들 대부분은 이주 후 문화적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양육자가 된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한국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 모국문화의 신념이나 관습에만 의존해서 양육하기보다 한국의 양육문화에 많은 비중을 둔다. 자녀 양육을 처음 수행해 보며, 더욱이 아직 한국의 양육문화를 접하지 못한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한국에서 자녀를 먼저 출산하고 양육한 선 이주여성의 양육 경험은 상당한 도움이 된다. 한편, 민족 집단에 따라 양육방식에 차이가 있는데, 공동체에서는 다양한 국가의 양육방식이 공유되고 있으며, 결혼이주여성들은 특정 국가의 양육문화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기보다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하고 이상적으로 판단되는 양육 방법을 선택하는 유연성을 보인다.

서로 아이 양육하는 방법 그런 거 여기(한국) 방법이라든지 알려주시니까 저희가 따라서 해요. 저희 외국인이라서 양육하는 방식도 다르거든

요. 한국에서는 다르니까, 그분들은 한국에 온 지 꽤 오래된 거 같아요. 그분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저희한테 전달해 주거든요. 한국에서 가르쳐주는 방식하고 중국, 베트남 그렇게 비교하면서 좋은 점을 배우게 되고. (연구참여자 #1)

자조모임 덕분에 한국 경험 많은 언니들께서 경험도 공유해주고, 육아하고 영양 어떻게 하는지, 어떤 음식 췌는지 다 알려줘서 좋습니다. (연구참여자 #15)

(2) 교육 정보공유

아동기는 학교 진학으로 본격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양육자의 역할이 확대된다. 결혼이주여성들은 모국과 다른 한국의 교육시스템에서 자녀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교육과 관련된 정보는 사교육이나 학부모들 간의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공유되는 경향이 있다. 실질적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은 자녀성장에 따라 상급학교 진학, 필요한 교육 내용 및 과정 등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교육 정보를 접하지 못하고 있다. 마땅히 자녀 교육과 관련된 지원 방법과 정보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구성원들은 서로의 경험이나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어머니로서 자녀교육 지원 역할을 수월하게 한다.

저보다 한국을 먼저 왔잖아요. 그니까 다 물어보고 학습지 시키고 있고, 이런 거는 좋고 이런 거는 안 좋고 다 거의 언니들한테 상담받는 거 같아요. 딸이 여덟 살이 되어서 그때 일 학년이 되잖아요. 그 문화센터에서 거기 다문화 자녀 생활 서비스라는 그 서비스 있어요. 그거 받는 중인데 너무 좋고, 좋아서 000씨한테도 알려주고 돌이 다 받고 있고 또 계속 받고 싶어요. (연구참여자 #2)

서로 다 학부모 입장에서 아무래도 자조모임 통해서 제가 모르는 거 다
큰 분 통해서 전달받는 게 도움 돼요. (연구참여자 #7)

진학할 때 저희 중국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지역에서 살면 바로 초등학교
다니면 그냥 중학교 가면 되는데, 여기(한국)는 1지망 2지망 써야 하
는 부분도 있고, 또 지금 큰애가 중3이어서 내년엔 고등학교 올라가요.
오늘 안 들어오셨지만 00는 큰 자녀가 지금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저보
다 선배여서 그분한테도 물어보고, 지망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이런 것
도 알아보기도 하고, 서로 물어보기도 하고.. (연구참여자 #10)

2) 모국문화 자녀에게 전수

모국어 교육과 문화소개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 생활에서 모국어 사용을 거의 하지 않게 되
는데, 모국어를 사용했을 때 주류사회의 구성원들로부터 불편한 정서를
느끼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동체에서는 모국어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
는 언어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공동체 활동 과정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은
모국어 사용을 촉진하게 되며, 자녀에게도 모국어를 교육하게 된다. 다
문화 자녀의 발달에서 언어 지체는 어머니의 서툰 한국어 사용이 원인
으로 지적된다. 연구참여자 결혼이주여성들 자녀에게도 언어 지체가 나
타났으나, 적절한 개입과 이중언어 환경 제공으로 한국어와 모국어를 습
득한 사례들이 있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공동체 활동으로 모국어뿐만
아니라 모국문화를 자녀에게 알려주고 함께 체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언어적, 문화적 배경은 모성 자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한국 나라인데 베트남말 하면 좀 이상하고, 여기(공동체)에서는 어색한 것도 없고.. 베트남 엄마니까 아이들한테 너는 베트남 말 알면 좋다고, 애들한테 자랑할 수 있어요. (연구참여자 #2)

“엄마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중국의 어떤 민족의 옷이고, 그 사람들은 어디에서 살고 어떤 축제에서 이런 옷을 입고 어떤 춤을 춘다.”라고 얘기를 해주죠. 신기해하죠. 음악도 옷도 다르지만 비슷한 축제 한다고 알려주죠. (연구참여자 #13)

우리 아기는 한국 사람인데 베트남 사람도 되고, 이중언어 프로그램할 수 있어요. 동생들이 알려줘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자신도 있고, 한국말만 아니고 베트남 말도 얘기하면 더 좋고요. 아기 지금은 엄마와 이야기할 때 베트남 말도 이해하고 있고 아빠하고 한국말로 말하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애들보다도 더 좀 빨리 발달해서 너무 좋아요. (연구참여자 #18)

3) 어머니로서 양육효능감

자녀의 성장과 변화

본 연구 결과 결혼이주여성들은 공동체 활동이 자녀의 성장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자녀의 긍정적인 발달과 자녀와의 관계에서 변화를 느끼기 때문이다. 공동체 활동을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은 양육 스트레스가 감소 되고, 자녀와 함께 활동함으로써 의미 있는 상호작용이 증가한다. 또한, 양육정보나 기술을 습득해 양육 시 실천하게 된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자녀발달에 대한 이해와 양육 태도에 있어 변화를 보이는데, 자녀의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로 나

타난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자녀의 발달과업 성취를 경험하게 되면서, 자신의 양육 능력에 대한 신념을 갖게 된다.

근데 집에서 혼자 있으니까 사회성 제한 있잖아요. 엄마밖에 없으니까. 근데 친구같이 모여서 노니까 사회성 발달이라는 거 많이 도움이 된 거 같아요. (연구참여자 #1)

엄마 피곤해서 안 놀아주고, 놀아주고 그러면은 서로 부딪히는 일이 많거든요. 아이랑 활동하니까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아이랑 엄마 관계 많이 좋아진 거 같아요. (연구참여자 #3)

아기 발달 어떻게 되는지, 엄마가 아기 성격 더 많이 알게 돼요. 아기가 궁금한 거 많은 나이이니까 그래서 그 엄마가 설명해 주고 아기가 배우는 거 많이 있어요. (연구참여자 #17)

아기 좀 커서 유치원 보내고 자조모임 참여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애들 가르치는지 알게 되고, 아기 지금 전보다 말을 빨리하는 거 같고.. (연구참여자 #19)

4. 주체성 획득: 주변인에서 주인공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은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며, 반복된 차별이나 소외의 경험으로 주류집단과의 경계에서 주변인 위치에 머무르게 된다. 본 연구참여자 결혼이주여성들은 공동체 활동을 통해 형성된 자기 신뢰와 확신은 주류 사회에서 이주 배경을 자신 있게 드러내는 행동으로 나타나며, 주체적

으로 삶을 구성해가는 능동성을 발휘하게 된다.

1) 경계를 넘어서기: 나를 드러내기

다문화 드러내기

다문화 배경이 한국 사회에서 드러났을 때 인정받고 수용되기보다 차별을 경험한 결혼이주여성들은 이주 배경을 자신 있게 드러내지 못한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주류사회에서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숨겨야 하는 상황에 놓일 때 심리적 불편함을 겪는다. 연구참여자 #15는 “다문화가정도 이제 좋은 가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토로하였는데, 다문화가정이 좋은 가정이란 긍정적인 신념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결혼이주여성들이 느꼈던 우리 사회의 다문화 가족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단편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공동체 활동으로 자신에 대한 존재와 가치에 대한 신념을 갖게 되는데,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는 다문화다” 그 뭔가 좀 소리도 낼 수 있고, “나는 베트남 사람이다” 그런 소리 낼 수 있는 거 같아요. (연구참여자 #4)

모임 전에는 우리도 중국인이어서 진짜 못 다녔어요. 솔직히 말해 이 사회는 어떤지 모르고 이 모임 통해서 내가 더 도전할 수 있는 일도 생기고, 자신감 생겼어요. “그래 해 봐, 해보자” 내가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생긴 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연구참여자 #12)

사실은 저번에 다문화가정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좀 자신감이 없는데 근데 요새 이런 우리 자조모임 덕분에 우리 다문화 엄마들 가정도

좋은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자신감도 늘었어요. (연구참여자 #15)

본 연구 결과 공동체 활동은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문화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도출되었다. 더 이상 결혼이주여성들은 주류사회에서 타자화된 수동적인 대상이 아니라, 동등한 주체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모국문화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주류사회에서 모국에 대한 저평가나 문화적 편견에 직면했을 때, 침묵하지 않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모국에 관해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노력한다.

저희는 좀 다문화 사람 베트남 사람 중에서 저희가 대표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공연할 때마다 저희가 문화를 알려주고 그런 거를 공연했었잖아요. 그럴 때 저희가 베트남 사람 중에서 대표로 나가서 홍보하고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연구참여자 #1)

한국 분들 ‘메이드 인 차이나’ 이게 되게 딱 중국 제품 하면 나쁘다 질이 떨어진다. 가품이고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 거죠. 문화뿐만 아니라, 저는 그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드려요. “만약에 메이드 인 차이나 적혀 있는 거 없으면 한국 사람 아예 하루도 못 산다.”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또, 일단 처음에 중국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형성됐지만, 저희 스스로도 이제는 한국에 적응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런 의미로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연구참여자 #10)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이 보이는 이러한 행동은 주류사회의 문화 못지 않게 소수집단인 자신들이 모국문화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적극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상호문화 존중에 대한 실천적 행동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참여자 결혼이주여성들은 자신이 모국을 대표한다는 사명감을 표명했는데, 이는 한국 사회에서 자신들의 실천적 행동의 필요성과 지속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 공동체 활동에서 나타난 상호문화실천과 임파워먼트에 초점을 두고 심층적인 고찰을 이루었다. 본 연구의 핵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결혼이주여성 공동체 활동은 임파워먼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사회구성원으로서 능동적인 삶을 실천하는 전환적 계기로 작용한다.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은 모국문화의 적극적인 발현과 타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을 바탕으로 공동체 내외적으로 상호문화실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상호문화실천적 행동은 임파워먼트 형성의 결과이며, 공동체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역량으로 더 적극적인 상호문화실천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공동체 활동 과정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의 자신감이 회복되는 심리적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관계에서 상호신뢰, 협력, 지지적인 특성이 나타났는데, 이는 불확실성을 극복하게 하고 자기효능감을 발휘하는 원동력이 된다. 결혼이주여성들은 공동체 활동으로 심리적 자신감과 성장 욕구와 같은 내적 자원을 획득하게 되며, 이는 한국 사회에서 안정적인 삶을 이루는데 보호 요인으로 작동한다. 결혼이주여성들이 겪는 심리적 위축과 자존감 손상은 한국에서 오래 생활한 중·장기 결혼이주여성들에게도 나타났는데(오은주·고진호 2021), 한국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배제의 문제로(이현심 2014) 개선되어야 한다

는 필요성이 지속해서 강조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을 자원의 수혜 대상이 아닌 스스로 자원을 획득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동성을 지닌 주체로 인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다문화 정책은 ‘다문화주의’를 선언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동화주의나 온정주의적 성격이 강하고, 일부에서는 아직도 차별 배제주의적 경향도 남아있다(김성호 2019). 다문화 수용성은 2015년도 54.0점에서 2018년도에는 52.8점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이는 다문화가족이 겪는 일상적 차별 및 소외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여성가족부 2021). 소수 이주자인 결혼이주여성들이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 기회는 제한적이며, 다문화에 대한 배타성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지지망의 형성은 상호작용, 상호원조 등의 역할을 가능하게 하고(Moon and DeWeaver 2005), 사회적 지지로 결혼이주여성들의 사회적 고립은 감소 된다(정혜원 2020). 공동체에서 이루어진 구성원들 간의 상호신뢰, 협력, 지지적 관계가 지역사회 구성원들과의 관계에서도 형성될 때 주류사회와 이주 소수민이란 이분법적 경계를 극복하고 더불어 사는 통합사회가 실현될 것이다.

둘째, 공동체 안에서 형성된 지지적 협력 관계는 한국 생활에서 결핍된 욕구나 자원을 보완해 주는 기능을 한다. 실제로 한국 생활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은 소유한 자원을 넘어서는 다차원적 환경의 요구를 경험하고,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한다. 의사소통의 한계와 문화적응 과정에서 미충족된 욕구를 해소하지 못하고 높은 수준의 우울증과 사회와의 단절감을 느낀다. 또한, 개인적, 대인관계, 사회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실패경험의 누적은 건강한 가족 체계를 위협하게 된다. 공동체에서 공유되는 결혼이주여성의 문제는 타자가 아닌 내가 겪었던 문제이며, 앞으로 내가 겪을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결혼을 통한 이주와 여성이란 동질성은 문제 상황에서 협력적인 태도로 나타난다.

공동체 안에서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보나 도움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함께 해결해 가는 과정은 공적 서비스의 역할을 보완하는 기능으로 볼 수 있다.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만들어진 협력적 관계는 활동이 끝나더라도 지속 가능한 자원이 된다. 이에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서 ‘다양한 사회참여 확대’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자조모임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자조모임 사업의 확대는 모든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던 포괄적인 정책 범위를 축소하고, 자립을 장려하여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

셋째, 결혼이주여성들은 삶의 맥락에서 공동체 활동 참여 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인지하고 있으며, 변화를 ‘성장’으로 의미화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안정적인 삶을 이루기 위한 필수 역량을 갖추기 위해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자기계발을 이루어 나간다. 한국어 능력, 학력 증진과 같은 목표를 정하고 활동하는 것과 동시에 직업정보를 공유하며 기회가 되면 경제 활동에 참여한다. 이는 자조모임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한국어 습득과 한국문화 적응에 대한 지체 현상(김영옥·한재희 2014)이 나타난 것과 다른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은 공동체를 한국어와 문화 습득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공동체는 일상생활 기술은 물론 경제 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노동시장 진입 시 필요한 요건들을 성취할 수 있는 교육적 환경으로 작용한다. 공동체의 교육적 기능을 잘 활용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법을 제안한다. 결혼이주여성 스스로의 자립과 능동적인 주체로서 자조모임은 그 가치가 충분하다(임선우·윤황 2017). 따라서 공동체 운영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주체적으로 하되 스스로 확보하기 어려운 자원이나 인력을 최적으로 투입하는 것이다. 전문성을 지닌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전문적 역량을 촉진하고, 한편으로는 결혼이주여성들이 개인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결혼

이주여성들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신들의 정체성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임파워먼트가 향상된다(김효순 2013).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임파워먼트 되는 공동체의 핵심 가치는 그대로 유지하되, 공동체 활동을 통해 형성되기 시작한 결혼이주여성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연계되어 있다는 소속감을 느끼게 되고, 지역사회는 결혼이주여성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넷째, 결혼이주여성 공동체 활동에서 나타난 상호문화실천은 주류사회에 만연해 있는 다문화에 대한 배타성을 완화 시키고 상호문화 기반 마련에 기여한다. 문화작용 과정에서 배제되었던 모국문화를 공동체 안에서 자유롭게 소개하고,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의상을 입어보며 직접 체험한다. 대외적으로는 공연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모국문화를 재현해 낸다. 정유리(2016)의 연구에서 공동체는 소속감이나 정서적인 지지 차원을 넘어 지역주민과 모국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하는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모국문화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받았을 때 문화적 자긍심과 성취감을 느낀다. 상호문화 교류 과정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이 나타난 타문화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와 높은 문화 수용성은 다문화의 조화로운 공존과 통합사회 실현에 필요한 상호문화 역량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 경험의 확장은 개인 안에는 다양한 문화의 수용이 가능하며, 사회적으로도 다문화 공존의 가능성을 나타낸다. 결혼이주여성 공동체에서 나타난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지역사회로 확장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결혼이주여성들로 구성된 공동체는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는 것에 비해 한국 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공동체나 학부모모임과 같은 외부체계의 활동은 ‘함께 참여할 사람이 없는 것’이 장애 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박명숙·송사리 2020). 선행되어야 할 것은 다문화가족과 지역사회와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상호교류의 기회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하지만 우호적이지 않은 사회적 환경 속에서 단지 상호교류의 양적인 증가는 오히려 차별 문제가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환경 자체를 변화시키는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김이선 외 4인 2020). 아직 네트워크를 만들고 활용하는 것이 어려운 결혼이주여성들에게는 지역사회에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지역주민들은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다문화가족과의 긍정적인 교류가 증가함으로써 다문화에 대한 편견을 해소할 수 있다.

다섯째, 공동체 활동은 결혼이주여성에게 다문화 어머니로서의 정체성 형성과 양육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공동체 구성원들은 모두 다문화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이며, 자녀 양육 과정에서 유사한 문제에 직면한다. 결혼이주여성들 대부분은 자녀 양육에 있어 부족한 사회적 지지체계로 양육지원을 받지 못하며, 더욱이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자녀를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라 혼란스러움에 빠진다. 공동체 활동을 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은 자녀 양육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공동체 단체 카톡방에 글을 올리고, 대처 방법과 필요한 자원을 공유한다. 양육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와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교류하며, 한국에서 부족한 양육자원을 메꾸어 주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결과는 공동체에서 자녀교육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고, 좋은 부모로서 역할을 해나간다는 서태실·이윤경(2017)의 연구 결과와 같다. 한편, 결혼이주여성들이 공동체 활동을 통해 경험한 사회적 '인정과 수용'은 어머니 역할에서도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언어적, 문화적 배경을 모성 자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자녀에게 모국어 학습을 시켜 이중언어를 성취하게 하고, 모국문화를 적극적으로 전수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혼이주여성들의 이러한 변화

는 언어적 역량이나 문화 다양성은 어머니로서의 강점이지만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때 모성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지영 2019).

마지막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의 개인적인 성장과 변화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지만, 자신이 속한 사회적 위치와 관계를 이해하고 그 관계의 바람직한 변화를 도모하는 실천적 행동을 통해 사회를 재구성해 나가는 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사회의 중요한 자원이 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다문화사회 진입으로 많은 도전을 받았고, 사회통합이란 거시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법을 제정하고 정책을 발전시켜 왔다. 향후 다양성은 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며, 초 다양화 사회로 진입할 것이다. 지금 한국의 다문화사회를 반추해 보고 앞으로 맞이할 초다양화 사회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다문화 공존의 실현은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조화롭고 안정적인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한 사회의 구성원들은 상호의존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끊임 없이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결혼이주여성들의 공동체 활동은 주류사회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려는 실천적 행동으로 볼 수 있으며, 이제 주류사회가 적극적으로 다문화가족과의 상호교류를 위한 실천적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에서 통합의 한 축인 정주민의 참여가 있어야 하고 이주민과 정주민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상호소통 프로그램이 요구된다(김경제·김수동 2020).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 공동체 활동을 상호문화실천과 임파워먼트에 초점을 두어 조명함으로써 공동체의 상호문화실천 기능과 결혼이주여성을 주류사회로부터 타자화된 대상이 아닌 주체성을 지닌 존재임을 규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지속 가능한 통합사회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역할을 제시하였다는데 함의를 갖는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연구참여자 특성을 세밀하게 구분하지 못한 것이다. 참여자들의 사회

인구학적 요인, 한국 체류 기간과 공동체 활동기간에 따라 경험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사회인구학적 요인, 한국 체류 기간과 공동체 활동기간에 따른 집단 간 비교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 김정제·김수동. 2020. 「상호소통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법적 개선방안연구: 다문화가족지원법상 사회통합을 중심으로」. 원광법학 36(4): 33-52.
- 김성호. 2019. 「상호문화주의에 근거한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참여 경험 연구: 사회적경제공동체 참여 경험을 중심으로」. 생명연구 52: 57-84.
- 김안나·최승아. 2013. 「결혼이주여성 임파워먼트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 29(2): 189-229.
- 김영옥. 2010. 「인정투쟁 공간/장소로서의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공동체: '아이다' 마을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철학 14: 31-64.
- 김영옥·한재희. 2014. 「결혼이주여성들의 결혼생활에서 나타나는 불안 경험에 대한 연구: 경기도 S의 필리핀여성들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5(6): 2581-2602.
- 김이선·최윤정·장희영·김도혜·박신규. 2020. 「이주여성의 사회적 포용을 위한 정책 대응 방안: 사회 참여 확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정선. 2009.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귀속(belonging)의 정치학」. 이화여자 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혜선. 2019.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연계적 사회자본」. 가족과 문화 31(3): 139-178.
- 김효순. 2013. 「사회적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의 임파워먼트 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업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3(1): 327-355.
- 라순주·이희수. 2015.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조직구성원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 평생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직업교육연구 24(6): 141-167.
- 박명숙·송사리. 「2020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사회·문화적 장애요인과 보호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실천인력의 인식비교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32(4): 189-230.
- 사이드먼, 얼빙(Seidman, Irving). 2009. 『질적연구 방법으로서의 면담』. 박해준·이승연 공역. 서울: 학지사.
- 서태실·이윤정. 2017. 「조선족 이주여성의 자조모임을 통해서 본 초등학교 자녀 교육경험에 관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24): 369-391.
- 은성희·신동윤·최종진. 2015. 「해결중심 집단상담이 청소년의 개인내적 임파워

- 먼트에 미치는 영향』. *해결중심치료학회지* 2(1): 41-64.
- 이은지. 2017. 「다문화교육의 공동체성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이주여성자조단체 한울림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영. 2019. 「한국 결혼이주여성의 '어머니 역할수행'을 통한 임파워먼트 과정」.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진이. 2011. 「씨 뿌리는 사람들: 이주여성 자치 봉사모임 '톡투미' 멀리서 온 아줌마들, 발 벗고 나서다」. *월간 샘터* 497: 94-95.
- 이현심. 2014. 「다문화가정 여성결혼이주자의 한국생활 어려움에 관한 질적 (CQR) 연구」. *농촌지도와 개발* 21(1): 143-176.
- 임선우·윤황. 2017.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통번역 자조모임 특성에 관한 연구: 대구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인문사회*21 8(3): 639-660.
- 여성가족부. 2021.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18~22)에 따른 2021년도 시행계획」.
- 오은주·고진호. 2021. 「질적 메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혼이주여성의 공동체 경험 연구」. *인문사회*21 12(2): 2097-2112.
- 정성미. 2010. 「결혼이주여성의 자조모임과 정체성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의철·정미영. 2018. 「베트남 이주여성의 공동체 미디어 참여가 문화적 시민권 구축에 미치는 영향: 부산지역 베트남 목소리 팟캐스트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62(5): 136-172.
- 정혜원. 2020.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고립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정보사회와 미디어* 20(1): 589-603.
- 최미경. 2018.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공동체 활동 경험 연구」.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명민·김기덕. 2013. 「기든스(Giddens)의 성찰성 이론을 통한 임파워먼트의 재해석: 통합적 사회복지실천 패러다임에 대한 탐색」. *한국 사회복지학* 65(2): 103-130.
- 커크, 제롬·밀리, L. 마크(Kirk, Jerome & Miller, Marc L.). 1986. 『질적 연구로서의 신뢰도와 타당도』. 엄미란·김현숙·오진주 옮김. 서울: 군자출판사.
- 패짓, K. 데보라(Padgett, K. Deborah). 1998. 『사회복지 질적 연구방법론』. 유태균 옮김. 서울: 나남.

Bryman, A. 1992. *Quantity and qualitative in social research*. London:

- Unwin Hyman.
- David, L. M. 1997. *Focus groups as qualitative research*. Thousand Oaks, Calif, CA: Sage.
- Jary, J. & Jary, D. 1995. *Collins Dictionary of Sociology*. Harper Collins Publishers.
- Moon, Sung seek & DeWeaver, L. Kevin. 2005. "An Empirical Test of the Multicultural/Multimodal/Multisystems (MULTI-CMS) Approach for Korean Immigrant Families," *Journal of Social Work Research and Evaluation* 6(1): 57-74.
- Morgan, D. L. 1997. *Focus groups as qualitative research*, 2nd ed. London: Sage.
- Morgan, D. L., & Scannell, A. U. 1998. *Planning focus groups: Focus group Kit 2*. London: Sage.
- Schwandt, T. A. 2007. *The sage dictionary of qualitative inquiry*. Thousand Oaks, CA: Sage.
- “2022년 2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법무부. 2022.3.23.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569/subview.do;jsessionid=Pao09nQZm13O07Oj4R6QztOIlyeOny5zRv4XSSnD,wizard-12-xvfwr?enc=Zm5jdDF8QEB8JTJGYmJzJTJGaW1taWdyYXRpb24lMkYyMjc1MkY1NTc1NDQlMkZhcRjbFZpZXcuZG8lM0Y%3D>(검색일: 2022년 3월 31일)

국 문 초 록

결혼이주여성의 공동체 활동 경험 연구: 상호문화실천과 임파워먼트를 중심으로

김기화(인하대학교 아동심리학과 초빙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주여성 공동체 활동에서 나타난 상호문화실천과 임파워먼트 경험을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는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며, 현재 공동체 활동을 하는 결혼이주여성 19명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석학적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자료수집을 위해 FGI 방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4개의 주제영역과 9개의 소주제로 도출되었다. 4개의 주제영역은 구체적으로 1) 다문화 공동체의 의미: 안정과 성장의 장 2) 상호문화실천: 다문화 공존 3) 어머니로서의 정체성 형성: “우리는 다문화 어머니” 4) 주체성 획득: 주변인에서 주인공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의 상호문화실천 기능과 결혼이주여성을 주류사회로부터 타자화된 대상이 아닌 주체성을 지닌 존재임을 규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지속 가능한 통합사회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역할을 제시하였다는데 함의를 갖는다.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의 특성을 세밀하게 구분하지 못한 한계가 있으며, 추후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한 집단 간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결혼이주여성, 공동체, 상호문화실천, 임파워먼트, 질적 연구

Abstract

A Study on the Community Activity Experience of Married Immigrant Women:

Focusing on the Intercultural Practice and Empowerment

Kim, Gihwa (Visiting Professor, Department of Child Psychology, Inha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intercultural practice and empowerment process shown in the community activities of married immigrant women. The study participants were 19 married migrant women who had lived in Korea for more than 5 years and were engaged in community activities. Interpretive qualitative research and the focus group interview method were used for data collec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multicultural community is a place of stability and growth; (2) multicultural coexistence is a practice of mutual culture; (3) the women's identity as mothers ("we are multicultural mothers") is formed; and (4) the women acquire a new identity: from neighbors to protagonists. This study has limitations because it does not consider the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and a comparative study between the groups is needed.

Key words: Married Immigrant Women, Community, Intercultural Practice, Empowerment, Qualitative Research

일반논문

Ⅱ 마포·용산·성동(마용성) 현상의 이해:

직주락 센터의 형성을 중심으로

모종린·강예나

Ⅱ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이 지역민의 주거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천호동 320과 천호동 321-18을 중심으로

고은정·박지혜

Ⅱ 인천시민대학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교육 요구 분석

김명랑·윤초롱·김월용·김종윤

Ⅱ 서울 청년의 행복격차:

잠재프로파일분석의 적용

이민주·박민진

Ⅱ 시민들의 정부 대응성 인식이 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

인천광역시 도시환경과 환경 문제를 중심으로

왕혜진

Ⅱ 코로나 팬데믹 기간 인천시 가계부채 동향의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

서봉만·최태림·김다애

Ⅱ 인천지역 청년층의 일자리 특성 및 고용의 질 분석

황광훈

마포·용산·성동(마용성) 현상의 이해:

직주락 센터의 형성을 중심으로

모종린*, 강예나**

I. 서론

II. 선행연구 검토

III. 마용성 현상의 지표 검증

IV. 직주락 관점의 마용성 현상 분석

1. 락
2. 직
3. 주
4. 소결

V. 직주락 센터의 형성 사례분석: 마포·용산·성동을 중심으로

1. 마포
2. 용산
3. 성동
4. 소결

VI. 직주락 센터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

.....
*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주저자

** 연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연구원, 교신저자(E-mail: yaena0504@naver.com, Tel: 02-2123-4425)

<http://doi.org/10.34165/urbanr.2022..21.93>

I. 서론

‘마용성’은 2017년 이후 ‘마포’, ‘용산’, ‘성동’(이하, 마용성)이 서울의 신흥 주거지역으로 주목받으면서 쓰이게 된 부동산 업계의 용어이다. 2000년대 후반부터 마용성의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2016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상위권으로 부상, 강남 3구와 더불어 ‘강남 3구 + 마용성’ 6강 체제의 한 축을 이룬다. 마용성 현상은 1980년대 형성된 강남 3구 독주 체제를 흔든 최초의 대규모 부동산 시장의 재편성을 의미한다. 서울 부동산 지형을 바꾸고, 강남·북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지역발전 모델 연구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마용성 현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언론이 주목하는 재개발을 통한 아파트 공급과 도심 교통 접근성으로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서대문구, 동작구, 동대문구, 은평구 등 2010년대 초반 마용성과 같은 시기에 뉴타운 사업이 진행된 지역에서는 마용성 수준의 아파트 가격 상승이 발생하지 않았다.¹⁾ 따라서 마용성 현상을 이해하려면 아파트 공급과 도심 접근성 외의 다른 요인을 찾아야 한다.²⁾

1) 뉴타운은 2002년 시정운영 4개년계획(2002-2006)에 의해 대규모 도시기반시설의 공공 투자를 포함한 노후 불량주택지의 정비로 강남·북 격차를 해소하고자 시작된 사업으로, 2002년 시범지구 3개, 2003년 12개, 2005년 이후 11개 등 총 26개 지구가 지정되었다(서울특별시 2015/5/8). 마용성 중 2022년 현재 뉴타운 아파트가 공급된 지역은 마포구와 성동구로, 용산구의 가격 상승은 뉴타운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도심 접근성이 좋고 뉴타운이나 재건축이 준공된 자치구는 마포와 성동 외에도 강동구, 동작구, 서대문구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지역에서는 마용성 수준의 가격 상승이 일어나지 않아, 아파트 가격의 상대적인 변화를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2) 교통과 지하철 접근성의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는 접근성의 수혜 지역으로 마용성을 지적하지 않는다. 교통 접근성의 경우 서울 대규모 아파트단지들의 지역별 영향력 차이가 거의 없다(김광영·안정근 2010). 지하철 접근성의 영향을 받은 지역은 마용성 이외의 자치구들이고, 임차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 월세, 전세, 매매 등 임차유형에 따라 전철 접근성이 아파트 가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남형권·서원석(2021)에 따르면, 매매의 경우 성북구, 은평구, 중랑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구로구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직주락(職住樂) 센터(LWP Center: Live-Work-Play Center)’이론으로 마용성의 부상을 설명한다. 직주락 센터 이론이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인해 근거리에서 일하고 즐기며 생활하는 지역이 도시의 성장을 주도한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을 적용하면 마용성의 성공은 새로운 직주락 센터로 자리 잡은 데 기인한다.

도시계획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직주락 센터 형성의 순서이다. 마용성의 직주락 구조는 공통적으로 ‘락(상권)’으로 시작했다. 마포구와 용산구가 주거지로 주목받기 이전인 2005년에 이미 두 지역은 골목상권을 바탕으로 청년문화를 선도하는 문화지역으로 자리매김했다. 성동구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늦은 2010년대에 시작되었지만,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골목상권이 직주락 센터화를 견인했다. 서울을 대표하는 골목상권인 홍대, 이태원, 성수동을 보유한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에서 직주락 형성이 시작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본 논문은 직주락 센터로 성장한 마용성을 분석하는 사례연구이다. 주택 공급, 교통 접근성 등 부동산 시장의 논리만으로 마용성의 차별화된 부상을 설명하는 데에는 데 한계가 있는 점에 주목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1990년대 이후 나타난 도심 회귀 현상(Birch 2002; Florida 2002b; Glaeser & Gottlieb 2006)을 설명하기 위해 직주락 센터 이론을 제안한다. 도시의 다양성과 창조성을 창출하는 도심의 구성과 역할을 제시하는 직주락 센터 이론을 토대로 마용성을 분석함으로써, 지역 발전의 역학을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으로 도시연구에 기여한다.

직주락 근접은 그동안 언론에서 지적한 직주근접과 락주근접의 연장이다. 업무지구 주변에 주거지를 갖춘 마용성은 직주근접 현상의 수혜 지역이다(머니타임즈 2019/6/5). 직주락 근접의 측정에 있어 직주근접과 락주근접을 집계할 체계적인 데이터는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직주락 센터로 성장한 마용성의 사례 분석에 집중한다. 마용성이

직주락 센터로 부상한 시점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통계청 사업체조사, 인구이동조사, 주민등록인구조사,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등의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였다.³⁾ 보도자료와 문헌들을 수집해 마용성 각 지역별 직주락 형성의 과정을 분석하였다.

논문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 마용성 현상의 이론적 틀인 직주락 센터를 설명한다. 도심의 다목적성과 고밀도를 강조하는 직주락 센터는 신도시주의적 개념들과 연결된다. 3장에서는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마용성 현상이 나타난 정확한 시점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직주락의 관점에서 각 요인들이 마용성에 집적된 시점을 파악하여, 그 순서를 종합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마포, 용산, 성동에서 직주락 센터의 완성이 이루어진 과정을 상세히 분석하여 공통점을 제시한다. 분석결과들을 토대로 6장에서는 도시 발전을 위한 직주락 센터 구축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II. 선행연구 검토

도시의 구조와 역할은 산업 구조에 따라 변화한다. 산업사회의 도시는 물질적 자본과 기술에 의한 생산 기지였다면, 탈산업화 사회의 도시는 문화의 생산과 소비를 지향한다. 가치를 생산하고 사회적 교류를 지원하는 문화 서비스의 밀집은 삶의 질을 제고하고 다양한 어메니티를 공급하며, 인적자원의 유입과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는 등 긍정적 외부효과를 창출한다(Florida 2002a; Glaeser et al. 2001; Markusen &

3) 본 연구가 선정한 ‘락’지표들의 자치구별 도보접근성과 직주일치 거주민의 데이터가 부재하고 25개 자치구별 아파트가격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모형화 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어, 각 요인별 시계열 분석으로 한정하였다.

Schrock 2006).

공동화, 높은 공실률, 황폐화 등 산업사회 도심의 기능 저하는 오히려 탈산업사회 도심 부활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Moulton 1999). 어메니티의 생산자이자 개방성의 척도인 보헤미안과 예술가는 도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난 낙후 지역에서 새로운 문화산업을 개척한다(Florida & Mellander 2010; Lloyd 2006). 개방성과 다양성을 창출하는 어메니티의 집적은 창조계층의 유입을 촉진해 지식확산(knowledge spillover)과 경제성장을 견인한다(Florida & Mellander 2010; Lucas 1988; Simon 1998). 창조인재가 유입되는 탈산업사회의 도심은 이들이 원하는 생활공간으로 변모한다(Edlund et al. 2019; Florida & Adler 2018). 사회 집단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창조인재가 선호하는 어메니티의 다양성과 자유로운 분위기를 갖춘 공간으로 진화한다(Florida 2017; Landry 2008). 이들의 주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도심은 오피스 기능뿐만 아니라 상업과 문화 서비스, 주거 등 '다기능성(multi-functionality)'을 갖추게 된다(Gottliener & Budd 2005).

거리의 다목적성을 주장한 Jacobs(1961)는 복합용도의 건물들이 균형 있게 혼합되어 활기차고 건강한 거리를 지원하는 근린주택지구를 구상했다. Jacobs의 주장을 발전시켜 1980년대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플로리다에서 시작된 '신도시주의(New Urbanism)'는 복합용도의 건물구성과 함께 생활 시설에 대한 도보 접근성을 갖춘 고밀도의 친환경적 디자인으로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해 활기찬 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Calthorpe 1993; Grant 2006; Elin 1996; Talen 2012). 도시환경의 관점에서 '장소 만들기(place-making)' 연구들(Campoli 2012; Sucher 2003)과 연결되는 직주락 센터는 압축성, 다용도성, 내·외부의 접근성, 촘촘한 연결성을 위한 도보 접근성에 주목한다(Malizia & Song 2016). 걷기 좋은 거리에 압축적인 다기능 공간의 구성은 개개인에게 차별화된

경험과 재미를 제공하고, 거주민의 생활 수요를 충족시켜 도심 자산의 가치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진다(Leinberger 2005).

‘걷기 좋은 도시주의(Walkable Urbanism)’는 주거, 일자리, 여가, 쇼핑 등 모든 활동이 4~6시간 안에 가능한 도보 생활권을 지향한다(Leinberger 2005). 도보 5분 이내의 생활편의시설의 밀집을 통한 유용성, 거리 디자인의 안전성, 건물과 거리풍경의 편안함, 특색 있으면서도 사람 냄새 나는 흥미로움 등의 네 가지는 워커빌리티(Walkability)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꼽히며, 창의적인 밀레니엄을 매료시켜 살아 숨 쉬는 도심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한다(Duany et al. 2000; Speck 2012). 밀도와 다양성, 도보 접근성을 갖춘 도시는 젊은 인재와 기술 중심 기업의 유입을 촉진해 활기를 불어넣고, 혁신과 생산성을 창출한다(Malizia & Motoyama 2019). 실제로 중심업무지구(CBD) 내 주택을 공급하고, 인프라를 정비해 접근성과 안전성을 개선하며, 역사적 건축물을 리모델링해 공공 및 상업 어메니티를 공급하는 재개발은 미국 도시들의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했다(Danielsen & Lang 2010; Moulton 1999).

직주락 센터 이론은 용도복합의 도심 개발에 의해 더 많은 고용과 쇼핑의 기회와 질 높은 주거를 제공함으로써(Danielsen & Lang 2010), 창조도시 이론을 신도시주의적 관점에서 보완한다. 직주근접 환경과 문화 상업 어메니티의 집적은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유입시키고, 이들을 고용하기를 원하는 첨단 기업과 스타트업들이 모여들어 혁신을 창출함으로써, 더 많은 고용과 세수 증가에 기여한다(Malizia & Song 2016). 직주락의 높은 근접성은 도보 친화적 라이프스타일로 거주민의 건강 수준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 도심 주거 정책의 성공에 있어 오피스, 상업 및 생활편의시설, 공공재의 높은 접근성에 의한 기능적 상호의존성이 중요한 것은 민간과 공공의 협력적 투자를 촉진하는 유대 관계의 안정성이 필요함을 의미한다(Beauregard 2005). 창의적

인 기업가와 창업가, 활동가, 정부 등 다양한 주체들의 신뢰 기반 공동체 형성은 도심 활성화의 핵심 조건이다(Rich 2013). 직주락 센터의 밀도 높고 복합적인 공간 활용으로 축적되는 사회적 자본은 투자 안정성을 높여 지속적인 자본의 유입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도시의 창조적 역량을 강화한다.

건기 좋은 거리의 조성, 일자리와 주거의 균형, 교통 접근성 등 직주락 센터는 도시구조에 용도복합을 도시 내 활동공간에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한다(Ewing et al. 2011). 공간들의 밀도 높고 복합적인 활용으로 지속적인 교류와 창의적인 활동을 촉진하는 도시발전 모델이다. 도보 환경으로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는 도심계획은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해 커뮤니티의 구성원으로 느끼게 한다는 점에서 도시개발의 주요 방향이 되어야 한다(Slowey 2016). 다양한 시설의 밀도 높은 구성에 있어 지역의 문화, 산업,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 주민들의 지향점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Grant 2002).

마용성 현상은 일과 삶의 균형에서 나아가 문화 정체성을 보유한 소비 공간이 집적된 직주락 센터가 도시의 미래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마포구는 직주근접과 함께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상업시설을 갖추어, 도보 15분 이내에 생활 인프라가 구축된 서울의 대표적인 직주락 지역이다(모종린 2021). 지역 특색을 반영한 독립가게의 밀집이 상권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주장하는 골목경제학은 직주락 동네의 조건 중 ‘탁’의 중요성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Jacobs 이론 및 신도시주의 이론과 연결된다(모종린 2017).

특정 장소에 누적되는 한 집단의 가치와 관행의 집합체인 문화는 지속적인 소비를 통해 계승된다(Hofstede & Minkov 2010). 직주락 센터는 도시가 내포하는 익명성과 확장성의 부정적 효과를 줄이고, 구성원 간의 신뢰 기반 커뮤니티 구축을 지원하여 지역 문화를 재생산하는 미래지향적

인 도시계획모델이다. 본 연구는 직주락 센터 이론으로 마용성 현상을 설명함으로써, 접근성과 신규아파트 공급으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는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한다. 이러한 접근은 유기체로서 도시를 이해하고, 도시 건축, 경제, 사회, 문화 등 학제 간 연구를 촉진하는 데 기여한다.

직주락 근접은 그동안 언론 중심으로 논의된 현상이다. 2000년대 중반부터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직장과의 근접한 아파트의 수요가 증가했다(부동산뱅크 2015/7/7).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인 2018년에 이미 서울 직장인의 절반 이상이 같은 자치구에서 거주하고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선일보 2021/3/26).

직주근접은 주거지 전반의 환경과 삶의 질을 좌우하는 지표로 사용되어 왔다. 서울시는 서울시민 생활의 질적 수준과 만족도를 파악하고자 2003년부터 매년 ‘도시정책지표조사(서울서베이)’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서울 자치구 내 통근 인구를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 2만 가구에 대해 자치구별 최소 400개의 표본을 확보하여 조사하는 것으로, 전체 인구의 직주근접 현황을 파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또한 직주근접 선호도가 높은 2030세대⁴⁾의 직장과의 주거지 거리의 변화 추이를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는 부재한 상황이다.

주거지 소비의 중요성은 2010년 중반 이후 대두되었다. 스타벅스, 편의점, 맥도날드 등 주거지 근처가 스세권, 슬세권, 맥세권인 경우 다양한 음식점과 편의시설이 들어서는 경향이 있다(아주경제 2019/10/1).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 소형 가구의 주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원하는 라이프스타일을 뒷받침하는 직주근접과 락주근접이 중요해졌다(한국경제 2021/12/1).

4) 국토교통부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9세의 직주근접 비율이 61.5%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30~39세가 39%로, 2030세대의 직주근접 선호가 가장 높았다.

Ⅲ. 마용성 현상의 지표 검증

마용성은 상업, 오피스, 주거 환경의 질적 수준이 높은 직주락 센터를 구축했다. 직주락 센터는 다양한 편의시설과 어메니티의 도보 접근성을 갖춘 쾌적한 복합용도 지역이다. 본 장에서는 직주락 센터의 형성을 상징하는 마용성의 부상을 객관적인 지표로 분석한다.

아파트가격은 학군, 교통, 녹지 등의 입지 및 환경특성과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전용면적, 조망도 등 단지 및 세대특성의 영향을 받는다(박운선·병준 2012). 일상적 생활환경의 수준과 지역 특성이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이소영 외 2020), 지역발전을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주거지 주변 환경의 질적 수준을 파악하고자 1990년대부터 2010년 후반까지 서울의 25개 자치구 아파트 가격 데이터를 비교하였다. 변화추이의 가시화를 위해 마포는 연희색, 성수는 회색, 용산은 진회색으로,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는 이탤릭체로 표시하였다[표 1].

언론에서는 2017년에 마용성의 부상을 다루기 시작했으나,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상승하기 시작한 시기는 그 이전이다. 2007년 마포구의 상승이 시작됐고, 용산구는 2008년에 송파구를 추월하며 3위권에 진입했다. 성동구는 2012년 잠시 하락했으나, 2011년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상승하는 패턴이다. 마용성의 부상으로 2016년 형성된 6강 체제는 현재에도 유지되고 있다.

강남 3구와 마용성으로 나누어 비교해보면, 2000년대 중반 마용성의 상승폭이 커지며 격차가 감소했고, 2010년 중반 다시 한 번 상승폭이 커졌다(부록의 [그림 1] 참조). 한때 강북 지역보다 인기가 높았던 수도권 신도시인 분당, 판교와 비교해도 마용성의 부상은 뚜렷하다(부록의 [표 1] 참조). 마용성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2009년 분당, 2019년 판교를

[표] 1㎡당 가격

[표 1] 1만 가격														단위: 만 원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948.6	947.8	981.0	1124.6	1090.4	1068.2	1032.2	1013.1	1030.5	1140.9	1280.4	1466.1	1702.5	2052.0		
790.9	777.5	812.1	893.6	916.3	899.7	859.8	865.4	898.6	976.1	1098.5	1238.2	1461.6	1755.4		
762.2	731.9	769.7(78.5)	843.2	872.2	843.4	851.6	840.6	821.9	860.7	931.8	1029.9	1203.1	1463.6(71.3)		
606.0(63.9)	709.6(74.9)	754.5	816.8(72.6)	813.2(74.6)	799.4(74.8)	768.8(74.5)	719.5(71.0)	776.3(75.3)	819.6(71.8)	910.5(71.1)	1012.6(69.1)	1198.9(70.4)	1442.7		
568.4	560.9	615.4	659.3	656.8	644.7	626.6(60.7)	642.8(63.5)	652.0	687.1	732.8(67.2)	835.3(67.0)	1048.8(61.6)	1245.3(60.7)		
524.3	548.9(57.9)	584.2(59.6)	636.6	649.1	626.0(58.6)	619.6	618.7	617.6(59.9)	663.8(58.2)	719.4(56.2)	829.2(56.6)	989.6(58.1)	1222.1(59.6)		
512.5	548.1	577.2(58.8)	619.6(55.1)	616.7	603.2	613.2	598.6	615.5(59.7)	657.0(57.6)	715.5	791.1	946.5	1105.8		
478.9(50.5)	512.8	563.0	613.1	608.3(55.8)	591.3	585.1	579.3(57.2)	605.4	639.9	690.5	778.0	879.4	1066.5		
457.1	498.9(52.6)	559.1	600.0(53.4)	591.6(54.3)	587.1(55.0)	580.9	577.8	591.9	638.5	682.1	761.3	871.6	1039.3		
452.5(47.7)	485.7	544.0	574.0	579.9	587.0	578.8	574.0	587.3	634.4	681.7	746.6	858.4	1038.2		
443.7	467.4	527.2	573.2	575.3	579.1	570.7(55.3)	566.4	580.6	603.3	656.3	746.3	845.1	1024.5		
424.7	465.1	525.6	571.5	572.8	576.5	567.2	557.7	573.3	596.4	647.1	717.7	811.4	1016.0		
370.0	420.7	472.7	522.5	531.4	553.4	544.7	534.7	563.7	567.9	626.9	696.6	764.3	1007.4		
353.3	409.7	470.1	484.4	476.9	481.9	498.3	469.9	482.2	506.6	581.0	662.3	729.0	922.7		
342.6	378.4	447.3	475.0	473.2	479.5	451.1	454.7	477.5	502.3	558.9	652.3	727.4	852.7		
328.3	371.2	446.7	462.8	454.1	471.1	450.5	450.9	471.6	497.4	553.5	610.6	693.1	841.1		
325.6	369.7	438.5	459.3	453.1	465.0	449.3	449.9	470.5	495.7	542.8	576.9	642.2	771.4		
319.6	368.3	435.4	459.0	450.2	462.3	442.7	444.5	466.1	491.0	538.5	572.5	629.7	757.9		
309.0	361.1	435.1	453.5	446.3	440.6	435.4	444.0	456.9	482.3	517.0	562.8	627.3	729.7		
280.4	336.3	422.3	451.5	442.2	438.3	428.5	439.1	448.3	466.3	503.7	543.8	601.7	707.5		
275.9	330.2	414.6	422.1	439.3	434.5	405.8	407.2	421.0	461.5	488.9	541.1	595.4	703.7		
275.0	320.2	412.1	419.6	418.6	426.5	404.8	407.0	419.8	449.7	479.9	514.4	563.4	665.3		
273.1	318.1	403.5	419.6	407.4	411.9	399.0	401.6	419.7	446.9	471.5	498.3	541.2	660.9		
272.0	315.3	403.1	411.8	393.6	391.0	362.4	376.8	412.2	444.9	447.5	473.8	516.1	619.2		
252.4	304.8	369.7	381.8	363.4	368.6	352.5	361.5	375.5	397.7	432.0	468.9	504.4	594.1		

자료(설명): 표 안의 괄호는 각 년도 강남구를 100으로 했을 때 마용성의 가격을 환산한 것임.
 자료(출처):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추월했다.

주택 시장에서 부동산의 1위를 유지하는 강남구와의 격차도 크게 줄었다. 강남구 가격을 100으로 설정했을 때, 마포구는 2006년 47.7%에서 2019년 59.6%로 11.9%p 상승해 마용성 중에서 가장 상승폭이 크다. 강남구 가격의 절반이었던 성동구는 2019년 60.7%로 10.2%p 상승했다. 2006년 강남구 가격의 63.9%였던 용산구는 2019년 71.3%로 7.4%p 상승했다.

재정자립도의 상승패턴 역시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부록의 [표 2] 참조). 자치구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의미하는 재정자립도는 지역발전을 진단하는 하나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김홍배 외 2008). 마포는 2005년, 용산은 2006년부터 상승세가 시작되었고, 성동은 2006년에서 2010년 사이에 상승폭이 급증했다. 이러한 변화는 2000년대 중반 마용성의 성장 이 다른 지역보다 두드러졌음을 의미한다. 세 지역 모두 2000년대 중반부터 재정자립도가 개선되고 2000년대 후반부터 아파트 가격도 상승해, 전반적인 지역발전의 수준이 다른 자치구보다 빨랐음을 알 수 있다.

IV. 직주락 관점의 마용성 현상 분석

마용성의 인기가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본 논문은 접근성이 개선되고 주택 공급이 이루어진 서울의 다른 자치구들과의 차별성이 직주락의 집적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회귀분석을 사용한 직주락 센터 이론의 검증은 각 도시마다 직주락의 집적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축적을 요구한다. Malizia & Song(2016)은 미국 대도시 간 직주락 센터의 비교를 위해 면적 당 건물 층 수, 면적 당 종사자 수, 보행 점 수, 도심 1 mile 내 인구수, 도심 1 mile 내 직주근접 인구 비중, 거리의

블록 사이즈 등을 측정했다. 본 논문은 이를 위한 기초 연구로서, 탈산업 사회의 발전을 선도하는 도심의 사례로 마용성 현상을 분석한다. 직장, 인구, 상업시설의 규모를 비롯해 창조산업, 청년인구이동, 질적 수준이 높은 맛집의 상대적인 비중 등 직주락 센터 이론의 개념과 관련된 집계 가능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함이다. 개성 있고 다양한 문화상업공간을 의미하는 ‘락’,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산업의 발전을 의미하는 ‘직’, 주거지 선호를 보여주는 ‘주’ 등 개념적 정의에 부합하고 집계 가능한 지표들을 자체적으로 선별해 사용하였다.

1. 락

먼저 락의 관점에서 리테일 산업과 블루리본의 집적 변화를 살펴보고 있다. 개성 있는 레스토랑, 카페, 바 등 상업 어메니티는 도시 라이프스타일을 원하는 창조인재의 유입을 촉진한다(Florida 2002b; Glaeser et al. 2001). 본 연구는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상품과 서비스로 구현하는 업종을 리테일 산업⁵⁾으로 정의하고, 블루리본에 선정된 맛집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문화상업 어메니티가 증가한 자치구들을 파악했다.

리테일 산업은 2000년대 초·중반부터 상승세가 뚜렷하다. 용산과 성동의 경우 2000년, 마포는 2005년 고점을 찍고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다가 2010년 중반부터 상승한다[표 2].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마용성에는 리테일의 집적이 이미 이루어졌고, 2010년대 초반 재상승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블루리본에 선정된 업체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대 중반부터 마

5)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업력 3년 이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해당 업종들은 모종린·강예나(2017)에서 라이프스타일산업 의·식·주 업종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 2] 리테일 산업 규모

(단위: 인구 천 명 당 사업체 수)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81.25	81.06	68.12	66.11	60.49	65.23	72.43	65.47	64.48	65.39	68.32	60.93	54.73	57.43	60.44	61.35	59.47	58.66	60.21	61.38	58.24	56.44	
27.64	30.07	28.95	27.18	27.31	28.97	32.62	31.45	31.29	33.47	32.61	31.74	30.34	31.49	33.66	34.91	35.23	35.32	37.18	39.58	37.59	37.67	
18.25	18.84	16.04	14.11	14.04	14.13	16.03	15.87	14.37	14.74	14.40	13.30	13.65	13.92	14.27	13.88	13.33	13.24	13.59	15.19	15.19	15.17	
18.05	17.94	15.32	13.70	13.83	14.07	14.55	13.68	13.26	14.17	13.46	12.35	11.74	12.20	12.25	12.74	12.70	13.02	13.25	14.48	13.75	13.70	
16.01	17.04	15.09	12.86	11.99	12.46	13.39	13.18	11.21	11.59	12.05	11.72	11.54	11.66	12.05	12.16	12.64	12.61	13.09	13.94	12.03	13.37	
13.07	12.15	11.35	10.90	10.61	11.38	12.21	10.62	10.50	10.92	11.79	11.45	10.53	10.70	11.32	11.19	11.34	11.05	11.53	12.66	10.16	12.64	
11.89	11.12	9.69	8.96	9.46	9.84	10.85	9.76	9.87	10.35	11.06	10.78	10.42	10.38	11.00	10.96	11.13	10.87	11.40	12.66	9.63	12.20	
11.25	10.98	9.22	8.49	8.68	9.46	9.73	9.76	9.53	9.99	10.03	10.44	10.15	9.30	10.72	10.75	11.05	10.65	11.24	12.11	9.43	12.14	
11.18	9.95	9.01	8.30	8.65	8.88	9.37	8.98	8.75	9.71	9.62	9.39	9.06	9.14	9.43	9.94	10.24	10.19	10.72	11.85	9.10	11.91	
10.47	9.71	8.99	8.27	8.54	8.69	8.91	8.80	8.52	8.88	9.09	8.86	8.93	8.93	9.14	8.93	9.12	9.35	9.08	9.24	9.95	8.97	9.98
9.84	9.65	8.66	8.14	8.14	8.43	8.70	8.55	8.38	8.86	8.88	8.73	8.46	8.70	8.44	8.61	8.66	8.32	8.78	9.55	8.95	9.23	
9.66	9.55	8.51	7.84	7.97	8.41	8.66	8.34	8.17	8.53	8.66	8.04	7.87	8.03	7.97	8.08	8.13	8.08	8.32	9.10	8.85	9.02	
9.58	9.41	8.38	7.80	7.96	8.28	8.51	8.31	7.95	8.16	8.12	7.95	7.70	7.99	7.82	8.04	8.08	7.83	8.26	9.09	8.55	8.83	
9.03	9.26	8.37	7.56	7.75	8.27	8.29	7.95	7.82	7.94	7.80	7.75	7.64	7.77	7.78	7.98	7.85	7.70	8.24	8.99	8.48	8.79	
8.93	9.14	8.29	7.46	7.37	7.67	7.97	7.76	7.58	7.79	7.77	7.46	7.60	7.72	7.76	7.97	7.67	7.64	7.85	8.42	8.26	8.68	
8.89	8.93	8.16	7.19	7.30	7.32	7.92	7.68	7.45	7.65	7.75	7.45	7.11	7.01	7.33	7.49	7.64	7.29	7.63	8.32	7.73	8.31	
8.60	8.86	8.08	7.12	7.09	7.27	7.77	7.42	7.38	7.64	7.69	7.41	6.87	6.92	6.93	7.01	7.11	6.95	7.12	7.84	7.23	7.91	
8.57	8.55	7.81	7.03	7.06	7.27	7.64	7.24	7.27	7.59	7.63	7.30	6.84	6.72	6.79	6.98	7.00	6.84	7.08	7.73	6.77	7.39	
8.54	8.29	7.68	6.95	7.05	7.18	7.35	7.20	7.17	7.57	7.27	7.01	6.79	6.70	6.77	6.75	6.70	6.73	6.96	7.62	6.70	7.39	
8.36	8.27	7.15	6.54	6.58	6.85	7.29	7.04	7.05	7.38	7.19	6.95	6.69	6.46	6.40	6.55	6.57	6.44	6.80	7.48	6.63	7.36	
8.00	8.08	7.00	6.49	6.46	6.52	6.99	6.95	6.76	7.11	7.13	6.66	6.18	6.13	6.37	6.46	6.42	6.14	6.50	6.98	6.42	6.92	
7.01	7.82	6.21	5.50	5.36	5.63	5.84	5.75	5.65	5.95	5.99	6.10	5.68	5.70	5.77	5.87	5.80	5.84	5.94	6.48	6.38	6.92	
6.84	6.72	6.19	5.43	5.31	5.61	5.61	5.66	5.51	5.80	5.98	5.51	5.40	5.61	5.70	5.70	5.67	5.56	5.85	6.47	5.48	6.53	
6.08	6.19	5.37	4.91	4.87	5.04	5.58	5.64	5.42	5.62	5.54	5.51	5.35	5.58	5.59	5.60	5.65	5.54	5.78	6.47	5.44	6.35	
4.36	4.69	4.12	3.65	3.66	4.06	4.49	4.67	4.70	5.13	5.30	5.11	4.47	4.63	4.69	4.93	5.01	5.08	5.44	6.12	5.41	6.21	

자료(출처):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용성에 집적이 시작된 것을 알 수 있다[표 3]. 매년 3만 명가량의 독자 투표로 맛집을 선별하는 ‘블루리본 서베이’는 한국 최초의 맛집 가이드 북으로, 등급별 맛집 정보를 제공해 ‘한국판 미쉐린 가이드’로 불린다(세계일보 2020/11/24; 시사매거진 2020/11/18). 질 높고 다양한 레스토랑은 활기차고 여유로운 ‘어반 씬(urban scene)’을 만드는 어메니티라는 점에서 락의 지표로 활용했다.

용산과 마포는 처음 블루리본 서베이가 시작된 2006년부터 상위권이 었다. 마포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6위를 차지하다가, 2011년부터 5위권에 진입했다. 2000년대부터 4위를 유지한 용산은 2013년 3위를 유지하고 있다. 성동은 2006년부터 상승세를 보이면서 2010년 11위를 차지, 2013년 10위권 안에 진입하며 2019년 8위를 차지했다.

리테일 산업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마용성 집적이 완성되었다. 2000년대 중·후반에 잠시 하락했으나 2010년대 초반 재상승했다. 리테일 업종 중에서도 질적 수준이 높은 맛집은 2000년대 중반부터 밀집되기 시작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순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마용성은 2000년대 초반부터 문화상업 어메니티가 풍부했고, 개성과 특색 있는 맛집들로 상권의 질적 수준을 유지했음을 알 수 있다.

[표 3] 블루리본 서베이 순위

(단위: 인구 천 명당)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1.04	1.35	1.26	1.26	1.12	1.10	1.13	1.39	1.48	1.33	1.20	1.13	1.17	1.16	1.17
1.02	1.03	0.99	1.04	1.04	0.95	0.89	1.18	1.23	1.23	1.13	1.06	1.14	1.12	1.17
0.59	0.60	0.62	0.59	0.59	0.53	0.57	0.65	0.70	0.74	0.65	0.65	0.67	0.66	0.63
0.32	0.47	0.45	0.45	0.48	0.48	0.51	0.65	0.69	0.64	0.58	0.59	0.62	0.60	0.61
0.21	0.27	0.27	0.25	0.24	0.24	0.29	0.34	0.41	0.44	0.52	0.56	0.61	0.50	0.48
0.14	0.14	0.19	0.24	0.24	0.23	0.24	0.27	0.27	0.25	0.22	0.22	0.23	0.20	0.19
0.09	0.13	0.13	0.14	0.13	0.13	0.14	0.17	0.21	0.20	0.18	0.19	0.21	0.19	0.18
0.08	0.11	0.11	0.13	0.13	0.11	0.11	0.13	0.12	0.13	0.12	0.13	0.12	0.12	0.11
0.05	0.05	0.05	0.06	0.06	0.06	0.04	0.06	0.07	0.08	0.07	0.07	0.08	0.11	0.11
0.02	0.03	0.03	0.03	0.04	0.04	0.04	0.05	0.05	0.07	0.06	0.07	0.06	0.06	0.06
0.02	0.03	0.02	0.03	0.03	0.03	0.03	0.04	0.05	0.05	0.04	0.04	0.05	0.04	0.04
0.02	0.02	0.02	0.03	0.03	0.03	0.03	0.04	0.04	0.05	0.03	0.04	0.04	0.03	0.03
0.01	0.02	0.02	0.02	0.03	0.03	0.03	0.03	0.04	0.03	0.03	0.03	0.03	0.03	0.03
0.01	0.02	0.02	0.01	0.01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3	0.02	0.03
0.01	0.02	0.01	0.01	0.01	0.01	0.01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0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0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2	0.01	0.01	0.01
0.00	0.00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0	0.00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0	0.00	0.00	0.01	0.01	0.01	0.00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1	0.00	0.01	0.01	0.01	0.01	0.01	0.0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1	0.00	0.01	0.01	0.01	0.0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자료(출처): 블루리본 서베이

2. 직

직의 관점에서 산업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체 수와 고용역량의 변화를 분석한다. 먼저 전 산업 기준에서 마용성의 규모가 증가한 시점을 파악한다. 광화문, 여의도, 강남, 가산디지털단지 등에 산업이 밀집된 서울의 특성을 감안해 지역별 오피스 기능을 확인하고자 주거인구 대비 고용의 변화를 살펴본다. 또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조산업의 자치구별 비중 변화로 마용성이 서울의 창조산업 중심지로 거듭난 시점을 파악한다.

전체 산업 규모에서 마용성은 2010년 초반부터 상승세를 보인다[표 4]. 마포구는 2000년대 초반까지 10위권 밖이었다가 2011년 이후 8~9위를 유지했다. 용산구는 1998년 18위에서 하락해 2005년에서 2011년까지 23위를 유지하다가 2015년 21위로 상승했다. 성동구는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순위 증감을 반복하다가 2009년 이후 상승하면서 2016년 13위까지 산업 규모가 증가했다.

산업 기능의 상대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사업체당 종사자 수는 산업의 자본스톡과 고용구조 및 역량을 측정하는 지표이다(여효성·이장욱 2019; 염승일·이희연 2011). 주거와 산업 활동 중에서 자치구마다 어떤 기능이 강화되었는지 파악하고자 인구 천 명 당 사업체 평균 종사자 수를 측정했다[표 5]. 마용성은 2000년대 초반부터 10위권을 유지해 주거 대비 오피스 기능이 높은 편이다. 마포구는 1990년대부터 8~9위를 유지하고 있고, 용산구는 중구와 종로구 다음으로 3위를 유지하다가 2006년에서 2010년 가산디지털단지가 들어선 금천구에 밀리면서, 4위에 자리 잡았다. 성동구는 1998년부터 2011년까지 8~9위를 유지하다가 2012년 강남구(8위)를 제치고 2014년 6위까지 상승, 2015년부터 영등포와 서초구 다음으로 7위를 유지하고 있다.

[표 4] 전체 사업체 수

(단위: 개)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64126	64949	66173	66518	68641	70370	69443	67371	66183	63136	60905	58825	57649	59289	64035	64570	69991	73311	72025	72245	71111	70747	70477
39978	44290	51315	50749	50000	51692	51109	53370	52885	53108	52005	52604	53235	57686	62140	62338	65095	65895	63354	62659	60667	59834	59834
39815	41115	40543	39019	39015	40457	39845	40077	39976	40120	40555	40802	40820	42493	43496	43218	45659	46777	63354	46389	47476	48328	48328
37261	38168	39321	38827	39811	39656	38790	39032	38790	38522	39222	39245	40661	40330	42321	42607	43997	45100	46137	45944	46246	46650	46650
33882	34686	38062	37660	38734	38978	38830	38588	36904	37846	38051	37024	37349	38369	41905	41913	43856	44262	45269	42894	42316	42094	42094
32918	33969	35246	35671	36086	36381	34886	35990	36287	35917	34935	34790	36023	38232	39220	39079	40641	40820	40398	40240	39685	39394	39394
31229	32829	32915	31663	32102	31968	32231	32835	31821	29707	29483	31825	32100	33509	35239	35072	36421	37160	32463	38121	38276	39204	39204
25819	27021	28386	28652	28791	29763	30012	29930	29422	29526	29412	30182	30443	30777	31776	32502	34784	36241	32463	36278	38261	38479	38479
25490	26356	27637	28120	27983	28400	28444	28866	28859	29062	28379	29440	28396	30127	31592	31718	32589	32995	29974	36033	36959	37040	37040
24553	25297	26875	27565	27948	27976	27339	26878	27001	27800	27747	27753	28621	29812	31325	31683	32486	32714	27657	32113	32219	33557	33557
24012	24966	26040	26274	26908	27152	27111	26763	26817	27092	27061	27311	27859	28479	29430	29477	30221	29831	27657	31479	31591	31008	31008
23634	24319	25887	26146	26695	26888	26515	26174	26336	26033	25552	25844	26242	26699	27365	28118	29303	29801	26305	29646	29467	28810	28810
23321	24306	23876	24152	24668	25490	25492	25770	25812	25603	25462	25459	25545	25836	27002	27204	27775	27016	26305	27749	27742	28048	28048
21633	23002	23770	23909	24501	24999	24399	25228	24720	24803	24573	24650	24279	25716	26048	26065	26146	26012	26105	26989	27577	27924	27924
21188	21793	23464	23852	24367	24988	24380	24696	24083	24272	24030	23931	24254	25334	25466	25440	25896	25954	25968	26212	26297	26314	26314
20922	21600	23033	23738	24310	24536	24143	24252	24070	23616	23608	23744	24214	24994	24901	24871	25773	25845	24601	26109	25818	25590	25590
20782	21495	22888	23559	23938	24505	23969	23818	23515	23564	22924	23599	23493	24240	24580	24810	25408	25546	24601	25769	25801	25206	25206
20124	21053	22204	22714	23582	24286	23646	23766	23039	22792	22232	23064	23320	24348	24544	24484	24836	24444	24314	24385	24593	24395	24395
19791	20959	21851	22030	22499	23019	22940	22188	21580	21580	22228	22224	22836	22982	23918	24402	24471	24234	24314	24299	24218	24141	24141
19667	20816	21608	21856	22261	22221	20954	20952	20952	21530	21720	21988	21648	22392	22785	23022	23686	23990	23901	23780	23017	23361	23361
19323	19848	20058	21123	21685	22173	20898	20534	20295	20295	20077	19766	19426	19586	19649	19747	19768	20187	20398	20707	20532	20520	19950
18184	19080	19574	19898	19459	20012	20298	20092	20155	19885	18888	19169	18990	19123	19698	19740	19906	19337	19467	19697	19641	19815	19815
16878	17398	17958	18286	19193	19740	19891	20047	20142	19694	18418	18359	18655	19076	19214	18993	19199	19327	18466	19571	19513	19517	19517
16327	17068	17508	17729	18823	19622	19881	19490	19031	19078	17911	17556	17600	17835	18381	18954	18941	18374	18466	18654	18637	18731	18731
14622	15734	15270	16073	16324	17154	17146	17117	16890	16375	17132	17461	17216	17370	17586	17443	18300	18170	18388	18052	18576	18328	18328

자료(출처):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표 5] 산업의 고용 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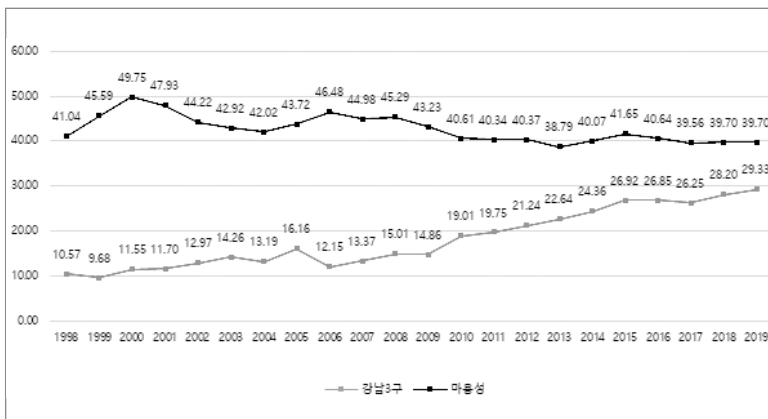
[표 이 산업의 고용 현황																					(단위: 명)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0.040	0.038	0.037	0.037	0.038	0.037	0.037	0.038	0.040	0.044	0.043	0.045	0.050	0.047	0.046	0.044	0.046	0.051	0.053	0.050	0.052	0.052			
0.030	0.029	0.029	0.030	0.031	0.031	0.030	0.032	0.033	0.035	0.035	0.036	0.037	0.036	0.036	0.037	0.038	0.043	0.051	0.043	0.044	0.043			
0.022	0.021	0.021	0.021	0.022	0.022	0.022	0.022	0.024	0.025	0.027	0.029	0.031	0.031	0.030	0.030	0.031	0.032	0.043	0.031	0.031	0.031			
0.021	0.021	0.020	0.021	0.020	0.020	0.021	0.022	0.022	0.021	0.023	0.023	0.025	0.026	0.024	0.025	0.025	0.026	0.040	0.028	0.030	0.029			
0.018	0.018	0.019	0.021	0.020	0.020	0.020	0.021	0.021	0.020	0.022	0.023	0.025	0.024	0.020	0.021	0.021	0.022	0.026	0.023	0.023	0.024			
0.018	0.017	0.017	0.018	0.019	0.018	0.018	0.019	0.018	0.019	0.018	0.019	0.019	0.019	0.019	0.019	0.019	0.021	0.021	0.020	0.020	0.020			
0.015	0.014	0.014	0.017	0.017	0.015	0.015	0.016	0.017	0.018	0.018	0.019	0.018	0.018	0.018	0.018	0.017	0.018	0.021	0.018	0.018	0.018			
0.012	0.013	0.013	0.013	0.012	0.012	0.012	0.012	0.013	0.014	0.016	0.016	0.018	0.017	0.017	0.017	0.016	0.017	0.018	0.017	0.018	0.018			
0.010	0.010	0.010	0.010	0.010	0.011	0.010	0.011	0.011	0.012	0.012	0.013	0.013	0.014	0.015	0.015	0.015	0.016	0.017	0.016	0.016	0.016			
0.010	0.010	0.010	0.010	0.010	0.010	0.010	0.010	0.011	0.011	0.012	0.012	0.013	0.012	0.012	0.013	0.013	0.013	0.015	0.014	0.014	0.014			
0.009	0.009	0.010	0.010	0.009	0.010	0.010	0.010	0.011	0.011	0.012	0.012	0.013	0.012	0.012	0.013	0.012	0.013	0.014	0.013	0.014	0.014			
0.009	0.009	0.009	0.010	0.009	0.010	0.010	0.010	0.011	0.011	0.011	0.011	0.012	0.012	0.011	0.012	0.012	0.012	0.013	0.013	0.013	0.013			
0.009	0.009	0.009	0.010	0.009	0.009	0.009	0.010	0.010	0.011	0.010	0.010	0.012	0.012	0.011	0.011	0.012	0.012	0.012	0.013	0.013	0.013			
0.009	0.009	0.009	0.009	0.009	0.009	0.009	0.009	0.009	0.009	0.009	0.010	0.010	0.010	0.010	0.010	0.011	0.011	0.011	0.011	0.012	0.012			
0.008	0.008	0.008	0.008	0.009	0.008	0.009	0.008	0.008	0.008	0.009	0.009	0.009	0.009	0.009	0.010	0.010	0.010	0.011	0.011	0.011	0.011			
0.008	0.008	0.008	0.008	0.008	0.008	0.008	0.008	0.008	0.008	0.008	0.008	0.009	0.009	0.009	0.010	0.010	0.010	0.010	0.011	0.011	0.011			
0.007	0.007	0.008	0.008	0.008	0.008	0.008	0.008	0.008	0.008	0.008	0.008	0.009	0.008	0.008	0.009	0.010	0.010	0.010	0.011	0.011	0.011			
0.007	0.007	0.007	0.007	0.008	0.008	0.008	0.008	0.008	0.008	0.008	0.008	0.008	0.008	0.008	0.009	0.009	0.010	0.010	0.010	0.010	0.010			
0.007	0.007	0.007	0.007	0.007	0.007	0.007	0.007	0.007	0.008	0.008	0.008	0.008	0.008	0.008	0.008	0.009	0.009	0.009	0.009	0.010	0.010			
0.006	0.006	0.007	0.007	0.007	0.007	0.007	0.007	0.007	0.007	0.007	0.007	0.007	0.007	0.007	0.007	0.007	0.007	0.008	0.009	0.009	0.009			
0.006	0.006	0.006	0.007	0.007	0.007	0.006	0.006	0.006	0.007	0.007	0.007	0.007	0.007	0.007	0.007	0.007	0.007	0.008	0.009	0.009	0.009			
0.006	0.006	0.006	0.006	0.006	0.006	0.006	0.006	0.006	0.007	0.007	0.007	0.007	0.007	0.007	0.007	0.007	0.007	0.008	0.008	0.008	0.008			
0.006	0.006	0.006	0.006	0.006	0.006	0.006	0.006	0.006	0.006	0.006	0.006	0.007	0.007	0.007	0.007	0.007	0.007	0.008	0.008	0.007	0.008			

자료(설명): 인구 천 명당 사업체별 종사자수

자료(출처):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인구동향조사

주목할 점은 고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소득수준을 향상시키는 창조산업의 변화이다.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생산성 증대와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창조업종의 변화를 강남 3구와 마용성으로 나누어 비교했다. 서울 창조 종사자 대비 두 지역의 비중 변화를 연도별로 파악한 결과 창조산업 중심지가 된 마용성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서울의 창조인재는 강남보다 마용성으로 더 많이 유입되기 시작했다(그림 1). 서울 전체 창조 종사자 대비 강남 3구와 마용성의 비중을 파악했을 때 강남은 2006년 46.48%에서 2019년 39.70%로 6.78%p 감소했다. 같은 시기 마용성은 12.15%에서 29.33%로 17.18%p 증가했다.



[그림 1] 마용성 vs. 강남 3구의 서울 창조산업 종사자 대비 비중(%)

자료(설명): Florida(2002)의 창조산업분류에 따라 표준산업분류 소분류 기준에서 추출
 자료(출처):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전체 산업의 규모와 고용역량은 2010년대 들어 강남보다 마용성의 상승폭이 컸다. 2000년대 중반 창조산업은 마용성으로 이동이 시작됐으며, 2010년대에 집적이 가속화되었다. 강남은 주거 기능이 강화되면서 산업 역량이 감소한 반면, 마용성은 서울 창조산업의 집적지로 부상하

면서 도시경제의 중심지가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3. 주

마지막으로 주의 관점에서 인구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순이동과 주민등록인구를 파악하였다. 순이동율을 5년 주기로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주거선호지역이 변화했다. 각 연도마다 유입과 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다양해 변동의 폭이 크기 때문에, 5년 주기로 평균치를 측정했다. 밀레니엄은 도시의 활기를 좌우하는 핵심 세력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이동 추이를 살펴보았다.

[표 6] 순이동률

(단위: %)

전체인구					밀레니엄 세대				
'95~'99	'00~'04	'05~'09	'10~'14	'15~'19	'95~'99	'00~'04	'05~'09	'10~'14	'15~'19
0.78	2.10	9.23	2.92	-0.59	1.67	1.72	4.27	1.76	2.67
-1.90	1.36	3.89	0.66	-0.92	1.24	1.72	2.75	0.94	2.53
-2.81	1.06	3.60	-1.51	-1.08	0.34	1.56	1.70	0.64	2.17
-3.96	0.98	2.72	-1.92	-1.23	0.30	1.00	1.53	0.57	2.15
-4.60	0.75	2.29	-2.00	-2.76	-0.19	0.60	1.50	0.51	2.10
-4.94	0.24	1.51	-3.09	-3.67	-0.58	0.40	1.17	-0.23	1.88
-5.32	-0.96	0.15	-3.96	-3.97	-1.34	0.21	0.87	-0.73	1.79
-5.53	-1.38	-1.11	-4.25	-4.16	-1.56	0.18	0.55	-0.88	1.56
-5.87	-1.63	-3.10	-4.77	-4.81	-1.88	0.15	0.12	-0.94	0.58
-6.18	-1.73	-3.57	-4.79	-4.84	-1.98	0.04	0.08	-1.29	0.57
-6.29	-2.23	-3.59	-5.70	-4.91	-2.25	-0.14	-0.48	-1.48	0.19
-9.53	-3.27	-4.18	-5.73	-5.23	-2.54	-0.41	-0.77	-1.61	0.02
-9.76	-3.44	-4.46	-5.90	-5.25	-3.99	-0.69	-1.04	-1.61	-0.57
-10.20	-3.83	-4.80	-6.26	-5.82	-4.59	-1.05	-1.09	-1.62	-0.84
-10.65	-5.11	-4.88	-6.71	-6.36	-4.61	-1.20	-1.31	-1.67	-1.09
-10.88	-5.16	-4.88	-6.91	-6.42	-5.08	-1.30	-1.68	-1.70	-1.19
-11.53	-5.56	-4.99	-7.04	-6.47	-5.16	-1.35	-1.77	-1.70	-1.20
-11.90	-6.32	-5.37	-7.23	-6.49	-5.27	-1.97	-1.90	-1.74	-1.44

전체인구					밀레니엄 세대				
'95~'99	'00~'04	'05~'09	'10~'14	'15~'19	'95~'99	'00~'04	'05~'09	'10~'14	'15~'19
-13.88	-6.56	-5.41	-7.35	-6.55	-6.41	-2.53	-1.95	-1.99	-1.69
-15.83	-6.61	-6.54	-7.42	-7.04	-6.75	-2.60	-2.10	-2.00	-2.21
-16.78	-6.69	-6.78	-7.81	-7.05	-7.73	-2.82	-2.66	-2.24	-2.82
-16.99	-7.19	-7.95	-8.48	-7.49	-7.76	-2.94	-3.34	-2.68	-2.93
-18.43	-7.75	-9.09	-9.09	-8.22	-9.37	-2.98	-3.48	-2.98	-3.08
-23.16	-8.87	-9.34	-11.00	-9.91	-11.15	-3.48	-3.50	-3.07	-3.18
-24.38	-12.79	-12.93	-11.24	-10.91	-12.14	-4.30	-4.01	-3.94	-4.19

자료(설명): (20세 이상 39세 미만 인구의 순유입)/(전체 주민등록인구)*100

자료(출처):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젊은 층의 기준에서 2010년대부터 상승세가 나타난다([표 6] 오른쪽). 주기별 마포구의 순위는 13위, 9위, 8위 5위, 8위로 '10~'14기간에 가장 유입이 많았다. 용산구는 19위, 14위, 2위, 10위, 7위순으로 '05~'09 기간, 성동구는 17위, 10위, 25위, 11위, 1위로 '15~'19기간에 크게 상승했다. 2000년대 후반 용산구가 가장 먼저 상승세로 돌아섰고, 이어서 마포구와 성동구가 유입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체 인구 기준에서 마포구와 용산구는 '95~'99 기간에 각각 16위와 19위, '00~'04 기간에 14위와 15위였다가, 2000년대 중반 이후 9위와 6위를 차지하며 10위권으로 상승했다[표 6 왼쪽]. '10~'14 기간 용산구의 경우 19위로 하락했지만, '15~'19 기간에 12위로 상승했다. 성동구는 2015년 이전까지 세 번의 주기에서 15위, 13위, 25위로 하위권이었으나, '15~'19 기간에 1위를 차지했다.

밀레니엄의 정주 인구 변화를 비교해보면[표 7], 세 자치구는 2000년대 중반까지 상승세였다가 2015년 이후 재상승하는 패턴을 보인다. 대학이 밀집한 마포구는 1998년부터 3위를 유지하다가 2010년 초반 4위로 하락, 2015년부터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용산구는 1998년 14위에서 상승세를 이어가 2007년 9위까지 상승했으나 2011년부터 하락해

[표 7] 밀레니엄 정주인구비중

표기: 1월레니움, 2월우주기비중																						단위: %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43.06	42.77	42.74	42.91	43.19	43.51	43.54	43.20	42.86	42.56	42.21	41.64	40.91	40.21	39.59	39.01	38.51	38.22	38.18	38.37	38.89	39.41			
42.24	41.62	41.39	41.13	40.95	40.94	40.78	40.42	40.12	39.65	38.93	38.13	37.16	36.17	35.35	34.94	34.48	34.25	34.19	34.25	34.39	34.44			
41.98	41.58	41.15	40.83	40.68	40.52	40.14	39.52	38.93	38.40	37.77	37.15	36.48	35.83	35.34	34.75	34.47	34.22	34.08	33.91	33.95	34.08			
41.90	41.37	40.98	40.68	40.53	40.46	40.05	39.33	38.80	38.37	37.76	37.08	36.41	35.70	35.12	34.66	34.32	33.99	33.66	33.44	33.35	33.64			
41.72	41.07	40.81	40.51	40.17	39.84	39.43	38.88	38.34	37.77	36.94	35.89	35.11	34.34	33.75	33.13	32.93	32.84	32.82	32.85	33.21	33.32			
41.61	40.92	40.45	40.05	39.63	39.25	38.86	38.38	37.89	37.28	36.53	35.87	34.89	34.08	33.54	33.11	32.77	32.60	32.55	32.65	32.71	32.69			
41.46	40.87	40.22	39.52	39.03	38.73	38.39	37.94	37.49	37.07	36.49	35.63	34.83	34.03	33.49	33.09	32.69	32.33	32.25	32.42	32.71	32.52			
40.71	40.27	39.85	39.36	38.93	38.52	38.02	37.43	37.09	36.74	36.19	35.59	34.76	34.00	33.43	33.07	32.66	32.31	31.80	31.51	31.54	31.80			
40.69	40.20	39.80	39.32	38.87	38.51	37.92	37.36	36.93	36.64	36.18	35.47	34.59	33.79	33.37	33.02	32.45	31.88	31.56	31.22	31.54	31.71			
40.33	39.61	39.28	39.08	38.79	38.41	37.82	37.24	36.92	36.39	35.69	35.02	34.35	33.74	33.04	32.57	32.13	31.77	31.30	31.21	31.50	31.43			
40.01	39.28	39.04	38.94	38.57	38.18	37.79	37.15	36.86	36.37	35.66	34.96	34.26	33.56	32.89	32.12	31.81	31.54	31.27	31.12	30.99	31.09			
39.94	39.27	38.84	38.81	38.50	38.11	37.65	37.12	36.73	36.23	35.51	34.95	34.13	33.27	32.59	32.06	31.46	31.10	31.11	31.02	30.82	31.08			
39.89	39.27	38.76	38.54	38.46	38.09	37.64	37.11	36.70	36.15	35.50	34.84	34.01	33.25	32.53	31.94	31.36	31.09	30.93	30.70	30.67	30.59			
39.75	39.12	38.63	38.27	38.00	37.90	37.50	36.96	36.56	35.99	35.34	34.73	33.98	33.17	32.33	31.78	31.33	30.99	30.69	30.60	30.55	30.12			
39.26	38.54	38.55	38.20	37.95	37.69	37.26	36.86	36.34	35.89	35.29	34.36	33.45	32.86	32.28	31.74	31.31	30.86	30.68	30.57	30.19	29.89			
39.04	38.49	38.53	38.14	37.93	37.67	37.11	36.67	36.01	35.67	35.23	34.35	33.44	32.51	32.16	31.72	31.29	30.79	30.42	30.12	30.00	29.87			
38.64	38.36	37.87	37.89	37.79	37.48	37.04	36.30	35.91	35.06	34.49	33.82	33.37	32.49	32.02	31.53	30.98	30.76	30.31	30.00	29.95	29.62			
38.32	38.07	37.74	37.57	37.55	37.37	37.01	36.28	35.61	34.99	34.22	33.79	33.03	32.46	31.84	31.39	30.82	30.56	30.30	29.93	29.67	29.36			
38.09	37.87	37.68	37.44	37.24	37.27	36.82	36.28	35.49	34.81	34.00	33.62	32.97	32.20	31.61	31.14	30.77	30.17	29.69	29.81	29.50	29.16			
37.98	37.75	37.61	37.34	37.23	37.12	36.76	36.10	35.39	34.67	34.00	33.12	32.26	31.56	31.01	30.49	29.95	29.70	29.68	29.29	29.10	29.06			
37.72	37.33	37.56	36.99	36.54	36.06	35.52	34.95	34.51	34.22	33.83	33.00	32.24	31.43	30.73	30.19	29.82	29.54	29.17	28.81	28.65	28.56			
36.61	36.88	36.21	36.14	36.05	35.85	35.38	34.82	34.47	34.12	33.60	32.97	32.21	31.39	30.66	29.87	29.13	28.57	28.17	27.89	27.67	27.34			
36.57	36.24	36.18	35.68	35.35	34.94	34.57	34.13	33.65	33.07	32.47	31.81	31.07	30.36	29.75	29.18	28.66	28.27	27.92	27.58	27.34	27.00			
36.45	36.15	35.97	35.63	35.23	34.94	34.46	33.91	33.40	32.84	32.17	31.42	30.62	29.89	29.34	28.92	28.47	28.10	27.84	27.57	27.27	26.87			
36.15	35.75	35.50	35.23	34.87	34.44	33.97	33.39	32.77	32.11	31.38	30.61	29.85	29.20	28.73	28.36	28.09	27.91	27.74	27.45	27.13	26.72			

자료(설명): (20세 이상 39세 미만 인구의 순유입)/(전체 주민등록인구)*100

자료(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6년 13위까지 떨어졌다. 이후 2017년 11위, 2018년 8위로 상승하며 10위권에 진입했다. 성동구는 2010년까지 5~6위를 차지하다가 2011년 8위로 하락했으나 2015년부터 상승해 2019년 6위를 차지했다.

2000년대 중반에 용산과 마포를 중심으로 인구유입이 증가했고, 이후 성동에 인구가 늘어나면서 마용성 모두 순이동에 있어 상위권을 차지했다. 밀레니엄의 정주인구비중과 순이동 모두 2015년 이후 상승 패턴을 보이는 것이 공통점이다. 2000년대 중반부터 젊은 층의 마용성 주거 선호가 나타났고, 2010년대부터 순유입 증가로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의 전체 순유입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⁶⁾ 다른 자치구들과 차별화된 마용성의 매력의 유의미함을 의미한다.

4. 소결

직주락 지표들의 시점별 마용성의 변화 과정을 정리해보면 ‘락’에 이어서 ‘직(일자리)’과 ‘주(인구)’가 증가했다. 먼저 ‘락’의 기준에서 리테일 산업은 2000년대 초반, 블루리본은 2000년대 중반에 마용성에 집적되었다. ‘직’의 전체산업 규모는 2010년대부터 증가폭이 커졌다. 특히 창조산업의 비중은 2008년~2010년 사이에 강남 3구와 마용성의 격차가 현저히 줄어들어, 2010년대 마용성이 산업 중심지로 부상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의 기준에서 젊은 층의 인구 유입 시기가 용산(2005~2009), 마포(2010~2014), 성동(2015~2019)의 순으로 시기별 차이가 있었으나, 밀레니엄 정주인구 비중은 2015년 이후 공통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따라서 마용성은 락>직>주의 순서로 직주락 센터를 형

6) 전년 대비 서울 인구의 감소폭은 2017년 0.75%, 2018년 1.01%, 2019년 0.58%, 2020년 0.37%로 꾸준히 줄어들었으며, 2021년 956만 5,990명으로 전년 대비 1.59% 감소하며 규모와 비율이 최근 5년 중 가장 컸다(매일경제 2021/7/4).

성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마용성의 부상을 뒷받침한다.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포와 용산은 2000년대 중반, 성동은 2010년대부터 지역의 전반적인 성장 속도가 빨라진다. 이러한 변화는 마용성이 락직주의 순서에 의해 직주락 센터로 거듭나는 시기와 맞물린다. 신규 아파트가 공급되고 접근성이 개선된 다른 자치구들과 달리, 직주락 센터를 형성한 것이 마용성의 차별성이다.

이는 생활환경 개선과 경제성장을 이끄는 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락직주 순서에 의하면, 마용성에는 2000년대 초반에 문화상업 어메니티가 집적되었고 2000년대 말부터 창의적인 일자리가 증가했으며 2010년대부터 인구유입이 늘어났다. 직주락 센터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지역의 전반적인 수준이 향상되어, 2010년 중반 마용성은 서울 부동산 지형을 바꾼 상징적인 대명사가 되었다.

V. 직주락 센터의 형성 사례분석: 마포·용산·성동을 중심으로

마용성은 직주근접 환경과 함께 지역문화를 상업화한 공간들이 밀집되어 직주락 센터로 거듭난 사례이다. 도시의 매력적인 어메니티를 즐기며 일하길 원하는 젊은이들이 유입되고, 이들을 고용하기를 원하는 창의적인 기업과 스타트업이 늘어나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주거인구의 유입을 촉진했다. 락의 관점에서 역사문화적 특성에 따라 형성된 고유의 장소성을 파악하고 직과 주거 집적된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직주락 센터의 형성에 영향을 끼친 사건을 각 지역별로 정리한다.

1. 마포

마포의 직주락 스토리는 청년문화 정체성의 발원지인 홍대에서 시작된다. 1955년 홍익대학이 자리 잡으면서, 예술인들의 작업실 겸 카페와 주점이 증가했다. 1990년대 인디 문화를 선도하며 2000년대에는 예술가들의 집합공간으로 변모했다(박민하·이병민 2019; 양인화 2016). 2010년대 이후 상수동과 당인리 발전소 등 보행흐름이 이어지는 지역으로 상권이 확장되었다(이한울·권영상 2016). 2010년 중반 이후 경의선 숲길 조성으로 마포 전역이 연결되면서 연남, 연희, 망원까지 홍대 정체성이 이식되었다(윤혜수 2016).

홍대문화는 문화창조산업의 집적에 영향을 미쳤다. 1980년대 출판사들이 상수동으로 이전하면서 도서를 전시하고 커피 마시는 북카페문화를 이끌었다. 문화창조산업의 집적이 가시화된 시기는 2000년대이다. 홍대 클럽에서 활동하던 인디 레이블들의 대중적 인기로 YG 엔터테인먼트가 2007년 홍대에 본사를 설립하면서, 대형 투자사들의 건물 매입이 본격화됐다. 홍대 패션의 산업화는 2010년대 초반 시작된다. 홍대 패션을 대표하는 ‘스타일난다’의 2012년 홍대 플래그십 스토어를 시작으로 2010년대 후반 ‘마크엠’, ‘널디’, ‘디스이즈네버댓’ 등 스트리트 브랜드들이 밀집했다. 2006년 「상암도시기본계획」에 의한 DMC(Digital Media City)는 IT와 미디어산업의 집적을 가속화했다. DMC빌(2006년), DMC 래미안e-편한세상(2012년), DMC파크뷰자이(2015년), DMC센트럴아이파크(2018년)가 차례로 들어서며 직주근접을 갖춘 첨단산업의 허브로 거듭났다.

2010년대부터 상업부동산의 프리미엄화가 가시화된다. 1970년대 부촌이었던 서교동과 동교동 일대 주택들은 부동산 수익과 양도 목적으로 상가주택으로 전환, 외부계단 설치 및 옥탑방 증축 등 건축물 변경이 활발

해졌다(김신성 2016).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용도 변화에 따라 다양한 상업공간이 증가했다.

2000년대 초반 추진된 재정비촉진사업에 의해 2010년 이후 주택 공급이 활발해졌다. 1991년 도화우성 아파트를 시작으로 노후아파트의 재건축이 본격화되었다(삼성경제연구소 1999). 이후 도화현대(1996년), 마포삼성(1997년) 등 1990년대 중후반에 아파트가 들어섰다.⁷⁾

마포의 공덕을 신흥 부촌으로 이끈 것은 아현 뉴타운이다(서울경제 2018/9/20). e-편한세상 마포리버파크(2015년)와 마포 래미안리버웰(2016년)은 직주근접 단지로 마포래미안푸르지오(2014년)와 함께 마포의 가치를 상승시켰다(머니타임즈 2019/6/8; 한국일보 2020/11/17). 2015년 강남에 있던 일본인학교의 상암동 이전은 외국인전용주거단지가 마련된 상암동을 포함한 마포 전역에 외국인 유입을 촉진했다(중앙일보 2016/2/17).

경의선 숲길 조성은 마포 전역의 주거가치 상승에 기여했다(한국경제 TV 2021/10/8). 홍대부터 원효로까지 이어지는 숲길을 따라 특색 있는 독립 카페와 레스토랑, 바가 늘어나면서, 쾌적하면서도 개성 있는 녹지공간이 형성된 것이 다른 공원들과의 차별점이다. 공덕파크사이, 연남코오롱하늘채, 효창파크푸르지오 등 인근 아파트 가격이 모두 상승하며 숲세권 프리미엄을 형성했다(한경매거진 2019/2/27; 한국경제 2018/9/22; 매일경제 2015/11/9; 이투데이 2018/6/8).

마포 직주락 근접 현상의 원동력은 홍대문화이다. 독립예술가와 개

7) 마포는 1962년 건립된 근대 공동주택단지인 도화동 마포아파트단지가 1991년 철거되고 도화동마포삼성아파트로 재건축(1997년)되면서 개발·재건축사업이 시작됐다. 2003년 아현2구역에 이어 염리2구역(2005년), 마포로6구역(2005년), 염리3구역(2006년)이 재정비사업지역으로 지정되었다. 2006년~2010년 사이 아현4구역(2006년), 공덕1구역(2006년), 대흥2구역(2007년), 신수2구역(2007년) 등 10개 지역을 재건축·재개발·재정비 사업지역으로 지정해 사업 진행의 토대를 마련했다(마포구청 2022/2/23).

성 있는 가게들은 홍대 서쪽으로 합정까지, 북쪽으로 연남동과 성미산 마을을 넘어 상암동까지 문화 지역을 확장했다(시사IN 2010/7/27). 2012년 1단계 대흥동구간부터 2016년 연남동구간의 완성으로 숲길을 통해 홍대의 도보 연결성이 강화되면서 외국인 주거 유입이 늘어나고 인근 아파트들의 가치가 크게 상승했다. 2018년 3단계 동교동구간까지 완성됨으로써, 마포는 독립문화 정체성이 뿌리내린 활기찬 상권과 근린 환경, 뛰어난 교통 입지를 갖춘 직주락 센터로 거듭났다.

2. 용산

용산은 배산임수의 입지로 인해 역사적으로 가치가 높다(서울경제 2020/4/24) 미군기지를 중심으로 동부이촌동, 이태원·한남·한강진, 삼각지·한강로로 구분된다. 강변북로와 철로로 둘러싸인 동부이촌동과 달리, 나머지 지역은 이태원을 기점으로 서쪽의 한강로와 후암동, 동쪽 한남동, 북쪽 경리단길과 소월로, 남쪽 보광동까지 연결되어 상권이 성장했다.

용산 정체성의 토대는 다문화의 용광로인 이태원이다. 1955년 미8군 사령부의 용산기지 구축으로 미군 전용 클럽들이 생겨나고 양복점과 서양의류 전문점들이 자리 잡으면서 미국 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했다(서준호 2013). 1976년 이슬람 성원 건립을 계기로 중동 및 아프리카계 외국인들이 방문하고 거주하면서 이들을 위한 슈퍼마켓, 레스토랑 등이 점차 늘어나 다문화 공간으로 변모했다(경신원·정규리 2019; 홍승표 2008).

1965년 한일수교 후 일본대사관직원들과 일본기업 주재원이 정착한 동부이촌동은 외국인 부촌으로 출발했다. 미군고위장병들도 거주하며 스페셜티 커피, 다이닝 바, 퓨전 레스토랑이 밀집해 특유의 분위기가 있

는 동네로 발전했다(조선일보 2018/5/11; 여성동아 2019/9/5). 이태원 역시 전통적인 부촌에 형성된 골목상권이다. 용산미군기지는 조선시대부터 군사기지로 활용되었던 곳으로, 대사관저를 비롯해 외국인 고위관계 인사들이 거주하는 고급주택지가 그 일대에 자리했다.

삼각지·한강로에는 미군 초상화를 그려주는 화가들이 모여면서 삼각지 화랑거리를 형성했다(스카이드일리 2014/12/19; 문화포털 공감리포트 2017/2/10). 삼각지역을 기점으로 국방부 쪽에는 노포들과 카페가 자리했고, 신용산역과 연결되는 한강로 이면도로에도 한식당과 이태리 레스토랑, 카페들이 들어섰다. 2000년 중반 한강대우트럼프월드3차(2004년), 용산파크자이(2005년), 용산시티파크(2007년) 등 주상복합에 미군 장교들이 거주하며, 이태원 상권과 연결되어 발전했다.

직의 관점에서 문화산업의 집적이 시작된 것은 2000년대 초반이다. 해밀턴 호텔 주변에 자리 잡은 창업가들은 자신의 가게에 외국 예술인들의 아틀리에를 제공하거나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다문화 정체성을 구현했다(Kim 2016). 홍대 센트리피케이션으로 이주해 온 예술인들이 풍부한 문화자본을 이식했다(류동현 2011).

1998년 제일기획 본사가 이태원에 사옥을 지으면서 창조산업의 집적이 가속화됐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보행흐름이 이어지는 한강진역 일대에 ‘삼성 리움미술관’, ‘패션5’, ‘블루스퀘어’, ‘현대카드 뮤직 라이브러리’ 등 대기업 복합문화공간들이 생겨났다. 2004년 리움미술관과 더불어 ‘뽌데가르송’, ‘구호’, ‘띠어리’ 등 고급 패션 소매점이 한남동에 자리 잡으면서, 남산 소월길에 위치한 ‘서정기 컬렉션’, ‘이광희 부티크’, ‘표화랑’ 등과 함께 고급문화 소비계층의 유입을 촉진했다(박은실 2018). 2010년 중반 ‘디뮤지엄’을 시작으로 ‘박여숙 화랑’과 ‘가나아트홀’ 등 갤러리들이 자리 잡으면서 미술시장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락과 직의 집적은 주의 프리미엄화를 동반했다. 용산e-편한세상(2011

년), 한남더힐(2013년), 래미안 첼리투스(2015년) 등 상권 주변에 녹지 공간을 갖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주거 가치가 상승했다(머니타임즈 2018/8/27; 동아일보 2021/8/11; 매일경제 2015/7/30). 2008년 금융위기와 2009년 용산참사로 연기되었던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도 재개되어, 래미안 용산 더 센트럴과 푸르지오 써밋(2017년), 용산 센트럴파크 헤링턴스퀘어(2020년) 등 직주근접의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서고 있다.

이태원의 외국인 문화는 용산 정체성의 토대가 되었다. 마포와 마찬가지로 락과 직의 활성화가 주거 수요로 이어졌다. 한강로는 미군 대상 상업 미술거리이자 녹사평역과의 도보 연결성으로 상권을 발전시켰다. 미군기지 인근의 외국인 주거문화는 상업공간의 확산과 다변화를 촉진했고, 배후지에 아파트와 주상복합을 공급해 외국인들의 주거 수요를 뒷받침했다. 2010년 중반 이후에는 재개발과 재건축의 본격화로 고급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직주락 센터를 완성했다.

3. 성동

성동구 문화 정체성의 시작은 성수동에서 찾을 수 있다. 1974년 준공업지역 지정 및 1980년대 도심재개발로 형성된 성수 공단은 노동 집약적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봉제산업이 발전하면서 제화업체들이 집적되었고, 도제 시스템을 기반으로 장인 문화가 짙게 되었다(김민수 2018; 김희식 2014).

2000년대 중반 공단이 쇠락하자 2000년대 후반부터 서울숲 부근에 예술가들이 모여들었고(이지원 2016), 장인정신을 계승하는 독립가게들과 복합문화공간으로 공장 부지를 변화시켰다. 2011년 정미소였던 공간을 카페와 갤러리로 리모델링한 ‘대림창고’가 들어섰고, 강남에 있던 디자인회사와 건축가사무실, 스튜디오 등이 이전했다(박수린·이정교

2018). 2013년 예술가들의 아지트였던 '사이'가 양재동에서 성수로 이전하고 '어반소스', '오르에르', '자그마치' 등 인쇄소와 공장, 자동차 정비업소를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킨 문화 창업가들이 유입되면서, 문화예술적 소비를 지향하는 상권으로 재탄생했다(이지원 2016).

마포와 용산과 달리 성동에서는 직주락이 거의 동시에 진행됐다. 2012년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를 시작으로 서울숲 조성계획에 참여한 '서울그린트러스트'가 성수동으로 이전하면서, '루트임팩트', '소풍' 등 소셜 벤처들이 들어섰다(이유리·이명훈 2017). 이들이 운영하는 '디웰살롱', '카우앤독', '헤이그라운드' 등의 코워킹 스페이스는 영리활동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성수동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역할을 했다. 소셜 벤처들이 다양한 사회문제에 주목하며 창업생태계를 조성함에 따라 스타트업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윤지훈 외 2017). 이후 2010년 코오롱 디지털 타워를 시작으로 63개 지식산업센터⁸⁾가 들어서고 글로벌 스타트업들과 대기업 본사가 이전하면서 창조산업 허브로 거듭나고 있다.

창조기업의 유입으로 젊은 인재들의 주거 수요가 증가하자 성수는 주상복합단지와 공유주거의 중심지로 부상했다. 2005년 개장한 서울숲은 쾌적한 근린 환경으로 성수동의 가치를 제고하는 데 기여했다. 2011년 갤러리아 포레를 시작으로 민간건설사들이 폐공장 부지를 기부채납 방식으로 매입하면서 200~400%에 이르는 용적률을 적용받아 주상 복합 건물들이 들어섰다. 한편 저층 주택지에는 에피소드 성수, 디웰하우스 등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유주거지들이 늘어났다. 거실과 부엌, 커뮤니티 시설을 공유하며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공유주택은 스타트업과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는 창조인재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뒷받침했다.

8) 2021년 10월 26일 기준 63개 지식산업센터에 5,160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서울시 공공데이터포털 참조).

4. 소결

본 장에서는 마포, 용산, 성동의 사례를 통해 직주락 센터 형성의 공통점을 확인하였다. 세 지역 모두 1990년대 이전에 확립된 고유의 지역 정체성을 보유하고 있었다. 여기에 매력을 느낀 예술인들이 모여 창작 활동과 소통을 통해 지역 특색을 발전시켜 나갔다. 예술 활동을 겸하면서 카페와 레스토랑, 바를 운영하는 문화 창업가들이 많았으며, 독립가게의 소상공인이 네트워킹을 지원했다. 직주락 중에서 문화 정체성을 발전시키는 ‘락’의 집적이 선행되었거나 동시에 진행됐고, 상권의 부상으로 대기업 자본이 들어오면서 오피스시설과 아파트단지가 입지했다.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여섯 가지이다. 먼저 락의 정체성이다. 마포는 청년문화, 용산은 외국인 문화, 성동은 장인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음으로써 개성과 다양성을 창출하는 도심으로 성장했다.

두 번째로 상권 내 연결성이다. 세 곳 모두 역세권이지만, 배후지에는 확장 가능한 골목들이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다. 저층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들의 반지하와 루프탑은 용도변경을 통해 저렴하게 임대함으로써 공방 겸 상점으로 변화했다.

세 번째는 교통 접근성이다. 세 지역 모두 강변북로와 내부순환로 등 도심과 연결되는 간선도로들이 밀접해 있어 도심 접근이 수월하다. 문화 발원지인 홍대, 이태원, 성수 모두 2호선, 6호선, 분당선, 공항철도 등 3~4개 이상의 지하철 노선이 근접해 있다.

네 번째로 상징적인 녹지지역을 보유하고 있다. 마포는 경의선숲길, 용산은 용산가족공원, 성동은 서울숲이 있어, 쾌적하고 여유로운 분위기를 형성한다. 경의선 숲길에는 당인리발전소와 책거리가 조성되어 있고 용산가족공원은 텃밭과 야외행사를 운영한다. 서울숲에는 나비 정원과

곤충 정원을 비롯해 공연장이 가까이 있어, 세 녹지 공간 모두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섯 번째로 지역 아카이빙이다. 2009년 창간한 ‘H 스트리트’는 홍대 문화를 계승해 활동하는 예술가와 장인, 독립가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사진과 지도를 제작해 전시회를 여는 등 홍대의 정체성을 계승한다. ‘남산골 해방촌’, ‘오! 성수’ 역시 이태원과 성수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잡지로, 지역 문화를 아카이빙 하는 자생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징적인 복합주거단지시설이다. 마포는 메세나폴리스와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용산은 한남더힐과 나인원, 성수는 갤러리아포레와 트리마제 등 고층복합건물과 고급빌라단지가 들어섰다. 주거뿐만 아니라 문화와 레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업시설이 들어서면서, 마용성이 직주락 센터로 자리 잡는 데 기여했다.

마용성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 교통망, 아파트 공급 등 물리적인 인프라 확충과 함께 주거의 선호도와 삶의 질을 좌우하는 요인들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직주락 센터의 확립은 용도복합기능이 유·무형적으로 작용하여 지역 전반의 가치가 상승하는 지역 기반 생태계를 의미한다. 마용성의 부상은 직주락 센터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도시발전 모델의 전환을 보여준 사례이다.

VI. 직주락 센터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

본 연구는 직주락 센터 이론을 토대로 마용성 현상을 설명했다. 직장 과 주거시설, 문화 및 상업시설이 집적되어 다목적 기능을 수행하는 마

용성의 성장 과정을 분석했다. 직주락의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특색 있는 상업시설의 집적이 먼저 이루어지고, 이후 직장과 주거시설이 밀집되어 직주락 센터가 형성된 것이 마용성 현상의 요인이었다.

본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문화단지 성격의 상권을 보유했다는 사실이다. 정체성 기반의 예술인과 소상공인이 공생하는 상권은 지역의 투자 가치를 높여 기업과 자본의 집적을 촉진한다. 직장과 상업시설의 밀집은 직주락 라이프스타일을 원하는 이들의 주거 수요와 연결되어, 복합 주거단지의 개발을 견인한다. 문화 정체성을 동네 경쟁력으로 활용하는 ‘락’ 중심의 직주일치는 인적, 물적자원이 부족한 낙후 지역이 경제적 조건의 한계를 극복하고 삶의 질적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도시의 비전을 제시하는 데 기여한다. 마용성의 성장을 토대로, 본 연구는 ‘락’의 정체성의 확립과 직주일치를 도모하는 상권 중심의 공간 정책을 제안한다.

지역성이 내재된 골목상권의 개성과 특색이 지역성장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요소이다. 도보접근성과 복합용도이용의 활성화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직주근접 및 압축도시의 개념과 연결되고, 저층과 고층이 조화를 이루는 건물들에 풍부한 어메니티와 생활시설을 확충해 다양한 사람들의 네트워킹을 촉진하는 신도시주의를 뒷받침한다. 문화적 정체성이 내재된 주체들은 문화 어메니티를 생산하고 소비함으로써, 특정 장소의 문화적 특성이자 생활양식을 드러내며 고유의 장소성과 분위기를 형성한다(장원호 2018). 지역 문화 정체성을 활용하는 소상공인과 예술가를 지원하고 골목 자원의 경쟁력을 강화해 상권의 경쟁우위를 확보함으로써, 직주락 센터를 구축할 수 있다.

마용성 현상의 본질이 ‘락’이 주도하는 직주락 센터라면, 주택 공급 중심의 도시계획은 재고해야 한다. 원도심의 대규모 주택 공급 사업은 직주락 센터의 토대인 골목 자원을 파괴해, 마용성 모델의 이식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콘텐츠 중심의 로컬 브랜드를 육성하려면 ‘락’의 자원을

보유한 원도심 상권의 활성화에 주력해야 한다.

마용성 상권의 성장을 주도한 곳은 골목상권이다. 골목들이 소통의 장이 되려면, 우연한 만남이 가능한 건물과 거리의 복합용도 구성을 지향해야 한다. 홍대, 이태원, 성수는 저층 주택 건물과 고층빌딩이 조화를 이루며 성장했다. 대로변에 주상복합 빌딩이 들어섰다면, 배후지에는 단독주택을 개조한 가게들, 다가구주택이 밀집한 골목들이 연결되고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어 상권이 골목을 따라 확장했다.

저층부에 개방형 가게들이 입지하고 고층부에 주거시설과 오피스를 임대하는 건물구성은 다양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만남을 촉진한다. 주택건물들의 경우 용도변경을 통한 상업활동으로 거리의 다양성을 뒷받침할 수 있다. 고층빌딩의 저층부를 개방형으로 조성해 카페와 레스토랑, 상점 등이 거리와 연결성을 유지하고, 저층 주택의 반지하나 루프탑에는 창작자의 작업실이 들어설 수 있다. 문화 정체성을 보유한 독립가게들이 저층과 고층 건물에 다양하게 밀집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복합용도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본 연구는 언론에서 주목하는 마용성 현상을 통계와 사례연구로 검증하고, 직주락 이론을 토대로 설명하였다. 다목적 고밀도의 커뮤니티 구축을 강조하는 신도시주의적 관점에서 창조계층의 유입을 촉진하는 어메니티의 집적을 통해 직주락 센터로 거듭난 사례로 마용성을 분석한 것은 도시발전에 있어 직주락 센터의 역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접근성 개선과 신규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진 다른 자치구들보다 뚜렷한 성장이 이루어진 마용성의 원동력을 파악하고자 직, 주, 락의 관점에서 마용성의 성장 시점을 비교 분석했다. 이를 통해 주거 프리미엄을 설명하는 데 있어 정체성이 뚜렷한 골목상권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주거 선호의 차별성을 좌우하는 추가적인 요인들을 설명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했다.

본 연구는 자치구별 거주민의 직주일치와 ‘락’ 소비 데이터의 부재로 인하여 집계 가능한 자료를 활용해 마용성의 직주락 집적을 파악하는데 집중했다. 직주락 센터로서 지역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된 것을 확인하고, 자치구마다 직주락 센터의 형성 과정을 분석했다. 향후 행정구역 단위에서 직주락 지표들의 근접성을 측정할 수 있는 통계 자료가 체계적으로 수집된다면, 직주락 센터를 형성한 사례들을 추적하여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

마용성은 개성과 다양성을 갖춘 상권에 창조산업이 집적되고 인구가 증가하는 활기찬 도시의 비전을 제시한다. 홍대, 이태원, 성수가 보유했던 지역성의 계승을 통한 상권 경쟁력은 창조기업과 자본을 집적시키고, 직주근접을 뒷받침할 복합주거시설의 조성을 촉진했다. 창의적인 예술인과 소상공인은 지역의 역사문화를 상품과 서비스로 구현함으로써, 가치를 재생산하고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키는 직주락의 구심점이다. 직주락 센터 이론을 토대로 지역마다 상권 기반의 커뮤니티를 구축한다면, 코로나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고 도시의 지속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경신원·정규리. 2019. 「이태원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일어나는가?」. 서울도시연구 20(2): 1-17.
- 김광영·안정근. 2010. 「서울시 1,000세대 이상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아파트가 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1(6): 81-90.
- 김민수. 2018. “수제화의 모든 것이 모이는 곳, 성수동.” 김미영 외. 『서울의 공간경제학』, 169-191. 서울: 나남.
- 김신성. 2016. 「문화소비공간의 확산에 따른 저층주거지 변화 특성 연구 -연남동 일대를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7(4): 77- 88.
- 김홍배·문동주·박준화. 2008. 「지역진단 지표개발과 지역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3(1): 183-196.
- 김희식. 2014. 「서울성수공단의 형성과 변용에 관한 고찰: 수제화, 자동차정비 산업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57: 1-29.
- 남형권·서원석. 2021. 「지리가중회귀모델을 이용한 아파트 점유형태별 전철역의 접근성 가치 비교분석」. 서울도시연구 18(2): 65-79.
- 류동현. 2011. 「이태원 '예술' 프리덤 선봉에 서다」. 예술경영 제 132호.
- 모종린. 2017. 「골목길 자본론」. 서울: 다산북스.
- _____. 2021. 「머물고 싶은 동네가 뜬다」. 서울: 알키.
- 모종린·강예나. 2017. 「인천 뷰티 라이프스타일 산업 육성 방안」. IDI도시연구 11(1): 7-35.
- 박민하·이병민. 2019. 「홍대앞 사례를 통한 문화적 포용성 개념의 적용」.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2(4): 539-554.
- 박수린·이정교. 2018. 「유흥산업시설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지 13(6): 155-164.
- 박운선·임병준. 2012. 「지역 및 가격대별 아파트가격 결정요인의 차이 분석」. 주거환경 10(1): 91-113.
- 박은실. 2018. “경리단길의 변화와 젠트리피케이션.” 김미영 외. 『서울의 공간경제학』, 315-334. 서울: 나남.
- 삼성경제연구소. 1999. 「재개발 사업의 성공전략 Issue Paper」.
- 서준호. 2013. 「이태원 예술 공간 이야기」. 플랫폼 40: 148-151.
- 양인화. 2016. 「대중음악 창조계층의 활동지역 선택원인 연구 - 홍대 인디음악 신을 중심으로 -」. 철학사상문화 21: 164-191.

- 여효성·이장욱. 2019. 「지역별 고용창출을 위한 지방재정 개선 방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 염승일·이희연. 2011. 「시·군·구의 문화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4(3): 307-324.
- 윤지훈·박지훈·배종태. 2017. 「창업생태계가 소셜 벤처의 기업가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수동 소셜밸리를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연구 10(1): 91-134.
- 윤혜수. 2016. 「새로운 소상공인의 취향과 공간적 실천: 2010년대 연남동의 사례연구」. 문화와 사회 22: 227-281.
- 이소영·김명연·김은정. 2020.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근린환경 요인 분석 - 서울시 강남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대상으로-」. 부동산분석 6(1): 19-37.
- 이유리·이명훈. 2017. 「사회적경제조직의 네트워크 효과에 따른 지역사회 영향 분석 -성수동 소셜벤처 밸리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9(2): 161-187.
- 이지원. 2016. 「초기 문화예술생태계에서 창조적 환경의 형성과정과 추동요인: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지역을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 51(5): 691-711.
- 이한울·권영상. 2016. 「홍대 문화소비공간의 상업용도 확장 특성: 기존 문화소비공간의 경계부 단독다세대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17(2): 101-117.
- 장원호. 2018. “서울의 한류 썸.” 김미영 외. 『서울사회학』, 259-279. 서울: 나남.
- 홍승표. 2008. 「종교를 매개로 형성된 한남동 이슬람 거리와 외국인 무슬림 커뮤니티의 문화적 피난처 역할」. 지리학논총 52: 99-128.

Beauregard, R., A. 2005. “The Textures of Property Markets: Downtown Housing and Office Conversions in New York City,” *Urban Studies* 42(1): 2431-2445.

Birch, E. L. 2002. “Having a Longer View on Downtown Living,”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68(1): 5-21.

Campoli, J. 2012. *Made for walking*. Cambridge, MA: Lincoln Institute of Land Policy.

Calthorpe, P. 1993. *The next American metropolis*.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 Danielsen, K., A., and Lang, R., E. 2010. "Live Work Play: New Perspectives on the Downtown Rebound," *disP - The Planning Review* 46(180): 91-105.
- Duany, A., Plater-Zybeck, E., and Speck, J. 2000. *Suburban nation: The rise of sprawl and the decline of the American dream*. New York: North Point Press.
- Edlund, L., Machado, C., and Sviatschi, M., M. 2019. "Gentrification and the rising returns to skill," In NBER Working Paper No. 21729.
- Ellin, N. 1996. *Postmodern urbanism*. Cambridge, MA: Blackwell Publishers.
- Ewing, R., G., Meakins, G., B., and H., Hilton. 2011. "Transportation and land use." In *Making Healthy Places*, edited by A. Dannenberg, H. Frumpkin, and R. Jackson, 149-169. Washington, DC: Island Press.
- Florida, R. 2002a. "Bohemia and economic geography."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2(1): 55-71.
- _____. 2002b.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New York: Basic Books.
- _____. 2017. *The New Urban Crisis: how our cities are increasing inequality, deepening segregation, and failing the middle class- and what we can do about it*. New York: Basic Books.
- Florida, R., and Adler, P. 2018. "The patchwork metropolis: the morphology of the divided postindustrial city." *Journal of Urban Affairs* 40(5): 609- 624.
- Florida, R., and Mellander, C. 2010. "There goes the metro: how and why bohemians, artists and gays affect regional housing values."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10(2): 167-188.
- Glaeser, E., L., and Gottlieb, J. 2006. "Urban Resurgence and the Consumer City." *Urban Studies* 43(8): 1275-1299.
- Glaeser, E. L., Kolko, J., and Saiz, A. 2001. "Consumer city."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1(1): 27-50.
- Gottliener, M., and Budd, Leslie. 2005. *Key Concepts in Urban Studies*. Calif: SAGE Public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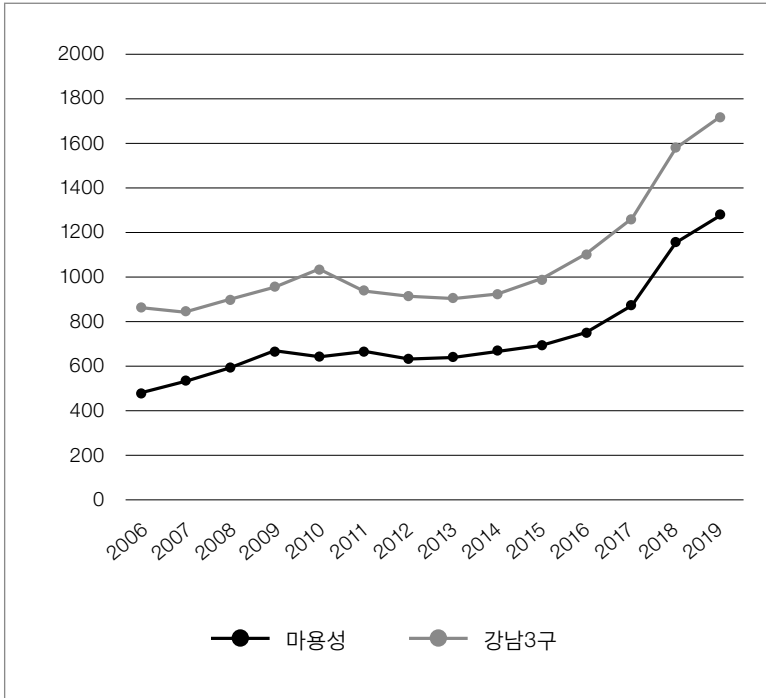
- Grant, J. 2002. "Mixed Use in Theory and Practice: Canadian Experience with Implementing a Planning Principle."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68(1): 71-84.
- Hofstede, G., H. and Minkov, M. 2010.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intercultural cooperation and its importance for survival*. New York: McGraw-Hill.
- Jacobs, J. 1961.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New York: Vintage Books.
- _____. 1985. *Cities and the Wealth of Nations*. New York: Vintage Books.
- Kim, Ji-Youn. 2016. "Cultural entrepreneurs and urban regeneration in Itaewon, Seoul." *Cities* 56: 132-140.
- Landry, C. 2008. *The creative city: a toolkit for urban innovators*. New York: Routledge.
- Leinberger, C. B. 2005. "Turning Around Downtown: Twelve Steps to Revitalization." Brookings Institution Center on Urban and Metropolitan Policy, Washington DC.
- Lloyd, R. 2006. *Neo-Bohemia: art and commerce in the postindustrial city*. New York: Routledge.
- Lucas, R., E. 1988. "On the mechanics of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22(1): 3-42.
- Malizia, E., and Motoyama, Y. 2019. "Vibrant Centers as Locations for High-Growth Firms: An Analysis of Thirty U.S. Metropolitan Areas." *The Professional Geographer* 71(1): 15-28
- Malizia, E., and Song, Y. 2016. "Does downtown office property perform better in live-work-play centers?" *Journal of Urbanism: International Research on Placemaking and Urban Sustainability* 9(4): 372-387.
- Markusen, A., and Schrock, G. 2006. "The artistic dividend: urban artistic special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implications." *Urban Studies* 43(10): 1661-1686.
- Moulton, J. 1999. "Ten Steps to a Living Downtown." Brookings Institution Center on Urban and Metropolitan Policy, Washington DC.

- Rich, M. Ashlin, 2013. “From Coal to Cool”: The Creative Class, Social Capital, and the Revitalization of Scranton,” *Journal of Urban Affairs* 35(3): 365-384.
- Simon, C. 1998, “Human capital and metropolitan employment growth,” *Journal of Urban Economics* 43: 223-243.
- Slowey, K. 2016. “Building a ‘sense of community’: Why mixed-use developments are sprouting up across the US.” <https://www.constructiondive.com/news/building-a-sense-f-community-why-mixed-use-developments-are-sprouting-u/421386/>(accessed May 1, 2022)
- Speck, J. 2012. *Walkable City*. New York: North Point Press.
- Sucher, D. 2003. *City Comforts: How to Build an Urban Village*. Seattle, WA: City Comforts Inc.
- Talen, E. 2012. *City Rules: How Rules Affect Urban Form*. Washington, DC: Island Press.
- “가격상승 보증수표, 직주근접형 아파트 잡아라.” 부동산뱅크. 2005.7.7. <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63525>(검색일: 2022년 1월 15일)
- “돈과 예술의 공존 60년 풍상 ‘삼각지 미술’ 한국경제. 2014.12.29.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1412295190y>(검색일: 2022년 1월 15일)
- “[르포] ‘마용성’의 매력? “출근시간과 대출 원리금 맞바꾼 것”” 머니타임즈. 2019.6.5.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190605065504810>(검색일: 2022년 3월 8일)
- “[모종린의 로컬리즘]일·삶·즐거움’ 한데 모은 도시라야 미래가 있다.” 조선일보. 2021.3.26. https://www.chosun.com/opinion/specialist_column/2021/03/26/4VV7XQXY5NF5TK4IG2RJR34F5E/(검색일: 2022년 3월 8일)
- “[분야별 정보] 재건축/재개발.” 마포구청. 2022.2.23. <https://www.mapo.go.kr/site/main/content/mapo05070201>(검색일: 2022년 3월 8일)
- ““배산임수에 살어리랏다”풍수가 좋으니 집값도 ‘경총’” 서울경제. 2020.4.24. <https://www.sedaily.com/NewsView/1Z1LL2JIO0>(검색일: 2022년 2월 18일)

- “삼성물산 노하우 결집 ‘공덕래미안5차’...워라밸 세대에 인기.” 서울경제. 2018.9.20. <https://www.sentv.co.kr/news/view/544863>(검색일: 2022년 2월 18일)
- “상위 1% 부자 물리는 강남·용산...이유는?” 국토일보. 2021.9.24. <https://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40992>(검색일: 2022년 2월 18일)
- “서울시 뉴타운 사업.” 서울특별시. 2015.5.8. <https://seoulsolution.kr/ko/content/%EC%84%9C%EC%9A%B8%EC%8B%9C-%EB%89%B4%ED%83%80%EC%9A%B4-%EC%82%AC%EC%97%85>(검색일: 2022년 3월 8일)
- “숲길공원의 힘, 3년 만에 아파트 가격 40%상승.” 이투데이. 2018.6.8. <https://www.etoday.co.kr/news/view/1629879>(검색일: 2022년 1월 15일)
- “신용산 시대가 온다.” 여성동아. 2019.9.5. <https://woman.donga.com/3/all/12/1837429/1>(검색일: 2022년 3월 8일)
- “실력 있는 무명 화가들의 등용문 ‘삼각지 화랑가’” 문화포털 공감리포트. 2017.2.10. https://www.culture.go.kr/culture/themeView.do?seq=934&menu_cd=8(검색일: 2022년 3월 8일)
- “용산개발 기대감에 1년 새 64% 수직 상승 ‘용산e편한세상’ 머니타임즈. 2018.8.27.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8082609214038741&EMBA>(검색일: 2022년 3월 8일)
- “[우리동네 아파트-18]마래푸, 신축 직주근접 ‘대세’열다.” 한국일보. 2020.11.17. <http://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684538>(검색일: 2022년 2월 18일)
- “유명인들 관심 갖는 한남 부동산...고급 주거상품 인기.” 동아일보. 2021.8.11.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811/108501028/2>(검색일: 2022년 1월 15일)
- “이태원·이촌동->홍대앞·상암...넓어지는 외국인 마을 지도.” 중앙일보. 2016.2.17. <https://www.joongang.co.kr/article/19579994>(검색일: 2022년 1월 15일)
- “[집코노미]경의선숲길 타고 ‘수직 상승’한 연남동.” 한국경제. 2018.9.22.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1809210223e>(검색일: 2022년 1월 15일)
- “[책]서울의 맛집 2021.” 시사매거진. 2020.11.18. <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6436>(검색일: 2022년 12월 20일)

- “철로의 재발견...도시에 꽃피우는 마포.” 한국경제TV. 2021.10.8.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110080084>(검색일: 2021년 12월 20일)
- “첼리투스 집들이에 동부이촌동 재건축 ‘들썩’” 매일경제. 2015.7.30.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15/07/732125/>(검색일: 2022년 1월 15일)
- “[테마진단]골목상권이 지역발전의 유일한 희망.” 매일경제. 2019.8.8.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19/08/608284/>(검색일: 2022년 12월 20일)
- “[핀테크]‘맥세권’부터 ‘스세권’까지...부동산 세권 백태.” 아주경제. 2019.10.1. <https://www.ajunews.com/view/20190930142246989>(검색일: 2022년 2월 18일)
- “‘학군’은 아쉽지만...마포서 가장 비싼 아파트된 이유.” 머니투데이. 2019.6.8.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190608070504888>(검색일: 2022년 1월 15일)
- “한국판 미쉐린 가이드 ‘블루리본’” 세계일보. 2020.11.24. <http://m.segye.com/view/20201124502581>(검색일: 2022년 12월 20일)
- “[big story]살고 싶은 집, ‘숲세권’의 가치.” 환경매거진. 2019.2.27. <https://magazine.hankyung.com/money/article/202101204341c>(검색일: 2022년 1월 15일)
- “[Friday]ㄴ자 골목따라 밥집·술집·찻집...‘원스톱 회식’ 딱이네요.” 조선일보. 2018.5.11.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10/2018051001795.html(검색일: 2022년 12월 20일)
- “MZ세대는 앞으로 어디에 살까요?[심형석의 부동산정석]” 한국경제. 2021.12.1. <https://www.hankyung.com/thepen/moneyist/article/202112100757Q>(검색일: 2022년 5월 20일)
- “[Real Estate]숲길로 재탄생해 뜨거워진 ‘효창-연남동’..버려진 철길 꾸몄더니 집값, 상권 好好.” 매일경제. 2015.11.9. <https://www.mk.co.kr/economy/view/2015/1066889>(검색일: 2022년 3월 8일)

부 록



[부록 그림 1] 마용성 vs. 강남 3구의 1m² 당 아파트가격(단위: 만 원)

자료(출처): 국토부 부동산실거래가공개시스템

[부록 표 1] 마용성과 일산·분당·판교의 아파트가격 추이 비교

(단위: 만 원)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948.63	947.76	980.96	1124.62	1090.41	1068.19	1032.22	1013.13	1030.52	1140.85	1280.43	1466.08	1702.49	2052.02	
790.90	777.50	812.06	893.56	916.34	889.72	859.78	865.37	898.59	976.11	1098.49	1238.22	1461.56	1755.43	
762.20	731.87	789.67	875.93	872.24	843.41	851.59	840.62	821.89	860.67	931.77	1029.91	1203.05	1463.56	
605.97	709.64	754.50	843.24	837.93	817.43	768.83	730.82	776.30	825.42	910.51	1012.64	1198.85	1440.66	
582.85	605.15	615.40	816.75	813.24	799.36	753.24	719.47	775.62	819.61	844.79	904.32	1100.61	1245.32	
568.43	560.91	586.87	659.33	656.75	644.69	628.64	642.80	632.02	687.11	732.79	835.28	1048.80	1222.07	
524.33	548.94	584.20	636.62	649.10	626.00	618.63	618.66	617.59	663.78	719.97	829.18	989.62	1207.53	
512.47	548.08	577.16	619.60	616.66	603.19	613.22	598.58	615.52	657.02	715.47	791.12	946.46	1103.82	
478.89	512.75	562.99	613.06	608.33	591.31	585.09	579.34	605.38	643.40	690.48	778.00	893.50	1066.53	
457.09	498.87	559.09	599.98	591.63	587.13	580.90	577.84	601.02	639.88	682.09	761.25	879.36	1039.33	
452.82	485.70	544.03	589.04	579.85	586.96	578.84	573.98	591.91	638.46	681.67	746.58	871.61	1038.17	
443.65	467.41	527.19	573.98	576.97	581.75	570.72	568.63	587.28	634.44	663.27	746.29	858.38	1024.53	
424.66	465.09	525.61	573.17	575.25	579.14	567.20	566.41	580.60	603.30	656.32	744.40	845.08	1015.95	
370.04	420.65	472.66	571.54	572.78	576.47	567.16	557.74	573.28	596.42	647.05	717.65	811.36	1007.35	
353.31	409.66	470.06	522.49	531.38	553.35	544.68	534.73	563.70	567.91	626.89	696.60	764.34	1005.79	
342.60	378.44	447.34	484.43	476.91	481.92	498.30	469.86	482.19	506.58	580.97	662.29	728.96	922.65	
328.30	371.22	446.68	474.97	473.18	479.49	451.12	454.72	477.46	502.32	558.87	652.27	727.43	862.66	
325.64	369.67	438.48	462.84	454.13	471.09	450.53	450.94	471.62	497.39	553.52	610.61	693.12	841.10	
320.30	368.28	435.40	459.31	453.10	464.97	449.32	449.93	470.48	495.74	542.78	576.89	642.23	771.37	
319.57	361.10	435.09	458.98	450.18	462.27	442.73	444.53	466.05	491.03	538.53	572.53	629.73	757.87	
308.96	336.28	422.31	453.47	446.26	440.60	436.37	443.98	456.85	482.34	517.04	562.80	627.25	729.67	
280.37	330.22	414.55	451.46	442.19	438.31	428.47	439.13	448.26	466.26	503.72	543.78	601.72	707.53	
275.86	320.23	412.06	422.09	439.26	434.48	405.75	407.20	421.01	461.50	488.94	541.11	595.39	703.66	
275.04	318.08	403.52	419.63	418.58	426.46	404.79	406.95	419.78	449.72	479.85	514.43	563.44	665.27	
273.11	315.28	403.06	419.56	407.42	411.86	399.03	401.64	419.70	446.92	471.45	498.25	541.19	660.86	
271.96	310.45	369.71	411.8	393.58	390.98	362.4	376.84	412.16	444.9	447.53	473.82	516.09	619.22	
252.42	304.82	348.18	381.81	363.44	372.24	362.5	361.53	375.46	397.72	432.03	468.88	504.36	594.08	
-	-	-	373.14	348.75	368.58	338.32	337.66	342.99	353.81	394.56	420.25	444.84	413.58	

자료(설명): 지역별 1m² 당 아파트 매매가격의 평균 추정. 판교는 2009년부터 집계 가능함.

연호색: 마포구, 회색: 성동구, 진회색: 용산구, 연회색: 이태원; 판교, 회색: 이태원; 일산, 진회색: 이태원; 분당, 이태원색: 강남 3구.

자료(출처): 국토부 부동산실거래가공개시스템

부록 표 2] 재정자립도

(단위: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95.0	93.0	91.9	92.7	92.6	90.4	90.5	86.0	85.7	82.9	82.8	81.5	75.9	71.6	66.2	65.2	68.5	67.9	66.2
	91.4	90.5	89.8	91.4	92.5	87.2	88.0	77.1	81.2	79.8	79.4	80.5	73.8	70.3	65.7	65.0	67.6	63.3	66.0
	90.8	87.7	87.6	91.4	89.9	84.2	83.0	75.5	79.4	78.5	77.1	76.9	70.9	69.0	64.0	63.6	62.4	63.3	62.8
	78.8	81.9	72.4	74.1	83.7	77.2	74.9	72.2	78.5	77.1	72.1	65.7	61.0	61.1	56.2	54.6	54.9	52.7	53.6
	72.3	75.7	70.4	73.5	76.0	74.4	69.8	70.6	74.6	73.9	63.8	63.3	55.4	51.3	49.3	48.9	49.2	47.7	46.9
	68.4	67.4	62.9	68.2	73.8	71.2	67.4	70.2	68.8	66.5	61.2	61.6	55.1	51.2	47.9	47.1	48.7	46.2	46.5
	58.2	60.4	45.9	53.0	58.2	59.7	53.0	66.9	60.4	62.7	59.5	56.2	49.4	49.2	46.3	45.1	44.3	42.8	42.6
	51.8	52.8	44.6	44.6	55.3	53.5	52.8	53.7	51.0	52.0	51.0	50.4	48.7	45.0	40.9	40.9	41.6	40.1	41.1
	46.7	45.6	42.9	43.8	53.8	53.1	51.8	52.9	50.8	47.1	49.3	49.1	46.1	42.6	39.4	40.0	39.6	38.2	39.2
	45.5	44.7	42.0	43.3	50.3	51.7	49.2	49.6	49.0	46.2	47.7	44.4	40.0	34.9	32.2	33.1	34.8	33.6	38.9
	44.0	44.5	41.4	43.1	47.4	48.2	42.9	45.4	48.2	45.0	47.7	44.2	39.2	34.4	31.6	33.0	34.2	33.0	33.3
	43.7	43.4	41.3	41.2	47.1	44.9	42.1	45.2	47.1	44.5	43.1	42.2	39.1	33.7	30.9	32.3	33.5	32.3	32.2
	42.3	43.3	40.6	40.6	47.1	44.5	40.3	44.6	44.5	44.0	42.5	41.6	39.1	33.7	30.4	31.3	32.5	31.9	31.4
	42.2	42.3	38.8	39.6	45.3	43.9	39.9	43.4	44.0	43.6	41.1	40.8	35.9	32.9	29.4	30.6	31.6	31.0	29.7
	41.8	41.7	38.5	39.3	43.5	43.9	39.9	41.8	41.9	40.1	41.0	39.0	35.8	32.1	28.7	30.1	30.2	28.6	28.9
	39.2	41.0	38.0	38.3	41.6	43.6	39.1	41.4	40.6	38.6	40.0	37.7	34.2	31.9	28.7	29.5	28.9	27.8	28.2
	39.1	39.7	37.3	37.6	38.3	41.3	38.1	41.2	40.1	37.8	38.7	36.8	33.0	31.1	27.1	26.6	26.9	27.8	27.0
	37.6	39.0	36.2	36.4	38.0	40.7	36.9	38.7	37.4	35.9	35.8	34.0	32.1	30.9	26.0	25.6	26.7	27.0	26.7
	37.6	38.8	35.1	34.5	37.2	38.5	34.6	36.2	37.2	34.8	34.5	33.4	30.5	27.6	25.3	25.5	26.6	26.5	25.8
	37.0	37.4	34.5	33.1	35.7	36.6	33.4	35.3	35.3	33.9	34.3	33.1	29.7	26.8	24.4	24.8	26.1	26.5	25.4
	35.1	33.2	31.3	32.9	35.0	32.9	33.0	35.1	35.0	33.8	32.1	30.9	29.2	25.9	23.9	23.8	25.8	25.9	25.3
	33.5	32.6	30.3	30.9	31.8	32.0	30.0	35.0	34.5	33.8	32.1	30.7	28.0	24.9	22.8	23.7	25.4	25.6	25.2
	31.4	32.0	30.1	30.3	31.1	31.1	29.5	34.2	32.9	31.7	31.5	30.1	27.6	24.5	22.0	23.3	24.0	23.9	24.3
	31.2	31.8	30.0	29.5	30.7	30.4	28.8	30.9	30.2	30.5	29.7	29.6	26.2	24.1	21.8	22.8	23.2	23.3	22.8
	30.4	31.1	29.1	27.9	29.1	29.3	28.3	29.1	29.2	27.4	27.7	22.7	22.3	19.0	17.5	19.2	20.8	21.1	20.6

자료(설명): (자체수입+자치단체 예산규모)×100% / 연회색: 마포구, 회색: 성동구, 진회색: 용산구, 이탤릭체: 강남3구

자료(출처): 통계청 e-지표지표

국 문 초 록

마포·용산·성동(마용성) 현상의 이해:

직주락 센터의 형성을 중심으로

모종린(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강예나(연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연구원)

탈산업화 시대 도시는 다양성, 개방성, 접근성을 갖춘 도심을 중심으로 발전한다. 오피스, 주거, 상업 및 문화시설이 집적된 도심이 다양한 사람들의 자유로운 상호작용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인재들이 유입되어 도시의 창조성을 이끈다는 직주락 센터 이론(LWP center)은 신도시주의와 연결되어 도시의 보행환경과 복합용도를 강조한다. 본 연구는 직주락 센터 이론을 토대로 서울 부동산 시장에 변화를 가져온 마용성 현상을 분석하고, 그 요인을 파악한다.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직주락 관점의 다각적인 지표를 측정해 마용성 현상을 설명한다. 직주락 형성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세 지역이 락-직-주의 순서로 직주락 센터를 형성했음을 확인하였으며, 차별화된 문화 정체성이 내재된 리테일 산업의 밀집이 선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한국 도시들의 직주락 센터 형성을 위해 '락' 정체성의 확립과 직주일치를 도모하는 상권 중심의 공간 정책을 제언한다.

주제어: 서울, 마용성, 신도시주의, 직주락, 리테일 산업

Abstract

Understanding Seoul's Mapo·Yongsan·Seongdong (Mayongseong) Phenomenon:

The Rise of LWP centers in Seoul

Mo, Jongryn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Yonsei University)

Kang, Yena (Researcher, Center for International Studies, Yonsei University)

Downtown neighborhoods with high levels of diversity, openness, and accessibility have become new population centers of the post-industrial city. The live, work, play (LWP) center theory, which argues that the concentration of office, residential, commercial, and cultural spaces in downtown areas promotes free interaction among diverse people, attracts creative talent, and produces urban creativit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pedestrian environments and mixed-use development. This study shows that the LWP center theory can explain Seoul's Mayongseong phenomenon, the rise of three Seoul districts as population centers since the mid-2000s. The three districts, Mayongseong, have emerged as new LWP centers and what is important for urban planners is the sequence of LWP development. In Mayongseong, retail development(play) came first, followed by office(work) and residential(live) development. Based on the findings, we recommend an LWP center policy that focuses on retail district development. Once an attractive retail district is formed, jobs and housing follow.

Key words: Seoul, Mayongseong, New urbanism, LWP, Retail industries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이 지역민의 주거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천호동 320과 천호동 321-18을 중심으로*

고은정**·박지혜***

고은정 · 박지혜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및 가설 설정

1. 주거 만족도
2.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주거 만족도
3.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주거 만족도 결정 요인
4. 주거 만족도 결정 요인의 매개효과
5. 주택 소유의 조절 효과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지 특징
2. 자료수집과 분석 방법
3. 변수의 측정
4. 측정 문항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IV. 연구 결과

1. 상관관계 분석
2. 가설 검정

V. 결론

* 이 논문은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지원되었습니다.

This publication is financially supported by Korea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MOLIT) as 「Education Program for Urban Regeneration Expert」.

** 고려대학교 도시재생협동과정 석사과정, 주저자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 강사, 교신저자(E-mail: jpark10173@gmail.com)

<http://doi.org/10.34165/urbanr.2022..21.141>

투고(접수)일 2022.2.3. 심사(수정)일 2022.2.22. 게재확정일 2022.6.20.

I. 서론

우리나라는 고도 성장기를 거치며 도시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주택 부족과 불량 주거지의 양산을 경험하였다(한춘모 2020). 이는 치안, 의료, 소방 등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켰으며 쾌적한 주거환경과 능률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한 정비사업에 대한 필요를 높였다(권대중·정용식·안경환 2013). 이에, 전면 철거재개발을 통해 도심부를 혁신적으로 개조하여 낙후된 도심부를 새롭게 현대화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었다. 하지만, 전면철거형 정비사업 방식은 이해당사자 간의 극심한 갈등을 유발하고, 원주민 재정착률이 저하하는 등 부작용을 드러냈다(김정옥·진성만·여관현 2019).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일환으로, 중앙정부는 전면 철거방식 재개발에서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으로의 정책변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도시재생추진단을 구성하여 시범사업을 공모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이종현 2014). 그중 하나가 2012년 1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을 통해 전면철거형 도시정비사업이 초래하는 문제점을 완화하고 원주민 재정착에 유리한 정책으로 도입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김필선·박태진 2018).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노후주택을 소규모로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기준을 충족한다면 주민이 직접 조합을 구성하여 추진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서울특별시 2015), 상대적으로 신속한 의사결정과 주민 의견 반영이 쉽고, 사업 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있다(서울특별시 2015).

이에 본 연구는 전면 철거재개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대안으로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행지역의 어떠한 요인의 변화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주거 만족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비슷한 규모와 배후지를 가진 지역 중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완료된 지역(천호동 320번지 일대)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조합설립인가를 마친 상태인 천호동 321-18번지 일대)의 주민 주거 만족도를 비교·분석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의해 주민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는 요인을 규명하고, 주민의 주택 점유유형(소유, 세입)에 따라 거주자의 주거 만족도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효과를 거주자의 인식 중심으로 고찰하고,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 시 주민의 주거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는 정책적, 실무적 고려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가설 설정

1. 주거 만족도

주거 만족도(housing satisfaction)란 주택에 대한 거주자의 주관적인 만족 혹은 불만족의 정도이며 주택에 대한 기대감, 욕구, 열망 및 이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연관되는 개념이다(한정원 2006). 인간 생활을 영위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의·식·주중의 하나인 주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제35조(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통해 국민의 기본 권리로 간주할 만큼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므로 연구자나 정책입안자 역시 주거 만족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다. 특히, 주거 만족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에 관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주거 만족도에는 지역적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으로 주거 만족도 선행요인에 관한 연구 결과를 정리할 수 있다. 유명소·남진(2017)은 서울시 자가형 코하우징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거 만족도를 연구하였는데, 주거 만족도는 주변 환경 만족도, 이웃생활 만족도, 사생활 만족도, 접근성 만족도, 경제성 만족도 순으로 영향을 받았으며, 코하우징 거주자의 주거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는 주택의 물리적 만족도와 이웃생활 만족도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엽·박천일(2012)은 서울시 영구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 장기전세의 거주민을 대상으로 주거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단위주택요인이 경제적 요인, 주거환경요인이 단지관리 요인, 친밀도 요인보다 주거 만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권영수·최완호(2018)는 관악구와 동작구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세대의 주거실태 및 인식조사를 하였는데, 주택 유형 및 연령에 따른 주택선택이유, 주택 유형에 따른 주거면적의 만족도, 보증금 유무에 따른 만족도, 주택 유형 및 연령에 따른 임대료 만족도, 직업 및 주택 유형에 따른 방 크기·방 구조·주방, 욕실 등 내부 배치 만족도, 주택 유형과 직업에 따른 주택성능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권준·이태영(2021)은 서울시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준공된 세 개 지역의 거주민 98명을 대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물리적 지표의 경우 체감안전도, 개방성 및 경관, 주차, 외부공간, 편의시설의 순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표에서는 정서적 안정감, 소속감, 이웃과의 교류 순으로 높은 만족도 결과를 보였다. 이 연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만족도 결정 요인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유사한 점이 존재하나, 본 연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완료된 지역과 추진 중인 지역을 비교하고, 점유유형(소유, 세입)의 조절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될 수 있다.

수도권 외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이한나·김승희(2017)는 강원도 18개 시·군 준고령자와 고령자를 대상으로 각각의 주거 의식 및 주거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준고령자의 영향요인은 접근성, 주거비용 및 수준, 커뮤니티로 나타났으며 고령자의 영향요인은 주거환경, 주거비용 및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집단 모두 주거비용 및 수준이 높을수록 주거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영호·김승희(2020)는 군관사에 거주하는 직업군인을 대상으로 주거 만족도 영향요인과 주거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주거수준, 접근성, 지역사회요인 순으로 주거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김정선(2019)은 베트남 하노이시 아파트 거주자의 주택가격이 주거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고가 주택의 주거 만족도가 저가 주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거주자가 아닌 중개인을 대상으로 거주자의 주거 만족도를 관찰하여 응답하도록 한 연구로 윤선화·김기홍·김재태(2018)가 있다. 윤선화 외(2018)는 서울시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을 대상으로 외국인의 주거 만족 및 계속 거주 의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주거환경 요인과 관련한 외생변수인 주택입지, 주택시설, 주거안전이 주거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주거생활 요인과 관련한 외생변수인 생활권, 특성 반영 정도는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주거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 만족도는 계속 거주 의향과 추천 의향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처럼 주거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지역별, 특정 사회 계층별로 이루어졌다. 이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특정 계층에 따라 주거 만족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주거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그대로 나열하면 접근성, 주거수준, 지역사회, 거주자특성, 교통, 사회, 접근,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주거환경, 주거생활, 주거수준, 주거비용, 접근성, 커뮤니티, 단지주택, 단지관리, 단지환경, 친밀도, 경제적, 쾌적성, 심리적 만족, 경제성, 접근성, 주변환경 여건, 주택물리적, 사생활, 이웃생활 등이다. 다만 연구자에 따라 각 요인에 속하는 하위 요인은 다르게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적 요인’의 경우, 노영호 외(2020)는 하위 요인을 주차 여건, 치안, 교통안전, 녹지공원, 주변청소/쓰레기로 보았고, 김정선(2019)은 이웃과의 교류, 공동공간 상태, 보안 상태로 보았으며, 권영수 외(2018)는 학원접근성, 교통접근성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선행연구에서 논의한 주거 만족도 결정 요인을 종합하면, ① 의료시설, 대중교통, 교육시설 등의 ‘접근성 요인’과 ② 주택 자체의 구조 상태, 크기, 방의 개수 등의 ‘물리적 요인’, ③ 치안·방법상태, 소음상태, 청결상태, 주차 여건 등의 ‘환경적 요인’, ④ 이웃 간의 교류 등 ‘관계적 요인’, ⑤ 점유유형, 임대료와 같은 ‘경제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거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는 [표 1]에 정리하였다.

[표 1] 주거 만족도 결정 요인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 종합

구분	연구자 (계재년도)	연구대상	변수	
			종속변수	독립변수
1	유명소 외 (2017)	서울시 소행주 1~4호와 구름정원사람들 주택 거주자 44명	주거 만족도	• 경제성 요인: 주택가격 및 향후 투자가치 • 접근성 요인: 대중교통 및 직장 접근성 • 주변환경 여건 요인: 주변 편의시설, 교육환경, 자연환경 • 주택물리적 여건 요인: 주택 내부구조, 일조권 및 주차 • 사생활 요인: 사생활 보호 • 이웃생활 요인: 이웃과 함께하는 생활

구 분	연구자 (게재년도)	연구대상	변수	
			종속변수	독립변수
2	김선엽 외 (2012)	공공임대주택 거주민 총 140명	주거 만족도	• 단위주택 요인: 주택규모, 방수, 옥내시설, 수납공간 • 단지관리 요인: 유지관리, 주차, 복지시설, 커뮤니티 • 단지환경 요인: 교육환경, 근린시설, 문화시설, 대중교통 • 친밀도 요인: 이웃 수준, 이웃과의 관계, 주민만족, 사생활 • 경제적 요인: 임대료, 관리비 • 쾌적성 요인: 방법, 소음, 분쟁 • 심리적 만족 요인: 차별, 공동체의식, 생활격차, 주변인식, 창피함
3	권영수 외 (2018)	관악구 동작구 거주청년 535명	주거 만족도	• 물리적 요인: 방 크기, 방 구조, 내부배치, 주택성능 • 경제적 요인: 거주유형, 임대료 • 사회적 요인: 학원접근성, 교통접근성
4	권준 외 (2021)	서울 시내 가로주택정비 사업이 준공된 세 개 지역의 거주민 98명	주거 만족도	• 물리적 지표: 체감안전도, 주차, 편의시설, 외부공간, 개방성 및 경관 • 사회적 지표: 이웃과의 교류, 정서적 안정감, 소속감
5	이한나 외 (2017)	강원도 18개 시·군 준고령자 593명, 고령자 478명 총 1,071명	주거 만족도	• 주거수준: 주택규모, 방의 개수, 시설수준 • 주거비용: 주거비용, 보증금/임대료, 생활비 • 접근성: 공원 접근성, 대중교통 편리성, 관공서/문화시설 접근성, 구매시설 접근성, 자녀/친지들과의 접근성, 병원시설 접근성 • 커뮤니티: 치안/방범 상태, 주변지역 청결성, 이웃주민과의 관계
6	노영호 외 (2020)	직업군인 4,712명	주거 만족도	• 접근성 요인: 의료시설, 교육환경, 상가시설,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보육시설, 생활환경 만족도, 문화체육시설, 대중교통이용, 민간사회와 접근성 • 주거수준 요인: 부엌/화장실/난방, 내부시설 만족도, 구조 상태, 악취/해충/곰팡이, 화재/전기/가스안전, 층간소음/방음/진동, 통풍/환기, 일조/채광 • 지역사회 요인: 주차 여건, 치안, 교통안전, 녹지공원, 주변청소/쓰레기

구 분	연구자 (게재년도)	연구대상	변수	
			종속변수	독립변수
7	김정선 (2019)	베트남 하노이시 대상사레 아파트 거주민 중 성인 600명	주거 만족도	• 거주자 특성 요인: 연령, 직업유무, 가구월소득, 교육수준, 거주기간, 점유유형, 주거면적 • 교통 요인: 대중교통 접근성, 주차설비 편의성, 보행안전 • 사회 요인: 이웃과의 교류, 공동공간 상태, 보안 상태 • 환경 요인: 소음 상태, 수질 상태, 대기 상태, 청소 등 처리 상태, 차양시설 상태 • 접근 요인: 편의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공공시설, 녹지시설, 직장
8	윤선화 외 (2018)	외국인 중개 경험이 있는 중개인 235명	주거 만족도/ 계속거주 의향/ 추천의향	• 주거환경 요인: 주택 입지, 주택 시설, 주거 안전 • 주거생활 요인: 생활권, 주거비, 특성 반영 정도

2.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주거 만족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속한 사업으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란 “노후 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① 자율주택정비사업(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② 가로주택정비사업(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③ 소규모 재건축사업(정비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④ 소규모재개발사업(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분된다(「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 제3항; 조필규·김은유 2020).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비해 정비 기본계획 수립, 정비 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등이 제외되어 사업 기간이 간소화됨에 따라 평균 2~3년의 사업 기간이 소요되고, 이는 통상 8~10년 이상 걸리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비해 사업 기간이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다(서울특별시 2015).

이러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한 조합설립 및 인가를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 즉,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 시작 단계에서부터 다수 주민의 동의를 근거로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점이 중요한 특징이다. 이러한 주민들의 참여는 프로젝트와 의사결정의 정당성, 즉 절차적 정당성을 높일 수 있다(변미리·박민진 2019). 또한, 다수 주민의 동의를 근간으로 한다는 점은 사업 시행 이후에도 원거주민의 정착 가능성을 높인다.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동의한 사업이므로 사업 시행 후에도 다시 거주지로 돌아와서 사업의 성과를 누리하고자 할 것이고,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사업 시행 후 주민의 재정착률이 높게 되는 결과를 이끈다. 실제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준공 완료 지역인 중랑구 면목동 173-2 우성주택 외 4필지를 사업대상으로 하는 ‘면목우성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전원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였으며 이에 기반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 이후에도 주민의 재정착률 100%를 달성했다(이데일리 2016/5/9). 주민들의 높은 재정착률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른 주거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사업 시행에 대해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 시행 후 사업성과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이주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또 다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준공 완료 지역인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주민은 “오래된 동네가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새롭게 바뀐 게 가장 마음에 든다,”며 “쓰러져가던 3층 연립주택이 새 아파트로 바뀌면서 깔끔하게 정비되어 좋다, 집값이 크게 오른 것도 만족하는 부분”이라고 답했다(에너지경제신문 2021/7/27).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시행이 주민들의 주거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이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한 지역과 시행하지 않은 지역 사이의 차이를 가져오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의 주거 만족도 수준을 결정하는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 자체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은 주민들의 주거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3.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주거 만족도 결정 요인

선행연구 결과, 주거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접근성 요인, 물리적 요인, 환경적 요인, 관계적 요인, 경제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과 다섯 가지의 주거 만족도 결정 요인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접근성 요인의 경우는 노영호 외(2020)와 김정선(2019), 권영수 외(2018), 이한나 외(2017)등 많은 선행연구에서 다루었으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서 주거 만족도 결정 요인 중 접근성 요인을 개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접근성 요인은 학군, 공원, 의료·편의시설의 근접성에 의해 형성된다. 이러한 주민 필요 시설에의 접근 가능성이 높을수록 접근성 요인에 의한 주거 만족도 향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노영호 외 2020; 이한나 외 2017).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저층 주거지의 도로나 기반 시설 등을 유지하면서 노후·불량 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방식이다. 즉, 동일 지역 내에서 기존의 시설들과의 접근성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접근성 요인의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둘째, 물리적 요인은 주택의 크기, 구조 및 방의 개수 등으로 구성된다.

주택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의해 주거 만족도 수준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물리적 요인의 개선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의 크기 및 방의 개수의 현저한 차이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이는 사업 시행 자체의 효과보다는 건물 설계에 대한 선호와 관련되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와 의견개진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므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의해 물리적 요인이 변화한다고 간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환경적 요인(치안·방법 상태, 소음 상태, 청결 상태, 주차 여건 등)의 경우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의 결과로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치안·방법 상태의 경우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마을 관리실, 경비실, 보안·방법·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한 시설이 설치되므로 개선될 여지가 있다. 신상준(2017)은 이러한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생활환경의 만족 수준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또한, 소음 및 청결 상태의 경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대상지가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에 부합하는 곳이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지역은 매연·소음 등에 의한 주민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이므로 해당 지역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되면 이러한 문제들이 가시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윤상훈·이재영(2016)은 청소 및 쓰레기 처리 상태는 주거환경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주차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 시 주차 문제 개선을 위하여 인근 주차장 사용권의 확보 및 주차면 설치 의무 면수를 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거 만족도 결정 요인 중 관계적 요인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관계적 요인은 일반적으로 이웃 간의 교류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데(이웃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공동체적 유대감이 형성됨에 따라 주거 만족도가 개선됨),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의

80% 이상(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조합을 설립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들 간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는 등 이웃 간의 의사소통과 다양한 측면에서의 교류를 높일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천호동 320번지는 조합원 66세대의 100% 동의를 거쳐 재정착률 100%를 달성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2015년 1월 이후 여러 차례의 주민설명회와 주민 회의로 이웃 간의 만남이 잦았다. 즉,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일정 정도의 주민 만남과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에 의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 시행 이후의 주민 교류 정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교류는 공동체적 연대감과 소속감을 높일 수 있으므로 주거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거 만족도 결정 요인 중 경제적 요인과의 관계가 있을 수 있으나,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역의 부동산 가격 변화를 가로주택사업 시행의 효과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주거 만족도의 경제적 요인이 변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정리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은 다섯 가지 주거 만족도 결정 요인 중 환경적 요인과 관계적 요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접근성 요인, 물리적 요인, 경제적 요인은 상대적으로 외부적인 영향(예를 들어, 국가 정책, 거시적인 지역 변화 등)을 많이 받는 것에 비해, 환경적 요인과 관계적 요인은 더 직접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 자체의 영향을 받아 변화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민들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결과로 환경적 요인과 관계적 요인이 긍정적으로 개선되었다고 인식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2: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은 주민들의 주거 만족도 결정 요인 중 환경적 요인 인식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3: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은 주민들의 주거 만족도 결정 요인 중 관계적 요인 인식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4. 주거 만족도 결정 요인의 매개효과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볼 때,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민의 주거 만족도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주거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 중 환경적 요인(치안·방범상태, 소음상태, 청결상태, 주차 여건)과 관계적 요인(이웃 간의 교류)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주거 만족도 결정 요인은 주거 만족 수준을 결정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은 주거 만족도 결정 요인 중 환경적 요인과 관계적 요인을 개선하고, 환경적 요인과 관계적 요인이 개선됨에 따라 최종적으로 주거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주거 만족도 결정 요인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주거 만족도의 관계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환경적 요인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주거 만족도의 관계를 매개하고, 관계적 요인 역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주거 만족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4: 주거 만족도 결정 요인 중 환경적 요인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과 주거 만족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5: 주거 만족도 결정 요인 중 관계적 요인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과 주거 만족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5. 주택 소유의 조절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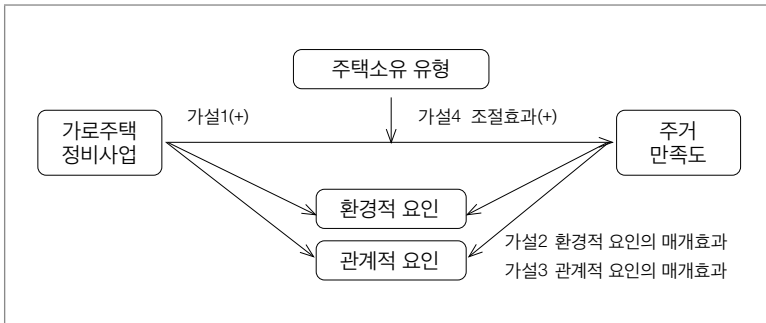
주택 소유(home ownership)는 한 가계의 부(wealth)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Hu & Ye 2020). 일반적으로 주택 소유는 주거 만족(housing satisfaction)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Diaz-Serrano 2009; Hu & Ye 2020). 예를 들어, 주택 소유자는 물리적 주거환경의 측면에서 전세나 월세 세입자보다 주거 만족도가 높았고(김준호 2016; 황광선 2013), 주택 소유자, 전세 세입자, 월세 세입자의 순서로 주거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이채성 2012), 주택 소유 여부는 개인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까지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소량·문상호 2011; 류지연·한창근 2018; 박종옥 2018; Hu & Ye 2020). 특히 주택 소유 형태(자가, 전세, 월세)에 따라 주거 만족도의 차이가 발생하였는데, 이 차이는 물리적(주요 편의시설에의 접근 용이성)·자연적(오염도, 이웃과의 관계 등)·사회적(주차·도로, 치안·범죄 등)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에 의해 전반적인 주거 만족도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김준호 2016; 박종옥 2018; 황광선 2013).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지역의 조합원 인식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 계층은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주거의 쾌적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m=3.95$, $s.d.=.942$), 분양받은 아파트의 가치가 상승할 것($m=4.15$, $s.d.=.712$)이라고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었다(박원석·이범웅·강정규 2021).

이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거 만족도 수준이 변화하는 과정에 해당 주택의 소유구조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주택 소유자는 세입자보다 더 나은 주거 조건에서 생활할 수 있고, 주택 소유로 인해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고 그에 따라 더 높은 자기 존중감을 느끼며(Rohe & Stegman 1994), 더 높은 통제력과 안전감을 가지게 된다(Hu & Ye 2020). 그러므로 주택 소유자는 세입자와 비교해 가

로주택정비사업에 의한 생활 여건의 개선(환경적 요인, 관계적 요인 측면)의 긍정적 효과를 더 강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더 높은 만족감을 보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한 지역의 주민들은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높은 주거 만족도를 보일 수 있는데, 이때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지역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는 다른 조건(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지역의 세입자, 가로주택정비사업 미시행 지역의 주민)에 비해 더 높을 것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주택 소유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른 환경적, 관계적, 경제적 변화의 긍정적인 효과를 직접적이고 장기적으로 향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6: 주택 소유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주거 만족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주택 소유자의 경우에는 세입자에 비하여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행과 주거 만족도의 정(+)의 관계가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상기의 가설을 종합하여 [그림 1]에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지 특징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준공이 완료된 지역인 천호동 320번지와 2021년 7월 현재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천호동 321-18번지 지역을 대상으로 2021년 7월 1일 ~ 7월 16일에 실행된 자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요인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지 중 문헌 연구 및 현장답사를 통해 준공 완료 지역과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지역 중 동네 특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입지적으로 비슷한 대상지를 선정하였다(천호동 320번지와 천호동 321-18번지). 둘째,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기존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주거 만족도에 대한 큰 영향요인과 그에 따른 세부 영향요인으로 분류하여 설문지 항목과 분석변수를 구성하였다. 셋째, 선정된 강동구 사업지의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주거 만족도 및 주거 만족도 결정 요인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넷째,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설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개선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대상지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천호동 320번지 지역은 서울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제1호 준공 사업장으로 2017년 11월 준공이 완료되어 현재 다성이즈빌로 재건축되었다. 다성이즈빌은 면적 3,332.5㎡,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하 1층 지상 7층의 1개동 총 96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전 동도연립 시절에는 연립주택 3개동, 층수 3층의 66세대였다. 2015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11월 착공을 거쳐 2017년 11월에 준

공이 완료되어 사업 시행인가일로부터 총 18개월, 착공일로부터는 총 12개월의 사업 기간이 소요되었다. 동도연립 주민 총 66명 가운데 56명 (84.85%)의 동의를 받아 조합을 설립하였으며 준공완료 당시 원주민 재정착률 100%를 달성했다. 조합원 분담금은 한 가구당 6,500만 원이 발생하였으나 30가구를 증축한 뒤 일반분양 수익을 합쳐 전체 사업비를 충당하였다. 정리하면, 천호동 320번지 지역은 조합설립일로부터 2년 2개월 만에 준공 및 입주하였고, 일반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평균 8~10년이 걸리는 것에 비해 사업 속도가 매우 빠르고,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이 100%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구하는 빠른 사업추진과 원주민들의 높은 재정착률에 근접한 성공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임종욱 2019). 한편 천호동 320번지와 비교하기 위하여 선정된 두 번째 연구대상지인 천호동 321-18번지 지역은 면적 2,704㎡,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상 3층의 39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2015년 12월에 조합설립이 인가되었으나 현재 사업이 담보 상태에 있다.

연구대상지인 천호동 320번지 지역과 천호동 321-18번지 지역은 같은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하여 있고, 도보 2분 거리로 매우 인접한 지역으로 유사한 생활환경 내에서 동일 학군, 공원, 편의시설 등을 이용하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 대지 면적 역시 3,333㎡와 2,704㎡로 큰 차이가 없으므로, 접근성 요인, 물리적 요인, 경제적 요인 등을 통제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준공 완료와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의 주거 만족도 차이 및 주거 만족도 결정 요인 중 환경적 요인과 관계적 요인의 차이에 대한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즉, 연구대상지가 천호동 320번지와 천호동 321-18번지로 같은 천호동 내 도보 3분 거리인 만큼 같은 생활환경에 위치하여 같은 학군, 공원, 편의시설을 이용하므로 접근성 측면에서 통제할 수 있고, 물리적 요인의 경우 천호동 320번지의 다성이즈빌의 평균 공급면적이 63.3㎡이고 천호동 321-18번지의 국도맨션의 평

균 공급면적이 69.3㎡로 유사하며 집 자체의 구조도 비슷하기 때문에 주택의 크기, 구조 및 방의 개수 등이 유사하여 주거 만족도에 미치는 물리적 요인의 효과를 통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두 지역은 인접하여 동일한 배후 시설을 공유하는 지역으로 부동산 가격의 변화 흐름도 비슷하기 때문에 경제적 요인도 통제가능하다고 보고 연구대상지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성공사례로 꼽히는 천호동 320번지 지역을 기준으로 비교, 분석하는 것은 앞으로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 있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연구대상지로 결정하였다.

2. 자료수집과 분석 방법

설문조사 및 인터뷰는 주거 만족도와 주거 만족도 결정 요인에 대해 리커트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자체 설문조사를 제작하였다. 준공이 완료된 지역인 천호동 320번지와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천호동 321-18번지 지역에 2021년 7월 1일 ~ 7월 16일에 직접 방문 조사하였다. 즉, 천호동 320번지와 천호동 321-18번지에 방문하여 실제 거주하는 주민 각 25명씩 총 50명을 대상으로 응답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 및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3. 변수의 측정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 여부는 연구대상지를 근거로 하여 구분한 뒤 시행지역은 1, 미시행지역은 0으로 표시하여 분석에 반영하였다.

주거 만족도는 거주 공간 및 주변 환경에 대한 만족도라고 조작적 정

의를 내리고 네 문항으로 질문하였다. 구체적으로, ‘현재 거주하는 공간이 만족스럽다,’ ‘현 거주지의 주변 환경이 만족스럽다,’ ‘현 거주지에서 계속해서 오랫동안 거주하기를 원한다,’ ‘다른 거주지로 이사 갈 생각이 없다’를 사용하였고, 응답자는 리커트 5점 척도(전혀 아니다 ~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주거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을 거주지 및 주변 환경의 안전, 청결, 쾌적성, 주차 여건으로 정의하고, ① 치안/방범 상태 (2문항), ② 소음상태 (1문항), ③ 청결상태 (2문항), ④ 주차 여건 (2문항)으로 리커트 5점 척도(전혀 아니다 ~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질문하였다.

주거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중 관계적 측면을 살펴보기 위하여 관계적 요인은 이웃과의 교류 정도로 정의하고 2문항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현 거주지의 다른 사람들은 이웃 간의 교류를 활발히 한다,’ ‘나는 옆집의 이웃과 교류하며 지낸다’이고, 리커트 5점 척도(전혀 아니다 ~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절변수인 주택 소유 유형은 점유유형(매매, 전세, 월세 중 선택)을 직접 기입하게 하였고, 이를 이분 변수(자가 1, 세입 0)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통제변수로 응답자의 성별과 가구소득을 반영하였다. 측정변수들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표 2]에 정리하였다.

[표 2]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지역(천호동 320번지)과 시행 예정지역(천호동 321-18번지)의 응답자 분포에 있어서 성별, 주택 소유 여부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가구소득은 전체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한 지역에서 더 높게 응답하고 있었다. 따라서 연구모형에서 가구소득을 통제한 후 가설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가로주택정비사업 인식에 대한 응답에서 환경적 요인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한 지역이($m=4,413$,

s.d.=.406) 시행 예정 지역보다($m=3.233$, s.d.=.869)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t=6.154$, $p<.000$), 이는 주거 만족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지역 $m=4.3$, s.d.=.703,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 예정 지역 $m=3.6$, s.d.=1.033; $t=2.8$, $p<.01$). 다만 관계적 요인에 대해서 두 지역 간 인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지역 $m=3.6$, s.d.=.736,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 예정 지역 $m=3.32$, s.d.=.988; $t=1.136$, $p=n.s.$).

4. 측정 문항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변수들은 연구자가 기존 연구를 토대로 수정·보완하였기 때문에 이 변수들이 변별력 있게 구분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윟값 1 이상의 주성분 분석에 베리맥스 직각회전을 적용한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단일 문항으로 객관적 상태를 측정한 독립변수(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 여부)와 조절변수(주택 소유 유형)를 제외하고 실시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매개변수인 환경적 요인(6문항)과 관계적 요인(2문항), 종속변수인 주거 만족도(4문항)가 각각의 개념으로 구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표 3) 참고). 더불어 두 개 이상의 문항을 활용한 변수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환경적 요인의 크론바흐 알파는 .903, 관계적 요인(2문항)의 크론바흐 알파는 .762, 주거 만족도의 크론바흐 알파는 .894로 변수들이 신뢰할 수 있게 측정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통제 변수	성별	가로주택	남 1	16	64.0
		정비사업시행	여 0	9	36.0
		가로주택	남 1	14	56.0
		정비사업예정	여 0	11	44.0
		계	남 1 여 0	30 20	60.0 40.0
	가구 소득 (월)	가로주택 정비사업시행	200만 원 이하	0	0.0
			200만 원 - 400만 원	9	36.0
			400만 원 - 600만 원	12	48.0
			600만 원 이상	4	16.0
		가로주택 정비사업예정	200만 원 이하	5	20.0
			200만 원 - 400만 원	13	52.0
			400만 원 - 600만 원	7	28.0
			600만 원 이상	0	0.0
		계	200만 원 이하	5	10.0
			200만 원 - 400만 원	22	44.0
			400만 원 - 600만 원	19	38.0
			600만 원 이상	4	8.0
독립 변수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 여부		시행 1 예정 0	25 25	50.0 50.0
조절 변수	주택 소유 여부	가로주택	자가 1	17	68.0
		정비사업시행	세입 0	8	32.0
		가로주택	자가 1	18	72.0
		정비사업예정	세입 0	7	28.0
		계	자가 1 세입 0	35 15	70.0 30.0
매개 변수	환경적 요인 t=6.154 p=.000	가로주택	(평균 = 4.413, 표준편차 = .406, 최소값 = 3.5, 최대값 = 5)		
		정비사업시행			
		가로주택	(평균 = 3.233, 표준편차 = .869, 최소값 = 1, 최대값 = 4.5)		
	관계적 요인 t=1.136 p=.262	정비사업예정			
		계	(평균 = 3.823, 표준편차 = .897, 최소값 = 1, 최대값 = 5)		
		계			
종속 변수	주거 만족도 t=2.800 p=.007	가로주택	(평균 = 3.600, 표준편차 = .736, 최소값 = 2.5, 최대값 = 5)		
		정비사업시행			
		가로주택	(평균 = 3.320, 표준편차 = .988, 최소값 = 1, 최대값 = 5)		
	정비사업예정				
		계	(평균 = 3.460, 표준편차 = .874, 최소값 = 1, 최대값 = 5)		
		계			

[표 3] 탐색적 요인 분석 및 신뢰성 검정 결과

문항	환경적 요인	관계적 요인	주거 만족도	크론바흐 알파
환경_치안방법1	.831	.211	.071	.903
환경_치안방법2	.849	.178	.200	
환경_소음	.684	.358	.285	
환경_청결1	.783	.046	.492	
환경_청결2	.711	-.074	.493	
환경_주차 여건	.674	.320	.048	
관계_이웃1	.207	.788	.307	.762
관계_이웃2	.225	.857	.150	
주거 만족도1	.305	.252	.766	.894
주거 만족도2	.393	.201	.661	
주거 만족도3	.175	.115	.911	
주거 만족도4	.053	.205	.883	
아이겐값	6.276	1.149	1.594	
설명분산비율	31.891	15.237	15.237	
누적분산비율	31.891	47.128	75.156	

KMO측도 : .780,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 근사 카이제곱: 440.232 (df=66, p=.000)

IV. 연구 결과

1. 상관관계 분석

가설 검증에 앞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거 만족도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환경적 요인, 관계적 요인과 정(+)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므로 가설적 관계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다.

[표 4] 상관관계 분석표

변수	평균	표준편차	1	2	3	4	5	6
1. 가로주택정비사업	.50	.505						
2. 주택 소유	.70	.463	-.044					
3. 환경적 요인	3.82	.897	.664**	.107				
4. 관계적 요인	3.46	.874	.162	.172	.494**			
5. 주거 만족도	3.95	.944	.375**	.269+	.577**	.474**		
6. 성별	.60	.495	.082	.000	-.002	-.014	.055	
7. 소득수준	367.60	164.435	.494**	.224	.306*	-.130	.319*	.043

주: n=50, + p<.10, * p<.05, ** p<.01

2. 가설 검정

가설1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이 지역민의 주거 만족도에 정(+)
의 영향을 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의 모형2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한 지역
의 주민들은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주거에 대해 더 높은 만족도를 보
였다($b=.633$, $s.e.=.287$, $p<.05$). 따라서 가설1은 지지되었다.

가설2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이 주거 만족도 결정 요인 중 환경적
요인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표 5]의 모형6을 보
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은 주민들이 환경적 요인에 대해 더 긍정적
으로 인식하도록 만든다($b=1.270$, $s.e.=.227$, $p<.01$). 그러므로 가설2 역
시 지지되었다.

가설3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이 주거 만족도 결정 요인 중 관계적
요인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표 5]의 모형8을 보

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은 주민들이 관계적 요인 역시 개선되었다고 인식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b=.616$, $s.e.=.279$, $p<.05$). 그러므로 가설3도 지지되었다.

가설4는 주거 만족도 결정 요인 중 환경적 요인이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주거 만족도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것이고, 가설5는 주거 만족도 결정 요인 중 관계적 요인이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주거 만족도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내용이었다. 매개효과 3단계 검증법에 따르면(Baron & Kenny 1986), 1단계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고, 2단계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존재하는지 확인한 뒤,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모두 반영한 회귀식에서 매개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존재하고 동시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회귀계수의 유의성이 낮아지거나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면, 매개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매개한다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1단계는 가설1에 의해 충족되었다([표 5]의 모형2, 가로주택정비사업 → 주거 만족도: $b=1.270$, $s.e.=.227$, $p<.01$). 2단계는 가설2와 가설3에 의해 충족되었다([표 5]의 모형6 가로주택정비사업 → 환경적 요인: $b=1.270$, $s.e.=.227$, $p<.01$; [표 5]의 모형8 가로주택정비사업 → 관계적 요인: $b=.616$, $s.e.=.279$, $p<.05$). 마지막으로, 3단계는 [표 5]의 모형3에서 환경적 요인은 주거 만족도에 한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였고($b=.373$, $s.e.=.188$, $p=.054$), 관계적 요인은 주거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관계를 나타냈으며($b=.338$, $s.e.=.153$, $p<.05$), 동시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거 만족도와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b=-.049$, $s.e.=.323$, $n.s.$). 따라서 매개효과 3단계 검증법으로는 환경적 요인과 관계적 요인이 모두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주거 만족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매개효과 3단계 검증법이 가지는 가정 상의 한계와 본 연구의

적은 응답자 수에 의해 통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보완하기 위하여 소벨 검정(Sobel test)을 실시하였다(Sobel 1987). 소벨 검정 결과, 주거 만족도 결정 요인 중 환경적 요인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주거 만족도의 관계를 한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매개하였고($t=1.866$, $p=.062$), 주거 만족도 결정 요인 중 관계적 요인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주거 만족도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매개하지 않았다($t=1.562$, $n.s.$). 그러므로, 가설4는 한계적으로 지지되었으나 가설5는 지지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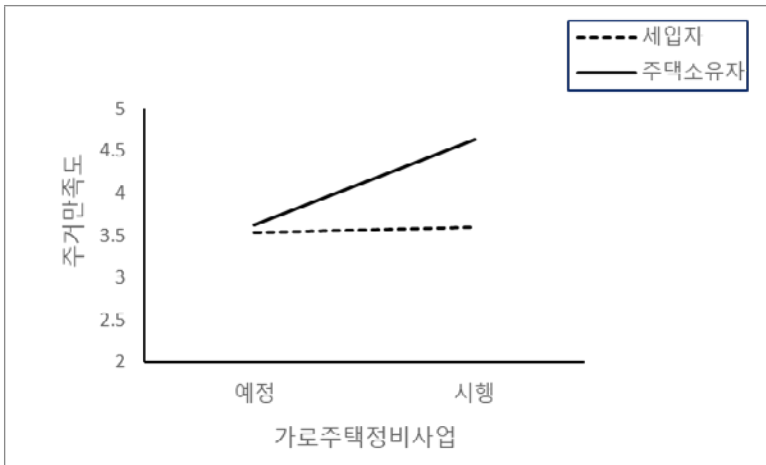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가설6은 주택 소유 여부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주거 만족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특히,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표 5] 가설 검정을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구분	DV=주거 만족도				DV=환경적 요인		DV=관계적 요인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모형6	모형7	모형8
(상수)	3.233** (.350)	3.037** (.357)	.650 (.648)	.938 (.608)	3.223** (.335)	3.197** (.282)	3.722** (.340)	3.539** (.346)
성별	.078 (.264)	.044 (.251)	.098 (.216)	.091 (.200)	-.027 (.252)	-.102 (.198)	-.015 (.256)	-.049 (.243)
가구소득	.002*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2* (.001)	.000 (.001)	-.001 (.001)	-.002* (.001)
가로주택정비사업(1)		.633* (.287)	-.049 (.323)	-.936* (.430)		1.270** (.227)		.616* (.279)
주택 소유(2)		.536+ (.279)	.251 (.249)	-.411 (.327)		.303 (.220)		.507+ (.270)
환경적 요인			.373+ (.188)	.374* (.174)				
관계적 요인			.338* (.153)	.393** (.143)				
(1) × (2)				1.236** (.431)				
ΔR^2	.104+	.125*	.226**	.089**	.094+	.373**	.017	.134*
R^2	.104+	.228*	.454**	.543**	.094+	.467**	.017	.151

주: $n=50$, + $p<.10$, * $p<.05$, ** $p<.01$, 비표준화계수 표시, 괄호 안은 표준 오차.

경우 세입자와 비교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주거 만족도의 정(+)의 관계를 더 크게 인식할 것(즉, 정(+)의 조절 효과)으로 보았다. [표 5]의 모형4에 따르면, 주택 소유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주거 만족도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조절하였다($b=1.236$, $s.e.=.431$, $p<.01$). 더 정확한 조절 효과의 양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 예측한 바와 같이, 주택 소유자의 경우,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거 만족도가 증가하였으나, 세입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주거 만족도의 정(+)의 관계가 주택 소유자에 비하여 크지 않았다. 그러므로 가설6도 지지되었다.



[그림 2]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주거 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주택 소유의 조절 효과

V. 결론

본 연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효과를 거주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고찰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한 지

역과 그 인근에 비슷한 규모와 배후지역을 가졌으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예정인 두 지역을 선정하여, 각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거주자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은 주민의 주거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었다. 비교적 거주지의 배후지 영향(접근성 요인), 인근 부동산 가격(경제적 요인), 주택의 구조나 면적(물리적 요인)에 대한 통제가 가능한 두 지역에 대해 개별 응답자의 성별과 가구의 소득수준을 통제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럼에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한 지역의 주거 만족도가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 예정 지역(미시행 지역)의 주거 만족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고하였다. 이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하는 것이 실제 거주민의 주거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구체적으로 사업대상 지역에 있어 치안·방범, 소음, 청결, 주차 여건과 같은 물리적 요인을 개선하고, 이웃 교류와 같은 공동체의 관계적 측면의 개선을 도모하는데 기여한다고 평가되었다. 즉,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한 곳의 거주자들은 거주지역의 치안·방범이나 소음 문제, 쓰레기 처리와 같은 위생과 청결의 문제, 더불어 주차 여건들이 좋다고 평가하였고 이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 예정 지역의 거주자가 인식하는 수준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므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거 지역의 환경적 요인과 관계적 요인을 개선하는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한 환경적 요인의 개선은 주민의 주거 만족도 인식을 향상하는 매개 요인의 역할을 한다. 다만, 환경적 요인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한계적인 수준을 보고하였다. 더불어 관계적 요인의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응답자 수와 같은 통계 처리 측면의 한계점을 보여줌과 동시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효과로서 공동체의 재

건, 이웃 간 교류 확대와 같은 관계적 측면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은 주택 소유자들의 주거 만족도를 더 크게 높이는 효과가 나타났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지역의 생활 여건이 개선되어 주거의 편의성이 높아지는 것뿐 아니라 개선된 환경에 따라 일정 정도의 자산가치 상승의 효과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이론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정책(가로주택정비사업)의 효과를 검증하는데 있어 실제 정책의 대상이 되는 주민의 인식을 기반으로 실증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도시사회학 및 정책학 분야에 이론적 기여를 할 수 있다. 특히, 준실험설계(quasi-experiment design)와 유사한 방식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효과를 비교 가능한 두 지역을 선정하였고, 실제 거주민의 설문 응답 자료를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방법의 적절성 및 엄밀성을 높이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 여부와 주거 만족도의 관계를 매개하거나 조절하는 변수를 논의함으로써 주거 만족도와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을 통합하는 새로운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즉, 주거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던 기존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는 변수 간 이론적 관계를 다양하게 설정하고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기여점이 있다.

한편, 본 연구가 가지는 정책적·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직접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실거주민의 주거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주변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거주자들의 주거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원주민의 지속 가능한 정주 환경 마련 및 주거 만족도 향

상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홍보 활동 등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국적인 사업 시행을 위해서 지역적 특성에 맞는 개선 방안 등도 필요하다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환경적 개선뿐 아니라 관계적 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이웃과의 교류를 증진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는 생각하지만 실제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른 관계적 요인의 개선이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매개 요인으로서는 작용하지 못하였다. 즉,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웃을 알게 되고 교류를 하게 되지만, 이것이 공동체의 관계적 안정성을 도모하여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역할까지는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주택지역의 주민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는 방안을 포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효과를 고려할 때 주택을 소유하면서 실거주 중인 주민 외에 실거주하는 세입자의 주거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실제 주거의 편의를 높이는 것으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세입자에게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효과가 주거 만족도 측면에서는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실거주민의 주거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니만큼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지의 실거주민을 위한 정책적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실무적으로 세입자도 체감할 수 있는 정주 환경의 개선(예를 들어, 주차 공간 확보, 방법 개선 등)과 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 최소화 방안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 연구 설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의 효과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종단 추적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로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 예정 지역에 대하여 사업이 완료된 후에 다시 한번 설문조사를 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 전·후의 주거 만족도 변화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연구대상 수가 제한적이다. 각 지역별 응답자는 25명으로 총 50명의 설문 응답을 받았는데, 이는 각 대상지별 전체 거주자의 수를 생각할 때 해당 표본이 너무 적은 숫자는 아니고, 제한된 표본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난 만큼 가설의 관계가 명확하게 실재하는 것이라는 방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통계 분석 결과의 안정성을 위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표본의 크기를 더 크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주거 만족도 결정 요인 중 연구모형에 포함되지 않은 요인에 대한 통제 방식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 연구모형에 포함된 환경적 요인과 관계적 요인을 제외하고 접근성 요인, 물리적 요인, 경제적 요인의 경우에는 연구대상지 선정 을 통해 통제 가능하다고 보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천호동 320번지와 천호동 321-18번지 실제 거주자들이 주변의 접근성 요인이나 물리적, 경제적 요인을 같게 인식하는지에 관한 확인은 다소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천호동 320번지는 인근에는 아파트 단지가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천호동 321-18번지는 저층 주거지를 배후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면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인식을 추가 설문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주거 만족도 결정 요인에 대한 인식을 설문 문항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더욱 더 넓은 지역으로 확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천호동으로 연구대상지를 국한하였으므로 본 연구 결과를 전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효과로 확대하여 해석하기에 제한이 따른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른 주거 만족도와 인식 개선에 대한 연구를 지역 범위를 넓게 하여 수행할 필

요가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하여 전면 재개발 방식의 주거 환경 개선보다 소규모 지역 개발에 따라 주민들이 주거 환경 개선과 편의 증진을 직접 체감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통하여 높은 수준의 만족을 누리는 주거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강소랑·문상호. 2011. 「중 고령자의 삶의 질에 관한 증험적(Evidence-Based) 정책설계: 고령화연구패널(KLoSA)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한국정책학회보 20(2): 353.
- 권대중·정용식·안경환. 2013. 『도시재생론』. 부연사.
- 권준·이태영. 2021. 「주민만족도 조사를 통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16(7): 201-211.
- 권영수·최완호. 2018. 「서울시 거주 청년의 주거 만족도 분석-서울시 관악구/ 동작구 거주 청년의 주거실태 분석을 중심으로」. 부동산경영 18: 289-311.
- 김선엽·박천일. 2012.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만족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8(2): 79-99.
- 김정선. 2019. 「주택가격 수준별 주거 만족도 영향요인분석」. 주거환경 17(4): 43-58.
- 김정욱·진성만·여관현. 2019. 「강화군 마을사업에서 주민조직의 참여와 역량 분석 : Chaskin의 공동체 역량 형성 모형을 활용하여」. IDI도시연구 15: 143-178.
- 김준호. 2016. 「소득계층 및 주택점유형태별 주거 만족도에 관한 연구」. 부동산·도시연구 9(1): 95-111.
- 김필선·박태진. 2018. 「노후주거지 재생을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연구」. 부동산경영 18: 267-288.
- 노영호·김승희. 2020. 「직업군인의 주거 만족도 영향요인 및 특성분석」. 대한부동산학회지 57: 105-123.
- 류지연·한창근. 2018. 「베이비붐 세대의 주택 소유 여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정책실천 4(2): 5-40.
- 박원석·이범웅·강정규. 2021.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지역의 조합원 인식에 관한 연구」. 주거환경 19(4): 111-128.
- 박종욱. 2018. 「경제적 요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거주주택관련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소비자문제연구 49(1): 97-129.
- 변미리·박민진. 2019. 「서울은 사회적으로 혁신적인가? : 서울시 사회혁신 정책을 중심으로」. IDI도시연구 15: 59-101.
- 서울특별시 주거재생과. 2015.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주거환경정비사업부문) 정비사업 실무 매뉴얼. 서울특별시.
- 신상준. 2017. 「개인의 생활환경과 사회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인천광역시 시민을 대상으로.」 IDI도시연구 11: 285-316.
- 유명소·남진. 2017. 「소규모 코하우징 거주자의 주거 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서울시 소행주1~4호와 구름정원사람들주택을 사례로.」 국토계획 52(1): 163-184.
- 윤상훈·이재영. 2016. 「주거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한 인천광역시 주거환경만족도 영향요인 규명.」 IDI도시연구 10: 69-97.
- 윤선화·김기홍·김재태. 2018. 「서울시 거주 외국인의 주거만족 및 계속 거주 의향에 관한 실증연구 - 외국인 대상 기업공인중개사의 중개 경험을 중심으로.」 부동산경영 17: 257-284.
- 이종현. 2014. 「미국 보스턴 도시재생정책 사례 및 시사점.」 IDI도시연구 8: 7-41.
- 이채성. 2012. 「주거점유상태와 주택형태에 따른 기혼자의 주거 만족도.」 한국 주거학회논문집 23(1): 9-17
- 이한나·김승희. 2017. 「준고령자와 고령자의 주거 만족도 영향요인 비교 분석-강원도를 중심으로.」 대학부동산학회지 35(1): 83-101.
- 임종옥·이춘원. 2019. 「가로주택정비사업 저해요인에 관한 연구-서울특별시 중심으로.」 대한부동산학회지 37(3): 259-274.
- 조필규·김은유. 2020.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지공법연구 90: 23-46.
- 한경원. 2006.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 영향요인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춘모. 2020. 「재개발사업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황광선. 2013. 「주택점유형태에 따른 주거환경과 주거만족 연구 : 주택복지정책에 대한 함의.」 서울도시연구 14(1): 57-72.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Diaz-Serrano, L. 2009. "Disentangling the housign satisfaction puzzle:

- Does homeownership really matter?"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30: 745-755.
- Hu, M., & Ye, W. 2020. "Home ownership and subjective wellbeing: A perspective from ownership heterogeneity."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21: 1059-1079.
- Rohe, W. M., & Stegman, M. A. 1994. "The effects of Homeownership: On the self-esteem, perceived control and life satisfaction of low-income people."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60(2): 173-184.
- Sobel, M. E. 1987. "Direct and indirect effects in linear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16(1): 155-176.
- “가로주택정비사업 현장 가보니... 동네 노후 개선에 ‘특효’” 에너지경제신문. 2021.7.27. <https://m.ekn.kr/view.php?key=20210727010004517>(검색일: 2022년 1월 10일)
- “면목동 가로주택 이주시작...‘미니 재건축’ 전국 첫 사례.” 이데일리. 2016.5.9.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23446612647280&mediaCodeNo=257>(검색일: 2022년 1월 9일)

국 문 초 록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이 지역민의 주거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천호동 320과 천호동 321-18을 중심으로

고은정(고려대학교 도시재생협동과정 석사과정)

박지혜(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 강사)

본 연구는 전면 철거재개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대안으로 실시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민들의 주거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천호동 320번지와 천호동 321-18번지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연구 방법은 빈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 및 매개효과와 조절 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은 지역민의 주거 만족도와 주거 만족도 결정 요인인 환경적/관계적 요인에서 정(+)의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환경적/관계적 요인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과 주거 만족도의 관계를 매개하는 지에 대해서는 매개효과 3단계 검증법으로는 지지되었으나 소벨검정에서는 환경적 요인은 한계적으로 지지되었고 관계적 요인은 지지되지 않았다.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주거 만족도의 정(+)의 관계는 주택 소유 형태에 의해 조절되었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점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거 만족도, 천호동

Abstract

The study on the implementation impact of a “housing improvement project in a city block” on housing satisfaction:

Focusing on 320 Cheonho-dong and 321-18 Cheonho-dong

Ko, Eun-jeong (Master's course, Department of Urban Regeneration, Korea University)

Park, Ji-hye (Lecture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a “housing improvement project in a city block (ga-lo-ju-taeg-jeongbi-sa-eob),” which is a policy on the housing satisfaction of residents implemented as an alternative to urban renewal projects. A survey was conducted in 320 Cheonho-dong and 321-18 Cheonho-dong. The study methods were frequency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ediation test, and moderation test. The implementation of the housing improvement project in a city block positively affected residents’ housing satisfaction and environmental/relational factors, which are determinants of housing satisfaction. Whether environmental/relational factors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ousing improvement project and housing satisfaction, Byron and Kenny’s (1986) three-step method supported this mediating effect; however, in Sobel’s test, environmental factors were marginally supported, and relational factors were not supported as mediators.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housing improvement project and housing satisfaction level was moderated by the type of home

ownership.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by synthesizing the study results.

Key words: Urban Regeneration, Housing improvement project,
Residential environment, Residents satisfaction

인천시민대학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교육 요구 분석*

김명랑**·윤초롱***·김월용****·김종윤*****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1. 시민대학의 현황과 사례
2. 인천 평생교육 및 시민대학 현황 및 사례

III. 연구 방법

1. 설문 대상 및 수집
2. 설문 구성 및 분석

IV. 연구 결과

1. 인천시민대학에 대한 인식과 운영 요구
2. 인천시민대학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2021년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정책연구 과제로 수행된 「인천시민대학 체계 및 운영모
델 수립연구」 보고서를 수정한 논문임.

**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 주저자 겸 교신저자(E-mail: kmlang@
itl.or.kr, Tel: 032-722-7290)

***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정책연구실 연구원, 공동저자

****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공학박사, 공동저자

***** 고려대학교 BK21+아시아에듀허브사업단 연구교수, 공동저자

<http://doi.org/10.34165/urbanr.2022..21.179>

투고(접수)일 2022.5.4. 심사(수정)일 2022.5.23. 게재확정일 2022.6.20.

I. 서론

인천광역시시는 2020년에 인천시 평생교육 발전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 사업의 필요성과 민주시민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대를 주로 하는 평생교육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인천시 평생교육발전 기본계획에는 2021년에 이어 2022년도 5대 전략 과제(튼튼한 평생학습, 언제나 누리는 평생학습, 폭넓게 누리는 평생학습,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 역량을 키우는 평생학습)가 수립되었고, ‘역량을 키우는 평생학습’에 시민대학 캠퍼스 운영 및 교육 역량 강화가 신규과제로 포함되었다.

이러한 인천시의 평생교육정책 수립 배경에는 국내·외 평생교육 시스템의 변혁에 대한 요구가 반영되어 있다.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18-2022)에서는 기대 수명증가로 인한 평생학습 수요 증가, 교수·학습 혁신과 학습 행태의 변화 필요, 시민사회 인식 개선, 일자리 변화로 인한 직무능력 습득 및 적응의 필요 등의 배경으로 평생학습의 중요성과 의의를 강조하였고,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혁신적 과제가 채택·추진되고 있다. 유네스코 평생학습원(2020)에서는 2050년까지 평생학습문화로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미래중심 교육 비전을 제시하였는데, 평생학습 역량 프레임워크 개발, 초학제적 연구 및 부문 간 협력 증진, 평생학습 공유재 확립 등의 주요 메시지와 행동방침이 포함되었다.

한편, 독일, 덴마크, 프랑스, 미국에서 시민대학은 성인을 대상으로 열린교육과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운영하는 평생교육 기관으로 인지도가 있다(김명량·박인우·김종윤·윤초롱 2021). 한국의 경우 주요 시민대학들은 지역사회에서 평생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 설립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더욱 활성화되고 있으며 서울시, 세종시, 대전시, 충청남도도 포함 13개 정도가 운영중이다. 최근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축이

되어 시민대학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고, 시민의 사회적 책임과 공동체의식, 사회적 통합을 위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시민대학은 학위를 인정하지 않는 교육기관으로 「고등교육법」상의 대학과는 다르고, 지역적 특징에 따라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실천적 학문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시민들을 위한 높은 수준의 공공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제공한다는 특징을 지닌다(김진경·권양이 2018). 그러나 성인교육 기관과 동일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명칭만 시민대학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 제도적 정비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차별성이 필요하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김은경 2017). 인천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인천시민대학이란 이름으로 대학, 기관(공공, 민간)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사업을 위탁·운영하였으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였다. 이에 인천시는 민주시민 생태계 조성 및 평생교육 인프라 확대를 실현하기 위한 기제로 인천시민대학을 강화하고, 인천시민들의 평생학습 문화를 조성 및 양질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시민의 자기개발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인천시민대학 연구와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민대학이 인천시의 평생교육을 어떻게 반영하고 차별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제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고, 기존의 시민대학 관련 연구에서도 인천시민대학으로 보고된 사례는 드물다. 국내 타시도의 시민대학 현황을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서울과 경기도의 사례를 보고하고 있으며 시민대학이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이루어진다는 점과 기존의 평생교육기관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김은경 2017; 김정은 2019; 김진경·권양이 2018; 신용민 2017; 연구문 외 2011).

국내 시민대학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에서 평생교육

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기반하여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민대학은 문학, 미래학, 생활환경학, 사회경제학, 문화예술학, 시민학, 서울학의 7개 교육 영역으로 구성하고(유정완 외 2017), 대전시민대학은 대전학, 인문학, 시민공동체, 인문융합, 직업역량교육, 교양·여가 교육으로 구성하고 있다(김은경 2017). 한편, 유럽의 시민대학은 직업교육, 정치교육, 시민교육, 일반교양교육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다양한 연계 법률과 협조하여 성인교육법에서 지원하고 있어 시민들의 요구에 중심을 둔 다양한 교과목들이 개발될 수 있는 체계를 지니고 있다(김진경·권양이 2018). 독일의 시민대학은 주로 정치교육, 외국어교육, 직업교육, 문화, 건강, 교양 분야가 대표적이고(서지현 2005), 프랑스의 시민대학은 건강, 언어, 컴퓨터가 주를 이루고 있다(황성원 2011). 이에 인천시민대학도 보다 지역의 문화와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이 최우선 순위가 되고 일상의 문제 상황을 인지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키는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체제로 개발·운영될 필요가 있다(김명량 외 2021).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인천시민대학 운영 및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인천시민대학에 대한 인식 및 운영, 교육 프로그램 분야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민대학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생애주기별 인천시민의 요구, 소득수준별 지원 및 강화해야 할 교육 정보, 인천의 정주의식을 높이기 위한 거주기간별 요구를 탐색하기 위해 연령별, 소득별, 거주기간별 요구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시민대학의 개념, 국내·외 사례, 인천 평생교육의 현황을 고찰하였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야에 대한 요구는 연령별, 소득별, 거주기간별로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인천시민대학에 대한 인식 및 운영 요구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인천시민대학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야에 대한 연령별, 소득 수준별, 거주기간별 요구는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시민대학의 현황과 사례

1) 시민대학의 개념

시민대학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나 대학들이 지역주민 또는 일반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시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특별한 자격요건들을 요구하지 않는 열린 교육과정과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평생교육 기관의 한 형태이다(김진정·권양이 2018). 시민대학은 학계에서 모두에게 같은 의미로 해석되지 않으며, 실정법상에 제도적으로도 정착되어 사용되는 단어는 아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시민대학이라는 단어는 모든 시민에게 수준 높은 열린 교육과정을 제공한다는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주로 시민대학의 설립 주체가 되는 지방자치단체나 학교, 또는 시민단체들의 명칭에 '시민대학'이란 단어를 붙여 사용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연구문 외 2011). 우리나라에서도 빠르게 변화하는 지식기반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시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평생학습 지원에 대한 책무를 지닌 지방자치단체들이 해당 지역만의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시민대학들을 운영하고 있다(김은비·김종윤 2021).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민대학들은 독일 시민대학인 폭스호흐슐레(Volkshochschule)를 모델로 삼고 있다(김진정·권양이

2018). 독일어로 ‘고급학교’ 또는 ‘대학’으로 번역되고 있는 ‘호호슐레’는 독일에서 정규 교육과정에는 포함되지 않고, 그러므로 학위를 인정하지 않는 교육기관을 의미한다. 여기에 대중, 시민을 의미하는 ‘폭스(Volk)’라는 단어가 연결되어 폭스호호슐레란 단어가 만들어졌다. 즉, 폭스호호슐레는 대중, 민중 또는 국민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이라고 해석 가능하다(김진경·권양이 2018).

한국의 시민대학이 대학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게 된 것은 성인을 보다 교육에 참여하게 하기 위한 유인책이라고 설명할 수 있으며, 정규 교육과정에서의 대학과는 다른 형태를 보인다. 시민대학은 운영방식에서 기존 정규대학과는 다르게 실천적인 학문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국가에서 인정하는 학위를 수여하지는 않는다는 등 여러 차별점을 보이고 있다. 또한 시민대학은 취미나 교양강좌 중심의 기존 평생교육기관과는 차별화되어 시민들을 위한 높은 수준의 공공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평생교육기관과는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있다(김진경·권양이 2018).

2) 국내 시민대학 사례

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요 시민대학들은 지역사회에서의 평생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한 1980년부터 설립되기 시작했고, 1980년대 1개, 1990년대 4개, 2000년대 5개, 2010년대 3개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김진경·권양이 2018). 현재는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더욱 활성화되고 있으며, 전국에 13개 정도가 운영 중이다. 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요 시민대학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주요 한국 시민대학 현황

구분	설립	운영목적	지원	소재	운영기관
관악시민대학	2005	시민의식 함양 시민리더 함양	지자체	관악	관악구 평생학습과 서울대학교
광명시민대학	2004	지역공동체 리더양성	지자체	광명	광명시 평생학습원
대전시민대학	2011	지역평생교육활성화 지역 경제 활성화	지자체	대전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서울시민대학	1997	소외계층 교육복지확대	지자체	서울	서울시립대학교
순천시민대학	2010	평생학습도시 경쟁력 제고	지자체	순천	순천시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용인시민대학	2006	지역 자원 활동가 양성	지자체	용인	용인시 평생학습센터
장성시민대학	1995	시민의식함양	지자체	장성	장성군 한국인간개발연구원
전주시민대학	1989	문화예술 환경조성	지자체	전주	전주시립도서관
천안시민대학	2011	평생학습도시 경쟁력 제고	지자체	천안	천안시
파주시민대학	2008	시민의식 함양 지역민의 시정 참여	지자체	파주	파주시 평생학습과 연세대학교 평생교육원
부산시민대학	2007	인문학적 소양 함양	공동 운영	부산	부산대학교 KBS부산총국
안양시민대학	1996	지역 비문해자 교육	교육 지원청	안양	안양과천 교육지원청
평택시민예술대학	1996	지역 문화예술 저변 확대	자체 운영	평택	평택예술 총연합회

자료(출처): 김진경·권양이(2018)

국내 주요 시민대학의 교육과정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민대학은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의 자기실현, 사회적 참여, 이를 통한 공동체적 의식 및 관계 형성을 지향하고(유정완 외 2017), ‘한국문화 인문학, 예술과 문화 인문학, 성찰 인문학, 종교 인문학’ 등은 정통 인문학 분야였고, ‘서울과 도시 인문학, 지역문화 인문학’ 등은 서울 관련 분야이며, ‘인권 인문

학, 여성 인문학, 민주시민 인문학, 세계시민 인문학’은 민주시민 관련 역량강화 분야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대전시민대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민주시민역량 교육, 직업역량 교육, 교양·여가 교육으로 구분되고, 가장 특징적인 것은 대전학 분야로 대전학에서 내세우고 있는 교육 목표는 ‘지역 이해와 지역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통한 지역 공동체의 형성’이다.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시민대학들은 서울시민대학 등 10여 개 정도로 전체 시민대학 형태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나머지는 지역사회 지원을 받거나 자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시민대학은 지자체, 대학, 평생학습기관, 지역단체가 연계하여 공동운영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김진경·권양이 2018). 하지만 기존 한국의 시민대학들은 명칭만 외국의 ‘시민대학’을 사용했을 뿐 위탁, 대행 형태로 운영되거나 다른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시민대학이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주로 여가, 교양,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연규문 외 2011).

국내 주요 시민대학은 지역에 대한 이해, 시민의식 함양, 도시 특성화에 초점을 두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의 사회적 요구를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차원에서의 변화가 요구된다.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안)」에 의하면, 평생교육의 의의와 정책 수립 배경을 일자리 및 성장 잠재력 확충, 4차 산업혁명 등 기술혁신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 등으로 강조하고 있다(교육부 2018). 이러한 배경에서 국내 평생교육에서의 직업교육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정책과의 연계방안도 제시되고 있다(윤형기·이희수 2009; 여상운·천단·박창언 2018; 최운실 2006). 평생교육에서의 직업교육은 시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 향상과 역량 함양을 위한 것이다. 윤형기·이희수(2009)는 평생학습을 통한 평생고용 가능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평생 직업능력개발 체제 구축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이렇듯 최근 평생교육 정책은 학교교육의 체제에서 벗어나 사회 내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는 평생교육 내에서 이루어지는 직업교육에 대한 요구와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김은비·김종윤 2021). 미래 직업교육은 중등·고등수준에 초점을 맞춘 학령기 중심의 직업교육, 그리고 특정한 직무의 역량개발에 초점을 맞춘 현 직업교육 체제에서 벗어나서, 평생에 걸쳐 진로 관련 경로를 다양하게 열어주며, 개인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성공적인 삶을 지원하는 직업교육훈련 정책과 체제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7).

3) 국외 시민대학 사례

국외 시민대학 사례는 유럽을 중심으로 독일, 덴마크, 프랑스를 살펴 보았다. 독일 시민대학은 19세기 후반기부터 시민단체에 의해 촉발되었으며, 국가 민주화를 위한 교육이 그 출발점이다(서지현 2005). 독일의 시민대학은 성인교육의 장(場)으로서 공적 책임이 개인과 민간 성인교육 기관들에게 분담되었으며, 지역사회에서 성인 학습 네트워크 구성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였다(고인아 2001). 독일 시민대학의 특징은 계층, 연령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한다는 것과 직업교육, 일반교양교육 사이의 단순구별을 넘어 통합적인 교육활동을 지향한다는 것이다(서지현 2005). 독일 시민대학은 주로 지방자치단체나 등록 단체에 의해 운영되며, 재정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지원한다(김진경·권양이 2018). 비정치적, 비종파적 성격을 띄는 독일 시민대학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며, 지역사회 최상의 사회봉사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의 미래준비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김진경·권양이 2018).

덴마크의 시민대학은 자유주의 성인교육의 전통에 기초한 청소년, 성인을 위한 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다(고병헌 2011). 덴마크 시민대학은 개

인적으로는 철학적, 인문적 개념을 가지고 세상을 접하며, 사회적으로는 민주적 사회를 경험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병헌 2011). 그룬트비의 교육사상에 기초한 시민대학은 지역과 국가에 주인의식을 갖게 함으로써 시민사회가 성숙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며, 유럽을 대표하는 평생교육 기관이 되었다(송순재 2010).

프랑스의 대표적인 시민대학으로 캥시민대학과 리옹시민대학이 있다. 캥시민대학은 교양 문화를 대중화하는데 설립목표를 두었으며, 리옹 시민대학은 캥시민대학을 모델 삼아 프랑스 남동부 11개 기관과 북서부 4개 시민대학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황성원 2011). 프랑스 시민대학은 프랑스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학위를 수여하는 정규대학이 아니라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원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의무나 제재도 없이 무상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개방대학이다(황성원 2011). 캥시민대학을 설립한 옹프레는 시민대학을 바로 이들 집단적 지식의 실천적 장으로 생각하였으며, 시민대학을 통하여 ‘철학을 민중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민중을 철학이 있는 곳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주장하였다(김세희 2005). 이러한 취지의 시민대학은 캥시민대학 이외에도 자유시간대학(Université du temps libre), 나이가 없는 대학(Université inter-âges), 모든 지식의 대학(UTLS: Université de Tous Les Savoirs), 국제 철학 콜레주 등 약 70여 캠퍼스, 약 10만 명의 시민들에게 다양한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김세희 2005).

유럽의 시민대학은 역사적으로 노동조합, 다양한 민간단체들에 의해 시작되었고, 다양한 기관과 관계자들의 협업으로 발전해왔다(김은경 2017).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 덴마크, 프랑스 시민대학들은 유구한 역사 속에서 각각의 주 정부들이 자율적으로 정립된 성인교육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으며, 지역적인 특징에 따라서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며 발전해 왔다. 이에 유럽 시민대학의 교육내용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

정리하자면, 유럽의 대표적인 성인교육기관 중 하나인 시민대학은 각 국가 내 성인교육법에 의하여 정부와 시민의 협동을 통하여 시민교육, 직업교육, 근로 관련 교육, 교양교육에 중점을 맞추어 더 나은 민주주의 사회 구현을 위해 다채로운 성인교육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시민대학의 직업교육은 다양한 운영 주체가 다양한 구조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협력하는 파트너십이 구축되어 있었다. 반면 한국의 시민대학 관련 교육은 국가평생교육법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관련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에 의해 실행되고 있으며, 국내 시민대학의 활성화를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가, 지자체, 교육단체 사이의 협력체계 구축과 연계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시민대학은 각 지역 시민들의 요구를 기반으로 한 교육이 우선 순위가 될 수 있도록 학습자중심 교육으로 접근해야 한다. 더 나은 시민 중심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시민대학은 일상생활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학습자 중심의 평생교육을 지원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유럽과 비교하여 한국의 시민대학 내 직업교육의 정비가 요구된다. 유럽의 평생직업교육은 고용과의 연계가 활발하며, 학습휴가제, 일·학습병행제 등 지원체계가 잘 발달해 있다. 한국도 근로자의 업무 능력개발을 위한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인천 평생교육 및 시민대학 현황 및 사례

1) 2021년 인천 성인 평생학습 실태조사 주요 결과

인천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시민 맞춤형 평생교육 정책 수립 및 사업 운영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인천시민 만 25세 이상 79세 이하의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 경험, 참여목적, 성과 등 평생학습 참여 현황을 격년 주기로 조사하고 있다(인천광역시·인천인재평생교

육진홍원 202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1,000명) 중 29.1%가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학습영역별 참여율은 형식교육 0.9%, 비형식교육 28.5%로 나타났으며, 직업과 관련된 목적의 비형식교육 참여율은 13.3%로 조사되었다.

비형식교육에 참여한 목적에 대해 살펴보면, 직업과 관련된 목적을 응답한 비율이 43.8%로 ‘직업과 무관한 목적(56.2%)’ 대비 12.4% 낮게 나타났다. 직업과 관련된 목적 중 ‘일하는 데 필요한 기능 습득’이 25.4%로 가장 높았으며, 직업과 무관한 목적으로는 건강관리(37.0%)가 가장 높았다. 참여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는 문화예술 교육 참여율이 13.2%로 가장 높았고, 직업능력향상교육 참여율(13.1%), 인문교양교육(3.6%), 시민참여 교육(0.2%) 순으로 문화예술 교육 참여율(3.8% 높음)을 제외하고는 전국 평균 대비 참여율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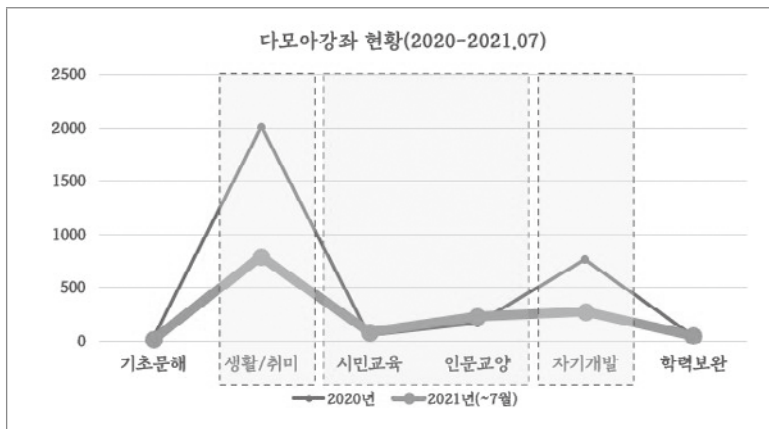
격년으로 조사되는 국가 및 지자체 단위의 평생교육실태조사 결과에서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목적은 조사 주기에 따라 큰 변화는 보이지 않으며, 세부적인 평생교육 분야에 관한 내용을 담기에는 결과를 충분하게 포함하지 않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인천시민대학 교육과정 개발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요구를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2) 인천 다모아정보망¹⁾ 내 프로그램 현황

2020년에서 2021년 7월에 정보망에 게시된 인천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그림 1]과 같이 인천 시군구 단위의 평생교육기관 운영

1) 다모아정보망(<http://www.itle.or.kr/user/lecture/list.do>)은 인천시민 누구나 평생학습을 더 쉽게 누릴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평생교육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광역단위 종합 평생교육 정보 서비스인. 정보망에서 추출한 통계를 기반으로 작성된 자료이므로 실제 강좌 운영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강좌는 생활/취미 영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자기개발, 인문교양, 학력보완, 기초문해 순으로 프로그램이 개설·운영되고 있다. 생활/취미 영역의 강좌를 구체적으로 분류해보면 음악/무용, 생활스포츠, 미술/서예, 생활공예, 가정생활 순이며, 자기개발 영역의 경우 생활외국어, 진로/자격, 정보인터넷 활용, 취·창업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인천 시군구 단위의 평생교육기관 운영 강좌는 생활/취미 영역에 편중되어 있어, 시민대학은 시민교육, 인문학 등의 영역을 보다 강화하여 인천시민에게 다양한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기존 평생교육과의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면서도 기존의 평생교육기관과 상생 관계 유지가 가능한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연계하고 방향성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1] 인천 다모아정보망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

3) 대학 특성화 사업(인천시민대학) 지정 운영 지원

2018년도부터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시민대상 인천학 및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인천지역의 대학 및 기관(민간 및 공공기관)을 인천시민대학으로 지정하여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2018년은 11개 기관·28개 프로그램, 2019년 7개·기관 22개 프로그램,

2020년 7개 기관·21개 프로그램으로 2021년 3개 기관·6개 프로그램으로 4년간 총 28개 기관 77개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2020년과 2021년에 운영된 인천시민대학 프로그램은 [표 2]와 같다.

2018년부터 운영된 인천시민대학 지정 운영 지원 사업은 주로 구평생교육원, 민간 평생교육기관의 시민의식 및 정주의식 함양을 위한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운영비를 지원하였다. 2020년에는 대학, 공공기관, 민간기관으로 기관을 구분하여 다양화하였고, 2021년에는 민주시민교육 거점기관 운영사업과 분리하여 인천시민대학 지정 및 운영지원 사업으로 대학 특성화를 시작하여 인천시민대학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평생교육의 시대적인 중요성이 강조되고, 대학 차원에서 지역 평생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요구됨에 따라, 캠퍼스별 교육 프로그램을 특성화하여 학과 특성화 캠퍼스를 운영하는 등의 새로운 포지셔닝 전략이 요구된다.

[표 2] 대학 특성화 사업 지정 운영기관 및 프로그램(2020년, 2021년)

No	구분	선정기관	프로그램
2020년	대학	가천대학교 평생교육원	인천 문화 유튜버 양성과정 (절친과 함께 인천을 알리다)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민주적 의사결정 퍼실리테이션 기법
			뇌 인지 활성화를 위한 인문학 강좌
		인천대학교 평생교육원	해양문화아카데미 기본과정
			평화도시 인천 바로알기
			해양문화아카데미 심화과정
	공공 기관	미추홀구	미추홀 시민로드 ‘역사를 거닐다’
			영화와 함께하는 민주시민교육
			서양미술사와 문명사
		연수문화원	섬 스토리텔러 및 유튜버 양성
			공동체 민주시민교육
			먼우금 마을이야기 및 지역사회 아카이빙

No	구분	선정기관	프로그램
2020년	민간 기관	사단법인 마중물	토론으로 읽는 세상
			저자와 함께하는 민주시민의 세상읽기
			민주시민의 음악여행
		아미고엠센터 평생교육센터	저자들과 함께하는 '인천 길'이야기
			독서토론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리더 양성
			상호문화도시 남동을 위한 지역인문학
		평생공부독서당 사회적협동조합	민주시민의 자격 - 소통능력
			민주시민의 품격 - 자본주의 이해와 통찰
			동서양을 횡단하는 타임머신 인문학
2021년	대학	가천대학교 평생교육원	중장년 자존감을 위한 시니어 모델 도전하기
			치매예방을 위한 뇌인지 활동가 양성과정
		인천대학교 평생교육원	해양 환경 도시 인천 바로알기
			해양 문화 아카데미
		인하대학교 평생교육원	인하 라이프 디자인스쿨Ⅰ: 세계 디자인 여행
			인하 라이프 디자인스쿨Ⅱ: 부모님이 직접 만드는 동화책

Ⅲ. 연구 방법

1. 설문 대상 및 수집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2021년 8월 한 달간 시행하였고, 평생교육 참여 경험이 있는 총 1,172명의 인천시민이 응답하였다. 온라인 설문은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다모아정보망(www.itle.or.kr)과 인천e배움캠퍼스(incheon.hunet.or.kr)를 통해 실시하였다. 다모아정보망은 인천광역시 평생교육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광역단위 종합 평생교육 정보 서비스이고, 인천e배움캠퍼스는 인천평생학습 온라인

플랫폼이다. 설문에 응답한 성별, 연령, 소득수준, 거주기간, 거주지역의 현황은 [표 3]과 같다.

[표 3] 설문 대상

구분	항목	빈도	퍼센트
성별	남	371	31.7
	여	801	68.3
연령	20~30세	562	48.0
	30~40세	185	15.8
	40~50세	197	16.8
	50~60세	154	13.1
	70세 이상	74	6.3
소득수준	50~150만 원	155	13.2
	150~200만 원	150	12.8
	200~300만 원	299	25.5
	300~500만 원	337	28.8
	500만 원 이상	231	19.7
거주기간	1년 미만	149	12.7
	1년 이상 5년 미만	150	12.8
	5년 이상 10년 미만	132	11.3
	10년 이상 15년 미만	164	14.0
	15년 이상 20년 미만	130	11.1
	20년 이상	447	38.1
거주지역	중구	83	7.1
	동구	31	2.6
	미추홀구	163	13.9
	연수구	167	14.2
	남동구	206	17.6
	부평구	181	15.4
	계양구	174	14.8
	서구	148	12.6
	강화·옹진군	19	1.6

2. 설문 구성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민대학에 대한 인식 및 운영 요구, 인천시민대학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야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 문항을 구성하였다. ‘연구문제 1’인 인천시민대학의 인식과 운영 요구를 조사하기 위한 문항은 인천시민대학 인지 여부, 인천시민대학의 참여 의지, 선호 수업 주기, 선호 교육 시간대, 강좌당 교육 기간, 선호하는 수업 방법, 선호하는 교육 형태, 적절한 수업료의 일반적인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연구문제 2’의 시민대학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야는 김진화 외(2010)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체계(기초문해, 학력 보완 제외), 최운실(2006)과 한상훈·박명신(2015)의 연구, 김정은(2019)의 연구에서 사용한 시민대학 교육 프로그램 분석 기준을 재구성하였다. 더불어 시민성(김정은 2017), 부모가족(최성우 2016), 디지털미디어(김혜준 외 2022), 생활환경(장미정 외 2021)을 참고하여 내용을 보완하였다. 최종적으로 시민성, 부모가족, 디지털미디어, 인문, 생활환경, 문화예술, 진로 직업의 총 7개 분야와 지역학인 인천학으로 구성하였다([표 4] 참조). 시민대학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야에 대한 요구는 현재 수준(내가 지금까지 교육받은 정도)과 바람직한 수준(나에게 더 중요하거나 필요한 교육 정도)으로 문항을 구성하고,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연구문제 1’은 문항별 빈도분석, ‘연구문제 2’는 대응표본 t 검정, Borich 요구도 분석, The Locus for Focus 모델 분석을 활용하여 우선순위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는 인천시민대학 교육 프로그램 분야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고자, 요구 분석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방법으로 바람직한 상태와 현재 상태의 차이(GAP)간의 격차를 찾아내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표 4] 시민대학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야

분야	설명	참고
시민성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시민이 마땅히 지녀야 하는 소양, 사회와 개인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되는 보편적 가치관과 행동 양식을 학습하기 위한 이론과 방법을 다룸.	김정은(2019) 김진화(2010) 최운실(2006) 한상훈·박명신(2015)
부모 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부모의 이해와 지식, 자녀 양육 방법과 기술, 가족의 건강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부부관계, 부모 자녀 관계, 가족 스트레스 관리, 가족복지와 같은 실천적 내용을 다룸.	최성우(2016) 최운실(2006)
디지털 미디어	디지털 기술과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생활에 응용하고 디지털 콘텐츠를 생산하고 미디어에 공유하기 위해 필요한 이론과 기능을 다룸.	김혜준 외 3명 (2022) 김진화(2010) 한상훈·박명신(2015)
인천학 (지역학)	인천의 언어, 문학, 역사, 사회, 정치, 경제, 국제관계 등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이론과 실천을 다룸.	권정숙(2021) 김정은(2017)
인문	인간의 삶, 사고 또는 인간다움을 이해하고, 인간의 문화에 관한 관심과 탐구, 표현하는 능력을 학습하기 위한 이론과 방법을 다룸.	김진화(2010) 최운실(2006) 한상훈·박명신(2015)
생활 환경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지식과 생활과 연계된 환경과 생태를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이론과 방법을 다룸.	김정은(2019) 장미정 외 5명(2021)
문화 예술	문화와 예술을 융합한 예술 활동이 있는 문화를 이해하고 참여하는데 필요한 이론과 방법을 다룸.	김정은(2019) 김진화(2010) 양은아(2012) 한상훈·박명신(2015)
진로 직업	진로 및 직업에 필요한 자격과 조건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정보와 지도를 제공, 일터 학습과 연계된 분야를 이해하고 진로 및 직업을 유지, 개선, 변화하기 위한 이론과 방법을 다룸.	김정은(2019) 김진화(2010) 최운실(2006) 한상훈·박명신(2015)

한편, Borich의 요구도 분석은 특정 내용의 현재 수준과 향후 중요도를 동시에 파악하여 바람직한 수준에 가중치를 주어 순위가 결정되지만, 몇 순위까지 선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제공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이에 Borich의 요구도 결과와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병행하여 우선순위를 판단한다(조대연·김명량·정은정 2010). The Locus for Focus 모델은 중요 수준 평균이 높고 차이 평균이 높은 HH

분면의 항목을 우선 개발 항목으로 볼 수 있어 두 방법을 비교하여 내용 선정을 할 경우 요구조사 프로세스의 타당성을 높여줄 수 있다. 설문 자료 분석 도구는 SPSS Statistics 25를 활용하였고, 기초통계분석,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Borich 요구도 분석과 The Locus for Focus 시각화 작업은 MS excel을 사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인천시민대학에 대한 인식과 운영 요구

인천시민대학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설문에 응답한 33.7%(395명)가 시민대학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66.3%(777명)는 모른다고 응답했다. 인천시민대학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은 68.9%(807명), 참여 의사가 없다는 응답은 31.1%(365명)으로 나타났다. 시민대학에 대한 운영 요구를 선호 수업 주기, 선호 교육 시간대, 강좌당 교육 기간, 선호하는 교육 형태, 적절한 수업료로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선호하는 수업 주기는 주 2회와 주 1회로 나타났고, 교육시간대는 평일 저녁과 주말 오전, 주말 낮 시간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좌당 교육기간은 1개월 이상에서 3개월 미만이 가장 높았고, 온·오프라인 혼합식 수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료는 1만원 이상에서 3만원 미만이 적절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인천시민대학 운영 요구

운영 요구	항목	빈도	퍼센트
선호 수업 주기 (N=1,172)	매일(주 5회)	34	2.9
	주 3회	148	12.6
	주 2회	426	36.3
	주 1회	423	36.1
	격주 1회	85	7.3
	월 1회	56	4.8
선호 교육 시간대 (N=1,172)	평일 오전	158	13.5
	평일 낮	122	10.4
	평일 저녁	430	36.7
	주말 오전	207	17.7
	주말 낮	192	16.4
	주말 저녁	54	4.6
	기타	9	0.8
강좌당 교육 기간 (N=1,172)	1주일 미만	25	2.1
	1주일 이상~1개월 미만	166	14.2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627	53.5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263	22.4
	6개월 이상~1년 미만	52	4.4
	1년 이상~2년 미만	22	1.9
	2년 이상	15	1.3
	기타	2	0.2
선호하는 교육 형태 (N=1,172)	집합교육(오프라인 수업)	296	25.3
	실시간 온라인 수업	146	12.5
	녹화식 온라인 수업	198	16.9
	온·오프라인 혼합식 수업	531	45.3
	기타	1	0.1
적절한 수업료 (N=1,172)	1만 원 미만	163	13.9
	1만 원 이상~3만 원 미만	390	33.3
	3만 원 이상~5만 원 미만	353	30.1
	5만 원 이상~10만 원 미만	211	18.0
	10만 원 이상~15만 원 미만	37	3.2
	15만 원 이상	8	0.7
	기타	10	0.9

2. 인천시민대학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1) 연령 분포별 요구도 분석

인천시민대학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인천시민들의 요구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연령별, 거주기간별, 소득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령대 분포는 20~30대, 30~40대, 40~50대, 50~60대, 60~80대로 나누었고, 연령별로 8개 분야(시민성, 부모가족, 디지털-미디어, 인천학, 인문, 생활환경, 문화예술, 진로 직업)의 현재 수준과 바람직한 수준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표 6]과 같이 모든 프로그램에서 현재 수준과 바람직한 수준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연령별 중요 수준과 현재 수준 평균, t 검정 결과

문항		수준			차이		
		평균	표준 편차		평균차	표준편차	t값
20~30대 (N=562)	시민성	중요	3.62	0.97	0.23	0.85	6.42***
		현재	3.39	0.99			
	부모-가족	중요	3.62	1.00	0.33	0.95	8.08***
		현재	3.29	1.05			
	디지털-미디어	중요	3.69	1.02	0.32	0.99	7.73***
		현재	3.37	1.05			
	인천학	중요	3.06	1.03	0.38	0.87	10.35***
		현재	2.67	1.01			
	인문	중요	3.56	1.00	0.35	0.96	8.70***
		현재	3.21	1.01			
	생활환경	중요	3.67	1.02	0.43	0.98	10.43***
		현재	3.23	1.01			
	문화예술	중요	3.53	1.02	0.44	0.99	10.60***
		현재	3.09	1.04			
	진로 직업	중요	3.68	1.06	0.63	1.14	13.11***
		현재	3.05	1.05			

문항		수준		차이		
		평균	표준 편차	평균차	표준편차	t값
30~40대 (N=185)	시민성	중요 3.30	1.12	0.39	1.14	4.64***
		현재 2.91	1.08			
	부모-가족	중요 3.32	1.18	0.62	1.22	6.91***
		현재 2.70	1.05			
	디지털-미디어	중요 3.35	1.20	0.59	1.26	6.44***
		현재 2.75	1.14			
	인천학	중요 2.65	1.10	0.46	1.07	5.85***
		현재 2.19	0.93			
	인문	중요 3.32	1.23	0.64	1.32	6.63***
		현재 2.68	1.03			
	생활환경	중요 3.22	1.24	0.71	1.32	7.28***
		현재 2.51	0.96			
	문화예술	중요 3.21	1.23	0.54	1.19	6.10***
		현재 2.68	1.05			
	진로 직업	중요 3.37	1.26	0.79	1.32	8.17***
		현재 2.57	1.08			
40~50대 (N=197)	시민성	중요 3.20	1.08	0.44	1.04	5.98***
		현재 2.76	0.97			
	부모-가족	중요 3.26	1.14	0.65	1.16	7.88***
		현재 2.61	0.92			
	디지털-미디어	중요 3.35	1.14	0.79	1.17	9.43***
		현재 2.56	0.96			
	인천학	중요 2.75	1.08	0.59	1.11	7.44***
		현재 2.16	0.74			
	인문	중요 3.24	1.16	0.74	1.14	9.03***
		현재 2.51	0.91			
	생활환경	중요 3.26	1.20	0.77	1.15	9.39***
		현재 2.50	0.90			
	문화예술	중요 3.18	1.15	0.80	1.12	9.99***
		현재 2.39	0.86			
	진로 직업	중요 3.32	1.21	0.82	1.27	9.08***
		현재 2.50	0.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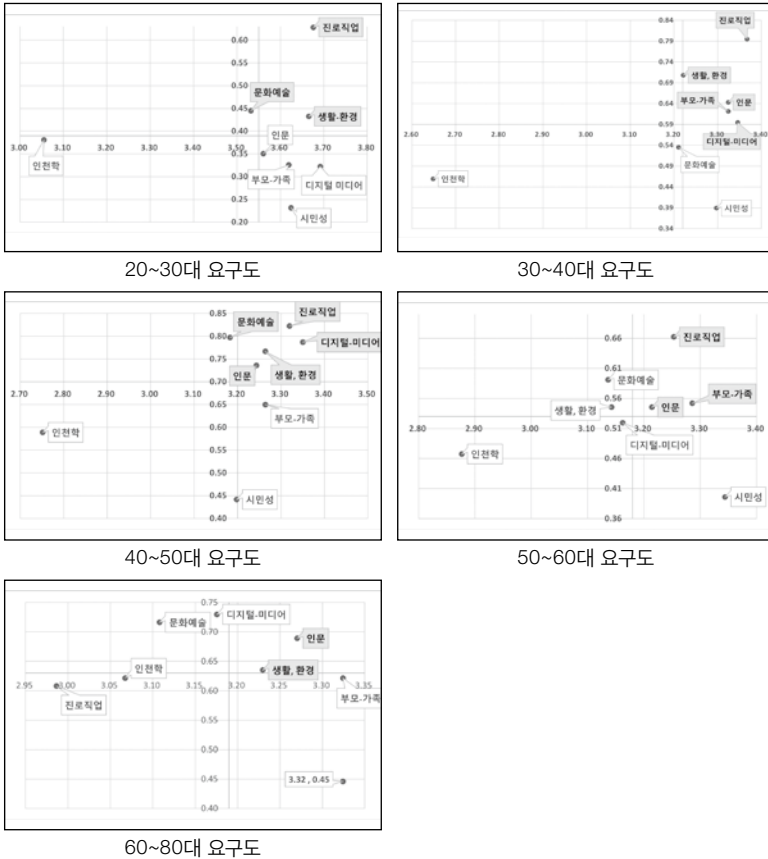
문항		수준		차이		
		평균	표준 편차	평균차	표준편차	t값
50~60대 (N=154)	시민성	중요 3.34	1.08	0.40	0.85	5.78***
		현재 2.95	1.05			
	부모-가족	중요 3.29	1.05	0.55	1.01	6.78***
		현재 2.73	1.02			
	디지털-미디어	중요 3.16	1.11	0.52	1.05	6.14***
		현재 2.64	0.99			
	인천학	중요 2.88	1.10	0.47	0.89	6.54***
		현재 2.41	0.90			
	인문	중요 3.21	1.10	0.55	1.05	6.46***
		현재 2.67	1.01			
	생활환경	중요 3.14	1.12	0.55	1.10	6.14***
		현재 2.60	0.95			
	문화예술	중요 3.14	1.15	0.59	1.02	7.19***
		현재 2.55	0.98			
	진로 직업	중요 3.25	1.14	0.66	1.08	7.61***
		현재 2.59	0.99			
60~80대 (N=74)	시민성	중요 3.32	1.09	0.45	1.05	3.66***
		현재 2.88	1.06			
	부모-가족	중요 3.32	1.01	0.62	0.98	5.48***
		현재 2.70	0.92			
	디지털-미디어	중요 3.18	1.09	0.73	1.10	5.70***
		현재 2.45	0.91			
	인천학	중요 3.07	1.11	0.62	1.12	4.78***
		현재 2.45	0.94			
	인문	중요 3.27	1.14	0.69	1.11	5.34***
		현재 2.58	0.95			
	생활환경	중요 3.23	1.14	0.64	1.01	5.38***
		현재 2.59	0.98			
	문화예술	중요 3.11	1.18	0.72	1.03	6.00***
		현재 2.39	0.92			
	진로 직업	중요 2.99	1.08	0.61	1.04	5.01***
		현재 2.38	0.82			

Borich 요구도 분석은 연령대별로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인천시민들은 진로 직업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가 높았고,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는 진로 직업, 생활환경, 문화예술, 30~40대는 진로 직업, 생활환경, 인문, 40~50대는 진로 직업, 디지털-미디어, 문화예술, 50~60대는 진로 직업, 문화예술, 부모-가족, 60~80대는 디지털-미디어, 인문, 문화예술로 나타났다. 40~50대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모든 교육 분야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특히 진로 직업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았다.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적용하여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 [그림 2]와 같이 20~30대는 진로 직업, 생활환경의 2개 분야, 30~40대는 진로 직업, 생활환경, 인문, 부모-가족, 디지털-미디어의 5개 분야, 40~50대는 디지털-미디어, 진로 직업, 생활환경, 인문의 4개 분야 50~60대는 부모-가족, 진로 직업, 인문의 3개 분야, 60~80대는 인문, 생활환경의 2개 분야의 요구가 1사분면에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30~40대와 40~5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연령별 Borich 요구도 및 The Locus for Focus 분석 결과

구분		Borich		The Locus for Focus		
		요구도	우선 순위	중요 수준	차이	hh
20~30대 (N=562)	시민성	0.84	8	3.62	0.23	
	부모-가족	1.18	6	3.62	0.33	
	디지털-미디어	1.19	5	3.69	0.32	
	인문학	1.16	7	3.06	0.38	
	인문	1.25	4	3.56	0.35	
	생활환경	1.58	2	3.67	0.43	o
	문화예술	1.57	3	3.53	0.44	
	진로 직업	2.31	1	3.68	0.63	o

구분		Borich		The Locus for Focus		
		요구도	우선 순위	중요 수준	차이	hh
30~40대 (N=185)	시민성	1.28	7	3.30	0.39	
	부모-가족	2.07	4	3.32	0.62	o
	디지털-미디어	1.99	5	3.35	0.59	o
	인천학	1.22	8	2.65	0.46	
	인문	2.14	3	3.32	0.64	o
	생활환경	2.28	2	3.22	0.71	o
	문화예술	1.72	6	3.21	0.54	
	진로 직업	2.68	1	3.37	0.79	o
40~50대 (N=197)	시민성	1.41	8	3.20	0.44	
	부모-가족	2.12	6	3.26	0.65	
	디지털-미디어	2.64	2	3.35	0.79	o
	인천학	1.62	7	2.75	0.59	
	인문	2.39	5	3.24	0.74	o
	생활환경	2.50	4	3.26	0.77	o
	문화예술	2.54	3	3.18	0.80	
	진로 직업	2.73	1	3.32	0.82	o
50~60대 (N=154)	시민성	1.32	8	3.34	0.40	
	부모-가족	1.81	3	3.29	0.55	o
	디지털-미디어	1.64	6	3.16	0.52	
	인천학	1.34	7	2.88	0.47	
	인문	1.75	4	3.21	0.55	o
	생활환경	1.71	5	3.14	0.55	
	문화예술	1.85	2	3.14	0.59	
	진로 직업	2.15	1	3.25	0.66	o
60~80대 (N=74)	시민성	1.48	8	3.32	0.45	
	부모-가족	2.07	4	3.32	0.62	
	디지털-미디어	2.32	1	3.18	0.73	
	인천학	1.91	6	3.07	0.62	
	인문	2.25	2	3.27	0.69	o
	생활환경	2.05	5	3.23	0.64	o
	문화예술	2.23	3	3.11	0.72	
	진로 직업	1.82	7	2.99	0.61	



[그림 2] 인천시민대학 연령대별 요구 분석 결과

2) 소득수준별 요구도 분석

소득수준은 150만 원 미만, 150~200만 원, 200~300만 원, 300~500만 원, 500만 원 이상으로 나누었고, 소득수준별로 8개 분야(시민성, 부모-가족, 디지털-미디어, 인천학, 인문, 생활환경, 문화예술, 진로 직업)의 현재 수준과 바람직한 수준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표 8]과 같이 모든 프로그램에서 현재 수준과 바람직한 수준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소득수준별 중요 수준과 현재 수준 평균, t 검정 결과

문항		수준			차이		
		평균		표준편차	평균차	표준편차	t값
150 미만 (N=155)	시민성	중요	3.53	1.00	0.28	0.99	3.56***
		현재	3.25	1.04			
	부모-가족	중요	3.54	1.00	0.51	1.07	5.92***
		현재	3.03	1.05			
	디지털-미디어	중요	3.52	1.10	0.40	1.13	4.40***
		현재	3.12	1.11			
	인천학	중요	3.01	1.10	0.41	1.02	5.05***
		현재	2.59	1.04			
	인문	중요	3.45	1.05	0.38	1.07	4.43***
		현재	3.07	1.02			
	생활환경	중요	3.50	1.09	0.45	1.10	5.11***
		현재	3.05	1.02			
	문화예술	중요	3.52	1.05	0.63	1.06	7.40***
		현재	2.89	1.09			
	진로 직업	중요	3.56	1.16	0.66	1.20	6.81***
		현재	2.90	1.09			
150~200 (N=150)	시민성	중요	3.34	1.09	0.35	0.85	5.08***
		현재	2.99	1.02			
	부모-가족	중요	3.19	1.14	0.40	1.07	4.56***
		현재	2.79	1.01			
	디지털-미디어	중요	3.26	1.16	0.37	1.08	4.24***
		현재	2.89	1.12			
	인천학	중요	2.73	1.02	0.37	0.83	5.50***
		현재	2.36	0.91			
	인문	중요	3.31	1.12	0.43	1.05	5.08***
		현재	2.88	1.04			
	생활환경	중요	3.30	1.16	0.53	1.04	6.28***
		현재	2.77	1.01			
	문화예술	중요	3.15	1.16	0.39	0.86	5.52***
		현재	2.76	1.03			
	진로 직업	중요	3.34	1.19	0.58	1.14	6.22***
		현재	2.76	1.05			
200~300 (N=299)	시민성	중요	3.29	1.07	0.22	0.85	4.55***
		현재	3.07	1.08			

문항		수준			차이		
		평균		표준편차	평균차	표준편차	t값
200~300 (N=299)	부모-가족	중요	3.31	1.11	0.33	1.00	5.78***
		현재	2.98	1.07			
	디지털-미디어	중요	3.33	1.16	0.34	1.03	5.66***
		현재	2.99	1.12			
	인천학	중요	2.72	1.01	0.25	0.86	5.07***
		현재	2.47	0.97			
	인문	중요	3.28	1.13	0.38	1.02	6.51***
		현재	2.89	1.08			
	생활환경	중요	3.33	1.14	0.41	1.06	6.69***
		현재	2.92	1.05			
	문화예술	중요	3.27	1.13	0.39	1.06	6.38***
		현재	2.88	1.07			
	진로 직업	중요	3.38	1.16	0.54	1.07	8.74***
		현재	2.84	1.05			
300~500 (N=337)	시민성	중요	3.46	1.03	0.42	1.01	7.70***
		현재	3.03	1.00			
	부모-가족	중요	3.54	1.02	0.60	1.11	10.00***
		현재	2.94	1.03			
	디지털-미디어	중요	3.54	1.03	0.58	1.08	9.91***
		현재	2.95	1.08			
	인천학	중요	3.01	1.07	0.61	1.00	11.19***
		현재	2.40	0.93			
	인문	중요	3.41	1.07	0.62	1.11	10.34***
		현재	2.79	0.97			
	생활환경	중요	3.47	1.12	0.69	1.10	11.41***
		현재	2.79	1.00			
	문화예술	중요	3.34	1.11	0.66	1.07	11.34***
		현재	2.68	1.00			
	진로 직업	중요	3.44	1.13	0.77	1.21	11.71***
		현재	2.67	0.98			
500 이상 (N=231)	시민성	중요	3.64	1.04	0.33	1.01	4.95***
		현재	3.31	1.06			
	부모-가족	중요	3.60	1.06	0.50	1.00	7.57***
		현재	3.10	1.11			

문항		수준			차이		
		중요	현재	표준편차	평균차	표준편차	t값
500 이상 (N=231)	디지털-미디어	중요	3.69	1.07	0.71	1.14	9.49***
		현재	2.98	1.09			
	인천학	중요	3.10	1.13	0.57	1.05	8.26***
		현재	2.52	0.98			
	인문	중요	3.59	1.09	0.64	1.14	8.48***
		현재	2.96	1.07			
	생활환경	중요	3.54	1.13	0.66	1.13	8.82***
		현재	2.88	1.07			
	문화예술	중요	3.45	1.12	0.67	1.13	8.94***
		현재	2.78	1.02			
	진로 직업	중요	3.65	1.11	0.87	1.26	10.42***
		현재	2.79	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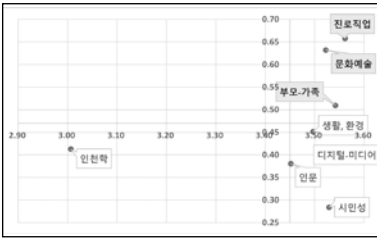
인천시민들은 연령분포와 동일하게 진로 직업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수준별로 차순위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orich 요구도 분석으로 소득수준별로 살펴본 결과, [표 외와 같이 150만 원 미만은 진로 직업, 문화예술, 부모-가족,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미만은 진로 직업, 생활환경, 인문,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미만은 진로 직업, 생활환경, 문화예술, 300만 원에서 500만 원 미만은 진로 직업, 생활환경, 문화예술, 500만 원 이상은 진로 직업, 디지털-미디어, 생활 환경 순으로 나타났다. 300~500만 원, 500만 원의 소득수준이 다른 구간에 비해 모든 교육 분야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고, 진로 직업에 대한 요구도는 500 이상의 소득수준 구간의 요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적용한 결과, [그림 3]과 같이 150만 원 미만은 진로 직업, 문화예술, 부모-가족의 3개 분야가 우선순위로 도출되었고,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미만은 진로 직업, 인문, 생활환경의 3개 분야, 200~300만 원 미만은 진로 직업, 생활환경, 인문, 문화예술의 4개 분야, 300~500만 원 미만은 생활

환경, 진로 직업, 인문의 3개 분야, 500만 원 이상은 디지털-미디어, 진로 직업, 인문, 생활환경의 4개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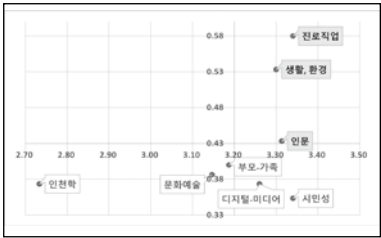
[표 9] 소득별 Borich 요구도 및 The Locus for Focus 분석 결과

구분		Borich		The Locus for Focus		
		요구도	우선 순위	중요 수준	차이	hh
150 미만 (N=155)	시민성	1.00	8	3.53	0.28	
	부모-가족	1.81	3	3.54	0.51	o
	디지털-미디어	1.41	5	3.52	0.40	
	인문학	1.24	7	3.01	0.41	
	인문	1.31	6	3.45	0.38	
	생활환경	1.58	4	3.50	0.45	
	문화예술	2.23	2	3.52	0.63	o
	진로 직업	2.34	1	3.56	0.66	o
150~200 (N=150)	시민성	1.18	7	3.34	0.35	
	부모-가족	1.27	4	3.19	0.40	
	디지털-미디어	1.22	5	3.26	0.37	
	인문학	1.02	8	2.73	0.37	
	인문	1.44	3	3.31	0.43	o
	생활환경	1.76	2	3.30	0.53	o
	문화예술	1.22	5	3.15	0.39	
	진로 직업	1.94	1	3.34	0.58	o
200~300 (N=299)	시민성	0.74	7	3.29	0.22	
	부모-가족	1.11	6	3.31	0.33	
	디지털-미디어	1.13	5	3.33	0.34	
	인문학	0.68	8	2.72	0.25	
	인문	1.26	4	3.28	0.38	o
	생활환경	1.37	2	3.33	0.41	o
	문화예술	1.28	3	3.27	0.39	o
	진로 직업	1.82	1	3.38	0.54	o
300~500 (N=337)	시민성	1.47	8	3.46	0.42	
	부모-가족	2.13	4	3.54	0.60	
	디지털-미디어	2.07	5	3.54	0.58	
	인문학	1.84	7	3.01	0.61	
	인문	2.13	5	3.41	0.62	o
	생활환경	2.38	2	3.47	0.69	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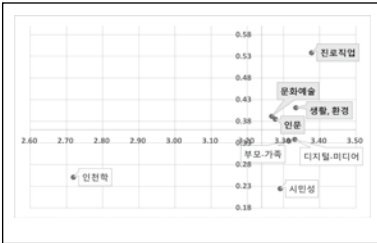
구분		Borich		The Locus for Focus		
		요구도	우선 순위	중요 수준	차이	hh
300~500 (N=337)	문화예술	2.21	3	3.34	0.66	
	진로 직업	2.64	1	3.44	0.77	o
500 이상 (N=231)	시민성	1.20	8	3.64	0.33	
	부모-가족	1.79	6	3.60	0.50	
	디지털-미디어	2.62	2	3.69	0.71	o
	인천학	1.77	7	3.10	0.57	
	인문	2.29	5	3.59	0.64	o
	생활환경	2.33	3	3.54	0.66	o
	문화예술	2.30	4	3.45	0.67	
	진로 직업	3.16	1	3.65	0.87	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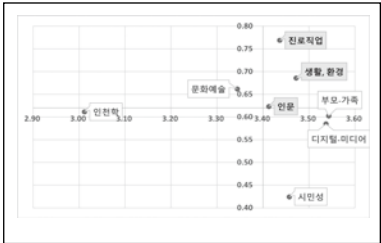
150 미만 요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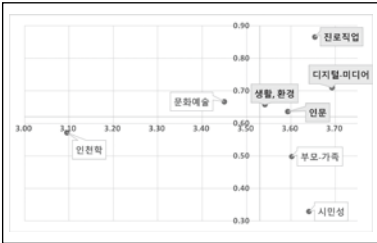
150~200 요구도



200~300 요구도



300~500 요구도



500 이상 요구도

[그림 3] 인천시민대학 소득수준별 요구 분석 결과

3) 거주기간별 요구도 분석

거주기간은 1년 미만, 1~5년, 5~10년, 10~15년, 15~20년, 20년 이상으로 나누었고, 거주기간별로 8개 분야(시민성, 부모-가족, 디지털-미디어, 인천학, 인문, 생활환경, 문화예술, 진로 직업)의 현재 수준과 바람직한 수준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표 10]과 같이 모든 프로그램에서 현재 수준과 바람직한 수준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거주기간별 중요 수준과 현재 수준 평균, t 검정 결과

문항		수준			차이		
		평균	표준편차		평균차	표준편차	t값
1년 미만 (N=149)	시민성	중요	3.21	1.09	0.26	0.99	3.23***
		현재	2.95	1.08			
	부모-가족	중요	3.23	1.12	0.44	1.16	4.60***
		현재	2.80	1.08			
	디지털-미디어	중요	3.34	1.16	0.38	1.24	3.69***
		현재	2.96	1.16			
	인천학	중요	2.52	0.96	0.24	0.73	4.03***
		현재	2.28	0.92			
	인문	중요	3.24	1.17	0.54	1.18	5.57***
		현재	2.70	1.04			
	생활환경	중요	3.19	1.22	0.50	1.17	5.24***
		현재	2.68	1.05			
	문화예술	중요	3.22	1.18	0.52	1.09	5.87***
		현재	2.70	1.06			
	진로 직업	중요	3.29	1.18	0.68	1.20	6.95***
		현재	2.60	1.03			
1~5년 (N=150)	시민성	중요	3.37	1.11	0.36	1.04	4.22***
		현재	3.01	1.06			
	부모-가족	중요	3.34	1.15	0.55	1.03	6.52***
		현재	2.79	1.02			
	디지털-미디어	중요	3.35	1.23	0.57	1.16	6.01***
		현재	2.78	1.11			
	인천학	중요	2.66	1.10	0.42	0.94	5.45***
		현재	2.24	0.82			

문항		수준			차이		
			평균	표준편차	평균차	표준편차	t값
1~5년 (N=150)	인문	중요	3.33	1.17	0.65	1.14	6.94***
		현재	2.69	1.00			
	생활환경	중요	3.21	1.23	0.60	1.17	6.28***
		현재	2.61	1.01			
	문화예술	중요	3.22	1.19	0.69	1.15	7.37***
		현재	2.53	0.97			
5~10년 (N=132)	시민성	중요	3.40	1.10	0.41	0.99	4.76***
		현재	2.99	1.06			
	부모-가족	중요	3.48	1.12	0.68	1.13	6.95***
		현재	2.80	1.01			
	디지털-미디어	중요	3.43	1.14	0.65	1.17	6.39***
		현재	2.78	1.04			
	인천학	중요	2.87	1.11	0.49	1.10	5.14***
		현재	2.38	0.94			
	인문	중요	3.27	1.13	0.55	1.19	5.25***
		현재	2.73	0.98			
	생활환경	중요	3.40	1.12	0.73	1.11	7.60***
		현재	2.67	0.97			
10~15년 (N=164)	문화예술	중요	3.30	1.14	0.72	1.14	7.25***
		현재	2.58	0.95			
	진로 직업	중요	3.46	1.18	0.76	1.17	7.42***
		현재	2.70	1.01			
	시민성	중요	3.60	1.09	0.31	0.90	4.41***
		현재	3.29	1.07			
	부모-가족	중요	3.67	1.01	0.50	1.03	6.22***
		현재	3.17	1.14			
	디지털-미디어	중요	3.62	1.07	0.53	1.06	6.41***
		현재	3.09	1.08			
	인천학	중요	3.07	1.06	0.50	0.90	7.14***
		현재	2.57	0.97			
	인문	중요	3.62	1.05	0.48	1.07	5.69***
		현재	3.14	1.09			

문항		수준			차이		
		중요	현재	표준편차	평균차	표준편차	t값
10~15년 (N=164)	생활환경	중요	3.60	1.08	0.49	1.02	6.10***
		현재	3.12	1.03			
	문화예술	중요	3.53	1.08	0.54	1.07	6.49***
		현재	2.99	1.09			
	진로 직업	중요	3.65	1.13	0.67	1.17	7.36***
		현재	2.98	1.12			
15~20년 (N=130)	시민성	중요	3.45	0.98	0.32	0.84	4.30***
		현재	3.14	1.01			
	부모-가족	중요	3.50	0.98	0.46	1.11	4.72***
		현재	3.04	0.95			
	디지털-미디어	중요	3.51	1.07	0.53	0.99	6.11***
		현재	2.98	1.05			
	인천학	중요	3.05	1.02	0.57	0.98	6.62***
		현재	2.48	0.86			
	인문	중요	3.38	1.05	0.41	0.95	4.91***
		현재	2.97	1.00			
	생활환경	중요	3.44	1.06	0.52	1.02	5.84***
		현재	2.92	0.92			
	문화예술	중요	3.25	1.07	0.39	0.98	4.54***
		현재	2.86	0.96			
	진로 직업	중요	3.45	1.15	0.56	1.17	5.48***
		현재	2.88	0.96			
20년 이상 (N=447)	시민성	중요	3.50	1.00	0.32	0.95	7.18***
		현재	3.18	1.02			
	부모-가족	중요	3.45	1.05	0.40	0.99	8.52***
		현재	3.06	1.06			
	디지털-미디어	중요	3.52	1.06	0.44	1.04	9.00***
		현재	3.08	1.11			
	인천학	중요	3.05	1.07	0.48	1.02	9.88***
		현재	2.58	1.04			
	인문	중요	3.46	1.05	0.48	1.04	9.81***
		현재	2.97	1.03			
	생활환경	중요	3.53	1.09	0.55	1.08	10.73***
		현재	2.98	1.05			

문항		수준			차이		
		평균		표준편차	평균차	표준편차	t값
20년 이상 (N=447)	문화예술	중요	3.40	1.09	0.52	1.01	10.93***
		현재	2.88	1.07			
	진로 직업	중요	3.49	1.11	0.66	1.15	12.17***
		현재	2.83	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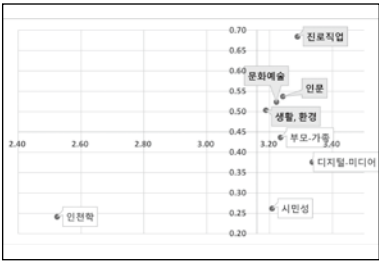
인천시민들은 연령분포, 소득수준과 동일하게 진로 직업에 대한 평생 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거주기간별로 차순위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orich 요구도 분석을 거주 기간별로 살펴본 결과, [표 11]과 같이 1년 미만은 진로 직업, 인문, 문화 예술 1~5년은 진로 직업, 문화예술, 인문, 5에서 10년은 진로 직업, 생활 환경, 부모-가족, 10~15년은 진로 직업, 디지털-미디어, 문화예술, 15~20 년은 진로 직업, 디지털-미디어, 생활환경으로 나타났다. 5~10년의 거주 기간이 다른 구간대에 비해 모든 교육 분야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 났고, 특히 진로 직업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았다.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적용한 결과, [그림 4]와 같이 1년 미만 은 진로 직업, 인문, 문화예술, 생활환경의 4개 분야로 나타났고, 1~5년 은 진로 직업, 디지털-미디어, 인문의 3개 분야, 5~10년은 부모-가족, 진 로 직업, 디지털-미디어, 생활환경의 4개 분야, 10~15년은 부모-가족, 진 로 직업, 디지털-미디어, 문화예술의 4개 분야, 15~20년은 디지털-미디 어, 진로 직업, 생활환경의 3개 분야, 20년 이상은 생활환경, 진로 직업, 인문의 3개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5~10년, 10~15년의 거주기간에서 부모-가족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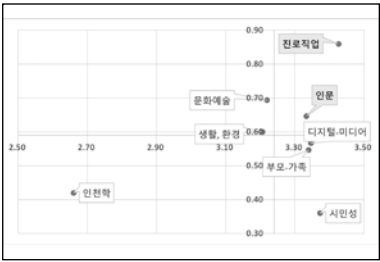
[표 11] 거주기간별 Borich 요구도 및 The Locus for Focus 분석 결과

문항		Borich		The Locus for Focus		
		요구도	우선 순위	중요 수준	차이	hh
1년 미만 (N=149)	시민성	0.84	7	3.21	0.26	
	부모-가족	1.41	5	3.23	0.44	
	디지털-미디어	1.25	6	3.34	0.38	
	인천학	0.61	8	2.52	0.24	
	인문	1.74	2	3.24	0.54	o
	생활환경	1.60	4	3.19	0.50	o
	문화예술	1.69	3	3.22	0.52	o
	진로 직업	2.25	1	3.29	0.68	o
1~5년 (N=150)	시민성	1.21	7	3.37	0.36	
	부모-가족	1.83	6	3.34	0.55	
	디지털-미디어	1.90	5	3.35	0.57	o
	인천학	1.12	8	2.66	0.42	
	인문	2.16	3	3.33	0.65	o
	생활환경	1.92	4	3.21	0.60	
	문화예술	2.23	2	3.22	0.69	
	진로 직업	2.95	1	3.43	0.86	o
5~10년 (N=132)	시민성	1.39	8	3.40	0.41	
	부모-가족	2.38	3	3.48	0.68	o
	디지털-미디어	2.24	5	3.43	0.65	o
	인천학	1.41	7	2.87	0.49	
	인문	1.79	6	3.27	0.55	
	생활환경	2.50	2	3.40	0.73	o
	문화예술	2.37	4	3.30	0.72	
	진로 직업	2.62	1	3.46	0.76	o
10~15년 (N=164)	시민성	1.12	8	3.60	0.31	
	부모-가족	1.84	4	3.67	0.50	o
	디지털-미디어	1.92	2	3.62	0.53	o
	인천학	1.53	7	3.07	0.50	
	인문	1.72	6	3.62	0.48	
	생활환경	1.76	5	3.60	0.49	
	문화예술	1.92	2	3.53	0.54	o
	진로 직업	2.45	1	3.65	0.67	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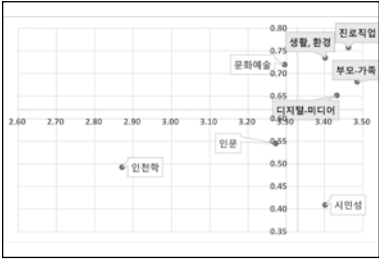
문항		Borich		The Locus for Focus		
		요구도	우선 순위	중요 수준	차이	hh
15~20년 (N=130)	시민성	1.09	8	3.45	0.32	
	부모-가족	1.62	5	3.50	0.46	
	디지털-미디어	1.86	2	3.51	0.53	o
	인천학	1.74	4	3.05	0.57	
	인문	1.38	6	3.38	0.41	
	생활환경	1.80	3	3.44	0.52	o
	문화예술	1.28	7	3.25	0.39	
	진로 직업	1.94	1	3.45	0.56	o
20년 이상 (N=447)	시민성	1.13	8	3.50	0.32	
	부모-가족	1.38	7	3.45	0.40	
	디지털-미디어	1.55	5	3.52	0.44	
	인천학	1.46	6	3.05	0.48	
	인문	1.67	4	3.46	0.48	o
	생활환경	1.94	2	3.53	0.55	o
	문화예술	1.77	3	3.40	0.52	
	진로 직업	2.30	1	3.49	0.66	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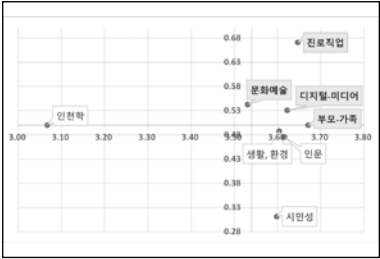
1년 미만 요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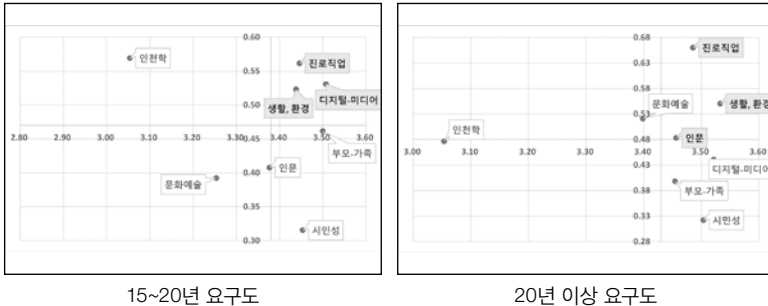
1~5년 요구도



5~10년 요구도



10~15년 요구도



[그림 4] 인천시민대학 거주기간별 요구 분석 결과

3) 최종 내용 도출

본 연구에서는 Borich 요구도의 우선순위와 The Locus for Focus 모델의 HH에 속한 교육내용을 비교하여 [표 12]와 같이 각 분야별 4순위까지를 최종 프로그램으로 도출하였다.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 20~30대는 진로 직업, 생활환경, 문화예술, 인문, 30~40대는 진로 직업, 생활환경, 인문, 부모-가족, 40~50대는 진로 직업, 디지털-미디어, 인문, 생활환경, 50~60대는 진로 직업, 부모-가족, 인문, 문화예술, 60~80대는 인문, 생활환경, 디지털-미디어, 문화예술로 결정되었다. 연령별로 60~80대는 인문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40~50대, 60~80대에서는 디지털-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 살펴본 결과, 150만 원 미만은 진로 직업, 문화예술, 부모-가족, 생활환경이 우선순위로 도출되었고,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미만은 진로 직업, 인문, 생활환경, 부모-가족, 200~300만 원 미만은 진로 직업, 생활환경, 문화예술, 인문, 300~500만원 미만은 진로 직업, 생활환경, 인문, 문화예술, 500만원 이상은 진로 직업, 디지털-미디어, 생활환경, 인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150만원 미만, 150~200만원의 소득수준에서 부모가족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500만원 이상의 소득수준에서 디지털-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기간별로 살펴본 결과, 1년 미만은 진로 직업, 인문, 문화예술, 생활환경으로 나타났고, 1~5년은 진로 직업, 인문, 디지털-미디어, 문화예술, 5~10년은 진로 직업, 생활환경, 부모-가족, 디지털-미디어, 10~15년은 진로 직업, 문화예술, 디지털-미디어, 부모-가족, 15~20년은 진로 직업, 문화예술, 디지털-미디어, 인문학, 20년 이상은 진로 직업, 생활환경, 인문, 문화예술인 것으로 나타났다. 15~20년의 거주기간에서 인문학에 대한 요구가 나타났고, 5~10년, 15~20년의 거주기간에서 부모-가족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인천시민대학 요구 분석 결과

분야	프로그램	
연령별	20~30대	진로 직업, 생활환경, 문화예술, 인문
	30~40대	진로 직업, 생활환경, 인문, 부모-가족
	40~50대	진로 직업, 디지털-미디어, 인문, 생활환경
	50~60대	진로 직업, 부모-가족, 인문, 문화예술
	60~80대	인문, 생활환경, 디지털-미디어, 문화예술
소득수준별	150 미만	진로 직업, 문화예술, 부모-가족, 생활환경
	150~200	진로 직업, 인문, 생활환경, 부모-가족
	200~300	진로 직업, 생활환경, 문화예술, 인문
	300~500	진로 직업, 생활환경, 인문, 문화예술
	500 이상	진로 직업, 디지털-미디어, 생활환경, 인문
거주기간별	1년 미만	진로 직업, 인문, 문화예술, 생활환경
	1~5년	진로 직업, 인문, 디지털-미디어, 문화예술
	5~10년	진로 직업, 생활환경, 부모-가족, 디지털-미디어
	10~15년	진로 직업, 문화예술, 디지털-미디어, 부모-가족
	15~20년	진로 직업, 문화예술, 디지털-미디어, 인문학
	20년 이상	진로 직업, 생활환경, 인문, 문화예술

VI.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인천시민대학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인천시민의 요구를 분석하는 것이다. 시민대학은 평생교육기관의 한 형태로 규정되어 있으나 제도적으로 정착된 법적 용어는 아니다. 그러나 시민대학은 지자체 차원, 대학 차원, 시민단체 차원에서 학습의 과정과 결과를 인증해 주는 기존의 평생교육과는 차별화된 평생교육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편, 시민대학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를 살펴보면 정책 수립을 위한 이론이나 사례 차원의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적 측면에서 시민들의 요구를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민대학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요구되는 요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인천시민들의 평생교육 수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른 결론과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천시민들은 인천시민대학의 참여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교육 운영에 있어 주 1~2회의 수업 주기, 평일 저녁이나 주말 오전의 교육 시간, 1~3개월의 단기간의 교육 기간 등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천시민들의 운영 요구는 교육과정 개발과 더불어 강좌별 교수설계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우선 선호 수업 주기, 교육 기간, 교육 시간대에 따라 전체 강의 시간, 주별 차시 및 차시별 시간 배정 등을 미시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온·오프라인 혼합식 수업에 대한 높은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 전략을 개발하고 세밀한 운영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시민대학 강의에서 활용 가능한 에듀테크, 온라인 수업 참여를 위한 시민들의 디지털리터러시 역량 향상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둘째, 인천시민들이 원하는 인천시민대학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8개 분야에서 모두 요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령, 소득수준, 거주기

간에 상관없이 진로 직업 분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에서의 직업교육은 자아실현, 고용가능성 증진, 사회통합 증진의 목적을 지닌다(윤형기·이희수 2008). 여상운·천단·박창언(2018)은 직업교육에 있어서 평생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고용 관련 평생학습 활성화,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은 지역의 경우 비경제 활동 인구의 고용 증진,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과의 연계 강화, 재직자 중심의 평생교육 직업능력 강화, 지역 내 평생교육기구와 대학을 활용한 직업능력 강화, 지역 일자리 수요와 공급을 매개할 수 있는 지자체 역할 강화를 강조하였다.

인천시민대학 교육 프로그램에서 진로 직업 분야에 대한 요구는 평생 학습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2021년 실시한 평생학습 개인 실태 조사 결과 중 주제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문화·예술·스포츠교육이 13.2%, 직업능력향상교육이 13.1%, 인문교양교육이 3.6% 순으로 나타났고, 2020년 인천 평생교육 통계조사에서 기관에서 운영하는 주제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의 경우 문화예술 프로그램 44%, 인문교양은 22%, 직업능력향상프로그램 13%로 나타났다(인천광역시·인천인재평생교육원 2020). 인천시민들의 직업관련 비형식교육 참여율은 전국 대비 3.8%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주제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서 직업능력향상프로그램의 비율이 문화예술프로그램 보다 적게 운영된다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 진로 직업 분야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양적·질적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연령, 소득수준,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진로 직업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4순위까지 도출된 교육 프로그램을 반영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설할 필요가 있고, 8개 영역별로 연령, 소득수준, 거주기간에 따른 구체적인 요구를 더욱 반영할 필요가 있다. 연령별로는 40~50대와 60~80대에서는 디지털-미디어 교육에 대

한 요구가 우선순위에 포함되어 있어 디지털-미디어 관련 교과목 개설 시에는 해당 연령층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부모·가족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는 30~40대, 50~60대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150만원 미만과 150~200만원 소득수준 구간에서도 요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연령층의 부모와 가족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15~20년 거주기간에서 유일하게 인천학에 대한 요구가 우선순위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인천학 과목의 세부 프로그램 구성시 거주지역과 기간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민대학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야에 대한 연령, 소득수준, 거주기간에 따른 요구만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거시적 측면에서의 교육과정 개발에는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실제 강좌 개발에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앞으로 인천시민대학이 일반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속해서 시민들의 요구를 분석하고 반영하는 연구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인천지역 전문가와 관내 평생교육기관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강화하여 인천시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참 고 문 헌

- 고병헌. 2011. 「시민들의 삶의 질과 결을 바꿔 놓은 덴마크 평민대학」, 세계시민교육 5: 50-55.
- 고인아. 2001. 「실업여성을 위한 성인교육: 독일 시민대학을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7(2): 35-158.
- 권정숙. 2021. 「지역학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학습자 참여형 모형 탐색」, 교육종합연구 19(1): 17-35.
- 교육부. 2018.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18-2022)」, 교육부.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1. 「2021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한국교육개발원.
- 김명랑·박인우·김종윤·윤초롱. 2021. 「인천시민대학 체계 및 운영모델 수립연구」,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 김세희. 2005. 「프랑스 대안대학」, 민들레 38: 90-97.
- 김은경. 2017.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시민대학 운영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17): 635-652.
- 김은비·김종윤. 2021. 『평생직업교육』, 서울: 해맞이미디어.
- 김정은. 2017. 「시민교육으로서의 지역학 강좌 내용요소 연구」, 교육문화연구 23(6): 577-598.
- 김정은. 2019. 「지방자치단체 주도 시민대학의 프로그램 특성 연구」, 교육문화연구 25(3): 229-249.
- 김진경·권양이. 2018. 「한국의 시민대학의 평생교육적 의미」, 교육연구 3(2): 73-87.
- 김진화·고영화·권재현·정민주. 2010. 「한국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체제 개발 연구」, 평생교육학연구 16(3): 211-236.
- 김혜준·박하나·정성희·임규연. 2022. 「국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교육정보미디어연구 28(1): 105-131.
- 서지현. 2005. 「독일 시민대학(Volkshochschule)의 평생교육학적 의미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송순재. 2010. 「덴마크의 자유교육·자유학교, 자유중등학교, 시민대학을 중심으로」, 신학과 세계 69: 357-410.
- 신용민. 2017. 「독일과 한국의 성인 시민교육비교연구: 라이프치히 시민대학과 진주의 평생교육원 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독일어문학 25(4): 87-

108.

- 양은아. 2012. 「평생교육 맥락에서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공급과 유형 분석」. 예술경영연구 22: 195-237.
- 연규문·김은경·김현주·송수진·윤여범·정현용·지희숙·김성수·박노동·양병찬·전시경·정선기·한상훈. 2011. 「대전시민대학 설립방안 연구」. 대전평생교육진흥원.
- 유정완·우기동·오정운·이병태·우대식. 2017. 「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 설립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과.
- 윤형기·이희수. 2009. 「평생직업능력개발 경로 재설계의 가능성과 한계」. 대한공업교육학회지 34(1): 19-43.
- 여상운·천단·박창언. 2018. 「직업능력향상과 교육훈련사업의 연계 가능성 탐색-평생교육분야와 지역고용사업을 중심으로-」.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8(6): 407-416.
- 인천광역시·인천평생교육진흥원. 2020. 「2020년 인천평생교육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인천평생교육진흥원.
- 인천광역시·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2021. 「2021년 인천광역시 평생학습 개인 실태조사」.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 장미정·김문옥·유영초·이다현·임수정·전푸름. 2021. 「생애주기 맞춤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패러다임 연구」. 환경교육 34(4): 452-469.
- 조대연·김명랑·정은정. 2010. 「교원 연수프로그램 개발 전략 : 교원능력개발평가지표를 중심으로」. 한국교육 37(3): 163-182.
- 최성우. 2016. 「부모학 : 성인학습적 관점에서 탐구」. 평생교육·HRD 연구 12(1): 143-166.
- 최운실. 2006. 「한국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 참여 특성 및 관련요인 분석」. 평생학습사회 2(1): 1-35.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7.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평생직업교육 정책방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한상훈·박명신. 2015. 「6진 분류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AHP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6(2): 995-1005.
- 황성원. 2011. 「프랑스 시민대학, “대학 밖 대학” 특성과 운영」. 비교문화연구 25(1): 597-626.

OECD, 2020, *HOW'S LIFE? 2020: OECD Better Life Initiative*.

UNESCO Institute for Lifelong Learning, 2020, *Embracing a culture of lifelong learning*.

국 문 초 록

인천시민대학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교육 요구 분석

김명량(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

윤초롱(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정책연구실 연구원)

김월용(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김종윤(고려대학교 BK21+아시아에듀허브사업단 연구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시민의 교육 요구를 분석하여 인천시민대학 평생 교육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인천시민 1,17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주요 내용은 인천시민대학에 대한 인식, 운영 요구,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야에 대한 요구로 구성하였다. 설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t 검정, Borich 요구도,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첫째, 설문에 응답한 인천시민의 68.9%는 인천시민대학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수업의 주기는 주 1회 또는 2회, 시간은 주말 오전과 낮시간, 교육 기간은 1개월 이상에서 3개월 미만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천시민은 8개 분야에 대한 요구가 모두 있었고, 진로-직업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순서로는 생활-환경, 인문, 문화-예술 분야가 높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인천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체계적인 요구조사 프로세스의 과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더불어 인천시민 교육과정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8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만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주제어: 인천시민대학, 평생교육, 요구 분석, 프로그램 개발

Abstract

Needs analysis for developing the lifelong education programs of Incheon citizens' college

Kim, Myounglang (Senior Researcher, Policy research Division,
Incheon Institute for Talent & Lifelong Education)

Yoon, Cholong (Researcher, Policy research Division,
Incheon Institute for Talent & Lifelong Education)

Kim, Weolyoung (Chief Director, Incheon Institute for Talent & Lifelong Education)

Kim, Jhongyun (Research Professor, BK21+ Edu-Hub in Asia, Korea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determine the priority of lifelong education programs for Incheon citizens' college by analyzing the educational needs of Incheon citizens. This study included 1,172 residents of the Incheon metropolitan area. The main contents of the survey consisted of the cognition of Incheon citizens' college and the need for lifelong education programs and operations. The data collected through the online survey were analyzed using a t-test, Borich's needs assessment model, and the locus for focus model.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first 68.9% of Incheon citizens who responded positively acknowledged their participation and preferred classes once or twice a week, morning and daytime on weekends, and for a period of 1-3 months. Second, Incheon citizens needed all eight programs, with the need for career-jobs being the highest, followed by life-environment, humanities, and culture-art. This study presents the necessary procedures for determining the programs' content, reflecting the needs of Incheon

citizens. It is also meaningful because it contributes to developing Incheon's citizenship curriculum. However, this study has limitations because it only analyzed the needs for eight programs.

Key words: Incheon citizens' college, lifelong education, needs analysis, program development

서울 청년의 행복격차:

잠재프로파일분석의 적용*

이민주**·박민진***

이민주·박민진

I. 서론

II.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1. 청년의 개념과 청년의 이질성
2. 행복 측정과 영향요인

III. 자료와 분석방법

1. 자료 및 변수 설정
2. 분석모형

IV. 서울 청년의 행복 프로파일과 영향요인 분석

1. 서울 청년의 행복 프로파일
2. 행복격차 영향요인 분석

V. 결론

* 이 논문은 2022년 한국공간환경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며,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3A2A01087370).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주저자

***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원, 교신저자(E-mail: farnia@si.re.kr)

<http://doi.org/10.34165/urbanr.2022..21.227>

투고(접수)일 2022.4.6. 심사(수정)일 2022.4.22. 게재확정일 2022.6.20.

I. 서론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행복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보편적 권리이다. 그러나 기존의 국가 정책은 행복 제고를 위해 그 내용을 구체화하지 않고, 경제적·물질적 관점에서의 발전에 집중해왔다. 최근 들어 경제적·물질적 관점에서 벗어나 ‘행복’을 반영해야 한다는 국가 및 도시정부의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영국의 국가 웰빙, 부탄의 국가 총 행복, 캐나다의 웰빙 지수 등이 그 사례이다.

최근 한국에서도 저성장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국가 발전의 중심에 ‘행복’을 두고 있으며, 행복 제고를 정책 프레임으로 설정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행복의 정책 대상을 전체 국민이 아닌 청년, 중장년, 노년 등 특정 세대에 중점을 두고 설계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가 청년의 행복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 및 도시정책이다. 외환위기 이후 청년 실업률 증가, 청년 일자리 감소가 사회적 쟁점이 되면서, 청년 정책의 주요 이슈는 청년의 고용 문제 해결이었다. 그러나 좋은 일자리 기회의 소멸과 고용 불안정성의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 발생, 새로운 청년 정책에 대한 수요가 등장함에 따라 청년의 고용뿐만 아니라 삶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정책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다(김기현 2017; 변금선 외 2020). 이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는 청년을 위한 정책의 주요 가치를 ‘행복’에 두고 청년들의 현실과 삶의 인식을 개선하고, 그들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의 청년은 다른 세대에 비해 행복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서울서베이(2020)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2019)의 조사에 따르면, 청년은 베이비붐 세대나 고령 세대에 비해 행복도가 낮았으며, 해외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

인다. 캐나다 최대의 마케팅 기관인 Leger에서 2019년 발표한 행복 지수를 보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청년의 행복도가 낮게 나타났다(Leger 2019/4/22).

최근의 ‘헬조선’, ‘이생망’, ‘N포 세대’ 등 다양한 신조어들은 청년들이 마주한 현실을 반영한다. 청년들은 더 이상 현실은 노력해서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소득, 자산, 주거 등 여러 측면에서 불평등과 박탈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전상진 2018). 또한 청년들은 저성장, 저출산 고령사회, 좋은 일자리의 감소와 고용의 불안정성 증대와 같은 사회경제적 변화와 더불어 생애주기적으로 학업과 취업, 결혼과 출산 등의 개인적 삶의 변화를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개인의 생애주기적 변화는 청년들이 마주하는 불확실성을 증가시킨다. 이에 더해 2019년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은 학교 폐쇄, 채용 단절, 실직을 불러왔고 청년세대에 큰 타격을 주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발생했던 부정적 영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봉쇄 조치 등으로 그 경향성이 굳어지고 있다. 그 결과, 스마트폰, 태블릿과 함께 성장한 최초의 디지털 네이티브 Z세대와 세계화와 경제적 안정기를 거친 M세대는 생애주기에서 자연스럽게 거쳐야 하는 주요 단계인 ‘이행기’가 단절되어 그들이 감당해야 할 문제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Mckinsey & Company 2018; MILOTAY 2020). 또한 MZ세대는 교육과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세대이자 빈곤의 위험이 가장 큰 세대, 세대 간 소득 이동성 부족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세대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연구자들은 청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행복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청년 행복 관련 연구들(김지영 2018; 박민진 외 2021)은 청년세대를 동질의 특성을 가진 하나의 집단으로 정의하여 그들의 행복 특성과 영향요인을 분석하거나, 다른 세대와의 행복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그러나 청년세대를 하나의 동질한 집단으로 정의하는 것이 타

당한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청년세대 내에서도 세계화와 경제적 안정기에서 경험을 소비하는 M세대와 9·11 테러와 전쟁에 대한 기억이 없고 세계 경제에서 중국의 급격한 부상을 목격한 Z세대가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청년의 이질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는 정치 지형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 ‘이대남(20대男)’과 ‘이대녀(20대女)’, 금수저와 흙수저가 대조를 보이고 ‘세상에서 연줄보다 더 좋은 줄이 텃줄’이라는 자조 섞인 농담을 파생시킨 수저계급론(JUMP 2018/5/16)이다. 이처럼, 청년세대 내에서도 M세대와 Z세대, 성별, 그리고 소득 계층별로 차이가 나타나며, 이외에도 고용상태, 혼인상태 등에 따른 이질적 특성이 나타난다. 따라서 청년의 행복을 연구하는 데 있어 인구·사회·경제적 이질성(異質性)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청년의 이질성에 착안하여, 청년 내에서도 행복 유형이나 행복 수준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또 각 행복 유형과 수준별로 청년들의 특성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하여 청년세대 내의 행복격차를 탐색하고자 한다. 서울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이질성과 행복격차를 파악하기 위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우선, 청년의 이질성, 행복격차 등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적용하여 서울 청년,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그들의 행복 유형을 분류하였다. 또한, 분류된 집단별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분산분석과 교차분석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순서형 로짓분석을 통해 행복 유형에 미치는 인구 사회학적 특성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연구에서 동일한 특성을 가진 집단으로 정의되었던 청년집단의 이질성에 집중하여, 청년 내부의 행복격차를 포착하고자 하였다. 둘째, 청년세대 내의 행복격차를 탐색하기 위한 방법으로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적용하여 행복 유형별로 집

단을 분류하고, 각 집단에 속하는 청년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의 연구들이 행복감에 미치는 여러 영향요인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실제 행복 유형이나 수준별로 어떠한 사람들이 포함되는지, 또 그들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이 어떠한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포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연구들이 단일 문항으로 조사되는 종합적 행복 점수를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행복 수준을 세분화하여 영역별로 측정된 변수를 사용함으로써 행복 수준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종합하면, 이 연구는 서울 청년을 대상으로 행복 수준에 따른 집단별 분류와 탐색을 바탕으로, 청년의 행복 증진을 위한 보다 세분화된 청년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II.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1. 청년의 개념과 청년의 이질성

1) 청년의 개념

청년(青年, Youth, Young people)의 사전적 의미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절정에 도달해 무르익은 나이대를 뜻하는 한자어로 주로 20세에서 29세를 지칭한다. 그러나 사회가 바뀌고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청년의 기준도 변화하고 있다. 청년의 개념과 연령 범주는 생애주기별, 국가별, 정책별로 차이를 보인다. 우선, 청년의 개념은 생애 과업인 정규교육 종료, 취업, 독립, 자녀 출산, 가족 형성 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가령, 초혼 연령이 늦어지고 교육 수준이 상향함에 따라 청년의 개

넘은 20대에서 30대 초반, 더 늦게는 30대 후반까지 연장되고 있다(변금선·김기현 2019). 성장단계별로 청년은 청년 전기(13~15세), 청년 중기(16~18세), 청년 후기(19~22세)로 구분된다(강봉규 2000). 둘째, 국가별로 살펴보면 유럽에서 청년은 15세부터 25세를 지칭하며(The Swedish National Board for Youth Affairs 2010), 캐나다는 15~34세를 청년으로 지칭하나 지역이나 정책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Statistics Canada 2018/2/7).¹⁾ 셋째, 정책적으로 청년의 연령은 대체로 15세에서 29세로 정의된다(변금선·김기현 2019). 그러나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청년 기본 조례에서 청년을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지칭한다. 2020 서울형 청년보장에서 청년의 연령 범주를 15세에서 34세로 설정하였으나 세부 정책별로 연령 범주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

청년을 세대 관점에서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세대는 동일한 시기에 태어나 전쟁, 세계화, 인터넷의 출현, 다중현실 등의 비슷한 경험을 한 집단을 의미한다. 통계청과 맥킨지코리아는 Z세대(1995년 이후 출생)와 M세대(1980~1994년생)를 청년세대로 지칭하며 베이비붐 세대, 침묵세대 등과 비교하였다(박민진 외 2021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서울 청년, 특히 MZ세대의 행복격차를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과 맥킨지코리아의 구분을 따른다. 이에 서울서베이의 MZ세대의 연령을 구분하면 2020년 기준 M세대는 26~40세, Z세대는 25세 이하이다.

2) 청년의 이질성

청년세대 내의 이질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2022년 대선에서 화두가 된 ‘이대남’과 ‘이대녀’가 있다. 이대남과 이대녀는 정책수요, 가치

1) 퀘벡은 청년을 15~29세로, 토론토는 청년 참여 정책에서 청년을 18~30세를 대상으로 한다(Gouvernement du Québec 2019/4/30; Youth Engagement Strategy n.d.).

관 등에 있어서 20대 남녀 간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서울의 청년 이질성은 다음의 통계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서울 인구는 2020년 기준 총 9,586,195명이며 그중 20~39세의 청년이 31.1%를 차지한다. 이는 전국의 청년 인구 비율인 27.3%에 비해 높은 수치이다. 서울의 경우 특히 25~29세의 청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서울 청년의 28.0%를 차지한다. 대부분의 서울 청년들은 미혼이며 특히 20대는 10명 중 9명이 미혼이다. 한편 30대의 경우 배우자 있음 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한다. 30~34세의 경우 미혼 66.1%, 배우자 있음 비율이 32.9%이며, 35~39세는 미혼 40.1%, 배우자 있음이 57.5%로 나타난다. 35~39세에서 미혼과 기혼의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청년 내에서도 인구 사회학적으로 이질적 특성을 보인다.

청년세대의 내의 이질성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영미(2018)는 청년 정책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성별, 연령별, 교육 수준, 고용상태, 혼인상태, 주거 형태에 따라 구분하고 청년 정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채병주·황선재(2021)는 청년 1인 가구의 사회경제적 동질성만큼 중요한 이질성 문제에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청년의 지위를 객관 지위(소득지위, 교육지위, 노동지위), 주관지위(소득 만족도, 주관적 계층의식), 미래지위(내년 가구재정 예측, 계층이동 가능성)로 구분하여 총 5가지 유형(성취형, 불안형, 정착형, 소외형, 희망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이들의 복지 영역 선호를 비교하였다. 이처럼 청년세대 내에서도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 주관적 가치관에 따라 이질적 특성을 보이며 이것이 생애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행복 연구는 청년을 동질 집단으로 보고 청년과 다른 연령(세대)을 비교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2. 행복 측정과 영향요인

1) 행복 개념과 측정 방법

행복의 사전적 의미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한다. 옥스퍼드와 메리엄-웹스터 영영사전은 행복을 각각 ‘the state of being happy’, ‘a state of well-being and contentment’로 정의한다. 이처럼 행복의 사전적 의미와 표현은 다르지만,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 상태가 중심에 놓인다(박승민 2022). 즉, 행복은 단순히 현재 상태를 넘어 생애사 전반의 주관적 만족 상태를 의미한다. 행복이 주관적인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특성 하에서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측정하기는 어렵다. 일부 심리학자는 우리 삶에 대한 견해가 일시적이고 매우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행복 측정 방법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행복은 유전학, 성격 심지어 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정책의 대상으로 행복을 측정하는 기준이 개인의 심리에 한정되기 때문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변미리 외 2014).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회나 개인의 행복감을 측정하려는 노력은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행복측정 방법은 단일지표 측정과 복합지표 측정으로 구분된다. 단일지표 측정은 ‘당신은 지금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당신은 어제 행복하셨나요?’, ‘요즘 들어 당신의 삶은 전반적으로 행복하십니까?’와 같이 하나의 질문으로 구성된다. 복합지표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의 합을 통해서 행복도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UN의 행복보고서, OECD의 더 나은 삶의 질 지표, 영국의 국가 웰빙 등이 있다. 행복도를 단일 항목으로 측정하는 것은 다중 항목 측정보다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Twenge et al. 2016). 본 연구에서는 서울서베이의 행복 점수를 활용하는데, 이는 복합지표로 자신의 건강 상태, 재정 상태, 주위 친지 및 친구와의 관계, 가정생활, 사회생활의 5개 영역을 측

정하며 행복 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2) 행복격차와 행복 요인

현재까지 진행된 다수의 행복 연구들은 국가나 지역단위, 특정 인구 집단(여성, 노인, 청년, 노인 등), 세대(베이비붐 세대, MZ세대 등)별로 행복 정도를 비교·검증하고, 행복격차의 원인을 분석하는 데 집중하였다. 행복 영향요인을 밝히는 연구는 경제적 요인(소득)이 행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데에서 출발하였으며, 많은 연구에서 소득과 행복 사이에 유의미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발견하였다(Masuda et al. 2021 재 인용). 그러나 오래전부터 학계에서는 경제적 요인만으로 행복감의 증진을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인식해왔다. 이후의 연구들은 소득이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수준에 도달하면 행복감은 인구학적 요인, 사회적 요인(건강, 교육, 여가, 실업 등)과 행태적 요인(신뢰, 네트워크 등) 등 다차원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처럼 행복 결정요인 연구가 경제적 요인(소득)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데에서 출발하였으나 행복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은 소득 외에도 다양하다. 가령, 소득 이외에도 연령, 교육 수준, 건강, 고용상태, 여가 상태, 혼인상태, 자녀 유무, 사회적 관계, 그 외 가정 내 특성 등이 행복과 관련이 있다(Tinbergen 1991; Gerdtham and Johannesson 2001; Masuda et al. 2021; Akaeda 2020).

행복 수준은 연령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그 영향요인 또한 차이를 보인다. 가령, 낮은 혼인율과 같은 사회적 유대의 약화, 대공황과 같은 경제적 상황, 그리고 증가하는 소득 불평등은 청소년들보다 성인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청년은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미래에 이득이 될 참신함을 추구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노인들은 투자 기간(time horizon)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현재에 안주할 가능

성이 크다. 이처럼 시간에 따른 차이는 기간(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변화)이나 출생 코호트 및 세대(특정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변화)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Twenge et al. 2016).

국내에서도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들이 다수 수행되었다. 한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밝힌 연구(신승배 2015; 이용수 2018; 최유석 2018), 특정 세대나 연령대를 대상으로 행복 영향요인을 비교 분석한 연구(성은모·김균희 2013; 김동열 2013; 박민진 외 2017; 김지경 2018; 김혜연 2020; Diener and Biswas-Diener 2019; 변미리 외 2020)가 있으며, 거주하는 지역 특성이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연구(장인수·김홍석 2016; 강동우 외 2020)들도 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행복 연구는 주로 생애주기적 상황(변금선·김기현 2019), 학교 또는 직장이라는 공간(김동심·윤성혜 2018)을 전제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에 청년의 행복에 대해 보다 포괄적이고 다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었다(한승현 외 2017). 최근에는 청년의 일-삶 균형 수준과 행복을 다국가로 비교하는 연구(박미석 외 2019), MZ세대, 중국경제개혁 이전 이후 세대 등으로 청년세대를 보다 세분화하여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박민진 외 2021; Wu et al. 2021)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와 유사하게 박민진 외(2021)는 MZ세대를 대상으로 그들의 행복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기성세대와 비교분석한 바 있다. 또한, 이분산회귀분석을 활용해 각 세대 내에서도 그들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행복감의 분포가 다르게 나타나 세대 내 행복의 이질성의 존재를 어느 정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청년세대 내에서의 행복 수준과 격차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그러한 차이를 가져오는 집단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이처럼 청년에 대한 생애주기와 삶의 모습에 따라 청년의 행복도가 다르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청년세대 내의 행복격차를 밝히는 연구는 극히 드물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행복 유형을 분류하고 기존의 행복 연구들을 바탕으로 행복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III. 자료와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해 서울 청년들의 행복 유형을 분류하고, 분류된 각 집단별 인구 사회학적 특징을 확인하기 위해 분산 분석 및 교차분석을 수행하였다. 추가로, 행복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사회학적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순서형 로짓 모형을 활용하였다. 뒤의 분석 결과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으나, 집단별로 모든 영역의 행복 수준이 높은 집단, 중간 집단, 낮은 집단으로 분류되어 각 집단의 행복도가 순서화(ordered)된 것으로 나타나 해당 모형을 도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위해 R의 tidyLPA 패키지를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이외의 분석은 STATA 15.1을 사용하였다.

1. 자료 및 변수 설정

본 연구에서 주로 활용한 자료는 2020년 서울서베이이다. 2003년부터 시작된 서울서베이는 서울시민의 생활상, 가치관 변화 등 삶의 질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조사이다. 2020년 서울서베이는 전체 20,000가구, 만 15세 이상 가구원 40,08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4만여 개의 응답 중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청년(MZ세대, 1980~2005년생)에 해당하는 15,745개의 응답을 추출하여 활용하였다. 구체적으

로 M세대는 12,111명(76.9%), Z세대는 3,634명(23.1%)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현황(2020년)에 따르면, 서울의 청년 인구는 총 3,592,404명으로, 추출한 응답 수는 서울의 전체 청년 인구의 약 0.4%를 반영한다.

이 조사에서는 서울시민의 행복도를 조사하기 위한 5개 영역(자신의 건강 상태, 재정 상태, 주위 친지 및 친구와의 관계, 가정생활, 사회생활)의 세분화된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행복 점수는 가장 불행한 상태를 0점, 가장 행복한 상태를 10점으로 하여 측정된다.

[표 1]은 순서형 로짓 모형에 활용된 변수들을 나타낸 표이다. 종속변수는 서울서베이의 5개 영역의 행복 점수를 바탕으로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해 도출된 세 개의 집단이다. 독립변수들은 각 행복 집단들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분산분석과 교차분석에도 활용되었다. 독립변수 중 소득변수는 월평균 균등화 개인소득을 계산하여 활용하였다. 원자료에서는 월평균 가구소득을 50만 원 미만~900만 원 이상까지의 구간을 50만 원 단위로 코딩하여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하위 및 최상위 구간을 제외한 응답 구간들의 중앙값을 가구소득으로 코딩 후, 가구원 수를 반영해 1인당 균등화 소득을 계산하였다. 단, 자료의 한계로 최하위 구간(50만 원 미만)은 25만 원으로, 최상위 구간(9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해당 구간의 최저값인 900만 원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표 2, 3]은 각각 연속형 변수 및 범주형 변수의 기술 통계표이다.

[표 1] 변수설정

구분	변수		정의
종속변수	행복집단		1: 낮은 행복도 집단(C), 2: 중간 행복도 집단(B), 3: 높은 행복도 집단(A)
독립변수	성별		1: 남성, 2: 여성
	연령		응답자의 연령(2020년 기준)
	학력		1: 고졸 미만(중졸 이하), 2: 고졸, 3: (초)대졸, 4: 대학원 이상
	직업		1: 화이트칼라, 2: 블루칼라, 3: 기타(학생, 주부, 무직 등)
	혼인상태		1: 미혼, 2: 배우자 있음(기혼, 동거), 3: 배우자 이별(이혼, 별거, 사별)
	가구 특성	가구구성	1: 1인 가구, 2: 다인 가구
		소득	월평균 균등화 소득(만원) (가구소득 / $\sqrt{\text{가구원 수}}$)
	주거 특성	점유유형	1: 자가, 2: 전세, 3: 월세/사글세, 4: 무상
		주택 유형	1: 아파트, 2: 단독주택, 3: 다세대/연립/빌라, 4: 기타(오피스텔, 상가 내 거처 등)
		거주기간	현 주택 거주기간(개월)
서울 거 주 특성	거주권역	1: 도심권(용산구, 종로구, 중구) 2: 동북권(광진구, 동대문구, 성동구, 중랑구,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3: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4: 서남권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5: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거주기간	서울 거주기간(개월)

자료(설명): 종속변수는 5개 영역(자신의 건강 상태, 재정 상태, 주위 친지 및 친구와의 관계, 가정생활, 사회생활)의 행복 점수를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해 분류한 것임.

[표 2] 기술 통계(연속형 변수)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빈도
연령(세)	31.03	7.25	15	40	15,745
월평균 균등화 소득(만 원)	296.17	107.61	12.5	875	
현 주택 거주기간(개월)	62.18	56.05	6	480	
서울 거주기간(개월)	256.23	134.65	8	480	

[표 3] 기술 통계(범주형 변수)

변수	범주	빈도	백분율
행복 유형	1: 낮은 행복도 집단(C)	906	5.75
	2: 중간 행복도 집단(B)	5,318	33.78
	3: 높은 행복도 집단(A)	9,521	60.47
성별	1: 남성	7,206	45.77
	2: 여성	8,539	54.23
학력	1: 고졸 미만	340	2.16
	2: 고졸	2,323	14.75
	3: (초)대졸	12,036	76.44
	4: 대학원 이상	1,046	6.64
직업	1: 화이트칼라	8,879	56.39
	2: 블루칼라	1,921	12.20
	3: 기타(학생, 주부, 무직 등)	4,945	31.41
혼인상태	1: 미혼	8,033	51.02
	2: 배우자 있음(기혼, 동거),	92	0.58
	3: 배우자 이별(이혼, 별거, 사별)	7,620	48.40
가구구성	1: 1인 가구	2,425	15.40
	2: 다인 가구	13,320	84.60
점유유형	1: 자가	7,846	49.83
	2: 전세	5,908	37.52
	3: 월세/사글세	1,944	12.35
	4: 무상	47	0.30
주택 유형	1: 아파트	6,970	44.27
	2: 단독주택	3,428	21.77
	3: 다세대/연립/빌라	5,323	33.81
	4: 기타	24	0.15
서울 거주 권역	1: 도심권	1,285	8.16
	2: 동북권	4,805	30.52
	3: 서북권	1,870	11.88
	4: 서남권	4,736	30.08
	5: 동남권	3,049	19.36

2. 분석모형

1) 잠재프로파일분석(LPA: Latent Profile Analysis)

집단을 유형화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요인분석, 군집분석, 판별분석 등이 활용된다. 이들은 분류 방법의 차이가 있으나, 분류 대상이 갖는 특성의 유사성과 이질성을 기준으로 집단을 유형화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단순히 관찰된 값을 통해 대상을 분류하는 전통적인 방법들에 대한 비판으로, 개인의 프로파일에 따라 효과적으로 집단을 분류하는 잠재프로파일분석(LPA)이 주목받고 있다(황해익 외 2019).²⁾ 잠재집단분석(LCA: Latent Class Analysis)은 혼합모형(mixture model)으로, 모집단의 구성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하위집단(잠재계층, 잠재집단)을 분류하는 범주형 잠재변수들로 자료를 추론할 때 적용할 수 있다. 잠재프로파일분석은 잠재집단분석에서 확장된 분석 방법으로, 잠재집단분석은 관찰변수들을 바탕으로 잠재적인 특성 정보들을 도출하고 이에 근거해 기존에 관찰되지 않았던 잠재집단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Henry and Muthén 2010). 잠재집단분석은 원래 이분형 변수에 적용하는 분석 방법이나, 이후 연속변수, 다분변수, 서열변수, 순위변수 등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확장되었는데 특히 연속변수를 바탕으로 잠재집단을 도출하는 것을 잠재프로파일분석이라고 한다(김희경·정혜경 2021). 잠재프로파일모형은 다음의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f(x_i | \theta) = \sum_1^k \pi_k f_k(x_i | \theta_k)$$

2) 황해익 외(2019)는 잠재프로파일분석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잠재프로파일분석은 개인 중심적 접근법(person-centered approach)에 기반하는데, 변인 중심적 접근법(variable-centered approach)을 바탕으로 한 전통적인 분류 방법들과 비교해 응답자의 상호관계성을 상세히 설명한다는 점에서 응답자들의 특성 파악에 유용하다(Torney-Purta and Barber 2011). 또한, 응답자들의 다양한 특성들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고려하여 표본 내 집단 간 차이를 조사하는데 효과적이다(Chow and Kennedy 2014).

잠재프로파일모형은 관찰 연속변수 $x_i (i = 1, \dots, n)$ 에 대해, 특정 잠재집단 k 에 속할 확률 π_k 와 특정 잠재집단 k 의 정규밀도함수 $f_k(x_i|\theta_k)$ 에 대한 관찰점수 분포로 나타난다. 여기서 각 잠재집단에 속할 확률의 총합은 1로 ($\sum \pi_k = 1$), 이는 각 잠재집단들이 상호 배타적임을 의미한다. 정규밀도함수 f_k 는 각 잠재집단의 평균 벡터와 공분산 행렬 $\theta_k = (\pi_k, \sum k)$ 의 분포를 갖는다(Tein et al. 2013; 김희경·정혜경 2021).

잠재집단분석에서는 잠재집단의 수를 증가시키면서 모형들을 추정하고, 모형검증과 비교를 통해 최종적으로 가장 적합한 모형을 기준으로 잠재집단의 수를 결정한다. 최적의 적합 기준에 대한 공통적인 표준은 없지만, 연구자들은 일반적으로 정보지수(information-theoretic methods), 우도비 검정법(likelihood ratio statistical test methods), 엔트로피 지수(entropy-based criterion)를 적용하는 방법들을 조합해 활용한다(Tein et al. 2013). 구체적으로, 우선 정보지수는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BIC(Baysian Information Critertion), SABIC(Sample-size Adjusted BIC)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이 값들이 낮을수록 적합도가 양호함을 의미한다. 둘째, 우도비 검정법을 활용하여 모형들의 적합도를 평가한다. 이를 위해 LMR(Lo-Mendell-Rubin LR Test), BLRT(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 등이 활용된다. 이때 p 값이 유의하면 잠재집단 수가 k개인 모형이 k-1개인 모형보다 더 적합함을 의미한다(Lo et al. 2001). 마지막으로, 엔트로피 지수를 활용하여 분류의 질을 확인하는데 이는 추정된 모델이 집단을 정확하게 분류하는지를 보여준다. 엔트로피 지수는 0 이상 1 이하의 값으로 나타나며, 값이 클수록 분류의 질이 높은 것을 의미하는데 보통 0.8 이상일 때 잠재집단들이 양호하게 분류되었다고 판단한다.

잠재프로파일분석은 모집단을 유사성과 이질성을 기준으로 유형화하는 데 강점을 갖는 분석 방법으로, 국내에서는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

학 등의 영역에서 청소년, 학생과 학부모, 교사, 노인과 장애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특히,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개인의 인식이나 행태에 대한 응답 값을 바탕으로 집단을 유형화하고 정책적 함의를 갖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와 유사하게 MZ세대와 청년들을 대상으로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적용한 연구들도 있다. 양연지·김기옥(2020)은 MZ세대의 스마트폰 활용 유형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강시은 외(2019)는 1인 가구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기 발달과업 수행에 대한 자신감 유형을 분류하였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행복을 주제로 한 연구들(신혜숙 2015; 황해익 외 2019; 정혜원·박소영 2020; 오진주·이현민 2021)도 있다.

2) 순서형 로짓 모형 (Ordered logit model)

본 연구에서는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해 도출된 서울 청년들의 행복 잠재집단을 종속변수로 하여 각 특성의 영향력을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순서형 로짓 모형(Ordered logit model)을 활용하였는데, 이 모형은 종속변수가 다항이며 순서화되었을 때 사용되는 모형이다. 분석 결과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으나, 도출된 3개의 잠재집단은 행복 수준에 따라 분류되어 종속변수의 특성을 고려해 순서형 로짓 모형을 활용하였으며,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이성우 외 2005; 안용진 2014)

$$y^* = \sum_{k=1}^K \beta_k x_k + \varepsilon \quad (1)$$

(단, ε 는 $E(\varepsilon) = 0$ 인 대칭분포이며,

CDF(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F(\varepsilon)$)

$$y = J \text{ if } \mu_{j-1} < y^* \leq \mu_j \text{ } (\mu_j \text{는 경계값}) \quad (2)$$

$$\log \left[\frac{P(y \leq j | x)}{1 - P(y \leq j | x)} \right] = \mu_j - \sum_{k=1}^K \beta_k x_k \quad (3)$$

(단, $j = 1, 2, \dots, J-1$)

식 (1)에서 관찰 불가능한 응답변수 y^* 는 관찰 가능한 응답 y 를 선택하는 기준을 제공하며, 식 (2)는 범주화된 기준 y^* 와 관찰가능한 응답 y 와의 관계를 나타낸다. 응답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응답(y)이 J 개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1부터 J 까지 선택하기 위한 응답자에 내재된 기준, 즉 y^* 가 일정 범위 내에서는 j 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관찰 불가능한 기준이 된다. 이산형의 종속변수에 확률 개념의 연속성을 부여하여 $\text{prob}(Y=j)$ 는 식 (3)과 같이 누적분포함수(CDF)가 로그 변환된 형태로 표현된다. 덧붙여, 이같이 종속변수가 순서화된 항을 포함하는 모형은 응답변수의 범주가 달라져도 설명변수의 영향력이 같다고 설명한다. 이를 평행선 가정(Parallel Lines Assumption) 또는 비례적 승산비 가정(Proportional Odds Assumption)이라 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삶의 인식 수준과 행복도(김지경 2018), 삶의 만족도(우재영 2013; 최경희·조덕호 2013; 조덕호 외 2018), 주관적 건강 상태(안용진 2014) 등의 영향요인을 순서형 로짓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다만 이 연구들이 주로 서베이 자료의 리커트형 응답들을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면, 본 연구는 여러 영역의 주관적 행복도 응답을 바탕으로 분류된 집단을 활용하여 다양한 영역의 행복도를 반영하였다. 또한, 본 연구와 유사하게 이민주·박인권(2019)은 공간적 배제 정도에 따른 4개의 주거 이동 그룹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층 순서형 로짓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IV. 서울 청년의 행복 프로파일과 영향요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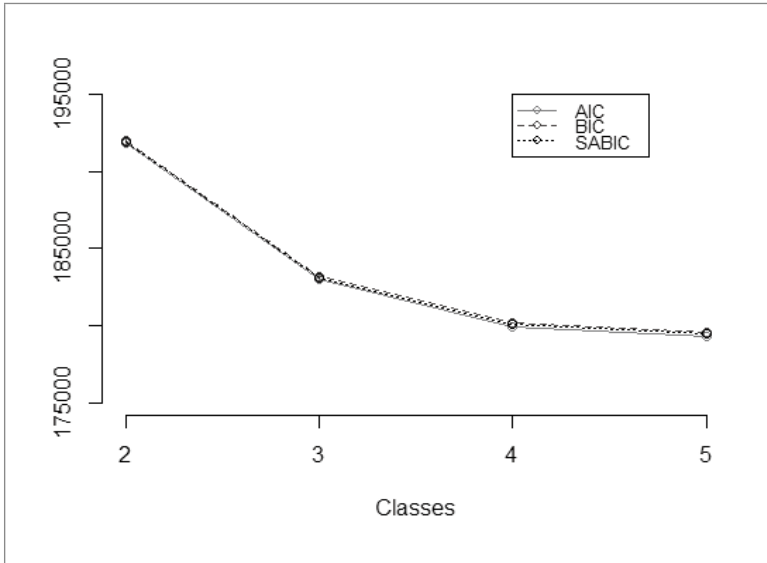
1. 서울 청년의 행복 프로파일

1) 잠재집단 도출

[표 4]는 서울 청년의 5개 영역별 행복도를 바탕으로 잠재집단 수에 따른 적합도 지수를 나타낸 것이다. 최적의 잠재집단 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잠재집단의 수를 증가시키면서 모형들의 적합도 지수들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보지수, 우도비 검정법(χ^2 차이 검증), 엔트로피 지수를 확인하였다. 우선 정보지수를 보면, AIC, BIC, SABIC 값이 작을수록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을 의미하나, 일반적으로 표본 크기가 크고 모형이 복잡할수록 이 값들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Jedidi et al, 1997; 오진주·이현민 2021). 이러한 경우 해당 수치들의 스크리도표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구간에서 잠재집단 수를 결정할 수 있다(노언경·홍세희 2012; 김영서·홍세희 2021).

[표 4] 잠재집단 수에 따른 적합도 지수

구분		잠재집단 수			
		2	3	4	5
정보지수	AIC	191855	183014	179935	179308
	BIC	191977	183183	180149	179569
	SABIC	191927	183113	180060	179461
χ^2 차이 검증	BLRT(p값)	0.01	0.01	0.01	0.01
분류의 질	Entropy	0.89	0.90	0.79	0.81
분류율 (%)	집단 1	0.68	0.34	0.35	0.29
	집단 2	0.32	0.60	0.04	0.23
	집단 3		0.06	0.25	0.42
	집단 4			0.35	0.02
	집단 5				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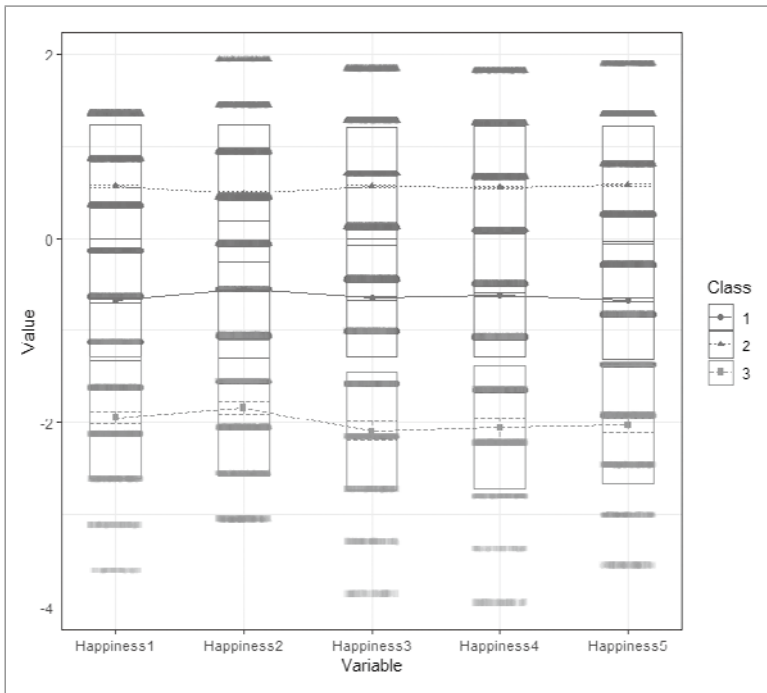
[그림 1] 잠재집단 수 증가에 따른 정보지수의 변화

[그림 1]을 보면 잠재집단의 수가 증가할수록 AIC, BIC, SABIC 값이 감소하고 경향을 보인다. 특히 잠재집단이 2개에서 3개로 증가하는 구간에서 정보지수 값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 3개의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우도비 검정에 기반한 BLRT 값은 네 가지 분류 모두 0.50 미만으로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엔트로피 지수는 분류의 질을 나타내는데, 대부분의 분류에서 엔트로피 지수가 0.8 이상으로 나타나 분류의 질이 양호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잠재집단 수가 3개일 때 엔트로피 지수가 0.90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합도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합한 잠재집단 수가 3개의 모형을 채택하였다.

2) 잠재집단의 특성 분석

[그림 2]는 3개 계층으로 분류된 잠재집단의 영역별 행복 점수를 나타

낸 그래프이다. X축의 Happiness 1~5는 각각 자신의 건강 상태, 자신의 재정 상태, 주위 친지, 친구와의 관계, 가정생활, 사회생활 영역의 행복 점수를 의미한다. Y축은 행복도 점수를 나타내는데, 서울서베이에서는 10점 만점의 리커트 척도로 행복 정도를 조사하였으나 도표의 값은 표준화된 값으로 나타난다. 표준화된 행복 점수가 0이면 평균 수준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양수이면 평균 이상, 음수이면 평균 이하 수준에 해당한다. 그래프는 상단부터 집단 2, 집단 1, 집단 3 순으로 상자 형태로 표현되었는데, 이는 각 집단 내의 표준편차를 반영한다. 점은 각 집단을 나타내는 상자의 중심(centroid), 즉, 평균 점수로, 그래프를 가로지르는 세 개의 선은 이를 이은 것이다. 이를 보면 집단 2의 영역별 행복도가 전반적으로 가장 높고, 집단 1, 집단 3 순으로 영역별 행복 점수가 높게 나



[그림 2] 잠재집단별 영역별 행복 점수

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집단 간 상대적인 행복 수준을 보면, 집단 2의 5개 영역별 행복 점수는 전체 청년 중에서도 평균 이상에 해당한다. 집단 1은 5개 영역별 행복 점수가 -0.5 내외의 값으로 평균보다 소폭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3은 -2 내외의 값으로 나타나 행복 수준이 상당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를 통해 동일한 집단의 영역별 행복 점수 차이는 크지 않으나, 3개의 집단 간의 행복 점수 차이는 비교적 뚜렷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해 분류된 3개의 계층은 전체 영역에 대해 행복 점수가 전반적으로 높은 집단(집단 2), 중간 수준인 집단(집단 1), 낮은 집단(집단 3)으로 분류되었으며, 각 집단 간의 행복격차가 존재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집단별 구체적인 행복 점수는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집단 2를 '높은 행복도 집단(A)', 집단 1을 '중간 행복도 집단(B)', 집단 3을 '낮은 행복도 집단(C)'으로 명명하였다. 집단별 빈도는 전체 15,745명 중 높은 행복도 집단(A)은 9,521명(60.5%), 중간 행복도 집단(B)은 5,318명(33.8%), 낮은 행복도 집단(C)은 906명(5.8%)이다.

[표 5]는 3개 집단의 행복 점수와 인구 사회학적 특징들에 대한 분산 분석 및 사후검정 결과이다. 각 집단의 영역별 행복 점수를 비롯해, 종합 행복 점수, 연령, 소득, 서울과 현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의 평균값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사후검정(scheffe) 결과, 현 주택 거주기간의 중간 행복도 집단(B)과 낮은 행복도 집단(C)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면 모든 집단 간의 차이가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표 5] 집단별 인구 사회학적 특성 (1)

구분		잠재집단 (N=15,745)						F	Prob>F
		높은 행복도 집단 (A) N=9,521		중간 행복도 집단 (B) N=5,318		낮은 행복도 집단 (C) N=906			
		Mean	SD	Mean	SD	Mean	SD		
영역별 행복 점수	자신의 건강 상태	8.40	1.18	5.92	1.50	3.34	1.76	10089.48	0.000
	자신의 재정 상태	7.09	1.50	5.00	1.48	2.43	1.63	6202.62	0.000
	주위 친지, 친구와의 관계	7.77	1.07	5.62	1.13	3.15	1.67	11084.02	0.000
	가정생활	7.80	1.05	5.76	1.21	3.29	1.71	9919.27	0.000
	사회생활	7.57	1.13	5.28	1.21	2.81	1.54	11125.05	0.000
종합 행복 점수		7.73	0.72	5.51	0.71	3.01	1.01	27612.88	0.000
연령(세)		29.6	7.66	33.2	6.04	34.0	5.05	538.27	0.000
월평균 균등화 소득 (만 원)		306.0	98.38	287.2	114.44	246.3	136.93	158.44	0.000
서울 거주기간(월)		267.7	124.51	243.8	146.37	208.5	147.92	115.92	0.000
현 주택 거주기간(월)		67.2	58.59	55.0	50.62	51.9	52.96	98.34	0.000

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낮은 행복도 집단(C)에서 높은 행복도 집단(A)으로 갈수록 종합 및 영역별 평균 행복 점수 역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개 영역별 행복 점수 및 종합 행복 점수를 보면, 높은 행복도 집단(A)은 7~8점대, 중간 행복도 집단(B)은 5점대, 낮은 행복도 집단(C)은 2~3점대의 점수를 보였다. 행복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영역은 자신의 건강 상태였으며, 가장 낮은 행복 점수를 보인 영역은 자신의 재정 상태였다.

소득, 서울 및 현 주택 거주기간 역시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즉, 행복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소득 수준이 높고, 서울 및 현 주택에서의 거주기

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균등화 소득을 집단별로 보면, 높은 행복도 집단(A)은 약 306만 원, 중간 행복도 집단(B)은 약 287만 원, 낮은 행복도 집단(C)은 약 246만 원으로 나타나 집단 간 평균 소득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거주기간과 현 주택 거주기간도 높은 행복도 집단(A)이 가장 길고, 낮은 행복도 집단(C)이 가장 짧으며 집단 간의 거주기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연령은 행복 수준과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행복도 집단(A)의 평균 연령은 29.6세로 가장 낮았으며, 중간 행복도 집단은 33.2세, 낮은 행복도 집단(C)은 34세로 행복 수준이 낮을수록 평균 연령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6]은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범주형 변수의 교차분석 결과이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는 모두 0.001 수준에서 유의하여, 집단별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집단별 분류율(전체 응답자 수 대비 각 집단에 속한 응답자 수 비율)이 높을수록 해당 특성이 우세하다고 할 수 있다. [표 6]의 음영 및 굵은 글씨로 표시한 것은 각 인구 사회학적 특성 범주 중 분류율보다 높으면서도, 범주 중 그 비율이 가장 높아 우세한 특성을 보이는 집단을 나타낸 것이다. 굵은 글씨로만 표시한 것은 분류율보다 우세하나, 범주 내에서 가장 우세한 집단은 아닌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낮은 행복도 집단의 직업 특성에서 블루칼라(8.6%)가 가장 우세하여 짙은 음영과 굵은 글씨로 표시하였다. 화이트칼라(6.2%)는 가장 우세하지는 않지만, 분류율(5.8%)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나 굵은 글씨로만 표시하였다. 이를 통해서 세 개의 행복 집단별로 성별, 세대, 혼인상태를 비롯해 직업과 학력, 가구, 주택, 서울 거주 특성에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 집단별 인구 사회학적 특성 (2)

구분		잠재 집단 (N=15,745)			계	χ^2
		높은 행복도 집단 (A)	중간 행복도 집단 (B)	낮은 행복도 집단 (C)		
성별	남	4,480 (62.2%)	2,360 (32.8%)	366 (5.1%)	7,206 (100%)	21.01 ***
	여	5,041 (59.0%)	2,958 (34.6%)	540 (6.3%)	8,539 (100%)	
MZ 세대	M세대	6,632 (54.8%)	4,642 (38.3%)	837 (6.9%)	12,111 (100%)	727.01 ***
	Z세대	2,889 (79.5%)	676 (18.6%)	69 (1.9%)	3,634 (100%)	
직업	화이트칼라	5,008 (56.4%)	3,324 (37.4%)	547 (6.2%)	8,879 (100%)	317.00 ***
	블루칼라	1,033 (53.8%)	722 (37.6%)	166 (8.6%)	1,921 (100%)	
	기타	3,480 (70.4%)	1,272 (25.7%)	193 (3.9%)	4,945 (100%)	
학력	고졸 미만	292 (85.9%)	37 (10.9%)	11 (3.2%)	340 (100%)	291.53 ***
	고졸	1,615 (69.5%)	551 (23.7%)	157 (6.8%)	2,323 (100%)	
	(초)대졸	7,117 (59.1%)	4,273 (35.5%)	646 (5.4%)	12,036 (100%)	
	대학원 이상	497 (47.5%)	457 (43.7%)	92 (8.8%)	1,046 (100%)	
혼인 상태	기혼/동거	4,231 (55.5%)	2,978 (39.1%)	411 (5.4%)	7,620 (100%)	196.26 ***
	이혼/별거/사별	46 (50.0%)	36 (39.1%)	10 (10.9%)	92 (100%)	
	미혼	5,244 (65.3%)	2,304 (28.7%)	485 (6.0%)	8,033 (100%)	
가구 구성	1인 가구	747 (30.8%)	1,254 (51.7%)	424 (17.5%)	2,425 (100%)	1400 ***
	다인 가구	8,774 (65.9%)	4,064 (30.5%)	482 (3.6%)	13,320 (100%)	

구분		잠재 집단 (N=15,745)			계	χ^2
		높은 행복도 집단 (A)	중간 행복도 집단 (B)	낮은 행복도 집단 (C)		
주택 유형	아파트	4,545 (65.2%)	2,152 (30.9%)	273 (3.9%)	6,970 (100%)	178.65 ***
	단독주택	2,046 (59.7%)	1,163 (33.9%)	219 (6.4%)	3,428 (100%)	
	다세대/ 연립/빌라	2,913 (54.7%)	1,999 (37.6%)	411 (7.7%)	5,323 (100%)	
	기타	17 (70.8%)	4 (16.7%)	3 (12.5%)	24 (100%)	
점유 형태	자가	5,066 (64.6%)	2,489 (31.7%)	291 (3.7%)	7,846 (100%)	481.60 ***
	전세	3,623 (61.3%)	1,932 (32.7%)	353 (6.0%)	5,908 (100%)	
	월세, 사글세	820 (42.2%)	866 (44.6%)	258 (13.3%)	1,944 (100%)	
	무상	12 (25.5%)	31 (66.0%)	4 (8.5%)	47 (100%)	
거주 권역	도심권	744 (57.9%)	480 (37.4%)	61 (4.8%)	1,285 (100%)	84.68 ***
	동북권	3,038 (63.2%)	1,494 (31.1%)	273 (5.7%)	4,805 (100%)	
	서북권	1,034 (55.3%)	738 (39.5%)	98 (5.2%)	1,870 (100%)	
	서남권	2,745 (58.0%)	1,686 (35.6%)	305 (6.4%)	4,736 (100%)	
	동남권	1,960 (64.3%)	920 (30.2%)	169 (5.5%)	3,049 (100%)	
계		9,521 (60.5%)	5,318 (33.8%)	906 (5.8%)	15,745 (100%)	-

*** p < 0.001

[표 기은 앞의 분산분석 및 교차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세 개의 행복
집단에 속하는 청년들의 우세한 인구 사회학적 특징을 정리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높은 행복도 집단(A)에는 전체 청년의 60.5%가 포함된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29.6세로, MZ세대 중 Z세대, 성별로는 남성, 학력은 고졸미만, 기타 직업군(학생)³⁾이 가장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행복 집단 중 평균 연령이 가장 낮았는데, 세대 중 Z세대가 우세한 것도 이를 반영한다. 월평균 균등화 소득은 306만 원으로 세 집단 중 소득 수준이 가장 높다. 혼인상태는 미혼, 가구 구성은 다인 가구인 청년들이 다수 포함된다. 거주 주거 특성은 기타 주택 유형(오피스텔, 상가 내 거처 등)과 아파트 거주 경향이 높았고, 점유 형태는 자가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전세 거주 비중 역시 높았다. 평균 현 주택 거주기간은 약 5년 7개월로 세 집단 중 가장 길다. 서울 거주 특성과 관련해, 동남권 거주가 가장 우세했고, 비슷하게 동북권 거주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서울 거주기간 역시 약 22년 4개월로 세 집단 중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집단에 속하는 청년들의 낮은 평균연령, 미혼 및 다인 가구, Z세대 비율(고졸 미만의 학생)이 우세하면서도, 높은 소득 수준과 양질의 주거환경에서의 거주 상황을 고려할 때 이들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집단(동남권 거주, 자가 및 전세 우세, 균등화 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임을 유추할 수 있다. 주거 특성 측면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현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이 길고 자가 비중이 높은 것을 볼 때 주거안정성이 비교적 높고, 서울에서도 비교적 주거환경이 양호한 동남권에 거주하는 비중이 높았다.

중간 행복도 집단(B)은 전체 청년의 33.8%가 포함되며, 이 집단에 속하는 청년들의 평균 연령은 33.2세로 MZ세대 중 M세대, 여성이 우세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력은 대졸 및 대학원 이상, 직업군은 블루칼

3) 높은 행복도 집단(A) 중 학생은 2,533명으로, 해당 집단의 26.6%를 차지한다.

[표 7] 집단별 우세한 인구 사회학적 특징

잠재집단	인구 사회학적 특징
 높은 행복도 집단(A) (평균 행복 점수: 7.7점)	• 평균 연령 29.6세, Z세대, 남성 • 평균 월 소득 306만 원(균등화 소득), 기타 직업군(학생) • 고졸 이하 • 미혼, 다인 가구 • 기타·아파트 거주, 자가·전세, 평균 현 주택 거주기간 약 5년 7개월 • 서울 동남권 및 동북권 거주, 평균 서울 거주기간 약 22년 4개월
 중간 행복도 집단(B) (평균 행복 점수: 5.5점)	• 평균 연령 33.2세, M세대, 여성 • 평균 월 소득 287만 원(균등화 소득), 블루칼라 및 화이트칼라 • (초)대졸 및 대학원 이상 • 배우자 없음(이혼/별거/사별) 및 배우자 있음(기혼/동거), 1인 가구 • 다세대/연립/빌라 거주, 월세, 평균 현 주택 거주기간 약 4년 7개월 • 서울 서북권·서남권·도심권 거주, 평균 서울 거주기간 약 20년 4개월
 낮은 행복도 집단(C) (평균 행복 점수: 3.0점)	• 평균 연령 34.0세, M세대, 여성 • 평균 월 소득 246만 원(균등화 소득), 블루칼라 및 화이트칼라 • 대학원 이상 및 고졸 • 배우자 없음(이혼/별거/사별) 및 미혼, 1인 가구 • 기타·다세대/연립/빌라 거주, 월세·무상·전세, • 평균 현 주택 거주기간 약 4년 4개월 • 서울 서남권 거주, 평균 서울 거주기간 약 17년 5개월

라와 화이트칼라가 비슷한 정도로 우세하며, 월평균 균등화 소득은 287만 원으로 세 집단 중 중간 수준이다. 혼인상태는 이혼, 별거, 사별로 인해 배우자가 없는 경우와 배우자가 있는 경우 모두 비슷한 수준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1인 가구 비율이 높았고, 주거 유형은 다세대, 연립, 빌라, 점유 형태로는 월세 거주자 비중이 높으며 현 주택 거주기간은 평균 약 4년 7개월이다. 서울에서는 서남권 거주자 비중이 가장 우세했고, 도심권, 서북권에 거주하는 청년들도 다수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평균 서울 거주기간은 약 20년 4개월로 이 역시 세 집단 중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종합하면, 전체 청년 1인 가구의 절반 이상이 중간 행

복도 집단(B)에 속할 정도로 비율이 높았는데, 혼인상태로는 미혼 또는 이혼·사별이나 기혼·동거 가구 비율이 비슷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주거는 아파트보다 비아파트(단독주택·다세대 등) 거주 비율이 우세하였고, 거주 지역은 서북권, 도심권, 서남권 등에 걸쳐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낮은 행복도 집단(C)은 전체 청년 중 5.8%가 포함되며, 평균 연령은 34세로 세 집단 중 연령이 가장 높았다. 세대로는 M세대, 성별로는 여성이 우세하다. 월평균 균등화 소득은 246만 원으로 세 집단 중 소득 수준이 가장 낮으며, 직업군 측면에서 블루칼라 및 화이트칼라가 모두 우세하다. 다만 중간 행복도 집단(B)에서 두 비중이 거의 비슷했던 것과 달리, 낮은 행복도 집단(C)에서는 블루칼라의 비중이 확연히 높은 편이다. 학력은 전체 대학원 이상 청년의 8.8%가 해당 집단에 포함되어 전체 청년 중 낮은 행복도 집단(C)의 비율보다 높아 가장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 역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혼인상태는 이혼·별거·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청년의 약 10%, 1인 가구 중 17.5%가 낮은 행복도 집단(C)에 포함되었다. 주거 특성관련, 기타 주택 유형 및 다세대·연립·빌라에 거주하는 경우가 우세하였고, 점유 형태 측면에서는 임차 및 무상거주가 우세하였다.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보면 자가에 거주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과 달리, 이 집단에 속하는 청년 중 가장 높은 점유 형태는 전세 거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현 주택 거주기간은 약 4년 4개월로 중간 행복도 집단(B)과 큰 차이는 없었지만 세 집단 중에서는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나 세 집단 중 주거불안정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서울 거주 특성 관련, 서울에서도 서남권에 거주하는 비중이 높았고 평균 거주기간은 약 17년 5개월로 세 집단 중 가장 짧았다. 종합하면, 세 집단 중 소득수준이 가장 낮고, 학력은 대학원 이상 및 고졸, 직업은 블루칼라 및 화이트칼라가 우세하게 나타났다. 또한 주거 측

면에서도 비아파트 비율 중 특히 기타(오피스텔, 고시원 등)가 우세하였고, 임차 및 무상거주가 우세하여 낮은 주거 안전성의 특성을 보였다.

각 행복 집단에 속하는 청년들의 연령과 성별, 직업과 학력, 가구 및 주거 특성, 서울 내에서의 거주 지역과 기간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특성들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 결과로는 각기 다르게 나타난 인구 사회학적 특징들이 행복 수준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면, 높은 행복도 집단(A)에서 고졸 이하, 기타 직업군인 청년들이 우세한 것은 이 집단의 낮은 연령에 의한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 즉,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후 각 특성 변수들의 영향력 추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다음의 순서형 로짓 분석 결과를 통해 확인하도록 한다.

2. 행복격차 영향요인 분석

청년의 행복격차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앞서 순서형 로짓 모형은 평행선 가정을 전제로 함을 설명하였다. 이는 승산비(Odds)가 누적적으로 형성되므로 범주의 차이가 있더라도 동일한 승산비에 대한 한계효과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이성우 외 2005). 이를 본 연구에 적용하면,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행복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독립변수의 승산비가 높은 행복도 집단(A)이 중간 행복도 집단(B) 및 낮은 행복도 집단(C)에 대비해 n 배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낮은 행복도 집단(C)에 대비해 높은 행복도 집단(A) 및 중간 행복도 집단(B)의 승산비 역시 동일하게 n 배 높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간 행복도 집단(B) 및 낮은 행복도 집단(C)과 비교하여 높은 행복도 집단(A)에 속할 확률로 분석 결과를 해석하였다.

[표 8] 모형 추정 결과

변수		Coef	exp(b)	
성별	여성	-0.049	0.952	
연령	연령	-0.124***	0.883	
	연령제곱	0.001*	1.001	
학력	고졸 미만	0.297*	1.346	
	(초)대졸	0.198***	1.219	
	대학원 이상	-0.078	0.925	
직업	블루칼라	-0.272***	0.762	
	기타	-0.177***	0.838	
혼인상태	배우자 있음(기혼, 동거)	-0.500***	0.607	
	배우자 이별 (이혼, 별거, 사별)	0.076	1.079	
가구 특성	가구 구성	1인 가구	-1.549***	0.212
	소득 수준	월평균 균등화 소득 (만 원)	0.002***	1.002
주거 특성	주택 유형	단독주택	-0.040	0.961
		다세대, 연립, 빌라	-0.122***	0.886
		기타	0.776	2.172
	점유 형태	전세	0.343***	1.410
		월세, 사글세	0.039	1.040
		무상	-0.480*	0.619
	거주기간	현 주택 거주기간(개월)	0.001**	1.001
서울 거주 특성	거주권역	도심권	-0.141*	0.869
		동북권	0.040	1.041
		서북권	-0.275***	0.760
		서남권	-0.122**	0.885
	거주기간	서울 거주기간(개월)	0.002***	1.002
cut point 1		-5.552642		
cut point 2		-2.863491		
Log likelihood		-11699.077		
N		15,745		

주: *** p < 0.01, ** p<0.05, *p<0.1

청년 개인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관련하여, 연령, 학력, 직업, 혼인 상태 변수가 행복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행복감이 감소하다 연령이 증가하게 되면 그 감소폭이 줄어들게 됨을 의미한다.⁴⁾ 또한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청년과 비교해 고졸 미만 및 대졸자가 높은 행복도 집단(A)에 속할 확률이 각각 1.35배, 1.22배로 나타나, 행복 정도와 학력이 비례하지는 않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속성 중 교육이 행복에 미치는 순기능은 비교적 일관되게 발견된다. 즉,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행복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감, 자가 평가, 지식에서 파생된 즐거움이 행복감을 높이며, 부가적으로 건강, 더 높은 급여를 받을 기회를 증가시켜 행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 설명한다(Gerdtham and Johannesson 2001; Akaeda 2020).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행복 수준에 교육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고하고 있다(Gow et al. 2007; Andersen 2009; Helliwell and Wang 2011). 본 연구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데, 이미 충분한 교육 기회와 학력 수준을 갖춘 청년세대에서는 학력과 행복 수준이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 및 사회적 맥락, 그리고 서울 청년들의 높은 교육 성취도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해석된다. 성별 변수가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p 값(0.171)이 유의 수준과 근접한 것을 볼 때 그 영향력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의 승산비는 약 0.94로, 여성과 비교해 남성의 행복 수준이 높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서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서울 미래세대 인식조

4) 행복과 연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여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연령별 행복 점수가 U자형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행복도가 증가한다는 연구(Gerdtham and Johannesson 2001)와, 반대로 행복과 연령은 역U자형의 관계를 맺는다는 연구(국회미래연구원 2021)가 있다.

사(변미리 외 2017)나 서울청년패널(2020)의 결과와도 유사하다.⁵⁾

직업 변수와 관련하여, 화이트칼라인 청년들과 비교해 블루칼라와 기타 직업군의 청년들이 높은 행복도 집단(A)에 속할 확률은 각각 약 0.76배, 0.84배로 나타나, 직업에 따른 행복 수준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혼인상태의 영향력을 보면, 미혼인 청년들과 비교해 배우자가 있는 청년들이 높은 행복도 집단(A)에 속할 확률은 낮았다. 이는 선행연구(박민진 외 2021; Gerdtham and Johannesson 2001)의 결과와는 상반된 것이다. 생애주기에서 결혼은 중요한 사건이지만, 청년들에게 결혼은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지는 않는다. 최근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고 비혼을 선택하는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연구 결과는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가구 특성과 관련하여, 1인 가구인 청년의 승산비는 0.21로 나타나 다인 가구인 청년과 비교해 높은 행복도 집단(A)에 속할 확률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변수들과도 비교해 행복 수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서울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그들의 낮은 행복 수준과 연관된 취약한 부분들을 자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편, 소득이 증가할 때 행복 수준이 높을 확률도 높았다. 소득과 행복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상이한 시각이 존재하지만, 대체로 소득의 증가는 명백하게 행복도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Stevenson and Wolfers 2008)와 유사한 결과이다.

주거 특성과 관련하여, 아파트에 거주하는 청년과 비교해 다세대, 연립, 빌라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높은 행복도 집단(A)에 속할 확률이 0.89배로 낮았다. 이는 주택 유형 중 일반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주택 유

5) 성별에 따른 행복 수준은 국가나 사회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크다. 가령, 러시아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행복하지만, 미국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행복하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성별 간 행복도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Quick 2015).

형인 아파트에서의 거주가 행복 수준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점유 형태 측면에서는 전세 거주 청년의 승산비는 1.41, 무상 거주 청년의 승산비는 0.62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자가 거주 청년과 비교한 점유 형태에 따른 행복 수준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현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행복 수준도 증가할 확률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높은 주거안정성이 행복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주거 안정성이 가장 높은 자가 거주자의 행복 수준이 전세 거주자에 비해 낮을 확률이 높았다. 이는 주택가격이 높은 서울에서의 자가 거주를 위한 주거비 부담이 행복 수준을 감소시키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세대와의 구체적인 비교 분석이 필요하겠으나, 자산 축적의 기간이 비교적 짧은 청년들에게는 주거비 부담이 행복 수준 감소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서울 거주 특성도 청년들의 행복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의 거주기간이 증가할 때, 높은 행복 수준을 유지할 확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서울 내에서도 거주 지역에 따른 행복 수준의 영향력도 확인하였다. 서울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거주 지역별 행복 수준을 분석한 결과,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에 거주하는 청년들과 비교해 도심권, 서북권, 서남권 거주 청년들이 높은 행복 수준 집단(A)에 속할 확률은 각각 0.87배, 0.76배, 0.89배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안에서도 비교적 양질의 주거 및 생활환경, 교육 및 고용 기회를 갖춘 동남권에서의 거주가 청년들의 행복 수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청년집단의 이질성에 집중하여 서울 청년들의 행복격차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행복 유형에 따라 집단을 분류하고, 행복 수준에 따른 청년들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해 서울 청년들을 행복 수준별로 3개의 집단(높은 행복도 집단, 중간 행복도 집단, 낮은 행복도 집단)으로 분류하였고, 각 집단별 청년들의 인구, 사회, 경제적 특성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서울 청년의 행복 수준에 따라 도출된 3개 집단별 특성과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높은 행복도 집단은 세 집단 중 평균 연령이 가장 낮고, Z세대, 미혼, 남성의 특성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또한 높은 소득 수준, 자가 및 아파트 거주, 동남권 거주 등이 우세함을 고려할 때,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의 영향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변수의 부재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에는 한계가 있었다. 향후 부모의 사회경제적 환경이 자녀의 행복격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간 행복 집단은 세 집단 중 연령대가 중간 수준이며, 여성, 대출 이상, 직업이 있는 청년들이 우세한 집단이다. 특징적인 것은, 청년 1인 가구 중 절반 이상이 이 집단에 속하며, 다른 집단에 비해 서울의 특정 지역에 거주하기보다는 전역에 고루 거주하는 경향을 보였다. 중간 행복도 집단을 대상으로 1인 가구와 주거안정성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낮은 행복도 집단은 세 집단 중 평균 연령이 가장 높았고, 월평균 소득이 가장 낮았으며, 여성, 블루칼라가 우세하였다. 또한 배우자 없음, 1인 가구가 우세하였고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주거 안정성을 보

였다. 또한 이 집단은 경제적 안정성뿐만 아니라 주거안정성 또한 취약한 집단인 만큼, 소득 및 주거 안정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분석 결과는 청년세대 내의 행복격차를 확인하였으며, 행복 수준별 청년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주거 및 서울 거주 특성 등에 대한 탐색을 통해 행복 집단별 청년들의 취약점 또한 확인하였다. 청년세대 내 행복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도시정부는 각 집단별 취약점을 보완하는 맞춤형 정책들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도시정부의 주거, 교육, 사회복지 등에 대한 지출은 도시민의 행복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며, 공공부문에서 주민들의 행복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은 점차 증대될 것이다.

앞서 분류된 행복 집단을 바탕으로, 청년들의 행복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행복 수준은 감소하다 그 감소 폭이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이 서로 다른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 만큼 보다 세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교육 수준과 혼인상태는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교육 수준과 행복 정도가 비례하지 않으며, 미혼 청년이 기혼 청년보다 행복할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난 것도 특징적이다. 이는 서울 청년들의 전반적으로 높은 교육 수준과 교육 성취, 교육과 결혼에 대한 인식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소득, 주거 특성, 서울 거주 특성 등의 영향력도 확인하였다. 눈여겨볼 것은, 점유 형태의 안정성이 행복 수준과 비례할 것이라 예상한 것과는 달리 자가 거주 청년들이 전세 거주 청년들보다 행복할 확률이 낮았다. 이는 주거비 부담이 큰 서울에서의 자가 거주를 위한 부담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서울에서의 거주기간이나 거주권역에 따라 청년들의 행복 수준도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양

질의 생활환경을 갖춘 동남권에서의 거주가 행복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과 관련하여, 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청년들의 행복을 높이는 데 유효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청년 1인 가구가 다인 가구에 비해 행복할 확률이 크게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청년 1인 가구들의 구체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그들의 어려움과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다행히 서울시에서는 ‘1인 가구 특별대책추진단’을 신설해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주거지원, 안전지원, 심리상담, 관계망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집단 맞춤형 정책 전개는 해당 집단의 행복 수준을 제고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청년세대의 행복격차를 확인하고, 행복 수준별 청년들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포착하기 위한 시도로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청년세대를 동질의 집단으로 간주하여 그들의 행복과 영향요인을 탐색했던 것과는 달리, 본 연구는 청년세대의 이질성에 집중하여 행복격차를 포착하고자 하였다. 특히,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해 청년세대 내의 행복 유형 분류를 통해 행복격차를 파악하고 행복 수준별 서로 다른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취약점 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청년들의 생애주기를 고려하면서도, 청년 내에서도 각 집단별 특성에 맞는 실용적인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데이터의 한계로 구체적으로 분석하기는 어려웠으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청년의 행복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유추할 수 있던바, 이를 고려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동우·안주엽·남수연. 2020. 「지역 특성이 주민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의 탐색」, 국토연구 104: 3-21.
- 강봉규. 2000. 『인간발달』, 서울 동문사.
- 강시은·조원희·엄명용. 2019. 「1인가구 청년의 청년기 발달과업 수행에 대한 자신감 유형과 그 경제적 예측요인: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활용하여」, 사회복지연구 50(2): 53-81.
- 김기현. 2017. 「청년 정책의 현황 진단과 개선 방향」, 보건복지포럼 244: 54-68.
- 김동심·윤성혜. 2018. 「청년취업자의 직무만족도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규명: 수면시간, 자기인식, 사회신뢰를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집 47(1): 53-70.
- 김동열. 2013. 「세대별 행복도 차이의 배경과 시사점」, 경제주평 통권 529호, 현대경제연구소.
- 김영미. 2018. 「한국 2030세대의 청년정책에 대한 태도와 영향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 18(5): 386-396
- 김영서·홍세희. 2021. 「고등학생의 청소년활동 참여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유형과 공동체 의식 및 주관적 행복감의 차이」, 조사연구 22(1): 91-125.
- 김지경. 2018. 「청년세대 삶의 인식 수준과 행복도의 영향요인」, 한국사회정책 25(3): 209-245.
- 김혜연. 2020. 「노년기 행복 불평등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72(2): 97-123.
- 김희경·정혜경. 2021.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한 중학교 과학 학생 성취특성 분석」, 교육과정평가연구 24(2): 177-198.
- 노언경·홍세희. 2012. 「청소년의 컴퓨터 사용 목적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분류 및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3(3): 51-76.
- 박미석·김미영·김경아·전지원. 2019. 「청년세대의 일-삶 균형 수준과 행복 요인: OECD ‘더 나은 삶의 지수(Better Life Index)’와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를 활용한 다국가 비교」,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3(2): 79-97.
- 박민진·민보경·이민주. 2021. 「미래세대의 행복과 영향 요인 연구: MZ세대를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34(4): 121-147.
- 박민진·민보경·정우성. 2017. 「관계제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

- 시민의 세대별 비교,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9(2): 1-30.
- 박승민, 2022, 「행복과 사회정책의 역할」, 복지이슈 Today, 서울복지재단.
- 변금선·김기현, 2019, 「청년층의 삶의 질 격차에 관한 연구: 1988-1998년생 청년의 다중격차 실태 분석」, 사회복지정책 46(2): 257-285.
- 변금선·김승연·박민진·이혜림, 2020, 『2025 서울시 청년정책 비전과 전략』, 서울연구원.
- 변미리·박민진·박영미, 2020, 『2024 서울행복플랜: 시민행복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서울연구원.
- 변미리·민보경·박민진, 2017, 『서울형 행복지표 구축과 제도화 방안』, 서울연구원.
- 변미리·최정원·박민진·이혁준, 2014, 『메가시티 삶의 질과 서울형 행복지표』, 서울연구원.
- 서울시·서울연구원, 2020, 「서울서베이」.
- 서울시·서울연구원, 2021, 「서울청년패널조사」.
- 성은모·김균희, 2013,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과 환경특성 간의 관계분석」,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 신승배, 2015, 「한국인의 행복감 결정요인」, 사회과학연구 41(2): 183-208.
- 신혜숙, 2015, 「초등학생의 학업성취도, 공동체의식, 학교행복에 관한 잠재프로파일 분류 및 영향요인 탐색」, 교육평가연구 28(1): 53-76.
- 안용진, 2014, 「도시규모와 사회 질 (Social Quality) 지표가 여성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5(4): 153-164.
- 양연지·김기욱, 2020, 「Z세대와 밀레니얼세대의 스마트폰활용패턴에 따른 잠재프로파일분석」, 소비자학연구 31(4): 159-182.
- 오진주·이현민, 2021,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이용한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의 질 유형과 주관적 행복의 차이」, 조사연구 22(1): 127-154.
- 우재영, 2013, 「경제, 사회적 요인이 여성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농촌지도와 개발 20(2): 555-602.
- 이민주·박인권, 2019, 「대도시 공간배제적 주거이동 영향요인 실증분석」, 국토연구 101: 49-73.
- 이성우·민성화·박지영·윤성도, 2005, 『로짓·프라빗모형 응용』, 서울: 박영사.
- 이용수, 2018, 「한국인의 행복과 행복 요인」, 보건복지포럼 265: 20-31.
- 장인수·김홍석, 2016, 「서울시민들의 주관적 건강 행복지수 결정요인 분석」, 보건사회연구 36(3): 85-118.

- 전상진. 2018. 『세대게임: '세대 프레임'을 넘어서』. 문학과 지성사.
- 정혜원·박소영. 2020. 「청소년의 그릿 및 행복감에 대한 잠재프로파일 분류와 개인, 부모, 친구, 교사요인 영향 검증」. *중등교육연구* 68(1): 135-167.
- 조덕호·여창환·서윤희. 2018. 「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한 삶의 만족도 분석과 복지정책 수립방안」. *대한정치학회보* 26(4): 177-195.
- 채병주·황선재. 2021. 「청년 1인가구의 사회경제적 이질성과 복지 영역 선호」. *보건사회연구* 41(3): 248-268.
- 최경희·조덕호. 2013. 「도·농노인의 삶의 만족도 분석을 통한 지역별 노인복지 정책 우선순위 결정」. *도시행정학보* 26(3): 49-70.
- 최유석. 2018. 「행복 불평등: 행복의 분산과 관련요인」. *한국인구학* 41(4): 39-64.
- 한승헌·임다혜·강민아. 2017. 「한국 청년의 삶의 불안정성(precariousness)과 행복: 불확실성과 통제권한 부재의 매개효과」. *한국사회정책* 24(2): 87-126.
- 황해익·서원석·이강훈. 2019.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활용한 유아교사의 행복 유형 결정요인과 행복 유형에 따른 행복플로리시 차이 검증」. *열린유아교육연구* 24(2): 365-390.

- Akaeda, N. 2020. "Contextual Social Trust and Well-Being Inequality: From the Perspectives of Education and Incom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21: 2957-2979.
- Andersen, S. H. 2009. "Unemployment and subjective well-being: A question of class?" *Work and Occupations* 36(1): 3-25.
- Chow, K. F., and Kennedy, K. J. 2014. "Secondary analysis of large-scale assessment data: An alternative to variable-centred analysis." *Educational Research and Evaluation* 20(6): 469-493.
- Diener, E., and Biswas-Diener, R. 2019. "Well-being interventions to improve societies." *Global Happiness and Well-being Policy Report*: 95-110.
- Gerdtham, U.-G. and Johannesson, M. 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happiness, health, and social economic factors: Results based on Swedish microdata." *The Journal of Socio-Economics* 30(6): 553-557.

- Gow, A. J., Pattie, A., Whiteman, M. C., Whalley, L. J. and Deary, I. J. 2007. "Social support and successful aging: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lifetime cognitive change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Individual Differences* 28(3): 103-115.
- Helliwell, J. F. and Wang, S. 2011. "Trust and well-being." *International Journal of Well-Being* 1(1): 42-78.
- Henry K. L. and Muthén, B. 2010. "Multilevel latent class analysis: An application of adolescent smoking typologies with individual and contextual predictor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7(2): 193-215.
- Jedidi, K., Jagpal, H. S., and DeSarbo, W. S. 1997. "Finite-mixture structural equation models for response-based segmentation and unobserved heterogeneity." *Marketing Science* 16(1): 39-59.
- Masuda, Y. J., Williams, J. R. and Tallis, H. 2021. "Does life satisfaction vary with time and income?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 among free time, income,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22(5): 2051-2073.
- Mckinsey & Company. 2018. "True Gen': Generation Z and its implications for companies." <https://www.mckinsey.com/industries/consumer-packaged-goods/our-insights/true-gen-generation-z-and-its-implications-for-companies>(accessed March 18, 2022).
- Milotay, N. 2020. "Next generation or lost generation? Children, young people and the pandemic." EPRS: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https://policycommons.net/artifacts/1426820/next-generation-or-lost-generation-children-young-people-and-the-pandemic/2041358>(accessed April 13, 2022).
- Quick, A. 2015. *Inequalities in wellbeing: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research and policy*. New Economics Foundation.
- Stevenson, B. and Wolfers, J. 2009. "The paradox of declining female happiness." *American Economic Journal: Economic Policy* 1: 190-225.
- Stevenson, B. and Wolfers, J. 2008. "Happiness Inequality in the United

- States.” *The Journal of Legal Studies* 37(S2): 33-79.
- Tein, J., Coxe, S. and Cham, H. 2013. “Statistical power to detect the correct number of classes in latent profile analysi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0(4): 640-657.
- The Swedish National Board for Youth Affairs. 2010. *Youth and youth policy - A swedish*. https://www.youthpolicy.org/national/Sweden_2010_Youth_Policy_Summary.pdf(accessed June 9, 2022).
- Tinbergen, J. 1991. “On the measurement of welfare.” *Journal of Econometrics* 50: 7-13.
- Torney-Purta, J. and Barber, C. 2011. “Fostering young people’s support for participatory human rights through their developmental niche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81(4): 473-481.
- Twenge, J. M., Sherman, R. A. and Lyubomirsky, S. 2016. “More happiness for young people and less for mature adults: Time period differences in subjective well-being in the United States, 1972-2014.”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7(2): 131-141.
- Wu, Y., Qin, G., He, C. and Wang, W. 2021. “How Institutional Evaluation Bridges Uncertainty and Happiness: A Study of Young Chinese People.” *Frontiers in Psychology* 4436. (DOI: <https://www.frontiersin.org/articles/10.3389/fpsyg.2021.651844/full>).
- “국회미래연구원, 2021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주요 결과 발표: 전반적인 행복 수준은 전년도 보다 낮아지고 취약집단의 하락폭은 더 커.” 국회미래연구원 보도자료. 2022.2.7. <https://nafi.re.kr/new/press.do?mode=view&articleNo=3105&article.offset=0&articleLimit=10>(검색일: 2022년 4월 6일)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올해 충북도민 행복지수 62.8 역대 최고.” KBS NEWS. 2019.12.30.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352745>(검색일: 2022년 4월 13일)
- “지금 제주 청년들의 삶을 쥐고 흔드는 것은 무엇인가?” JUMP. 2018.5.16. <http://news.jejunu.ac.kr/news/articleView.html?idxno=12952>(검색일: 2022년 4월 13일)

- “8 REASONS WHY YOUNG PEOPLE ARE LESS HAPPY.” Leger, 2019.4.22.
<https://legerhappinessindex.com/articles/8-reasons-why-young-people-are-less-happy>(검색일: 2022년 4월 10일)
- “A portrait of Canadian youth,” Statistics Canada, 2018.2.7. <https://www150.statcan.gc.ca/n1/pub/11-631-x/11-631-x2018001-eng.htm>(검색일: 2022년 3월 25일)
- “POLITIQUE QUÉBÉCOISE DE LA JEUNESSE 2030.” Gouvernement du Québec, 2019.4.30. <https://www.jeunes.gouv.qc.ca/politique/index.asp>(검색일: 2022년 3월 25일)
- “Youth Engagement Strategy.” City of Toronto, n.d. <https://www.toronto.ca/city-government/planning-development/outreach-engagement/youth-engagement-strategy>(검색일: 2022년 3월 25일)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https://jumin.mois.go.kr>)

국 문 초 록

서울 청년의 행복격차:

잠재프로파일분석의 적용

이민주(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박민진(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원)

본 연구는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해 서울 청년의 행복 유형을 분류하여 그 유형별 특성과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 서울 청년들은 행복 수준에 따라 3개의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각 집단별 청년들은 인구 사회학적 특성의 차이가 있었다. 또한, 분류된 행복 집단을 바탕으로 청년들의 행복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사회학적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순서형 로짓 모형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청년의 개인 특성을 비롯하여 가구 특성, 주거 및 서울 거주 특성 등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청년세대의 행복격차를 확인하고, 행복 수준별 청년들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포착하기 위한 시도로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서울 청년의 행복 증진을 위해 청년 내에서도 보다 세분화된 도시정책 전개의 필요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주제어: 청년, MZ세대, 행복격차, 잠재프로파일분석, 순서형로짓분석

Abstract

The happiness gap between MZ generations:

Application of Latent Profile Analysis to the case of Seoul

Lee, Minju (Research fellow, Research Institut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Park, Minjin (Researcher, Department of Urban Society Research, The Seoul Institute)

This study aims to categorize the happiness group of Millennials and Generation Z (MZ Generations) and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each group. To do this, we employed Latent Profile Analysis (LPA) to classify happiness groups and explore each group's characteristics and influential factors. The happiness group is classified into three subgroups according to happiness level, and the MZ generations in each group have different sociological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In addition, we analyzed the influential factors that contribute to the happiness of MZ generations through an ordered logit model. The analysis of happiness influences confirms that household factors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such as age, marital status, and occupation affect young people's happiness levels.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calls for suitable urban policies to respond to various demands, considering young people's different sociological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Key words: Young people, MZ generations, happiness gap, Latent Profile Analysis, Ordered logistic analysis

시민들의 정부 대응성 인식이 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 인천광역시 도시환경과 환경 문제를 중심으로

왕혜진*

왕
혜
진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1. 정부신뢰의 개념
2. 지방정부 신뢰 영향요인 선행연구 검토
3. 환경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성과 지방정부 신뢰

III. 연구설계

1. 연구모형
2. 변수설정
3. 분석방법

IV. 분석 결과

1. 응답자의 특성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량
3.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V.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2. 제언

.....
* 인천대학교 행정학과 석박사통합과정(E-mail: wangwang@inu.ac.kr)
<http://doi.org/10.34165/urbanr.2022..21.273>

I. 서론

정부 정책은 개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인 정책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정부 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지만, 그중 정부신뢰는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순응을 끌어낸다(손호중 2016)는 점에서 활발히 연구되어왔다.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집행하는 정책에 대한 지지와 순응 대신 저항이 발생할 수 있고, 결국 정책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에 제대로 대응하기가 어려워진다. 즉, 국민의 정부신뢰는 국민의 저항을 줄이고 지지를 이끌어내 정책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선제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간의 정부신뢰 선행연구는 국민의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히는 데 주력해왔다. 그 결과, 정부성과(최지민·김순은 2014), 교량적 사회자본(서형준·명승환 2015), 정책수단, 정책산출(황창호 외 2015), 공익성, 전문성, 효율성 등 행정 가치(황창호 외b 2015) 청렴성, 공정성, 협력적 거버넌스(윤건·서정욱 2016), 전자정부에 대한 만족도(문승민·최선미 2018), 정책혜택 및 관료신뢰(임재훈·윤영채 2018)가 우리나라 국민의 정부신뢰 결정요인이라고 알려진 바 있다.

그런데 국내 선행연구는 주로 중앙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대상으로 진행되었기에(박희봉 외 2003; 이곤수·송건섭 2011; 손호중 2016), 상대적으로 지방정부 신뢰에 관한 연구는 미약한 실정이다. 중앙정부 신뢰와 지방정부 신뢰를 동시에 연구한 경우도 있으나(박희봉·이영란 2012; 황창호 외 2015; 최예나 2018), 그 수가 많지 않다. 이는 우리

나라의 중앙집권적 특징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김태형 외 2019).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신뢰는 둘 다 정부신뢰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정부는 국민에게 가장 가까운 정부로서, 국민에게 생활에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이승중 외 2013; 정명은 외 2014). 따라서, 국민이 정부에 직접 접촉한 경험이 지방정부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현승숙·이승중 2007). 또, 지방정부의 종류에 따라서도 신뢰 영향요인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민의 투표로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 경우는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 실질적인 결과물보다 더욱 중요할 가능성이 크다(정광호 외 2011). 또, 지역의 고유한 특성인 지방성도 간과할 수 없다(차재권·류태건 2018a). 이렇듯, 신뢰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는 신뢰의 대상과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 구성요소는 중앙정부 신뢰 구성요소와 달라야 한다(손호중 2016, 138).

또,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는 지방자치제도의 성숙과도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우리나라는 1995년에서야 지방자치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하여, 다른 나라에 비해 지방자치제도의 역사가 짧고 지방정부의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국민도 지방정부를 별개의 정부로 인식하기보다는 중앙정부 일부로, 혹은 중앙정부의 대리인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중앙-지방정부 간 관계는 주인-대리인 이론에 가깝다는 주장이 논의되어왔다(문유석 2015). 따라서, 성숙한 지방자치제도와 분권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는 구분되는 지방정부만의 고유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지방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이곤수·송건섭 2011; 김태형 외 2019). 지방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지방자치와 분권화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도 필수적이다. 기업 등 민간 영역이 수도권만큼 활발하지 않은 지방

에서는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최예나 2016). 이외에도,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는 해당 지역의 발전에 필요한 사회자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류태건·차재권 2020),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만족도와 지방정부 자체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이용되기도 한다(임동진 2010).

이처럼 지방정부 신뢰 연구가 필요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지방정부 신뢰가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방정부는 거시적인 국가정책을 담당하는 중앙정부와는 성격이 다르다. 앞서 언급했듯이, 지방정부는 국민에게 가장 가까운 정부로서,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실행하고 일상에서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이승종 외 2013; 정명은 외 2014). 그런데,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는 것은 지방정부가 주민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지방정부의 정책과 서비스가 주민의 삶에 긍정적이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은 주민의 저항을 야기할 수 있고, 주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 정책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되며 지역주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결국은 악순환이 반복된다.

그간 국내의 정부신뢰 선행연구는 주로 추상적인 공공가치나 정부행태, 정부 간 협력 등을 독립변수로 삼아 정부신뢰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앞서, 정부신뢰 연구의 목적 중 하나가 국민의 정책순응을 끌어내기 위한 점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구체적인 정책 분야에 대한 신뢰연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환경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냈으나,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발생한 각종 사회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특히, 환경 문제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그 중요성이 크다

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를 자랑하는 경제 규모와 K-POP으로 대표되는 문화적 역량으로 전 세계의 경제와 사회문화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나, 기후 위기를 비롯한 환경 분야에서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전 세계 국가 중 플라스틱 배출량 3위(연합뉴스 2021/12/2), 온실가스 배출량 7위(KBS 2020/12/7) 등 온갖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녹색성장, 문재인 정부에서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하는 등,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나름 노력을 해 왔으나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미세먼지, 폭염, 산불, 한파 등 국민의 일상에 악영향을 미치는 환경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또, 정부가 대응했다 하더라도 국민이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그런데, 환경 문제는 지리적 위치나 도시 혹은 농촌 지역인지에 따라 그 심각성과 문제의 종류가 다르다. 예를 들어, 도시인 서울에서는 미세먼지가 치명적인 환경 문제이지만, 강원도에서는 미세먼지보다는 산불이나 폭설이 더 위협할 수 있다. 이처럼 환경 문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응해야 하므로 중앙정부보다는 지역 실정에 특화된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즉, 지역의 환경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주민들의 삶에 대한 책임이 있는 지방정부의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Konisky et al. 2008). 따라서, 이 연구는 시민들의 환경 문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성 인식과 지방정부 신뢰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대응성은 행정이념 중 하나로서 정부가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지를 직접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국민의 정부신뢰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지만,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단독으로 연구된 적이 없다.

연구대상 지역으로는 인천시를 선정하였다. 이는 인천시의 환경 문

제가 심각한 점을 고려하였다. 인천광역시시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세종시와 서울시 다음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이다(환경부 2019). 이는 남동공단 등 인천지역 내에 있는 대규모 공장지대, 공장지대가 많은 중국 동부와 가까운 지리적 위치, 전국 광역시 중 서울과 부산 다음으로 많은 인구수(KOSIS 2022)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미세먼지와 더불어, 인천시의 수질도 논란을 빚은 적이 있었다. 지난 2019년과 2020년에 연달아 인천시 서구 지역을 시작으로 가정용 수도물에서 녹물과 벌레가 유출된 사건이 발생했다(인천일보 2020/12/2). 이렇듯 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환경 문제가 연달아 일어남에 따라 시 정부의 적절한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민들의 환경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성 인식과 지방정부 신뢰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2020 인천광역시 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본 연구는 그간 그 중요성과 영향력과 비교해 국내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시민들의 정부 대응성 인식과 지방정부 신뢰의 관계를 실증하는 데 의의가 있다. 두 변수 간의 유의미한 관계가 입증된다면 단순히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일깨워 지방정부 단위에서의 환경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또, 환경 문제의 종류에 따라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봄으로써, 인천시민들의 환경 문제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환경정책을 구상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정부신뢰의 개념

정부신뢰를 정의하기 이전에, 일반적인 신뢰 개념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신뢰라는 개념을 신뢰할 수 있는가(Gambetta 1988)?” 이 문장은 신뢰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신뢰, 정부 신뢰, 지방정부 신뢰 개념은 연구마다 다양하게 정의되기 때문에, 개념 정의가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최지민·김순은 2014; 정현·전희정 2017).

신뢰에 관한 해외연구의 정의를 살펴보면, Fukuyama(1995, 26)는 “신뢰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동체의 공유규범에 의거하여 규칙적이고, 정직하며 협력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의미한다”라고 정의했다. Mayer et al(1995, 712)에 따르면, 신뢰는 상대가 나에게 중요한 특정한 행위를 할 거라는 가정하에, 상대의 행동에 취약해짐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Fukuyama의 정의는 공동체 내에서 발생하는 관계에 적용되는 것이라면, Mayer의 정의는 개인 간 관계를 가정한 것으로 보인다.

Rousseau et al.(1998, 394)는 신뢰 개념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로 확신에 근거한 기대와 취약성에 대한 자발적 의지를 제시했는데, 이 특징은 신뢰의 유사개념과의 차이에서 더 두드러진다. 신뢰의 유사개념으로는 협력(cooperation), 자신감/확신(confidence), 예측 가능성(predictability) 등이 언급된다. Mayer et al.(1995)은 이 세 가지 개념과 신뢰의 차이점을 설명하였다. 첫 번째 유사개념인 협력과 신뢰와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신뢰는 협력을 끌어내지만, 필수조건은 아니다. 또한, 협력은 항상 위험을 동반하지는 않는다. 긍정적 혹은 부정적 원인

이 있으면 신뢰하지 않아도 사람들 간의 협력을 끌어내는 것이 가능하다. 두 번째 유사개념인 자신감/확신은 신뢰 개념에 필수적인 위험을 미리 인지하고 이를 수용하는 사전 관계(previous engagement)가 없다는 데서 신뢰와 다르다. 세 번째 유사개념인 예측 가능성은 취약성에 대한 자발적 의지를 내포하지 않는다.

이를 바탕으로 정리하자면, 신뢰는 상대가 어떻게 행동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그에 대해 기대하고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감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신뢰 개념은 그 자체가 신뢰받는 대상의 특징이 아니라, 신뢰받는 대상의 신뢰성에서 야기한 결과라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신뢰성은 (perceived) trustworthiness로 표현되는데, 신실성(integrity), 능력/역량(ability/competence), 선의(benevolence) 3개 요소가 이에 포함된다(Mayer et al. 1995; Grimmelikhuijsen and Knies 2017). 신실성(integrity)은 신뢰받는 사람이 신뢰하는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행동을 할 것이라는 인식을 의미하며, 능력(ability)은 특정 영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술, 역량, 그 외 특징을 말한다. 선의(benevolence)는 신뢰 관계에서 상대가 나에게 좋은 행동을 할 것이라는 믿음을 뜻한다. 신실성(integrity)은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초기에 중요하고, 이후에는 선의(benevolence)의 영향이 커진다. 따라서, 개인이 타인을 신뢰하는 정도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신뢰하는 사람(trustor)의 신뢰 경향과 그가 인지하는 신뢰받는 사람(trustee)의 신실성, 능력, 선의를 파악해야 한다. 이 3가지 요소가 신뢰수준을 결정하지만, 신뢰의 결과인 위험을 감수하는 태도(RTR: Risk Raking in Relationship)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신뢰수준은 당사자들의 상호작용에 따라 변화한다.

이를 정부신뢰에 적용해보면, 정부신뢰와 정부의 신뢰성은 다른 개념이며, 정부신뢰는 정부의 신뢰성이라는 특성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류태건·차재권 2020). 또, 신뢰 개념에는 위험과 상호의존성이 필수적으로 포함되는데, 따라서 국민이 정부를 신뢰한다는 의미는 정부가 어떤 행위를 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위험도 감수하는 것을 말하며, 국민과 정부는 서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내포한다(Grimmelikhuijsen and Knies 2017).

2. 지방정부 신뢰 영향요인 선행연구 검토

국내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지방정부 신뢰 영향요인은 크게 정부 내적 요인과 정부 외적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정부 내적 요인은 정부조직 요소들과 관련된 요인을 의미하며, 반면에 정부 외적 요인은 정부를 둘러싼 환경과 관련된 요인이다(류태건·차재권 2020). 이외에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신뢰의 영향요인을 동시에 연구한 사례가 몇몇 있다.

정부 내적 요인에 관한 연구로는 정부행태·정책지향(김관보 외 2013), 정부행태·공직자행태(손호중 2016), 정부성과·연계성·공직윤리(차재권·류태건 2018b), 정부역량·정부 간 협력(김태형 외 2019) 등이 있다. 김관보 외(2013)는 경기도민과 경기도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정부 신뢰 영향요인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정책지향과 정부행태요인이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정부신뢰는 정부행태와 함께 정책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호중(2016)은 지방정부 신뢰를 구성하는 요소를 알아내기 위해,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AHP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문가 집단별로 중시하는 요소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공무원 집단은 공직자행태를, 시민단체 종사자들은 정부행태와 정책지향을, 전문가 집단은 공무원 행태와 정부행태를 지방정부 신뢰를 향상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모든 집단에서 정부행태와 공직자행태가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재권·류태건(2018b)은 광주광역시를 사례로,

성과, 연계성, 공직윤리로 구성된 정부요인이 광역, 기초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과 그 차이를 분석하였다. 공직윤리는 광역, 기초지방자치단체 신뢰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성과는 기초지방자치단체보다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연계성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외적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는 주민접촉(현승숙·이승중 2007), 정보제공·행정서비스 만족도(박정호 2014), 지방정부서비스(이현국·김윤희 2014), 사회자본(최예나 2016), 미디어 이용(김정렬 2017), 공공가치(김이수 2018), 지역축제만족도(김세운 외 2020) 등이 지방정부 신뢰의 영향요인으로 연구되었다. 현승숙·이승중(2007)은 주민접촉을 전통적 접촉과 온라인 접촉으로 나누어, 이들이 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통적 접촉은 지방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온라인 접촉은 지방정부 신뢰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를 대상으로 진행한 박정호(2014)의 연구에서 지방정부의 정보제공과 행정서비스 만족도는 지방정부 신뢰를 향상시켰다. 이현국·김윤희(2014)의 연구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개별 정부서비스 성과 인식이 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시민들과의 소통, 주택가격 안정 및 주택공급, 취약계층 지원, 경찰(치안)서비스, 보행자길 관리, 실업 문제 및 경제 활성화 서비스에 대한 인식 순으로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예나(2016)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이 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주민들과 지방정부, 의회와의 소통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주민들과 지방정부, 의회의 소통은 사회적 자본과 지방정부 신뢰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었다. 사회적 자본은 지방정부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렬(2017)은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전통적인 인쇄 미디어 이용이 성과

인식, 투명성 인식, 공정성 인식을 통해 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미디어 이용은 투명성과 공정성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투명성과 공정성 인식은 모두 지방정부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 인식과 지방정부 신뢰에도 정(+)의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김세운·정현·정문기(2020)의 연구에서, 지역축제만족도와 지방정부 신뢰는 지역애착도를 매개로 하여 정(+)의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김이수(2018)는 정의, 민주성, 공동체성을 포함한 공공가치가 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정보 비대칭의 조절효과를 통해서 알아보았다. 그 결과, 정의(기회균등), 민주성(지방정부와 주민 간 소통, 공공서비스 만족도, 투명성), 공동체(지역소속감, 공동체 이익지향성)이 지방정부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주민들의 지방정부 사무에 대한 정보인지역량(분배지향성, 정보비대칭성)은 지방정부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주민들이 지방정부 사무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수록 지방정부 신뢰가 낮다는 의미이다. 마지막으로, 정보비대칭성은 공공가치와 지방정부 신뢰의 관계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중앙정부 신뢰와 지방정부 신뢰를 동시에 다룬 연구들이 있다. 윤건·서정욱(2016)의 연구에서는 사회통합과 관련된 요소들이 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 그 결과 청렴도가 중앙정부 신뢰와 지방정부 신뢰에 모두 가장 큰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가치와 정부신뢰의 관계를 알아본 최예나(2018)의 연구에서 공정성과 청렴성은 중앙정부 신뢰와 지방정부 신뢰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민주성은 중앙정부 신뢰에만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부역량과 정부 간 협력에 대한 인식을 독립변수로 선정한 김태형 외(2019)의 연구에서 중앙정부 신뢰에는 업무성

과, 관리역량, 청렴성, 공정성, 중앙부처 간 협력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에, 지방정부 신뢰에는 청렴성, 공정성, 지방정부 간 협력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은 중앙정부 신뢰와 지방정부 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차재권·류태건(2018a)의 연구는 대구광역시 시민들을 대상으로 중앙정부 신뢰와 지방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일반신뢰와 표출적 결사체, 지역경제는 중앙정부 신뢰와 지방정부 신뢰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중앙정부 신뢰에는 국가소속감과 지역 자긍심이, 지방정부 신뢰에는 특수신뢰, 비관습적 정치참여, 지역소속감과 주민 자긍심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중앙정부 신뢰와 지방정부 신뢰 영향요인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 지방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위에 서술한 바와 같이 다양한 주제로 연구되어왔다. 하지만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먼저 서론에도 언급했듯이, 많은 선행연구가 정부행태, 정부역량, 공직윤리, 공공가치 등의 추상적인 가치를 연구대상으로 삼았다(김관보 외 2013; 손호중 2016; 차재권·류태건 2018b; 김이수 2018; 최예나 2018). 정부서비스를 대상으로 연구한 경우, 행정서비스만족도를 독립변수로 삼아(박정호 2014) 분야별 정책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미진한 상태이다. 특히, 환경 분야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다고 봐도 무방하다. 기후변화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현재 상황과 매우 괴리가 있다. 또, 추상적인 가치 중에서도 정부의 대응성은 단독으로 연구된 적이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시민들의 환경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성 인식이 지방정부 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표 1] 정부신뢰 선행연구 요약

분류	영향요인	저자
정부 내적 요인	정부행태, 정책지향	김관보 외(2013)
	정부행태, 공직자행태	손호중(2016)
	정부성과, 연계성, 공직윤리	차재권·류태건(2018b)
	정부역량, 정부 간 협력	김태형 외(2019)
정부 외적 요인	주민접촉	현승숙·이승중(2007)
	정보제공, 행정서비스 만족도	박정호(2014)
	지방정부서비스	이현국·김윤호(2014)
	사회자본	최예나(2016)
	미디어 이용	김정렴(2017)
	공공가치	김이수(2018), 최예나(2018)
	지역축제만족도	김세운·정현·정문기(2020)

3. 환경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성과 지방정부 신뢰

일반적인 대응성 개념은 정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Saltzstein 1992), 이 논문에서는 정치적 대응성과 관료의 대응성을 비교하여 대응성을 정의하고자 한다. 먼저 정치적 대응성은 대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다(Saltzstein 1985). 정치적 대응성은 국민과 권위적 의사결정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선거, 정치적 결정에 대한 국민의 순응, 정부 지지 등에 영향을 미친다(Esaiasson and Wlezien 2017).

반면에, 관료 대응성의 개념에 대해서는 2가지 관점이 있다(Saltzstein 1985; 1992). 첫 번째 관점에서의 대응성은 다원론적 환경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관료가 국민의 합의, 협상 등에 따라 만들어진 정치적 의사결정에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관점은 정치행정이원론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관료는 과학적인 기준과 그들의 전문성 혹은 합리성에 근거하여

주(state)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판단을 내리고 행동한다. 이 관점의 차이는 행정 책임성의 대상의 차이에서 기원한다. 행정은 첫 번째 관점에서는 국민에게, 두 번째 관점에서는 투표로 선출된 관료에게 책임을 진다.

Saltzstein(1992)은 대응성을 대중의 소망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처럼 대응성은 국민이 정부에게 가지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국민을 위한 정부를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민주주의와도 관련이 있다(윤주명 2001). 대응성의 구성요소로는 속도와 정확성이 언급된다(Vigoda 2002). 이를 정부와 국민의 관계에 적용하면, 정확성은 정부가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뜻하며, 속도는 국민이 정부에게 요구를 한 뒤 이것이 충족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 정리하자면, 대응성이란 정부가 국민이 원하는 바를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정부신뢰 연구에서 대응성은 단독으로 연구되기보다는 상위개념의 구성요소로 다뤄졌다. 김현구 외(2009)의 연구에서 대응성은 요소신뢰의 하위개념인 정치역량의 하위구성요소로 포함되었다. 여기서 대응성은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거나 갈등을 조정하는 정부 기관의 역할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정치역량은 연구대상인 국민과 공직자 집단에서 가장 중요도가 낮게 평가되었다. 김관보 외(2013)는 대응성을 정책지향성 요인 중 하나로 간주하였다. 그 결과, 대응성을 포함한 정책지향성 요인은 정부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재권·류태건(2018b)의 연구에서 대응성은 연계성의 하위개념으로 포함되었다. 여기서 연계성은 시민과 정부 사이의 원활한 관계를 의미한다. 이 연구는 광주광역시를 대상으로 성과, 연계성, 공직윤리가 광역지방정부 신뢰와 기초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과 그 차이를 알아보았는데, 연계성은 광역지방정부 신뢰보다는 기초지방정부 신뢰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대응성을 정부신뢰 변수로서 단독으로 연구한 경우는 거의 없고, 환경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성을 분석한 국내 연구는 전무하다. 다만, 해외연구에서 몇 가지 사례를 찾을 수 있었다. Kentmen(2013)은 국민의 환경에 대한 우려를 지역 환경에 대한 우려와 글로벌 환경에 대한 우려로 나누어 정부신뢰와 관련이 있는지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글로벌 환경에 대한 우려는 국민의 정부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민이 글로벌 환경에 대해 더 걱정할수록 정부를 덜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 환경에 대한 우려는 정부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나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Walker & Hills(2014)의 연구는 종류별 환경위험에 대응하는 정부의 역량이 국민의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지 2005년에서 2008년 시기의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기질, 수질, 쓰레기 처리,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모두 낮고 안정적인 정부신뢰가 나타났다. 이는 연구의 시간적 범위인 2005년에서 2008년 동안 국민의 정부신뢰 수준에 큰 변동이 없었다는 의미이다. 다만, 지속가능한 발전 분야에서 신뢰수준이 가장 낮았다. 또, 홍콩 시민들의 정부신뢰 유형은 냉소적 또는 회의적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를 요약하자면, 환경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역량 등은 국민의 정부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또,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독립변수(가설 1, 가설 2) 외에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도시환경 수준을 독립변수로 추가하고자 한다(가설 3).

가설 1: 시민들의 환경 문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성 인식은 지방정부 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환경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는 지방정부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시민들이 체감하는 도시환경 수준은 지방정부 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먼저 가설 1의 독립변수는 선행연구와는 조금 다르다. 선행연구에서는 정부 대응성과 정부 신뢰의 관계를 알아보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정부 대응성 인식과 정부 신뢰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정부의 대응성은 정부가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충족시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정부가 어떤 문제에 대해 잘 대응하였는지 여부는 이 문제와 관련 있는 국민들의 의견을 통해 알 수 있다. 즉, 국민들이 정부의 대응성을 인식하는 지가 중요하다. 실제로, 선행연구에서는 연구대상 지역의 시민 혹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대응성을 측정하였다(김현구 외 2009; 김관보 외 2013; 차재권·류태건 2018b). 또한, 이 연구의 종속변수인 지방정부 신뢰와의 관계를 고려해보면, 정부가 어떤 문제에 대해 대응했다 하더라도 국민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면 국민의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무엇보다, 종속변수인 지방정부 신뢰 혹은 정부신뢰와 정부 대응성의 관계는 선행연구에서 이미 유의미하게 나타난 바 있다. 가설 3에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도시환경 수준을 독립변수로 포함하는 이유는 첫째, 시민들이 체감하는 도시환경 수준과 정부신뢰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검증하여 새로운 정부신뢰 요인을 탐색하기 위함이다. 둘째, 시민들이 체감하는 도시환경 수준은 시민들이 실제로 생활하는 지역 환경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도시계획, 도시재생 측면에서 지방정부가 어느 지역을 어떻게 정비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도시환경과 정부신뢰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난다면, 그 도시환경을 개선해야 할지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출지 판단할 수 있

다. 다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도시환경 수준은 정부신뢰 연구에서 독립변수로 포함된 적이 없어 학술적으로 정의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체감도 개념을 활용한 다른 분야의 연구들을 검토하여 시민들이 체감하는 도시환경 수준을 정의하고자 한다.

우선, 체감도라는 개념은 심리학, 간호학, 경영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데, 공통적으로 개인이 어떤 대상이 주는 자극을 인식하고 이를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반응한다는 의미를 가진다(Garner et al, 1956; McDonald 2011; Otara 2011). 행정 분야에서의 체감도는 정책을 실행하는 사람과 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람 사이의 인식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슈가 된다(최진옥 2008). 정책 결정자의 의도대로 정책이 실행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정책 대상이 정책을 어떻게 인지하는지를 파악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서 체감도는 다음과 같은 의미로 쓰였다.

지방정부의 성과체감도와 거주의사의 관계를 연구한 이석환 외(2011)는 성과체감도를 정부가 제공하는 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라고 정의하였다. 대기환경 체감지수의 개발을 논의한 김현구 외(2006)의 연구에서 대기환경 체감지수는 사람들이 느끼는 대기환경을 양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과학적인 지표로만 보일 수 있으나, 과학적 지표라 하더라도 개인의 주관성이 포함된 의미로 사용해야 한다고 언급되었다. 경찰에서 사용되는 체감안전도는 범죄두려움과 혼용되기도 하나, 범죄두려움은 범죄 외의 안전 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한계 때문에, 체감안전도는 시민들이 범죄두려움뿐만 아니라 다양한 안전요인들에 대해 인지하고 안전을 체감하는 정도로 정의된다(정철우·강소영 2014). 도시주거환경에 대한 체감도를 사용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도시주거환경에 대한 체감도는 주거환경, 근린환경, 인간관계, 가족관계 등에 대한 만족도이거나(Raymond 1986), 도

시 건축과 공간적 측면, 사회적 관계적 측면, 사회복지서비스 같은 기능적 측면과 삶의 속도와 같은 맥락적 측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등(Bonaiuto et al. 2015) 연구주제와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측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다른 체감도 또는 체감지수와 마찬가지로, 어떤 대상과 그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나타낸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종합하면, 체감도 혹은 체감지수는 체감의 대상과 이와 관련된 요소들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양적으로 나타낸 지표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도시환경 수준을 여러 가지 도시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Ⅲ. 연구설계

1. 연구모형

이 연구는 시민들의 환경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성 인식이 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독립변수로 시민들의 환경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성 인식 외에도,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시민들이 체감하는 도시환경 수준(대기, 수질, 토양, 소음진동, 녹지환경)과 환경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미세먼지, 기후변화, 수돗물)를 포함하였다.

이를 위해, 분석자료로 「2020 인천광역시 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2020 인천광역시 사회조사」는 인구, 건강, 가구와 가족,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주거와 교통, 교육, 안전, 환경, 사회통합 총 11개 분야의 16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천시 내 6,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총응답자 수는 12,619명이다(인천광역시 2021, 4~5).

2. 변수설정

종속변수는 기관 신뢰를 묻는 49번 문항의 하위 2번 문항인 광역지자체(인천광역시)에 대한 신뢰로 측정하였다. 49번 문항은 중앙정부, 광역지자체(인천광역시), 기초지자체(거주 구/군) 총 3개 기관에 대한 신뢰를 묻는다. 이 문항의 응답은 원래 “1=전혀 신뢰하지 않음 ~ 4=완전히 신뢰” 총 4개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이분형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4개 응답을 “0=신뢰하지 않음, 1=신뢰함” 2개 응답으로 재코딩하여 사용하였다.

독립변수인 시민들이 체감하는 도시환경 수준은 주변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묻는 35번 문항의 하위 5개 문항(대기, 수질, 토양, 소음진동, 녹지환경)으로, 환경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는 환경 문제에 대한 불안감을 묻는 36번 문항의 하위 3개 문항(미세먼지, 기후변화, 수돗물)으로 측정하였다. 환경 문제에 대한 불안감을 묻는 문항의 응답지는 원래 “1=전혀 불안하지 않다 ~ 5=매우 불안하다”로 설정되어 있었으나, 역문항이라고 판단하여 “1=매우 불안하다 ~ 5=전혀 불안하지 않다”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시민들의 환경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성 인식은 지역 환경의식 및 대처 수준 평가를 묻는 37번 문항의 2번째 하위 문항(인천시의 환경 문제 대응)으로 측정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성별, 연령, 학력, 혼인상태, 자치구가 포함되었고, 성별은 남성, 학력은 무학, 혼인상태는 배우자 있음, 응답자의 거주지는 서구가 준거집단인 더미 변수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측정하는 설문 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Chronbach's alpha 값은 .789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과학에서 일반적으로 준수하다고 여겨지는 .6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설문 문항의 신뢰성이 확보됐다고 말할 수 있다.

[표 2] 변수 측정

구분	변수		측정	척도
종속 변수	광역지자체 신뢰		49-2. 귀하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광역지자체	0=신뢰하지 않음, 1=신뢰함
독립 변수	시민들이 체감하는 도시환경 수준 (환경체감도)	대기	35-1~5.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동네)의 환경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곳에 ○표해 주십시오.	1. 매우 나쁘다 ~ 5. 매우 좋다
		수질	35-1~5.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동네)의 환경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곳에 ○표해 주십시오.	
		토양	35-1~5.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동네)의 환경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곳에 ○표해 주십시오.	
		소음진동	35-1~5.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동네)의 환경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곳에 ○표해 주십시오.	
		녹지환경	35-1~5.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동네)의 환경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곳에 ○표해 주십시오.	
	35-1~5.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동네)의 환경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곳에 ○표해 주십시오.			
	35-1~5.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동네)의 환경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곳에 ○표해 주십시오.			
	35-1~5.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동네)의 환경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곳에 ○표해 주십시오.			
	35-1~5.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동네)의 환경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곳에 ○표해 주십시오.			
	환경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 (환경우려)	미세먼지	36. 귀하는 우리 지역(구/군)의 현재 환경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불안을 느끼십니까?	
기후변화		36. 귀하는 우리 지역(구/군)의 현재 환경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불안을 느끼십니까?		
수돗물		36. 귀하는 우리 지역(구/군)의 현재 환경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불안을 느끼십니까?		
	시민들의 환경 문제에 대한 인천시 정부의 대응성 인식		37-2. 귀하는 평소 우리 지역(구/군)의 환경의식과 대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낮다 ~ 5. 매우 높다
통제 변수	성별		응답자의 성별	0=여성, 1=남성 (준거집단: 남성)
	연령		응답자의 연령	주관식 응답

구분	변수	측정	척도
통제 변수	학력	응답자의 학력	1=무학, 2=초등학교, 3=중학교, 4=고등학교, 5=대학교, 6=대학원 이상 (준거집단: 무학)
	혼인상태	응답자의 혼인상태	0=배우자 없음, 1=배우자 있음 (준거집단: 배우자 있음)
	거주지	응답자가 거주하는 구·군	1=중구 2=동구 3=연수구 4=남동구 5=부평구 6=계양구 7=서구 8=미추홀구 9=강화·옹진 (준거집단: 서구)

3. 분석방법

위에서 제시한 「2020 인천광역시 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종속변수가 두 개의 값을 가진 이분형, 범주형 자료일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종속변수가 이분형 자료인 경우에는 회귀분석을 시행하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하는 정규분포와 같은 가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분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김순귀 외 2008).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광역지 자체 신뢰는 “0=신뢰하지 않음, 1=신뢰함” 두 개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분석 방법으로 채택하였다.

IV. 분석 결과

1. 응답자의 특성

[표 3] 응답자의 특성

종류	구분	빈도(또는 평균)	비율(%)
성별	남성	6,149	48.7
	여성	6,470	51.3
연령		48.47(평균)	
학력	무학	67	0.5
	초등학교	379	3.0
	중학교	1,155	9.2
	고등학교	5,637	44.7
	대학교	5,306	42.0
	대학원 이상	75	0.6
혼인상태	배우자 없음	3,431	27.2
	배우자 있음	9,188	72.8
거주지(구/군)	중구	1,086	8.6
	동구	1,081	8.6
	미추홀구	1,369	10.8
	연수구	1,343	10.6
	남동구	1,468	11.6
	부평구	1,533	12.1
	계양구	1,281	10.2
	서구	1,579	12.5
	강화·옹진	1,879	14.9
	총합	12,619	100

먼저 응답자의 특성을 빈도 분석한 결과, 남성 6,149명, 여성은 6,470명으로 전체 응답자 중 여성 응답자의 수가 과반수인 51.3%를 차지했다. 연령은 연속형 자료로 입력되어 따로 범주를 정하지 않고 평균값을 구하였다. 전체 응답자 연령의 평균은 48.47세이다. 학력의 경우, 고등학

교가 5,637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으며 대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대학원 이상, 무학 순으로 응답 수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는 총 3,431명으로 전체의 27.2%를 차지하며,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는 9,188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72.8%가 이에 해당한다.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강화·옹진 14.9%, 서구 12.5%, 부평구 12.1%, 남동구 11.6%, 미추홀구 10.8%, 연수구 10.6%, 계양구 10.2%, 동구 8.6%, 중구 8.6%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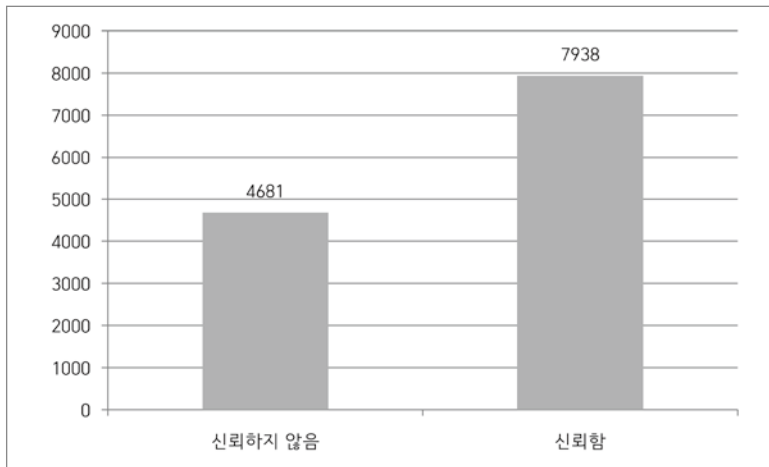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량은 [표 4]와 같다.

[표 4] 기술통계량

구분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종속변수	지방정부 신뢰	0.63	.483	0	1
독립변수	정부 대응성 인식	3.22	.805	1	5
	환경체감_대기	3.10	.868	1	5
	환경체감_수질	3.24	.878	1	5
	환경체감_토양	3.41	.834	1	5
	환경체감_소음진동	3.33	.876	1	5
	환경체감_녹지환경	3.54	.794	1	5
	환경우려_미세먼지	2.61	.774	1	5
	환경우려_기후변화	2.94	.853	1	5
	환경우려_수돗물	2.87	.863	1	5

종속변수인 지방정부 신뢰의 평균은 0.63으로 응답 척도가 “신뢰하지 않음=0, 신뢰함=1” 이분형인 것을 고려했을 때, 인천광역시 정부를 신뢰하는 시민의 수가 그렇지 않은 시민들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1]을 보면 신뢰하지 않음에 해당하는 응답은 4,681명, 신뢰함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7,938명으로 인천광역시 정부를 신뢰하는 시민의 수가 그렇지 않은 시민보다 많다. 주요 독립변수인 시민들의 환경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성 인식의 경우, 그 평균값이 3.22로 나타나 시민들은 인천시 정부가 환경 문제 대처 수준이 보통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변수의 응답 척도는 “1=매우 낮다 ~ 5=매우 높다” 이다. 환경 체감 변수는 녹지환경, 토양, 소음진동, 수질, 대기 순서로 평균값이 크다. 환경 체감 응답 척도는 “1=매우 나쁘다 ~ 5=매우 좋다” 이므로 시민들은 각 환경 수준이 대체로 보통보다 살짝 좋은 것으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환경우려의 경우 기후변화, 수돗물, 미세먼지 순서대로 수치가 크게 나왔는데, 응답 척도가 “1=매우 불안하다 ~5=전혀 불안하지 않다” 이므로, 시민들은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 약간 불안함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감이 셋 중에서 가장 크다.



[그림 1] 종속변수 응답 빈도

3.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표 5]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구분	변수	B	S.E.	Wald	자유도	유의확률	Exp(B)	Likelihood Estimate
독립 변수	정부 대응성 인식	.204	.027	57.202	1	.000	1.227	22.7
	환경 체감_ 대기	.150	.030	25.212	1	.000	1.162	16.2
	환경 체감_ 수질	.206	.030	48.156	1	.000	1.228	22.8
	환경 체감_ 토양	.064	.031	4.181	1	.041	1.066	6.6
	환경 체감도_ 소음진동	.228	.029	60.610	1	.000	1.256	25.6
	환경 체감도_ 녹지환경	.316	.032	97.009	1	.000	1.372	37.2
	환경우려_ 미세먼지	-.179	.031	32.444	1	.000	.836	-16.4
	환경우려_ 기후변화	.244	.029	69.690	1	.000	1.276	27.6
	환경우려_ 수돗물	.035	.029	1.405	1	.236	1.035	3.5
통제 변수	여성	.129	.040	10.619	1	.001	1.138	13.8
	연령	-.001	.002	.102	1	.750	.999	0.1
	중구	.160	.089	3.233	1	.072	1.174	17.4
	동구	.500	.088	32.272	1	.000	1.649	64.9
	연수구	1.268	.087	213.413	1	.000	3.555	255.5
	남동구	.696	.080	75.822	1	.000	2.006	100.6
	부평구	.664	.079	71.114	1	.000	1.943	94.3
	계양구	.945	.084	126.350	1	.000	2.574	157.4

구분	변수	B	S.E.	Wald	자유도	유의확률	Exp(B)	Likelihood Estimate
통제 변수	미추홀구	.911	.083	120.451	1	.000	2.487	148.7
	강화·옹진	.681	.082	68.285	1	.000	1.975	97.5
	초등학교	-.438	.356	1.517	1	.218	.645	-35.5
	중학교	-.949	.342	7.686	1	.006	.387	-61.3
	고등학교	-.838	.338	6.155	1	.013	.432	-56.8
	대학교	-.853	.341	6.273	1	.012	.426	-57.4
	대학원 이상	-.376	.431	.760	1	.383	.686	-31.4
	배우자 없음	-.019	.050	.151	1	.697	.981	-1.9
상수항		-3.494	.389	80.866	1	.000	.030	
-2LL=15067.269 Nagelkerke R ² =.160								

본 연구는 시민들의 환경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성 인식과 시민들이 체감하는 도시환경 수준, 환경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지방 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16%로 나타났으며 (Nagelkerke R²=.160), 독립변수 중에서는 환경불안_수돗물을 제외한 모든 독립변수가($p<.01$, 환경체감_토양은 $p<.05$), 통제변수 중에서는 여성($p<.01$), 거주지 중에서는 동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미추홀구, 강화·옹진($p<.01$), 학력 중에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집단($p<.05$)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서 각 변수의 Exp(B) 값과 1의 차이를 구한 뒤 100을 곱하여 Likelihood Estimate 값을 도출했다[$\{1-\text{Exp}(B)\} \times 100$]. 이를 해석하자면, 시민들의 정부 대응성 인식이 1단계 증가하면 지방정부를 신뢰할 가능성은 22.7% 증가한다. 마찬가지로, 나머지 독립변수들의 값이 1단계 증가하면 지방정부를 신뢰할 가능성은 환경체감_대기는 16.2%, 환경체감_수질은 22.8%, 환경체감_토양

은 6.6%, 환경체감_소음진동은 25.6%, 환경체감_녹지는 37.2%, 환경우려_기후변화는 27.6%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환경우려_미세먼지 독립 변수는 독립변수 중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값을 보였다. 이는, 시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감이 1단계 증가하면 지방정부를 신뢰할 가능성이 16.4%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통제변수들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지방정부를 신뢰할 가능성이 13.8% 더 증가하며, 거주지별로 살펴봤을 때, 준거집단인 서구에 비해 동구는 64.9%, 연수구는 255.5%로 약 2.5배, 남동구는 100.6%, 부평구는 94.3%, 계양구는 157.4%로 약 1.5배, 미추홀구는 148.7%, 강화·옹진은 97.5배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순서대로 나열하자면, 연수구가 약 2.5배로 준거집단인 서구에 비해 증가폭이 가장 크며, 그다음으로는 계양구, 미추홀구, 남동구, 강화·옹진, 부평구, 동구 순이다.

학력에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집단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 < .05$). 그런데 모든 집단이 마이너스(-)값을 보였다. 이를 해석하자면, 준거집단인 무학 집단과 비교해 지방정부를 신뢰할 가능성이 중학교 집단은 61.3%, 고등학교는 56.8%, 대학교는 57.4% 더 적다고 볼 수 있다. 모든 학력 집단 변수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는 않아서 학력과 지방정부 신뢰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V.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이 연구는 그간 국내 정부신뢰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시민들의 정부 대응성 인식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인천광역시와 인천시의 환

경 문제를 대상으로 알아보았다. 「2020 인천광역시 사회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주요 독립변수인 시민들이 인식하는 지방정부의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성 수준이 1단계 증가하면, 지방정부를 신뢰할 가능성이 2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민들이 지방정부가 환경 문제에 대해 대응한다고 인식할수록 지방정부를 신뢰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시민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환경 수준과 환경 문제에 대한 불안감 또한 지방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녹지, 소음 진동, 수질, 대기, 토양 순으로 시민들이 인식하는 환경 수준이 1단계 높아지면 지방정부를 신뢰할 가능성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의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 변수에서는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만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두 변수는 상반된 결과를 보인다. 먼저, 기후변화 변수는 시민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불안감이 1단계 증가하면 지방정부를 신뢰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변수들에 비해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박희봉·이영란(2012)의 연구에서 환경보호를 포함한 여러 행정서비스가 정부책임이라고 인식하는 경우 정부신뢰가 증가하고, 각종 사회적 문제에 대한 우려가 클수록 정부신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희봉·이영란(2012)은 이를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 정부를 신뢰하는 의미라고 해석한 바 있다. 이를 참고하여 연구결과를 해석하자면, 기후변화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개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를 문제라고 느낄지라도 개인이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가 이를 해결하리라 기대한 것이 정부신뢰 증가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미세먼지는 독립변수 중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값이 나왔다.

즉, 시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감이 1단계 증가하면 지방정부를 신뢰할 가능성이 16.4% 감소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미세먼지 문제가 지방정부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시민들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통제변수 중에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서구보다는 연수구, 계양구, 미추홀구, 남동구, 강화·옹진, 부평구, 동구 순서로 승산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점은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김이수(2018)의 연구에서 성별은 지방정부 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아예 통제변수 자체가 지방정부 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한다(김태형 외 2019). 반면에, 정광호 외(2011)의 연구에서 응답자가 남성일 경우 시군구청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력의 경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집단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집단에서 마이너스(-)값이 나왔다. 준거집단인 무학에 비해 학력이 높을수록 지방정부를 신뢰할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학력 집단이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응답자들의 학력과 지방정부 신뢰의 관계를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2. 제언

정부신뢰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촉발된 팬데믹의 영향으로 불안해진 현 상황에 더욱더 중요한 지표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손꼽을 정도의 높은 방역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와 국민이 한 마음으로 희생하며 애쓴 결과이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방역을 유지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그중에서도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신뢰할 만한 정부가 아니라면

결코 이런 결과를 성취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은 현재 진행형이기에 잠시라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여전히 정부신뢰는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위협을 받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방정부 신뢰에 대한 이론적, 정책적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이론적 측면에서 향후 정부신뢰 연구에서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정부신뢰 영향요인으로 대응성과 환경 관련 변수를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이 연구는 주요 독립변수인 시민들의 정부 대응성 인식이 지방정부 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그동안 국내 정부신뢰 연구에서 정부 대응성은 단독으로 다뤄진 바가 거의 없다. 마찬가지로 환경 관련 변수도 정부신뢰 연구뿐만 아니라 국내 행정학 연구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대응성과 환경 관련 변수는 모두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특히, 환경 관련 변수는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는 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좀 더 다양화, 구체화하여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전반적인 정부 대응성과 분야별 정부 대응성을 높여야 한다. 정부 대응성은 정부가 국민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에 대처하고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뜻하며 정부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이고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내 정부신뢰 연구에서 정부 대응성은 거의 다뤄지지 않은 변수이다. 국내 정부신뢰 연구에서는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연구대상을 불문하고 주로 추상적인 가치인 공의성, 전문성, 효율성, 청렴성, 공정성, 연계성, 공직윤리 등이 정부신뢰 영향요인으로 주목받았다(황창호 외b 2015; 윤건·서정욱 2016; 차재권·류태건 2018b). 정부 대응성은 국민의 일상에 피해를 미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의 행태를 나타내는 보다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히 연구되어야 한다. 또한, 연구에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정부 스스로 대응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현실을 고려할 때, 정부의 대응성은 앞으로 더욱더 중요한 정부신뢰 지표가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두 번째, 환경 문제에 대한 지방정부와 관련 단체들의 실질적이고 유효한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 환경 문제, 구체적으로는 시민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도시 내 환경의 수준과 환경 문제에 대한 불안감은 지방정부 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국민 소득 3만 달러, 경제 규모 10위, 세계 최고 수준의 코로나19 방역 등 여러 방면에서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으나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경제성장이 우선시되던 과거와 달리 어느 정도 국부를 달성한 지금은 더 이상 환경 문제를 등한시할 수 없다.

환경 문제에 있어서 인천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차별화된 특성이 있는데, 바로 송도국제도시에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을 유치한 것이다. 녹색기후기금은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기후 관련 기금이며 개발도상국들이 온실가스감축계획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GCF 2013). 그런데 녹색기후기금 유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되어 왔다. 왜냐하면 단순히 인천 관내에 환경 관련 국제기구를 유치한 것만으로는 환경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인천광역시시는 녹색기후기금 유치의 파급효과 중의 하나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환경 모범 국가가 되는 것을 제시하였는데(인천광역시 2022), 현재까지는 녹색기후기금 유치가 인천시와 우리나라 전체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유의미하게 이바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으로는 두 기관의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인천광역시를 넘어 우리나라 전체가 정말 환경 모범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정부신뢰의 종류는 주로 중앙정부 신뢰와 지방정부 신뢰 또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나뉘는데, 이를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제변수인 응답자가 거주하는 자치구별로 종속변수 변화량 차이가 큰 편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가장 종속변수 변화량이 가장 큰 연구구와 가장 작은 동구는 준거집단인 서구에 비해 지방정부를 신뢰할 가능성이 각각 255.5%, 64.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했듯이 국내 정부신뢰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중앙정부를 연구 대상으로 선택하였는데, 자치구 단위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을 고려하면, 정부신뢰를 단순히 중앙정부 신뢰, 지방정부 신뢰로만 연구할 것이 아니라 자치구 단위로도 세분화할 필요도 있다. 또, 환경 문제에 대한 시 차원의 대응도 시급하지만 동시에 자치구 단위에서의 적극적인 대응도 요구되는 바이다. 특히 환경 문제는 그 종류가 다양하고 지역별로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환경 문제는 특정 지역에서만 발생하기보다는 여러 지역에 걸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 정부와 자치구들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네 번째, 지방정부는 구체적인 환경 문제들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 따라 환경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녹지, 소음진동, 수질, 대기, 토양 순으로 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녹지 확보는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만드는 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시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이다. 인천시의 송도국제도시나 청라국제도시 등 도시계획에 근거해 만들어진 신도시에는 시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무료 공원을 거주지 근처에서 쉽게 접할 수 있지만, 동인천 등 구도시에서는 그렇지 않다. 인천시는 도시재생계획을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신도시와 구도시 사이의 편차가 큰 편이다. 소음진동 문제의 경우, 인천시 관내에는 남동공단, 인천항 등 공업지구와 인천공항, 지하철 수인

선 등 각종 인프라 시설이 도시 내에 꽤 큰 규모로 존재한다. 또, 도시개발로 인한 소음도 이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짐작되는 바이다. 하지만 현재 인천광역시 공식 웹사이트의 환경 페이지에는 GCF, 미세먼지오존, 물, 자연생태가 주요 세부 분야로 각자 개별 페이지를 갖고 있지만 소음진동은 자연생태의 세부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인천투데이(2019/3/5)의 보도에 따르면, 인천 내 도로변과 시민들이 생활하는 지역의 소음이 이미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생활지역의 소음이 다른 지역보다도 더 높다. 소음진동은 세부 항목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로 다뤄져야 할 것이다.

수질은 2019년과 2020년 인천시 서구에서 발생한 녹물과 유충 사건으로 인천시에서 특히 많이 논란이 됐던 문제이다. 다행히, 사건 이후 인천시는 최고 수질 등급을 유지하고 여러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꾸준한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대기는 인천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매년 심각한 수준의 미세먼지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미세먼지가 심각한 문제인 이유 중 하나는 해를 거듭할수록 이 문제가 더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인천시는 수도권 고농도 비상저감조치와 차량 운행 제한을 통해 이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미세먼지가 발생한 이후의 소극적 대처로 앞으로는 미세먼지 발생 자체를 억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환경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토양은 기본적인 삶의 터전이다. 토양 오염은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인천시의 인구는 약 300만 명 정도이며, 광역시 중 서울과 부산 다음으로 인구가 많다(KOSIS 2022). 따라서 공업용 쓰레기와 더불어 생활 쓰레기의 규모도 어마어마할 것이다. 공장지대와 각종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도 절대 간과할 수 없다. 또, 인천시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쓰레기 매립지인 서구 쓰레기 매립지가 있

다. 문제는 이곳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도 매립된다는 것이다. 서구 쓰레기 매립지는 이미 수용량이 한계에 다다랐으며, 2025년에 운영을 종료할 예정이다(한국경제 2020/10/25). 인천시는 서구 매립지를 사용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쓰레기 매립을 효과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또, 매립지를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재활용할 방법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이 연구는 2020년 단년도 자료만을 사용하고, 인천광역시의 사례만을 다룬 점, 그리고 종속변수인 지방정부 신뢰를 세분화하여 측정하지 않고 광역지자체에 대한 신뢰로만 측정하여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여러 기관에 대한 신뢰수준을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 인천광역시 정부를 구성하는 여러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를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못했지만, 인천시를 대상으로 정부신뢰를 처음 연구한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이 연구는 그동안 국내 정부신뢰 분야에서 거의 연구된 바 없는 시민들의 환경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성 인식과 시민들이 인식하는 환경수준, 시민들이 느끼는 환경 문제에 대한 불안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데 의의가 있다. 연구대상 지역인 인천시는 지방정부 신뢰 연구에서 한 번도 연구되지 않았던 지역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인천시는 우리나라 광역시 중 3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인구가 많은 만큼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만, 정부신뢰 연구뿐만 아니라 행정학 분야의 연구에서 인천시는 많이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는 다양한 분야에서 인천시 사례를 다루는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김관보·채경진·손호중. 2013. 「지방정부 신뢰와 정책순응: 경기도정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6(4): 267-287.
- 김세운·정현·정문기. 2020. 「지역축제만족도가 지역에착도와 지방정부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마산 국화 축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2(2): 31-58.
- 김순귀·정동빈·박영술. 2008. 『SPSS를 활용한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이해와 응용』, 서울: 한나래아카데미.
- 김정렬. 2016. 「지방자치단체 운영 미디어의 이용이 지방정부에 대한 인식과 신뢰에 미치는 영향」,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11(3): 36-67.
- 김정숙·황창호. 2021. 「행정이념에 대한 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정책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33(2): 283-307.
- 김태형·김한빛·문명재. 2019. 「정부의 역량과 정부간 협력에 대한 인식이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방행정학보 16(2): 1-36.
- 김현구·이승중·최도림. 2009. 「정부신뢰의 지표체계 개발 및 적용: 외부신뢰와 내부신뢰의 비교분석」, 행정논총 47(3): 1-24.
- 김현구·이영섭·구자문·고유나. 2006. 「사회통계조사에 의한 대기환경 체감지수의 개발」, 한국대기환경학회지 22(4): 421-430.
- 류태건·차재권. 2020. 「지방정부 신뢰의 주요 정부요인: 대전광역시 사례연구」, 한국행정학보 54(1): 111-141.
- 문승민·최선미. 2018. 「전자정부의 만족도가 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부역량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2(4): 119-149.
- 문유석. 2015. 「정부간 관계의 관점에서 본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 농정 분야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8(4): 393-416.
- 박정호. 2014. 「지방정부의 정보제공이 신뢰와 서비스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8(1): 291-313.
- 박희봉·이영란. 2012. 「시민문화와 정부정책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논집 24(4): 913-936.
- 박희봉·이희창·조연상. 2003. 「우리나라 정부신뢰 특성 및 영향 요인 분석」, 한국행정학보 37(3): 45-66.
- 서형준·명승환. 2015. 「사회자본과 정부신뢰의 관계 재조명」,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9(3): 1-31.

- 손호중. 2016. 「지방정부 신뢰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17:4: 135-154.
- 윤건·서정욱. 2016. 「사회통합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 한국조직학회보 13(3): 21-44.
- 이곤수·송건섭. 2011. 「지역주민의 삶의 질 인식과 지방정부 신뢰」. 한국행정논집 23(2): 487-509
- 이석환·김차희·조주연. 2011. 「지방정부의 성과체감도가 거주 의사에 미치는 영향 분석」. GRI 연구논총 13(3): 137-157
- 이수기·이윤성·이창관. 2014. 「보행자 연령대별 보행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로환경의 특성 분석」. 국토계획 49(8): 91-105.
- 이승중·기영화·김윤지·김남숙. 2013. 「커뮤니티웰빙 지표에 대한 공무원과 전문가의 평가 비교 연구」. 한국행정학보 47(2): 313-337.
- 이현국·김윤희. 2014. 「정부서비스 성과와 정부신뢰: 서울시 정부서비스를 대상으로」. 한국행정학보 48(4): 1-22.
- 인천광역시. 2021. 「2020 인천광역시 사회조사 보고서」.
- 임동진. 2010. 「중앙정부 성과관리에서의 만족도 조사 활용 실태 및 영향요인 분석: 만족도 담당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9(4): 503-549.
- 임재훈·윤영채. 2018. 「정부정책 만족도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관료신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27(1): 39-71.
- 정광호·이달곤·하혜수. 2011. 「지방정부 신뢰요인의 탐색」. 한국행정학보 45(4): 181-202.
- 정명은·김미현·장용석. 2014. 「서울시민의 행복과 사회자본 관계 분석: 행복한 시민, 따뜻한 지역공동체」. 서울시연구 15(1): 163-186.
- 정철우·강소영. 2014. 「체감안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13(4): 261-288.
- 정현·전희정. 2017.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인식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30(1): 141-161.
- 차재권·류태건. 2018a. 「중앙/지방정부 신뢰의 영향요인의 차이점-대구광역시 사례 연구」. 대한정치학회보 26(1): 81-107.
- 차재권·류태건. 2018b. 「지방정부 신뢰요인의 특성」. 한국동북아논총 23(1): 167-184
- 최예나. 2016. 「사회적 자본이 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 연구: 주민들과 선

- 출직 기관들간 소통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0(3): 69-88.
- 최예나. 2018. 「공공가치가 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 연구. 지방정부연구 22(2): 1-21.
- 최지민·김순은. 2014. 「개인 행복의 영향력을 고려한 정부성과와 정부신뢰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6(2): 29-57.
- 최진옥. 2008. 「참여정부 정부혁신 체감도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42(2): 97-117.
- 현승숙·이승중. 2007. 「주민접촉에 따른 지방정부 신뢰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9(4): 93-112.
- 황창호·김영주·문명재. 2015. 「행정가치에 대한 국민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보 49(4): 123-150.
- 황창호·김태형·문명재. 2015.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정책홍보, 정책수단, 정책산출에 대한 국민만족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545-561.
- Bonaiuto, M., Fornara, F., Alves, S., Ferreira, I., Mao, Y., Moffat, E., Piccinin, G., and Rahimi, L. 2015. "Urban environment and well-being: cross-cultural studies on Perceived Residential Environment Quality Indicators(PREQIs)." *Cognitive Processing* 16(S1): 165-169.
- Currie, R. F., and Thacker, C. 1986. "Quality of the urban environment as perceived by residents of slow and fast growth cit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8(1): 95-118.
- Esaiasson, P., and Wlezien, C. 2017. "Advances in the study of democratic responsiveness: An introduction."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50(6): 699-710. (DOI: <https://doi.org/10.1177/0010414016633226>)
- Fukuyama, F. 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Free press.
- Gambetta, D. 1988. *Trust: Making and breaking cooperative relations*. Oxford: Blackwell.
- Garner, W. R., Hake, H. W., and Eriksen, C. W. 1956. "Operationism and the concept of perception." *Psychological review* 63(3): 149-159.

(DOI: <https://doi.org/10.1037/h0042992>)

- Grimmelikhuijsen, S., and Knies, E. 2017. "Validating a scale for citizen trust in government organizations," *International Review of Administrative Sciences* 83(3): 583-601. (DOI: <https://doi.org/10.1177/0020852315585950>)
- Kentmen Cin, C. 2013. "Blaming the government for environmental problems: a multilevel and cross-nation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rust in government and local and global environmental concerns," *Environment and Behavior* 45(8): 971-992. (DOI: <https://doi.org/10.1177/0013916512453840>)
- Konisky, D. M., Milyo, J., and Richardson, L. E. 2008. "Environmental policy attitudes: Issues, geographical scale, and political trust," *Social Science Quarterly* 89(5): 1066-1085. (DOI: <https://doi.org/10.1111/j.1540-6237.2008.00574.x>)
- Mayer, R. C., Davis, J. H., and Schoorman, F. D. 1995. "An integrative model of organizational trus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0(3): 709-734. (DOI: <https://doi.org/10.5465/amr.1995.9508080335>)
- McDonald, S. M. 2011. "Perception: A concept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Knowledge* 23(1): 2-9. (DOI: <https://doi.org/10.1111/j.1744-618X.2011.01198.x>)
- Otara, A. 2011. "Perception: A guide for managers and leaders," *Journal of Management and Strategy* 2(3): 21-24. (DOI: [10.5430/jms.v2n3p21](https://doi.org/10.5430/jms.v2n3p21))
- Rousseau, D. M., Sitkin, S. B., Burt, R. S., and Camerer, C. 1998. "Not so different after all: A cross-discipline view of trus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3(3): 393-404. (DOI: <https://doi.org/10.5465/amr.1998.926617>)
- Saltzstein, G. H. 1985. "Conceptualizing bureaucratic responsiveness," *Administration & Society* 17(3): 283-306. (DOI: <https://doi.org/10.1177/009539978501700303>)
- Saltzstein, G. H. 1992. "Bureaucratic responsiveness: Conceptual issues and current research,"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2(1): 63-88. (DOI: <https://doi.org/10.1093/>

oxfordjournals.jpart.a037112)

Vigoda, E. 2002. "From responsiveness to collaboration: Governance, citizens, and the next gener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2(5): 527-540. (DOI: <https://doi.org/10.1111/1540-6210.00235>)

Walker, R. M., and Hills, P. 2014. "Changing dimensions of trust in government: An exploration in environmental policy in Hong Kong," *Public Administration and Development* 34(2): 123-136. (DOI: <https://doi.org/10.1002/pad.1677>)

“서울 쓰레기를 왜 인천에...문 닫겠다는 수도권 매립지 가보니.” 한국경제. 2020. 10.25.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20102329567>(검색일: 2021년 12월 16일)

“인천시민 일상적인 ‘환경소음’에 시달린다.” 인천투데이. 2019.3.5.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492>(검색일: 2021년 12월 23일)

“적수에 유충까지...인천시, 환경부 수도시설 평가서 ‘꼴찌’” 인천일보. 2020.12.2.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9788>(검색일: 2021년 10월 20일)

“탄소 불량국가’ 한국의 ‘내일 없는 경제?’” KBS. 2020.12.7.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65059>(검색일: 2021년 12월 16일)

“한국이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 세계 3위...연간 88kg.” 연합뉴스. 2021.12.2. <https://www.yna.co.kr/view/AKR202112020700000009>(검색일: 2021년 12월 16일)

“행정구역(시군구)별, 성별 인구수.” KOSIS. 2022.6.3.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A3&checkFlag=N (검색일: 2022년 6월 8일)

“GCF.” 인천광역시. 2022.5.4. <https://www.incheon.go.kr/env/ENV010102>(검색일: 2022년 6월 8일)

e-나라지표(<https://www.index.go.kr>)

녹색기후기금(<https://www.greenclimate.fund>)

국 문 초 록

시민들의 정부 대응성 인식이 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 인천광역시 도시환경과 환경 문제를 중심으로

왕혜진(인천대학교 행정학과 석박사통합과정)

정부신뢰는 정책성공의 조건으로 그 중요성이 크지만, 국내 정부신뢰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중앙정부와 추상적인 가치 위주로 연구를 수행한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시민들의 환경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성 인식이 지방정부 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대응성은 정부가 지향해야 할 가치이자 국민의 요구에 대한 정부의 반영 여부를 나타내기 때문에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단독으로 연구된 적이 없다. 분석 결과, 시민들의 정부 대응성 인식, 시민들이 체감하는 도시환경 수준(녹지, 대기, 토양, 소음진동), 환경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기후변화) 등이 1단계 증가할 때마다 지방정부를 신뢰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반면에,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이 1단계 증가하면 지방정부를 신뢰할 가능성이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단년도 자료만 사용한 한계가 있으나 국내 정부신뢰 연구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았던 정부 대응성을 정부신뢰 영향요인으로 실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인천광역시, 지방정부 신뢰, 정부 대응성, 환경 문제, 도시환경

Abstract

The Effect of Citizens' Perception of the Government's Responsiveness on Trust in Local Government: Focusing on the Urban Environment and Environmental Problems in the City of Incheon

Wang, Hye-jin (Ph. D. student,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Incheon National University)

Trust in government is often cited as important to policy success. Previous studies in South Korea have focused solely on the central government and abstract concepts, such as “equity” and “integrity”. In this study, I assess how citizens’ perceptions of local government responsiveness to environmental problems affect their levels of trust. Responsiveness has not been a focus of study despite a reasonable expectation that it will affect trust in government, and it is an administrative ideology that determines whether government actions reflect people’s needs. Using data from the 2020 Incheon Social Survey, I ran a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d found that citizens were more likely to trust government if their perception of its responsiveness with respect to aspects of the urban environment (greenspace, air quality, land use, noise levels) increased. Additionally, I found that the likelihood of trust increased when concerns about environmental problems (climate change) increased. Conversely, citizens were less likely to trust the local government if their concerns about specific

environmental problems (fine dust) increased. Although this study is limited because it draws from only a single year of data, I successfully show that citizens' perception of the government's responsiveness to environmental problems was a significant determinant of trust in government.

Key words: Incheon Metropolitan City, Trust in government, Responsiveness, Environmental problems, Urban environment

코로나 팬데믹 기간 인천시 가계부채 동향의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

서봉만**·최태림***·김다애****

서봉만 · 최태림 · 김다애

I. 서론

II. 가계부채 관련 연구동향

III. 코로나 팬데믹 기간 특·광역시 가계부채 동향

1. 전국 가계부채 동향
2. 특·광역시 가계부채 동향 비교

IV. 코로나 기간 인천시 가계부채 변동 특성

1. 인천시 차주의 연령별 가계부채 동향
2. 인천시 차주의 소득별 가계부채 동향
3. 인천시 자영업자 가계부채 동향

V. 코로나 기간 인천시 가계부채 상환위험 변화 분석

1. 인천시 가계부채 취약계층 추이
2. 인천시 고위험 대출 차주 비율 추이

VI. 인천시 가계부채 대응 정책 방향

VII. 결론

* 이 논문은 2021년 한국은행 인천본부의 외부연구용역사업(2021-9)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주저자 겸 교신저자(E-mail: bmseo@ii.re.kr, Tel: 032-260-2637)

***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공동저자

**** 한국은행 인천본부 기획조사팀 과장, 공동저자

<http://doi.org/10.34165/urbanr.2022..21.315>

투고(접수)일 2022.5.10. 심사(수정)일 2022.6.2. 게재확정일 2022.6.20.

I. 서론

2010년대 중반 급격한 증가세를 보인 가계부채는 2019년까지 증가율이 하락하면서 안정세를 보였지만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증가율이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거시경제의 불안 요소가 되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은 2019년 4분기 95.2%에서 2020년 4분기 102.8%로 높아졌는데 미국과 영국의 2020년 4분기 수치인 78.8%와 91.4%와 비교할 때 10%p 이상 높은 수치라는 점에서 관리가 필요한 수준이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1).

최근 가계부채 증가와 관련된 논의는 국가 차원에서 총량에 관한 관리와 함께 취약계층의 가계부채와 관련된 위험 요소의 점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노산하 2020; 정지수 2021). 국가 차원의 총량 관리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의 대출 총량에 관한 규제를 통해 진행되는데 하반기에 개별 금융기관들의 가계대출 관련 총량 관리가 추진되면서 실수요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개별 신용 수요자들에 대한 적절한 공급과 국가 수준의 총량 관리를 균형 있게 추구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아직은 효과적인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함께 지자체 차원에서 정책대응과 관련한 논의도 필요하다.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국가 차원의 가계부채 관련 정책은 신용 공급의 조절을 통한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지난 1년간 급등하는 자산시장과 관련된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고려할 때 중앙정부의 공급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동시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신용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에서 접근성의 제약을 체감하는 가계와 자영업자 대상 지원방안도 필요하다. 후자의 경우 개별 차주의 수요를 파악하고 유연하게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힘든 점이

있다. 따라서 지자체 차원에서 세밀한 행정을 통해서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지자체 차원에서 가계부채에 관한 연구는 한국은행 지역본부에서 진행된 사례들이 있는데 대체로 금융안정보고서 가계부문의 형식과 논의를 따르고 있다(강유진·이현우 2018; 강유진 2019; 한국은행 부산본부 2018). 정책적으로는 한국은행 지역본부 수행 연구들은 계층별 가구별 신용 공급의 관리를 통한 위험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대안적인 서민금융기관을 통한 저신용 가계 지원을 제안하는 연구도 존재한다(서봉만·정복용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한 인천시 가계부채 변동 상황의 특성을 분석하고 지자체 차원의 정책대응과 관련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관련 가계부채 연구 동향과 함께 가계부채 관련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대응 관련 논의를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3장은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자료를 활용하여 국내 가계부채 동향과 함께 특·광역시 가계부채의 비교 분석을 진행하고 인천시의 특성을 분석한다. 4장에서는 한국은행 가계부채 DB를 활용하여 인천시 차주의 연령, 소득 등 사회경제적 지위별 가계부채 변동과 인천시 자영업자 가계부채의 변동 특성을 살펴본다. 5장에서는 인천시 가계부채 상환위험의 변화를 가계부채 취약계층과 고위험 대출에 초점을 맞춰 분석한다. 6장에서는 가계대출 동향 특성에 따른 인천시의 정책대응과 관련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도출한다.

II. 가계부채 관련 연구동향

코로나 이전 가계부채 위험에 관한 연구들은 2010년대 중반 가계부채의 연평균 증가율이 2년 연속 11%를 초과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한국은행 지역본부에서 지역별 가계부채 현황과 상환능력 측정을 통한 취약계층의 규정과 관리방안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한국은행 대전본부 2018; 강유진 2019; 한국은행 부산본부 2018). 이외에도 박연우·허석균(2018)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해 가계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규명하고 DTI(Debt-to-Income)¹⁾가 위험 수준에 있는 취약계층의 신용위험에 관한 스트레스를 진단하였다. 상기한 연구들의 공통점은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DSR(Debt Service Ratio)²⁾, DTA(Debt-to-Asset)³⁾, DTI 등 부채 상환능력을 측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취약계층들의 관리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초점을 둔 것이다. 더 나아가 가계부채 상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진단을 통해 경제적 충격에 따른 채무 부담의 증가와 잠재적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규모 등을 산출한 연구들도 존재한다(박연우·허석균 2018; 강유진 2019). 상기한 연구들은 가계부채의 증가로 인한 상환 부담이 커졌지만, 거시 경제적 관점에서 부실 위험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코로나 팬데믹이 가계부채에 미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 첫 번째 연구들은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를 중심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내 가계부채 상황에 관한 전반적인 분석과 함께 잠재적인 부채상환 취약그룹에 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위험관리와 지원방안을

1) 차주의 부채와 소득의 비율(=Debt/Income)

2) 차주의 연간소득 중 원리금 상환에 소요되는 비율

3) 차주의 부채와 자산의 비율(=Debt/Asset)

논의한다. 코로나 팬데믹의 초기인 2020년 6월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실업 충격은 임시일용직 노동자에게, 매출 감소 충격은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자영업자에게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하였다(한국은행 2020a). 노산하(2020)는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취약가구(저소득, 자영업자, 임시일용근로자, 고연령층) 상환 리스크에 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자영업자와 임시일용근로자 가구가 저소득과 고연령층 대비 경제적 충격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소득층이 다른 취약가구에 비해 내성이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는 현안 분석을 통해 차주의 나이와 소득별 가계부채 현황과 함께 차주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부채 상환능력을 검토하였다(한국은행 2020b). 분석 결과 소득별로는 중소득 차주의 부채 비중이 높아졌으며, 연령대로 보면 30대 이하와 60대 이상 차주의 부채 비중이 늘었다. 보고서는 가계부채 규모의 빠른 증가세로 인해 소득-대비-대출(LTI)은 상승하였지만, 낮은 금리 등으로 인해 소득-대비-원리금 상환비율(DSR)과 연체율 등은 개선되어서 시스템 차원에서의 위험은 관리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동 보고서는 청년층의 가계부채 증가세에 관한 별도의 분석자료를 제공하는데, 청년층은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하는 주택 관련 대출과 주식 투자자금 조달을 위한 신용대출을 동시에 활용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하지만 채무상환 위험 관련 지표들(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 취약차주의 비중, 저소득, 저신용 청년 차주의 비율, 연체율)이 하락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안정성을 유지한다고 평가하였다.

코로나 팬데믹이 1년 이상 계속되면서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 혹은 저소득 차주인 취약차주에 관한 위험관리가 주요 정책과제로 부상하였다(한국은행 2021). 2021년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기존 정책당국의 조치들이 부실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한 채 단순히 지연시키는 효과만 있었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담은 것이다. 기준금리 인하, 원리금 상환유예 그리고 재난지원금 지급 등이 차주의 부실위험을 지연시키면서 연체율을 낮추는 효과는 있었지만, 비은행권 대출차주⁴⁾, 청년층 차주 그리고 자영업자 차주 등의 부실위험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 차주의 잠재된 부실위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한국은행 2021).

가계부채의 취약성이 높은 자영업자의 소득, 업종, 지역별 대출 변동의 특성을 분석하고 맞춤형 정책 대응의 필요성을 지적한 점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한국은행 2021).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는 1분위와 2분위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여가 서비스업 등에서 대출 증가율이 높았다.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는 확산이 집중된 수도권과 관광산업 의존도가 높은 강원도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자영업자 대출이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 2분기 이후에는 자영업자 신규 차주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3분기를 기점으로 자영업자들의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대부업 대출 등 고금리대출이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그 결과 2020년 하반기 이후 자영업자 대출은 양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부채의 질은 악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런데도 신규대출의 증가와 정부의 원리금 상환유예 시행 등으로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낮게 유지되는 아이러리한 현상이 나타났다(한국은행 2021).

두 번째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가계부채 동향 관련 정책 연구들이 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2019년까지 성장률이 감소하면서 하향 안정세를 보이던 가계부채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활동의 지장에 따른 가계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확장 금융과 통화정책 그리고 주

4) 비은행권 대출 차주들은 금리가 낮은 은행 대출 대신 저축은행이나 상호신용기관 등을 통해 중금리나 고금리 대출에 의존해야 하는 서민들과 금융소외계층들을 주로 포함한다.

식과 부동산 시장 상승에 투자하는 수요 확대가 맞물리면서 증가세로 전환하였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1). 현재 중앙정부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는 신용 공급의 조절을 통한 주택 가격의 안정과 자산 가격의 변동성 확대에 따른 가계의 부실 위험 관리 등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다. 중앙정부가 가계부채 총량 목표를 설정하고 금융기관별로 대출 규제를 통한 총량 관리를 시행하는 방식이다.

2021년 4월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기본 방침은 거시적으로는 ‘가계부채 총량의 안정적 관리’를 지향하고 미시적으로는 ‘차주 상환능력 범위 내 가계대출 취급 관행 정착’이라는 목표로 요약될 수 있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1). 거시 차원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핵심은 증가율의 목표를 설정하고 금융기관들이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미시 차원에서는 기존 금융기관별 DSR 규제를 2023년 7월 차주 단위 DSR 규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외에도 관리 취약부문에 해당하는 비주택담보 대출 관련 관행 개선과 서민과 청년층 대상 주거 마련을 위한 대출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중앙정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취약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재기 지원도 시행하고 있다.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 금융권이 원금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유예를 시행하였고 소득 감소로 신용위험에 처한 취약 개인 채무자에 대해서는 원금상환유예, 원금감면, 채권추심유보 등 연체방지, 재기 지원, 과잉 추심 방지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노산하 2020)

상기한 중앙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와 지원방안은 신용 공급의 관리에 초점을 두고 총량의 관리와 함께 소상공인과 취약 개인 채무자의 부채상환 유예를 통한 신용 공급의 연장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신용 수요자인 가계가 신용 수요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가계부채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기존 문헌에서 논의된 지자체 차원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지역별 차별성과 지역밀착형 접근에 초점을 둔다. 한국은행(2021)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자영업자 대출 변동이 업종, 소득, 지역별 특성과 관련이 있으므로 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다시 말하면 코로나 팬데믹의 경제적 충격이 지역마다 차별적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지자체가 중앙정부보다 더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자체는 한계가구 혹은 부채상환 취약가구 대상 실태조사를 통해 사각지대를 파악하여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데,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복지사업과 연계한 접근이 가능하다. 박희석·정현철(2019)은 저소득층 중 가계부채가 생계를 위협하는 한계가구 대상 지원은 복지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는 공공 일자리 제공 프로그램과 연계한 지원을 통해 한계가구의 소득 창출과 함께 가계부채 관리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유영성(2017)은 경기도 저소득층 60대 이상 가구들은 '의료비 마련' 등 생활비 대출로 인한 가계부채 발생 빈도가 높은 점을 지적하면서 의료복지 체계와 연계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의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한 영업활동의 제한으로 자영업자 가계부채는 지자체의 부실위험 중점 관리 대상이 되었다. 중앙정부는 부채상환 유예 및 저금리 신용 공급 등을 통해 현재까지는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해 왔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 자영업 매출의 증가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과 함께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단기적인 경영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저금리 혹은 무이자

대출 등 추가적인 부채상환 부담의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⁵⁾ 효율적인 신용 공급을 위해서는 지자체 단위에서 운영되고 있는 신용보증재단과 지자체 간의 협업이 필요하다(박희석·정현철 2019).

지자체 차원에서 신용 공급은 기존 금융시스템이 아닌 지역 기반 마이크로크레딧 기관을 통한 관계형 밀착금융 서비스와 연계해서 진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서봉만·정복용 2014; 유영성 2017; 이상훈 2019).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통해 가계부채 취약계층 대상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과 대출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진행하고 개별 취약계층과 마이크로크레딧 서비스 제공자 간의 관계형 서비스를 통해 적절한 신용 수요를 찾아서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서봉만·정복용 2014).

Ⅲ. 코로나 팬데믹 기간 특·광역시 가계부채 동향

본 장에서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가계대출 자료를 활용하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전국과 7대 특·광역시 가계부채 동향을 비교·분석하고, 인천시의 특성을 밝혀내고자 한다.

1. 전국 가계부채 동향

코로나 팬데믹 기간 전국 가계부채는 분기당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3.1%까지 증가하였고 지난 1년간 2020년 1분기 대비 약 9.4%, 103조가 증가하였다. 2020년 4사 분기에 가장 높은 3.1%의 증가율을 보였다.

가계부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은 2020년 1분기

5) 물론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한 자영업자들 대상 중앙정부의 손실보상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손실보상 논의는 본 연구의 논점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생략한다.

에 가장 낮은 0.9% 증가율을 기록한 이후 상승세를 유지하였으며 2020년 3분기에는 가장 높은 2.7% 증가율을 보였다. 동 기간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매매 수요의 급증에 기인한다.

중앙정부는 주택매매 수요를 진정시키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를 강화하였는데, 주택구매를 위한 신용대출이 확대되는 일종의 풍선효과를 초래하였다. 그 결과 신용대출을 포함하는 기타대출이 코로나 팬데믹 1년 간 10.3%나 증가하였다. 특히 2020년 3, 4분기 동안에 가계 기타대출은 각각 3.5%와 3.6%를 기록하며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율을 추월하였다.

코로나 팬데믹 1년간 주택담보대출은 약 56조 6천억 원 증가하였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약 46조 7천억 원 증가하였다. 한국은행(2021, 27)은 고신용자 신용대출이 주택 가격이 상승한 지역에서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신용대출과 증권사 고객예탁금 증가액이 유사한 흐름을 보인 것을 근거로 신용대출의 상당 부분이 자산시장 투자로 이어졌을

[표 1] 코로나 팬데믹 기간 전국 가계부채 동향

분기	가계부채총액		주택담보대출		기타대출(신용대출 등)	
	금액(십억 원)	전분기 대비 증감률	금액(십억 원)	전분기 대비 증감률	금액(십억 원)	전분기 대비 증감률
2019Q4	1,083,982.0		633,745.4		450,236.6	
2020Q1 (a)	1,094,531.7	1.0%	639,598.1	0.9%	454,933.6	1.0%
2020Q2	1,109,118.1	1.3%	648,637.7	1.4%	460,480.4	1.2%
2020Q3	1,138,181.0	2.6%	661,496.1	2.0%	476,684.9	3.5%
2020Q4	1,173,695.4	3.1%	679,641.6	2.7%	494,053.8	3.6%
2021Q1 (b)	1,197,922.7	2.1%	696,280.0	2.4%	501,642.7	1.5%
코로나 기간 변동	b - a = 103,391.0	(b-a)/a= 9.4%	b-a= 56,681.9	(b-a)/a= 8.9%	b - a = 46,709.1	(b-a)/a= 10.3%

자료(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것으로 진단한다. 따라서 가계부채에서 신용대출의 비중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족한 주택 구매 자금 마련을 위한 대안적인 통로로 신용대출을 활용한 요인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충하기 위해서 신용대출 수요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특·광역시 가계부채 동향 비교

1) 대출유형별 동향

코로나 팬데믹 기간 7대 특·광역시의 가계부채 증가율을 살펴보면 인천시는 총 대출액과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에서 울산시 다음으로 낮았으며, 신용대출을 포함하는 기타대출에서는 7대 도시 중 중간 수준의 증가율을 보였다.

[표 2] 코로나 팬데믹 기간 7대 특·광역시 가계부채 유형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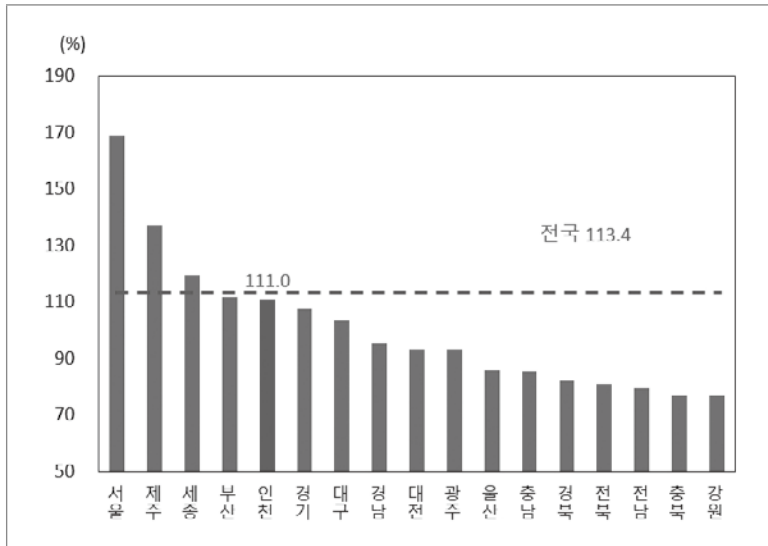
도시	합계	주택담보대출		기타대출(신용대출 등)	
	증가율	금액(십억 원)	증가율	금액(십억 원)	증가율
서울	13.6%	24,136.1	12.2%	20,646.0	15.6%
부산	10.9%	5,197.2	11.2%	2,049.6	10.3%
대구	11.0%	3,068.4	10.8%	1,755.8	11.3%
인천	8.5%	3,402.9	8.2%	1,586.8	9.2%
광주	11.0%	2,022.4	12.5%	827.9	8.4%
대전	8.5%	1,422.7	9.2%	838.5	7.6%
울산	3.8%	299.2	2.7%	520.1	5.0%
전국	9.4%	56,681.9	8.9%	46,709.1	10.3%

자료(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인천시의 낮은 부채증가율은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 인천시 가계의 대출 여력이 타 도시에 비해 낮아서 부채증가를 억제하는 효

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인천시는 2020년 기준으로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에서 특·광역시 중 3번째로 높게 나타나 소득 대비 부채상환 부담이 높은 편이다(김다애 2022). 따라서 인천시 가계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소득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이러한 상황이 부채증가율을 낮게 유지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가계부채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또다른 이유는 인천지역 주택가격 상승기가 상대적으로 늦은 2021년 1분기 이후 시작되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는 수도권에 위치하면서도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전국평균 수준을 하회하는 8.2%를 기록했는데, 이는 인천광역시 주택 가격 상승기가 2021년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주된 이유라고 판단된다. 인천광역시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2020



[그림 1] 지역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2020년 기준)

자료(출처): 김다애 2022)

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전국평균 이하였는데 2021년 2월부터 2021년 7월까지의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⁶⁾

7대 특·광역시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증가율은 다소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도시별 주택시장 동향과 산업 구성 특성과 관련이 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지역별로 주택가격 동향과 고신용 신용대출 간의 높은 상관관계가 형성되고 있으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신용 수요도 지역별 자영업자 비율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등에 의해 차별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밝혀졌다(한국은행 2020a; 2021).

[표 3] 특·광역시 주택매매 가격 증감 추이

구분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0.10	'20.11	'20.12	'21.1	'21.2	'21.3
전국	0.54	0.27	0.14	0.41	0.61	0.47	0.42	0.32	0.54	0.90	0.79	0.89	0.74
서울	0.13	-0.02	-0.09	0.13	0.71	0.42	0.27	0.16	0.17	0.26	0.40	0.51	0.38
부산	0.03	-0.05	-0.01	0.06	0.57	0.46	0.55	0.49	1.28	2.12	1.34	0.99	0.66
대구	0.06	-0.12	0.00	0.22	0.26	0.48	0.72	0.75	1.06	1.59	1.15	1.30	1.11
인천	1.61	1.05	0.59	0.77	0.47	0.19	0.21	0.21	0.42	0.48	0.72	1.16	1.31
광주	0.08	0.03	-0.01	-0.01	0.04	0.07	0.10	0.09	0.23	1.08	0.57	0.40	0.34
대전	1.30	0.89	0.43	2.19	0.82	0.75	1.19	0.81	1.02	1.41	1.15	1.26	1.18
울산	0.37	0.15	0.10	0.28	0.45	0.43	0.61	0.62	1.08	2.54	1.52	0.85	0.47

자료(출처): 국가통계포털

2) 업권별 동향

7대 특·광역시별 가계대출 증가추세를 은행권과 비은행권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비은행권 대출의 증가율은 6.4%에 그쳐서 은행권의 13.6%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비은행권 대출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서울

6) 인천시 가계부채의 낮은 증가율에 대해서는 4장 3절의 논의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시는 12%를 기록한 반면 대구시와 울산시의 경우 비은행권 대출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특·광역시 업권별 가계대출 동향

(단위: 십억 원)

구분		2020Q1	2021Q1	증감액	증감률
가계대출 총계	인천	58,681.0	63,670.7	4,989.7	8.5%
	서울	330,397.8	375,179.8	44,782.0	13.6%
	부산	66,367.0	73,613.8	7,246.8	10.9%
	대구	43,916.3	48,740.5	4,824.2	11.0%
	광주	25,927.1	28,777.5	2,850.4	11.0%
	대전	26,573.1	28,834.2	2,261.1	8.5%
	울산	21,498.2	22,317.5	819.3	3.8%
	특·광역시 총계	573,360.5	641,134.0	67,773.5	11.8%
	전국 총계	1,094,531.8	1,197,922.8	103,391.0	9.4%
은행권	인천	46,234.9	50,333.9	4,099.0	8.9%
	서울	284,821.7	324,146.7	39,325.0	13.8%
	부산	53,216.4	59,880.1	6,663.7	12.5%
	대구	31,250.1	36,296.0	5,045.9	16.1%
	광주	16,623.4	19,106.1	2,482.7	14.9%
	대전	17,567.7	19,705.7	2,138.0	12.2%
	울산	12,099.2	12,987.0	887.8	7.3%
	특·광역시 총계	415,578.5	472,121.6	56,543.1	13.6%
	전국 총계	780,604.9	868,519.9	87,915.0	11.3%
비은행권	인천	12,446.1	13,336.8	890.7	7.2%
	서울	45,576.1	51,033.1	5,457.0	12.0%
	부산	13,150.6	13,733.7	583.1	4.4%
	대구	12,666.2	12,444.5	-221.7	-1.8%
	광주	9,303.7	9,671.4	367.7	4.0%
	대전	9,005.4	9,128.5	123.1	1.4%
	울산	9,399.0	9,330.5	-68.5	-0.7%
	특·광역시 총계	111,547.1	118,678.5	7,131.4	6.4%
	전국 총계	313,926.9	329,402.9	15,476.0	4.9%

자료(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인천시의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은 8.9%로 7대 특·광역시 중 2번째로 낮은 수준이지만, 비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은 7.2%로 서울특별시 다음으로 높았다. 비은행권 가계대출은 은행권 대출 대비 이자 부담이 높고 변동성도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천시 가계의 높은 비은행권 대출증가율은 이자상환 부담의 증가를 초래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천시의 경우 가계부채 총액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되어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비은행권 가계대출의 높은 증가율에 대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IV. 코로나 기간 인천시 가계부채 변동 특성

본 장에서는 한국은행 가계부채DB를 활용하여 개인 차주의 연령, 소득, 자영업 종사 여부 등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가계부채 동향을 분석하였다.⁷⁾ 한국은행 가계부채DB는 국내 전체 신용활동인구의 약 2.4%에 해당하는 표본인구(약 100만명)의 개인별 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로부터 분기별로 수집하여 축적한 패널DB이다. 가계부채DB는 연령, 거주지, 신용등급, 소득수준 등 개인별 고유 특성정보, 대출, 신용카드 사용 실적 등 금융거래정보, 연체, 세금체납, 채무불이행 등 신용도 관련 정보 등을 수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 차주 표본의 2019년 1분기, 2020년 1분기 그리고 2021년 1분기의 가계부채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가계부채 변동을 살펴보았다.⁸⁾

7) 한국은행 가계부채DB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자료를 참조. 김미라·김성준·박현서, 2018, 「가계부채DB의 이해와 활용」,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72(9).

8) 4장과 5장에서는 동일 차주들의 코로나 발생 이후 1년간 가계부채의 상대적인 변화에 분석의 초점을 두었으며, 절대적인 부채 증감액은 전체적인 부채 동향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

1. 인천시 차주의 연령별 가계부채 동향

본 연구에 포함된 차주의 연령별 분포는 아래표와 같이 연령대별로 20% 전후 수준으로 균등하게 조정되었다. 60대와 70대는 은퇴와 함께 상대적으로 신용시장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합쳐서 전국은 24~5% 그리고 인천은 19~21%가 포함되었다.

[표 5] 연령별 차주 분포

(단위: 명, %)

연령별	전국				인천			
	2020Q1		2021Q1		2020Q1		2021Q1	
20	216,063	19.4	202,577	18.0	11,454	20.9	10,729	19.5
30	195,897	17.6	197,311	17.5	10,311	18.8	10,152	18.4
40	211,653	19.0	214,141	19.0	11,001	20.1	11,160	20.3
50	218,325	19.6	223,053	19.8	11,314	20.6	11,515	20.9
60	159,868	14.3	166,836	14.8	7,313	13.3	7,706	14.0
70	113,200	10.2	123,452	11.0	3,457	6.3	3,841	7.0
소계	1,115,006	100.0	1,127,370	100.0	54,850	100.0	55,103	100.0

자료(출처): 한국은행 가계부채DB

코로나 팬데믹 기간 인천시 가계부채 증가율을 연령별로 비교하면 20대가 16.6%를 기록했는데 이는 인천시 평균 증가율(8.2%)의 약 2배에 해당한다. 하지만 20대의 부채 증가율과 증가액은 코로나 직전 1년과 비교할 때 오히려 감소하였는데 이는 청년 고용률이 1.9%p 감소하면서 대출 여력이 줄어든 결과로 추정된다. 20대의 경우 자산을 축적한 장년층과 달리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매매시장 참여가 쉽지 않은 점도 부채 증가액 감소에 이바지하였다(표 9 참조). 인천시 20대의 부채 증가율이 전국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표 6] 코로나 팬데믹 전후 청년층 고용률 변화

연령	2019		2020		2021	
	취업자 수 (천 명)	고용률 (%)	취업자 수 (천 명)	고용률 (%)	취업자 수 (천 명)	고용률 (%)
계	592	62.1	561	60.2	555	61.3
15 - 19세	14	9.5	9	6.5	9	6.8
20 - 29세	238	64.5	229	62.2	223	61.6
30 - 39세	340	78.0	323	76.0	323	78.6

자료(출처): 국가통계포털

[표 7] 코로나 팬데믹 전후 인천시 연령별 가계부채 총액 동향

연령대	전국				인천			
	코로나 직전 1년 (2019Q1-2020Q1)		코로나 기간 (2020Q1-2021Q1)		코로나 직전 1년 (2019Q1-2020Q1)		코로나 기간 (2020Q1-2021Q1)	
	대출증감액 (억 원)	증가율 (%)	대출증감액 (억 원)	증가율 (%)	대출증감액 (억 원)	증가율 (%)	대출증감액 (억 원)	증가율 (%)
20	3,653	24.3	2,876	15.4	254	24.6	214	16.6
30	3,545	4.4	10,782	12.8	196	3.9	459	8.8
40	1,816	1.6	10,728	9.4	302	4.5	611	8.7
50	-80	-0.1	7,134	6.7	74	1.2	380	6.3
60	7,751	16.1	2,577	4.6	479	22.8	198	7.7
70	1,309	7.3	1,515	7.8	19	2.4	24	3.0
소계	17,994	4.7	35,613	8.9	1,323	6.1	1,885	8.2

자료(출처): 한국은행 가계부채DB

30대부터 50대에 이르는 연령층의 가계들은 축적된 자산과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수준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자산시장에 참여한 결과, 코로나 팬데믹 기간 인천시 가계부채 증가액의 약 77%를 차지하였다. 40대의 가계부채액이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다음으로 30대와 50대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30대에서 50대까지 연령층의 부채증가율은 거의 2배에서 5배까지 높아졌다.

인천시 1인당 가계부채 규모는 코로나 기간 323만 원(7.7%) 증가했는데 이는 전국평균과 유사한 증가율 수준인데, 증가액은 277만 원 대비 약 46만 원 많다. 연령별로 1인당 가계부채 증가율도 연령대별 총액과 마찬가지로 20대가 24.5%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20대 차주가 줄어 들면서 1인당 부채증가율이 20대 부채 총액 증가율보다 약 8%p 높은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연령별 1인당 부채 증가액은 30대와 40대가 가장 크고 20대가 50대보다 큰 증가율을 보인 점도 연령대별 총액 분포와는 다른 점이다. 전국과 비교할 때 인천시 70대 차주의 1인당 부채가 7~8%대 감소를 보이고 있는 점도 고연령층의 신용공급과 생계 안정 측면에서 추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표 8] 코로나 팬데믹 전후 인천시 연령별 1인당 가계부채 동향

연령대	전국				인천			
	코로나 직전 1년 (2019Q1-2020Q1)		코로나 기간 (2020Q1-2021Q1)		코로나 직전 1년 (2019Q1-2020Q1)		코로나 기간 (2020Q1-2021Q1)	
	대출증감액 (십만 원)	증가율 (%)	대출증감액 (십만 원)	증가율 (%)	대출증감액 (십만 원)	증가율 (%)	대출증감액 (십만 원)	증가율 (%)
20	16.0	22.7	19.9	23.1	21.5	23.7	27.5	24.5
30	31.3	7.9	51.6	12.0	44.4	9.6	53.2	10.5
40	18.0	3.4	43.8	8.1	43.8	7.4	45.7	7.2
50	11.3	2.4	21.6	4.4	21.6	4.2	23.6	4.4
60	9.9	2.9	0.8	0.2	17.1	5.1	7.7	2.2
70	-0.5	-0.3	-1.9	-1.1	-21.2	-8.4	-17.0	-7.3
소계	12.0	3.5	27.7	7.7	21.9	5.5	32.3	7.7

자료(출처): 한국은행 가계부채DB

코로나 팬데믹 기간 인천시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한 것은 신용대출이다. 코로나 팬데믹 1년간 주택담보대출의 총액이 601억 원 증가한 반면 신용대출 총액은 1,284억 원 증가했다. 인천시 20대 가계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두 유형에서 모두 가장 높은 부채 증가율을 보였는데 주택담보대출

대비 신용대출의 증가액이 거의 5배에 달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취업률의 하락은 20대 가계의 신용대출 증가율의 하락을 초래했고 그 결과 절대적인 대출증가액은 코로나 직전 1년 대비 감소했다.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 창출의 기회가 적은 60대 역시 신용대출을 통해 소득 감소에 대응하는 패턴을 보이면서 20대와 유사한 패턴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하였다. 지속적으로 소득을 창출하기 어려운 사회경제적 지위에 놓인 20대와 60대 가계의 신용대출 증가세는 향후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반면에 40대와 50대는 인천시 전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의 70%를 차지하였으며, 증가율도 20대 다음으로 높았다. 30대에서 50대까지 연령층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전체 인천시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의 약 88%를 차지하였다. 신용대출액은 30대와 40대 가계에서 가장 많이 늘어났는데 증가율도 코로나 직전 1년 대비 2배 이상 높아졌다. 코로나 기간 50대 가계의 신용대출 증가액도 직전 1년 대비 거의 8배 증가하였다. 인천시 50대 가계의 경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동시에 급격하게 증가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표 9] 코로나 팬데믹 전후 인천시 연령별 가계부채 유형별 동향

연령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코로나 직전 1년 (2019Q1-2020Q1)		코로나 기간 (2020Q1-2021Q1)		코로나 직전 1년 (2019Q1-2020Q1)		코로나 기간 (2020Q1-2021Q1)	
	대출증감액 (억 원)	증가율 (%)	대출증감액 (억 원)	증가율 (%)	대출증감액 (억 원)	증가율 (%)	대출증감액 (억 원)	증가율 (%)
20	45	16.7	36	11.4	209	27.4	178	18.3
30	44	1.7	95	3.7	151	6.0	365	13.6
40	147	3.9	249	6.3	154	5.4	362	12.0
50	49	1.5	183	5.4	25	0.9	197	7.4
60	275	23.0	25	1.7	204	22.5	173	15.7
70	15	3.8	14	3.3	3	0.8	10	2.6
소계	577	5.0	601	5.0	746	7.4	1,284	11.9

자료(출처): 한국은행 가계부채DB

인천시 차주 1인당 부채가 가장 많이 증가한 30대, 40대, 20대는 공통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율보다 신용대출 증가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인천시 20대는 유일하게 코로나 기간 주택담보대출 총액이 코로나 직전 1년보다 증가한 연령대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대 주택담보대출 총량의 증가율은 감소했지만 1인당 주택담보대출은 증가하였다. 인천시 20대 차주의 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부채규모는 두 유형에서 모두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표 10] 코로나 기간 인천시 1인당 연령별 가계부채 유형별 동향

연령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코로나 직전 1년 (2019Q1-2020Q1)		코로나 기간 (2020Q1-2021Q1)		코로나 직전 1년 (2019Q1-2020Q1)		코로나 기간 (2020Q1-2021Q1)	
	대출증감액 (십만 원)	증가율 (%)	대출증감액 (십만 원)	증가율 (%)	대출증감액 (십만 원)	증가율 (%)	대출증감액 (십만 원)	증가율 (%)
20	3.8	15.8	5.2	19.0	17.7	26.5	22.3	26.3
30	17.0	7.3	13.2	5.3	27.4	11.8	40.0	15.4
40	22.7	6.7	17.2	4.8	21.0	8.3	28.5	10.4
50	12.7	4.4	10.7	3.6	8.8	3.9	13.0	5.5
60	10.1	5.3	-7.1	-3.5	7.0	4.9	14.8	9.8
70	-9.1	-7.1	-8.4	-7.0	-12.1	-9.8	-8.6	-7.7
소계	9.3	4.4	9.9	4.5	12.6	6.8	22.4	11.3

자료(출처): 한국은행 가계부채DB

2. 인천시 차주의 소득별⁹⁾ 가계부채 동향

소득별 부채 동향 분석에 포함된 인천시 차주는 약 55,000명 정도이

9) NICE 소득추정등급 기준에 따르면 1~5등급(연 소득 5,000만 원 이상)은 고소득층, 6~10등급(연 소득 2,7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은 중소득층, 11~15등급(연 소득 2,700만 원 미만)은 저소득층으로 분류된다.

며, 대략 고소득 13%, 중소득 47%, 저소득 39% 수준으로 분포하고 있다. 인천지역 가계대출을 차주의 소득별로 살펴보면 전국평균보다 중·저소득층 차주의 비중이 높고 고소득층의 비중은 낮은 특성을 보인다(김보석 2021)는 점을 고려하면 본 연구에서 인천시 저소득층 표본 크기가 다소 작게 설정되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분석은 증가율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표 11] 소득별 차주 분포

(단위: 명, %)

소득 구분	전국				인천			
	2020Q1		2021Q1		2020Q1		2021Q1	
고소득	142,572	12.8	149,836	13.3	7,067	12.9	7,424	13.5
중소득	482,459	43.3	482,558	42.8	26,193	47.8	26,025	47.2
저소득	489,975	43.9	494,976	43.9	21,590	39.4	21,654	39.3
합계	1,115,006	100.0	1,127,370	100.0	54,850	100.0	55,103	100.0

자료(출처): 한국은행 가계부채DB

코로나 기간 소득등급별 대출증가액에서 인천시 저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21.5%로 전국 차원의 15.7% 대비 약 5.8%p 높다. 중소득층의 경우 인천시가 34.7%로 전국 31.3%보다 높다. 반면에 인천시 고소득층이 대출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7%로 전국의 52.9%보다 약 9.2%p 낮다. 김보석(2021)은 인천시 저소득층 대출 증가는 인천시 저소득층 전당 대출금액이 2015년 24.5백만 원에서 2020년 35.7백만 원으로 연평균 9.2%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표 12] 코로나 기간 인천시 소득등급별 1인당 가계부채 동향

소득 등급	전국				인천			
	코로나 직전 1년 (2019Q1-2020Q1)		코로나 기간 (2020Q1-2021Q1)		코로나 직전 1년 (2019Q1-2020Q1)		코로나 기간 (2020Q1-2021Q1)	
	대출증감액 (억 원)	증가율 (%)	대출증감액 (억 원)	증가율 (%)	대출증감액 (억 원)	증가율 (%)	대출증감액 (억 원)	증가율 (%)
고소득	10,036	6.6	18,847	11.6	644	8.5	824	10.0
중소득	6,374	3.8	11,156	6.5	473	4.7	655	6.2
저소득	3,606	5.9	5,606	8.6	345	9.3	406	10.0
소계	17,994	4.7	35,613	8.9	1,323	6.1	1,885	8.2

자료(출처): 한국은행 가계부채DB

1인당 가계부채 동향에서 가장 큰 차이는 총액으로 봤을 때 인천시 가계부채 증가율이 전국평균 대비 낮았는데, 1인당 가계부채 증가율은 인천시가 전국평균보다 0.1%p 높게 나타난 점이다. 특히 차주 1인당 부채 증가율이 중·저 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부채 총액 동향과 유사한 점은 인천시 1인당 가계부채 증가율이 고소득층에서는 전국평균 대비 낮은 반면 중소득층과 저소득층에서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표 13] 코로나 기간 인천시 소득등급별 1인당 가계부채 동향

소득 등급	전국				인천			
	코로나 직전 1년 (2019Q1-2020Q1)		코로나 기간 (2020Q1-2021Q1)		코로나 직전 1년 (2019Q1-2020Q1)		코로나 기간 (2020Q1-2021Q1)	
	대출증감액 (십만 원)	증가율 (%)	대출증감액 (십만 원)	증가율 (%)	대출증감액 (십만 원)	증가율 (%)	대출증감액 (십만 원)	증가율 (%)
고소득	-19.4	-1.7	67.8	5.9	1.8	0.2	49.6	4.2
중소득	7.2	2.1	23.0	6.4	10.8	2.7	27.8	6.8
저소득	3.5	2.7	10.0	7.5	11.6	6.6	18.2	9.7
소계	7.3	2.1	27.1	7.6	21.9	5.5	32.3	7.7

자료(출처): 한국은행 가계부채DB

통상적으로 볼 때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상황에서 가계부채 논의는 소득 감소로 인한 가계의 소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금융시스템의 신용 공급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 거시경제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측면에 초점을 둔다. 하지만 가계부채의 증가가 자산시장 참여와 밀접하게 연계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현 코로나 팬데믹 기간의 가계부채 현상은 부채증가의 요인을 가려서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힘들다는 어려움이 있다.

대출유형별로 살펴보면 코로나 기간 인천시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고소득층에서 7.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저소득층 7.2% 그리고 중소득층 2.0%로 나타났다. 코로나 기간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의 55.6%는 고소득층 가계로 귀속되었으며 저소득층 가계가 24.8% 그리고 중소득층 가계가 19.6%를 차지하였다. 고소득층 위주의 주택 매매시장 참여를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주목할 점은 인천시 고소득층의 대출총액 증가율이 10%인 점을 고려할 때 주택담보대출의 증가가 7.9%에 그친 것은 인천시 고소득층의 주택 매매시장 참여가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인천시 주택 매매가격의 상승에 따른 부채 증가가 2021년 1분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상황과 관련이 깊다.

코로나 기간 인천시 소득계층별 신용대출 증가율은 저소득층이 12.9%로 가장 높고 고소득층 12.2%, 중소득층 11.1% 순이다. 동 기간 인천시 신용대출 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중소득층이 41.7%, 고소득층 38.2%, 저소득층 20.0% 순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저소득층의 신용대출 증가율이 높은 점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소득 감소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표 14] 코로나 전후 인천시 소득등급별 가계부채 유형별 동향

소득 등급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코로나 직전 1년 (2019Q1-2020Q1)		코로나 기간 (2020Q1-2021Q1)		코로나 직전 1년 (2019Q1-2020Q1)		코로나 기간 (2020Q1-2021Q1)	
	대출액 증감 금액(억 원)	증가율 (%)	대출액 증감 금액(억 원)	증가율 (%)	대출액 증감 금액(억 원)	증가율 (%)	대출액 증감 금액(억 원)	증가율 (%)
고소득	260	6.5	334	7.9	384	10.6	490	12.2
중소득	213	3.8	118	2.0	260	5.7	536	11.1
저소득	124	6.4	149	7.2	220	12.4	257	12.9
소계	577	5.0	601	5.0	746	7.4	1,284	11.9

자료(출처): 한국은행 가계부채DB

코로나 기간 대출유형별 1인당 가계부채 동향의 가장 큰 특징은 고소득층의 부채 증가 규모는 크지만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가 되는 반면 중소득층은 신용대출 등 유형에서, 그리고 저소득층은 두 가지 유형 모두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적인 부채 규모는 고소득층이 주도적으로 확대시키고 있지만 상환 부담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서 빠르게 증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15] 코로나 기간 인천시 소득등급별 1인당 가계부채 유형별 동향

소득 등급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코로나 직전 1년 (2019Q1-2020Q1)		코로나 기간 (2020Q1-2021Q1)		코로나 직전 1년 (2019Q1-2020Q1)		코로나 기간 (2020Q1-2021Q1)	
	대출증감액 (십만 원)	증가율 (%)	대출증감액 (십만 원)	증가율 (%)	대출증감액 (십만 원)	증가율 (%)	대출증감액 (십만 원)	증가율 (%)
고소득	-10.0	-1.6	13.4	2.2	11.8	2.1	36.2	6.3
중소득	4.1	1.9	6.0	2.7	6.7	3.8	21.8	11.9
저소득	3.5	3.8	6.6	6.9	8.1	9.6	11.6	12.5
소계	4.8	2.2	9.8	4.4	10.5	5.6	22.3	11.3

자료(출처): 한국은행 가계부채DB

3. 인천시 자영업자 가계부채 동향¹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시행은 대면 영업 의존도가 높은 자영업자의 경제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자영업자들의 대출 변동의 분석을 통해 코로나 팬데믹이 특·광역시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자영업자 가계부채 동향에 포함된 포본 차주 수는 2021년 1사분기 기준 전국 73천여명과 인천시 41백여명이며, 일반 차주의 소득분포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비율이 낮고 고·중소득층의 비율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전반적으로 자영업을 운영하는 가계의 부채상환 부담이 일반 가계 대비 많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자영업자 가계부채는 가계대출과 기업여신으로 나누어진다.¹¹⁾ 국내 가계부채 증가율이 8%대이고 자영업자의 대출증가율이 18.8%인 것을 고려하면 대략 10%p 이상 자영업자의 대출금액이 더 증가한 것이다(한국은행 2021). 가계대출과 기업여신을 별개로 고려하더라도 비슷한 결론이 나온다. 정부의 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 지원정책도 자영업자의 대출금 잔액 증가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10) 직업과 업종에 따른 가계부채 동향에 관한 한국은행DB 자료는 실제 분석에 사용하기 힘들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영향이 자영업자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하여 자영업자의 가계 대출 동향을 살펴보았다. 자영업자 대출금액은 한국은행 가계부채 DB 설명자료의 제시된 방법을 활용하여 기업여신잔액이 0보다 큰 차주를 자영업자로 식별하고 식별된 차주의 가계대출과 기업여신 원화대출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하였다.

11) 실제 지출과정에서 가계대출과 기업여신을 가계소비와 사업운영 자금으로 나누어서 집행하고 있다고 가정하기는 힘들다.

[표 16] 소득수준별 자영업자 차주 분포

(단위: 명, %)

소득 등급	전국				인천			
	2020Q1		2021Q1		2020Q1		2021Q1	
	차주 수	비율	차주 수	비율	차주 수	비율	차주 수	비율
고소득	14,694	23.7	16,746	22.9	773	21.8	872	20.9
중소득	35,340	57.0	41,683	57.1	2,039	57.4	2,414	57.7
저소득	11,911	19.2	14,595	20.0	740	20.8	895	21.4
소계	61,948	100.0	73,025	100.0	3,553	100.0	4,181	100.0

자료(출처): 한국은행 가계부채DB

인천시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14.6%로 전국 대비 4%p 낮게 나타났다. 인천시 자영업자 대출액의 낮은 증가율은 수요 측면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에 의한 영향이 타 도시에 비해 덜했기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하지만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거리두기가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하게 유지된 점을 고려하면 인천시 자영업자의 대출 수요가 낮았을 것이라는 추론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인천시 자영업자의 운영상황과 대출수요를 가늠해 보기 위해 자영업 중 비중이 가장 높은 음식점업을 사례로 인천시와 전국의 폐업률을 비교해 본 결과 인천시 폐업률이 매 분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관해서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 코로나 기간 인천시 자영업자들이 추가적인 대출을 통해 사업을 유지하기보다는 폐업을 선택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아서 대출수요의 확대가 제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인천시 소재 금융기관의 신용공급이 부족해서 자영업자의 사업 유지가 상대적으로 힘든 상황을 초래했을 가능성도 있다. 두 가지 추론은 가계신용의 수급 균형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달성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즉 가계신용의 양적 확대가 상대적으로 제약을 받았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코로나 팬데믹과 같

은 단기적인 위기 상황에서 가계대출시장의 수급균형이 다소 높은 수준에서 달성되는 것이 자영업자의 사업 유지와 코로나 이후 지역의 회복성(resilience)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은 대안이라는 것이다.

[표 17] 전국과 인천 음식점업 폐업률 비교

기간	영업 사업장 수		폐업 사업장 수		폐업 사업장 비중		
	전국	인천	전국	인천	전국(A)	인천(B)	A-B
20201Q	1,019,932	42,087	35,528	1,766	3.5%	4.2%	-0.7%p
20202Q	1,030,094	42,367	31,988	1,752	3.1%	4.1%	-1.0%p
20203Q	1,044,000	42,774	32,380	1,500	3.1%	3.5%	-0.4%p
20204Q	1,056,486	43,435	43,489	2,230	4.1%	5.1%	-1.0%p
20211Q	1,059,677	43,674	31,862	1,602	3.0%	3.7%	-0.7%p

자료(출처):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개방

인천시 소득등급별 자영업자의 대출 변화는 전체 인천시 가계의 소득등급별 대출과는 다른 패턴을 보인다. 인천시 저소득층 자영업자의 대출 증가율은 전국 증가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고소득층 자영업자의 대출 증가율도 전국 대비 5.7%p 낮다. 반면에 인천시 중소득층 자영업자의 대출 증가율은 전국보다 1.2%p 높게 나타났으며 대출 증가금액도 인천시 고소득층 자영업자와 비슷하였다.

[표 18] 자영업자 소득수준별 가계부채 동향

(단위: 억 원)

소득등급	전국		인천		증감률(%)	
	2020Q1	2021Q1	2020Q1	2021Q1	전국	인천
고소득	99,049	113,083	5,028	5,455	14.2	8.5
중소득	75,410	90,822	4,431	5,390	20.4	21.6
저소득	26,720	34,724	1,738	1,988	30.0	14.4
소계	201,183	238,629	11,201	12,833	18.6	14.6

자료(출처): 한국은행 가계부채DB

인천시 소득등급별 자영업자의 1인당 가계부채 동향은 전체적으로 소득계층별 부채 총액의 증가라는 분석결과와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우선 인천시 자영업자 부채총액은 증가한 반면 1인당 가계부채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인천시 고소득층 자영업자의 1인당 가계부채는 3.8% 감소하였는데 동기간 전국평균은 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자영업자의 경우 인천시와 전국평균의 차이는 더욱 현저하게 대비된다. 인천시 저소득층 자영업자의 1인당 부채규모는 5.4% 감소한 반면 전국평균은 6.1% 증가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표본 수가 1000명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인천시 저소득층 자영업자들에 대한 신용공급이 전국평균 대비 10%p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표 19] 자영업자 소득수준별 1인당 가계부채 동향

(단위: 십만 원)

구분	전국		인천		증감률(%)	
	2020Q1	2021Q1	2020Q1	2021Q1	전국	인천
고소득	6,741	6,753	6,504	6,256	0.2%	-3.8%
중소득	2,134	2,179	2,173	2,233	2.1%	2.7%
저소득	2,243	2,379	2,349	2,221	6.1%	-5.4%
소계	3,248	3,268	3,153	3,069	0.6%	-2.6%

자료(출처): 한국은행 가계부채DB

V. 코로나 기간 인천시 가계부채 상환위험 변화 분석

코로나 팬데믹 기간 인천시 가계부채 상환위험의 변화를 LTI(Loan-To-Income)와 고위험 대출 차주 비율을 통해 측정하는 것이 본 장의 목적이다. 자영업자 LTI 산정 과정에서 총 부채금액은 가계대출과 원화대출금을

합산한 값으로 정하였다. 박연우·허석균(2018)의 연구를 참조하여, 차주의 LTI가 450 이상이면 가계부채 취약계층으로 분류하였다. 가계부채DB의 차주별 부채내역에서 카드사의 카드론 보유자, 대부업 대출 보유자, 상호금융 대출 2억 원 이상 보유자, 5개 이상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를 고위험 대출자로 선별하였다.

1. 인천시 가계부채 취약계층 추이

LTI 450 이상인 가계부채 취약계층의 비중은 코로나 팬데믹 1년간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차주의 소득보다 부채가 낮은 LTI 100 미만 가계의 비율이 코로나 이전 40% 중후반 수준에서 약 3%p 하락하면서 40%

[표 20] LTI 수준별 차주 동향

구분		2020Q1		2021Q1		비중 증감
		(명)	(%)	(명)	(%)	
인천	LTI 100 미만	12,559	44.1	11,866	41.2	-2.9
	LTI 100 이상 - 200 미만	4,999	17.6	5,050	17.5	0.0
	LTI 200 이상 - 300 미만	3,222	11.3	3,423	11.9	0.6
	LTI 300 이상 - 400 미만	2,217	7.8	2,354	8.2	0.4
	LTI 400 이상 - 450 미만	822	2.9	804	2.8	-0.1
	LTI 450 이상	4,637	16.3	5,302	18.4	2.1
	소계	28,456		28,799		
전국	LTI 100 미만	226,735	47.0	216,068	43.9	-3.1
	LTI 100 이상 - 200 미만	84,865	17.6	88,054	17.9	0.3
	LTI 200 이상 - 300 미만	49,945	10.4	54,006	11.0	0.6
	LTI 300 이상 - 400 미만	32,946	6.8	35,770	7.3	0.4
	LTI 400 이상 - 450 미만	12,488	2.6	13,445	2.7	0.1
	LTI 450 이상	75,299	15.6	84,972	17.3	1.6
	소계	482,278		492,315		

자료(출처): 한국은행 가계부채DB

초반대로 하락한 반면 가구부채 취약계층의 비중은 전국과 인천시 각각 1.6%p, 2.1%p 증가하였다. LTI 수준별 차주 동향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LTI 450 이상인 취약계층의 비중이 전국과 인천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인천시의 가구부채 취약계층의 비율이 전국보다 높고 증가세도 빠르다는 점은 그만큼 가계 부채 부실의 위험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천시 차주들의 LTI 수준별 대출유형별 구성을 살펴보면 자영업자를 선별하는 기준으로 활용한 기업여신의 비중이 LTI 450 이상 차주들에서 32.4%로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즉 가계대출 취약계층에 속하는 차주들의 전체 대출 총액에서 자영업자의 기업여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LTI 450 이상 차주 중 자영업자의 수도 상대적으로 많다고 합리적으로 추론이 가능하다. 종합하면 LTI 450 이상인 가구 부채 취약계층의 대출 상황에 자영업자가 미치는 영향이 다른 LTI 수준 차주그룹에 비해 월등히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21] 인천시 LTI 수준별 대출유형별 구성

구분	차주 수	대출총액 (억 원)	가계대출			기업 여신
			합계	주택담보	신용대출	
LTI 100 미만	11,866	1,788	94.9%	14.8%	80.1%	5.1%
LTI 100 이상 - 200 미만	5,050	2,825	93.1%	34.2%	58.9%	6.9%
LTI 200 이상 - 300 미만	3,423	3,499	94.4%	44.6%	49.8%	5.6%
LTI 300 이상 - 400 미만	2,354	3,426	94.6%	52.1%	42.5%	5.4%
LTI 400 이상 - 450 미만	804	1,402	93.9%	56.0%	37.9%	6.1%
LTI 450 이상	5,302	18,721	67.6%	39.3%	28.3%	32.4%
소계	28,799	31,661	78.5%	40.2%	38.3%	21.5%

자료(출처): 한국은행 가계부채DB

2. 인천시 고위험 대출 차주 비율 추이

고위험 대출 차주의 수는 전국과 인천시에서 각각 2.0%, 4.0% 감소하였다. 고위험 대출 차주 비율의 감소는 카드론 및 대부업 대출 보유자의 감소에 기인한다. 카드론 및 대부업 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지난 1년 동안 전국 3.2%, 인천 5.5% 감소하였다. 이에 비해 상호금융에 2억 원 이상 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¹²⁾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다양한 형태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면서 대부업과 카드론의 증가 등 부채부실 위험을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한국은행 2021).

[표 22] 고위험 대출 차주 구성 및 증감

구분	전국			인천		
	2020Q1	2021Q1	증감률	2020Q1	2021Q1	증감률
카드론/대출업	119,007	115,210	-3.2%	7,906	7,470	-5.5%
상호금융 2억 원 이상	11,297	12,019	6.4%	354	432	22.0%
다중채무	17,806	17,245	-3.2%	1,268	1,205	-5.0%
소계	131,101	128,425	-2.0%	8,361	8,030	-4.0%

자료(출처): 한국은행 가계부채DB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활동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고위험 대출 차주의 비율은 전국과 인천시에서 각각 1.4%p, 0.9%p 감소하였다. 전체 차주의 수가 거의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고위험 대출 차주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한 결과이다. 한국은행(2021)은 정책당국의 코로나19

12) [표 4]에서 인천시 가계부채는 비은행권에서 전국평균보다 훨씬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상호금융에서 2억 원 이상 대출을 받은 차주가 전국 대비 인천에서 크게 증가한 것은 이러한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시중은행의 대출규제로 인한 풍선효과가 인천과 서울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효과로 볼 수 있다.

대응조치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집중되면서 일반 가계대출자의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다소 예외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향후 현실화되지 않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차주들의 상환위험에 대해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하였다. 따라서 코로나 이후 정책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중 고위험 대출 차주들의 상환부담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들 가계부채 상황에 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표 23] 고위험 대출 차주 동향

구분	고위험 대출 차주(명)		대출 차주(명)		고위험 대출 차주 비중(%)		
	2020Q1 (a)	2021Q1 (b)	2020Q1 (c)	2021Q1 (d)	2020Q1 (e=a/c)	2021Q1 (f=b/d)	증감 (f-e)
인천	8,361	8,030	27,950	28,133	29.9	28.5	-1.4
전국	131,101	128,425	472,669	479,397	27.7	26.8	-0.9

자료(출처): 한국은행 가계부채DB

VI. 인천시 가계부채 대응 정책 방향

가계부채와 관련된 거시경제부문 관리는 중앙정부의 영역이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 필요성에 관한 중앙정부 차원의 논의는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통한 주택가격의 안정과 함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잠재적인 가계부문의 채무상환 부담의 가중으로 인한 거시경제 불안정성에 대한 위험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 다만 가계부채 총량에 관한 정부의 의지는 구조적인 부채상환에 필요한 가계의 금융지출 증가 관리를 통한 거시경제 건전성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필요하지만, 실제 정부 정책을 통한 부채총량 관리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유영성 2017).

중앙정부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차주 단위 신용공급 규제에 관한

논의와 함께 지자체 차원의 가계부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포용적 금융지원 방안도 필요하다. 자영업자들과 실업과 휴직 등에 노출된 저소득층의 상황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비교할 때 구체적인 실태 파악과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유리하다(박희석·정현철 2019). 따라서 지자체 차원에서의 가계부채 문제에 관한 접근은 부채상환에 취약한 가계, 특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사회적거리두기라는 공공차원의 필요 때문에 경제활동의 제약을 받는 자영업자들과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 실업에 노출되기 쉬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인천시는 피해가 집중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용공급의 유지와 상환부담 발생 억제 등 중앙정부의 정책사업들을 보완하는 사업에 초점을 두었다. 인천시는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신용공급을 하고 이자를 전액 인천시가 부담함으로써 상환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신용공급을 확대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인천시 소재 중소기업에 대상으로는 경영안정자금 지원 규모를 1,000억 원에서 1,500억 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신용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표 24] 인천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상 특별금융지원 정책

정책	지원대상	내용
코로나19 피해소상공인 무이자 특례보증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인천 소재) 코로나 소상공인 무이자 특례보증	업체 당 최대 2천만 원 이내 최초 1년간 무이자 (인천시 이자 전액 지원). 이후 4년간 연 1% 대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브릿지보증 지원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대출을 이용 중인 폐업 소상공인	기존 보증부대출의 잔여 대출금액 이내 만기 연장
코로나19 피해 기업 특별 지원 계획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직접 및 간접피해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규모 확대

자료(설명): 인천신용보증재단 및 인천테크노파크 홈페이지의 보도자료와 공지사항을 토대로 연구자 재구성

코로나 팬데믹 기간 인천시 가계부채 관련 양적 지표들은 가계의 부채상환 부담이 상승하고 있지만, 다른 특·광역시와 비교할 때 총량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다. 분석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인천시 가계부채 상환 위험부담 증가에 가장 크게 이바지한 요인은 자영업 차주의 부채 증가이다. 자영업자의 부채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지역 소비 진작을 통한 매출의 증가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과 함께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단기적인 경영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저금리 혹은 무이자 대출 등 추가적인 부채상환 부담의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자체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인천시가 추진하는 무이자 특례보증은 최소 1년간은 부채상환 부담이 없는 신용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지원사업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의 시행 기간과 강도를 고려할 때 업체당 2,000만 원과 500억 원이라는 한도는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운영하는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에 속하는 소상공인 대상 지원 비율과 금액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단기적인 위기 상황에서 실업 등 소득 감소로 인한 충격으로 부채상환에 취약한 상황에 빠진 차주 대상으로 공공 일자리 등을 통한 복지 프로그램과 연계한 복합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인천시 서민복지금융센터에서는 가계부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와 관련된 진단, 조정, 교육과 함께 일자리, 주거 등을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현재의 조직과 인력¹³⁾으로 광역시 차원의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다. 인천시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조직과 인력 확충을 통해 서민과 자영업자 대상 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센터가 제공하는 채무 진단과 조정, 교육 그리고 복

13) 현재 인천시 서민복지금융센터는 팀장 포함 직원 3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 서비스와의 연계 기능과 함께 실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톱 행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조직에 마이크로크레딧 기능을 보강함으로써 저금리의 신용을 차주의 채무상환 여건에 맞추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마이크로크레딧 기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계금융 매니저’를 통한 지역밀착형 관계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서봉만·정복용 2014).

마지막으로 최근 청년층의 부채 증가는 상대적으로 신용대출에 의존하고 있으며, 인터넷 बैं킹을 통한 중금리 대출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증가하는 청년의 채무불이행을 고려할 때 지자체 차원에서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건전한 채무 관리를 지원하는 체계의 정비가 중요하다.

VII. 결론

본 연구는 한국은행이 구축한 가계부채 DB를 활용하여 코로나 팬데믹 기간 인천시 가계부채 변동 상황의 특징을 특·광역시 간 비교와 차주의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살펴보았다. 두 번째로 인천시 가계부채의 변동상황이 가계부채의 상환위험의 증감을 초래했는지 여부를 LTI 수준을 기준으로 한 가계부채 취약계층과 고위험 대출 차주 비율의 변동을 통해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인천시 차원에서 가계부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가계부채 동향의 가장 큰 특징은 자산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중·고소득 대출 수요의 증가가 소득 및 고용 충격으로 인한 중·저소득 대출 수요증가를 큰 폭으로 압도하면서 전체적인 공급 조

절의 필요성이라는 정책 담론이 지배적인 상황이 되었다는 점이다. 주택 담보대출의 규제는 신용대출을 통한 우회적인 주택시장 참여를 초래하였고 그 결과 신용대출 증가액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을 초과하였다.

인천시는 7대 특·광역시 중 가계부채 증가율이 낮게 유지되고 있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에 인천시 가계의 비은행권 부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부채상환 위험요소로 평가된다. 전반적으로 총량에 있어서 인천시 가계부채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인천시 차주의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가계부채 동향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령별로는 20대 차주의 가계부채 증가율, 특히 신용대출 증가율이 월등하게 높았으며, 소득등급별로는 저소득층 가구의 부채증가율, 특히 신용대출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이 특징적이다. 마지막으로 인천시 자영업자들의 코로나 기간 폐업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자영업자, 특히 저소득층 자영업자의 대출증가율은 전국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쳤으며, 저소득층 자영업자의 1인당 부채규모는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신용 수요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신용수급의 적절한 조절 기제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팬데믹 이후 회복성 등을 포함해서 복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가계부채 취약계층 차주의 수와 고위험 차주의 비율을 기준으로 인천시 가계부채 위험 수준은 다소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 코로나 기간 가계부채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LTI 450 이상 차주의 비율이 전국평균 대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는 점에서 위험수준이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에 인천시 고위험 차주의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 점은 위험수준이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인천시 고위험 차주의 비율은 전국평균 대비 높게 나타나서 상대적으로 가계부채 상환위험이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현재 인천시는 가계부채 관련 정책 대응은 자영업자들의 부채상환 부담을 줄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인데 지원 범위와 규모의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코로나 이후를 고려한다면 구체적인 실태조사 등을 통해 복지 프로그램과 연계한 복합적인 지원정책의 발굴도 중요하다. 상기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조직으로서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조직과 인력의 확충도 시급한 과제로 대두하였다. 마지막으로 신용대출과 중금리 대출의존도가 높은 청년층의 부채와 채무불이행 증가추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교육과 컨설팅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도 중요하다.

지자체 차원에서 가계부채의 양적인 관리는 힘든 과제이며 정책 수단도 제한적이다. 중앙차원에서의 양적 관리로 인해 수면 아래에 머물고 있는 가계부채의 상환 위험부담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상별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이다. 이를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지역별 가계부채 상황에 관한 세밀한 검토와 함께 지역밀착형 지원을 위한 체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유진. 2019. 「대전·세종·충남지역 가계부채 상황 및 채무상환능력 평가」.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 강유진·이현우. 2018. 「대전·충남지역의 가계 및 자영업자 부채 현황 및 시사점: 채무상환 취약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1. 「가계부채 관리방안-2021~2023 중기관리계획」.
- 김다애. 2022. 「인천지역 민간소비 특징 및 여건 평가」. 한국은행 인천본부.
- 김미라·김성준·박현서. 2018. 「가계부채DB의 이해와 활용」.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72(9): 16-48.
- 김보석. 2021. 「인천지역 금융 현황 및 주요 특징」. 한국은행 인천본부.
- 노산하. 2020.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취약가구의 부채 리스크 점검 및 시사점」. 자본시장포커스 11: 1-8.
- 박연우·허석균. 2018. 「가계부채 결정요인과 부채부담 취약계층의 재무곤경 및 신용위험 분석」. 금융정보연구 7(1): 1-31.
- 박희석·정현철. 2019. 「서울시 가계부채 진단과 정책 방향」. 정책리포트 293. 서울연구원.
- 서봉만·정복용. 2014. 「인천지역 서민금융의 실태와 정책대응 방안」. 한국은행 인천본부.
- 유영성. 2017.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과 해결 방향」. 이슈&진단 289. 경기연구원.
- 이상훈. 2019. 「경기도민 삶의 질II-노후대책과 가계부채 해결해야」. 이슈&진단 344. 경기연구원.
- 이정인·장시령. 2018. 「부산지역 가계부채 리스크 분석과 시사점」. 한국은행 부산본부.
- 정지수. 2021.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국내의 가계부채 변화 및 과제」. 자본시장포커스 9: 1-5.
- 한국은행. 2020a. 「금융안정보고서 2020년 6월호」.
- _____. 2020b. 「금융안정보고서 2020년 12월호」.
- _____. 2021. 「금융안정보고서 2021년 6월호」.
- _____. 2021. 가계부채DB

인천신용보증재단(<https://www.icsinbo.or.kr>)

인천테크노파크(<https://www.itp.or.kr>)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개방(<https://www.localdata.go.kr>)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s://ecos.bok.or.kr>)

국 문 초 록

코로나 팬데믹 기간 인천시 가계부채 동향의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

서봉만(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최태림(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김다애(한국은행 인천본부 기획조사팀 과장)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은행 가계부채DB를 활용하여 코로나 팬데믹 기간 인천시 가계부채 변동의 특징을 살펴보고 정책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천시는 특·광역시 중 상대적으로 가계부채 총량과 고위험 대출이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둘째, 인천시의 경우, 20대 청년과 저소득층 차주의 신용대출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예상과 달리 인천시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은 전국평균을 하회하였다. 마지막으로 인천시 가계부채 위험 수준은 취약계층 비율의 증가세는 높고 고위험 차주의 비율은 낮아지는 상반된 추세가 동시에 나타났다. 향후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복지 프로그램과 연계한 지원정책 등의 발굴과 함께 서민 금융복지지원센터의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청년층과 저소득층 대상 교육과 컨설팅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언한다.

주제어: 인천광역시, 가계부채, 상환위험

Abstract

Household Debts and Policy Implication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Seo, Bongman (Research Fellow, Economic & Environment Research Division,
The Incheon Institute)

Choi, Taelim (Research Fellow, Economic & Environment Research Division,
The Incheon Institute)

Kim, Daae (Deputy Director, Regional Economic Research Team,
Incheon branch, Bank of Korea)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changes in household debt in Incheon Cit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using the Bank of Korea Household Debt DB and to suggest policy respons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cheon City showed a relatively low growth rate in total household debt and high-risk loans in comparison with major metropolitan cities in Korea. Second, in Incheon City, the debt growth rate of young people in their 20s and low-income borrowers is relatively higher. Contrary to expectations, the loan growth rate for the self-employed in Incheon was lower than the national average. Lastly, with regard to the household debt risk level in Incheon City, the opposite trends occurred simultaneously, with an increase in the ratio of households vulnerable to default debt and a decrease in the proportion of high-risk borrowers. For the stable management of household debt in the future, Incheon city should devise policies to support households with high debt burden in tandem with welfare programs, expand the organization and workforce of the Financial

Welfare Support Center for the working class, and promote education and consulting projects for youth and low-income households.

Key words: Incheon Metropolitan City, Household debts, repayment risk

인천지역 청년층의 일자리 특성 및 고용의 질 분석

황광훈*

황
광
훈

- I. 들어가며
- II. 선행연구 검토
- III. 분석자료 및 모형
- IV. 인천지역 청년층의 첫 일자리 주요 특성 및 분포
- V. 인천지역 청년층의 고용의 질 결정요인
- VI. 요약 및 시사점

I. 들어가며

청년층의 실업과 고용 문제는 청년 자신들에 국한되지 않고 한 나라의 미래와 직결되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주요 관심사로 등장한 지 이미 오래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청년 노동시장에 관한 다양한 연구

.....
* 한국고용정보원 중앙일자리평가팀 부연구위원(E-mail: hunzzang96@keis.or.kr, Tel: 043-870-8394)

<http://doi.org/10.34165/urbanr.2022..21.357>

투고(접수)일 2021.10.23. 심사(수정)일 2021.11.14. 게재확정일 2022.6.20.

가 진행되었고 관련 정책들이 제시되었으며 일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의 청년층 실업 및 고용 문제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기 어렵다. 이는 청년층 노동시장의 문제가 결코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님을 역설적으로 알려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특히, 기술발전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용 형태의 다변화 및 다각화, 유가 및 금리변동으로 인한 국내 경기 위축 등 노동시장과 경기변동 요소, 세계경제의 침체와 한국경제의 저성장 기조, 국내외 정치 환경의 급변 등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부문별 위험요인에 대한 위기감 및 경각심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청년고용’과 ‘청년실업’ 문제는 여전히 뚜렷한 해법 없이, 우리 사회의 최우선 화두로 자리 잡고 있다(김유빈 외 2017; 이영민 외 2010).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와 최근의 코로나19 감염사태로 인해 노동시장은 변화를 맞이하면서도 동시에 심각한 고용 충격을 겪고 있다. 향후 전개될 고령화사회를 예측해보면 청년층의 노동력과 같은 인적자산은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사태로 인해 청년 노동시장이 고용 부진 등을 겪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 중에서도 저학력층, 여성, 비정규직, 비수도권 지역 청년층과 같은 고용 취약계층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론 우리 정부와 국민은 적극적으로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재정투입을 통해 노동시장의 위기를 진정 및 회복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만들고 있다. 그런데도 향후 코로나19의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단기간 안에 노동시장 회복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층의 첫 일자리 등 노동시장 진입 과정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연구이다. 노동시장 진입 과정을 분석하는 중요성은 평생 근로의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일자리와의 미스매치 등에 따른 잦은 이직, 집중된 일자리 관련 훈련, 결혼 및 출산 등 주요한 변화를 경험하고, 이러한

변화들이 중장년기에서의 노동시장 참여 형태 및 평생 소득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안주엽·홍서연 2002).

한편, 청년고용 문제는 지역들 사이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동안 한국경제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불균형하게 발전해 온 결과, 청년들이 원하는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또한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인구집중 현상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절반 이상을 수도권 인구가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20~30대 청년층의 수도권 유입 현상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비수도권의 인구 감소 현상은 자연감소보다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현상으로 분석되며, 이에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청년일자리 창출, 출산 및 보육환경 개선 등 인구 유출을 최소화하고 인구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들을 추진 중에 있다(황광훈 2020).

반면, 수도권 내에서의 이동을 보면, 서울과 인천은 유입보다는 유출 현상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경기도는 유출보다는 유입 현상이 두드러지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12년간 서울은 경기지역으로 18.1%가 이동하였고, 인천은 10.8%가 이동했지만, 경기도는 서울과 인천 각각 8.0%, 2.7%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¹⁾ 수도권 내에서는 지난

1) [수도권 청년층의 권역 내 인구 유입 및 유출]

(단위: %)

구분		2007년→2013년			2013년→2019년			2007년→2019년		
		서울	인천	경기	서울	인천	경기	서울	인천	경기
유입	서울	93.6	2.6	10.0	92.3	1.8	12.4	90.3	4.7	18.2
	인천	0.8	92.4	2.0	1.4	94.5	2.6	2.0	89.1	4.2
	경기	5.6	5.0	88.0	6.3	3.8	85.0	7.8	6.2	77.6
유출	서울	89.5	1.0	9.5	85.7	0.7	13.6	80.1	1.8	18.1
	인천	2.1	92.8	5.1	3.0	90.2	6.8	4.5	84.8	10.8
	경기	5.9	2.1	92.1	5.8	1.5	92.7	8.0	2.7	89.4

자료(출처): 청년패널2007(YP2007)

10여 년간 경기지역의 신도시 개발과 확장, 서울지역의 주거비 상승 등으로 서울 및 인천의 청년인구가 일부 경기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분포되어있어 노동시장의 질적 수준이 앞서 있지만, 수도권 내에서는 서울과 경기와 비교해 인천은 상당수의 청년층 유출 현상을 겪고 있다. 이는 인천의 청년층 노동시장이 서울과 경기지역 신도시들에 비해 열악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과연 인천을 중심으로 수도권 내에서의 지역별 청년층 취업 특성들이 어떠한 분포와 특징을 가졌는지 살펴보고, 지역별로 취업한 첫 일자리의 지속 기간 및 임금 등 일자리의 질적 수준이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인천지역의 청년 노동시장을 이해하고, 지역 노동시장에서의 정책적 해법과 개선방안을 제시함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하에 인천지역 청년층이 노동시장 진입 이후 처음 경험한 첫 직장을 중심으로 수도권 타지역과 일자의 질이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일자리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무엇이고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Ⅱ장에서는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 등을 정리하고, 제Ⅲ장에서는 분석에 사용하는 자료와 실증분석 모형을 소개한다. 제Ⅳ장에서는 인천지역 청년층의 취업 특성 분포와 특징을 살펴보고, 제Ⅴ장에서는 인천지역 청년층의 첫 일자리 지속 기간 및 임금 등 고용의 질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Ⅵ장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고, 연구결과의 함의 등을 맺음말로 정리하겠다.

II. 선행연구 검토

일자리 질은 여러 요인으로 구성되고, 주관적이거나 다차원적인 특성이 있어 정의하기 어렵다. 통상적으로 경제학에서는 임금, 일자리 지속성을 통해 일자리 질을 측정하는 반면, 사회학에서는 근로자의 일자리 만족도, 숙련도 향상, 업무 성취감 등이 일자리 질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만약 노동시장에서 경쟁이 심하고 유연성이 높다면 노동자는 임금이 낮지만 내인(內人)적으로 더 만족하는 일 자리를 선택할 수 있고 반대로 임금은 높지만, 일자리 만족감이 떨어지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은 이렇게 자유롭고 개방적이지 않으며, 많은 연구자가 내인적인 면, 외인적인 면 모두를 측정하고자 노력해왔다(박정현 2010). 현재 일자리 질에 관한 연구는 주로 국제노동기구(ILO)의 ‘괜찮은 일(Decent Work)’, 유럽집행위원회의 ‘직장의 질(Quality in Work)’, 유엔유럽경제위원회의 ‘고용의 질(Quality of Employment)’ 등을 참고하여 일자리 질의 개념을 정립하고 있으며, 각 연구자는 여러 구성 요인 중 관심 있는 주제를 연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일자리 질 구성요소 중 임금, 근로시간, 종사상 지위, 일자리 지속 기간 등 경제학적 지표에 대해 지역별로 비교·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먼저 청년층의 취업 특성과 일자리 질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상은(2005)은 「청년패널」을 이용하여 청년들의 직업훈련이 취업과 근로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직업훈련은 대학재학 이상, 20~24세 청년들의 취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근로소득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장식 외(2015)는 대졸 취업자들의 재직기간은 개인의 특성, 취업지역 특성

의 영향을 함께 받는 복수의 분석단위를 갖게 된다는 것에 주목하였고, 이에 Cox의 혼합모형을 이용한 대졸 취업자의 재직기간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개인 특성에서는 성별, 평점, 연령, 대학유형, 전공계열, 정규직 여부, 기업규모 등이 탈출 확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취업지역 특성에서는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웅 외(2015)는 위계선형모형을 이용하여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중 임금과 고용 형태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서울 4년제 대학 졸업여부, 대학의 재정·교육·연구수준이 임금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개인의 취업목표가 분명하고 소속 대학이 연구역량이 확보되어 있다면, 임금 성과에 긍정적인 조절 효과를 갖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 형태로는 대기업 정규직 취업 측면에서, 서울 4년제 및 지방 4년제 졸업 여부는 부(-)의 영향을 미쳤고, 대학의 재정·교육·연구 수준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정우 외(2018)는 이산선택모형을 활용하여 경남지역 청년의 취업 상태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청년패널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청년들 개인 특성과 가구 배경은 취업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취업 준비 활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문석·송일호(2019)는 「청년패널」 10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교육·전공 불일치가 임금과 직장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육 수준, 전공과 맞지 않는 일을 하는 경우 임금과 직장 만족도 모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 일치도는 “자가발전”과 “장래성”에, 전공 일치도의 경우 “업무 내용”에 대한 직장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최근의 연구로, 조윤서(2021)는 4년제 대졸자를 대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행동이 취업과 괜찮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문, 사회, 공학, 자연 계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직무적성준비와 면접준비는 모든 취업과 괜찮은 일자리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취업 행동으로 나타났으며, 자격증, 외모관리, 취업 서류 작성 교육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여러 취업 준비 행동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 계열별로 차별화된 취업 준비 행동이 필요하고, 학교와 국가는 이에 맞춘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일자리 질에 대한 지역별 비교 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김영민(2014)은 「지역별고용조사」, 「산업재해분석」 자료 등을 이용하여 국내 지역별 일자리 질의 현황과 추이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별 일자리 질 지수 현황은 서울, 대전, 경기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경상북도, 울산, 강원도가 하위권에 머물렀다. 또한 지역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노동시장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한 고용정책을 장·단기로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은경·이희연(2015)은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노동시장 권역별 일자리 특성에 대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국에서 창출된 전체 일자리의 약 80%가 상위 10%의 지역노동시장권에서 창출되었으며, 일자리 질(고용 안정성, 생산성, 임금) 또한 광역 지역노동시장권이 우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부가가치, 고임금 일자리는 광역 지역노동시장권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창출되었으며, 상용 일자리는 인구 규모가 작은 농어촌 지역노동시장권에서 창출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구분(전체, 광역, 중소, 농어촌)에 따라 일자리 양·질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 지역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정성배·이지우(2018)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대졸자들의 팬찮은 일자리 취업 요인을 지역별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수도권 지역에서 팬찮은 일자리 취업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어학연수 경험, 가

족 경제지원 여부가 괜찮은 일자리 취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영남권은 성별(남성), 어학연수 경험이 괜찮은 일자리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호남권 지역에서 괜찮은 일자리 취업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자격증 확보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상의 선행연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차별점을 갖는다. 먼저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청년패널(YP2007) 1~13차」 자료를 사용한다. 청년패널은 2007년 기준 만15~29세를 대표하는 표본을 매년 추적 조사하는 종단면조사(longitudinal survey)로 모든 청년층을 아우를 수 있는 청년층 특화 자료이다.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내 타지역과의 비교라는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10여 년간 자료를 연결(merge)하여 표본 수를 확보한다. 또한 일자리 질, 일자리 지속 기간에 관한 여러 선행연구를 포괄한다. 기존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성별, 연령, 학력, 기업규모, 지역뿐만 아니라, 직·산업, 직업훈련 경험, 자격증, 학력과 기술의 미스매칭, 전공 일치 등 다양한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한다.

아울러 수도권 내 지역별 분석을 시행한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지역 변수는 개인적 특성을 통제하는 통제변수로 기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을 포함한 세 지역(인천, 서울, 경기)에 대하여 임금·일자리 지속 기간을 비교하고, 이를 결정짓는 모형에 대한 추정 또한 지역에 따라 실시하여 개인이 가진 특성이 지역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다.

[표 1] 일자리 질을 분석한 국내 주요 선행연구

저자	분석자료	주요 분석 방법	주요 결과
이상은(2005)	청년패널	개인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한 직업훈련의 취업 및 근로소득 효과 분석	직업훈련은 대학재학 이상 학력자, 20~24세 청년들의 취업 증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나, 근로소득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
조장식·강창완·최승배(2015)	대졸자직업 이동경로조사	Cox의 혼합모형을 이용한 재직기간 결정요인 분석	- 아래 수준별 요인들이 재직기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 - 개인 특성: 성별, 평점, 연령, 대학 유형, 전공계열, 정규직 여부, 기업규모 - 취업지역 특성: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이대웅·손주화·이소담·권기현(2015)	대졸자직업 이동경로조사	위계선형모형을 이용한 임금, 고용 형태 결정요인 분석	- 임금: 서울4년제 졸업 여부, 대학의 재정·교육·연구 수준이 (+)의 영향을 줌. - 고용 형태: 서울 4년제 및 지방 4년제는 (-)의 영향을, 재정·교육·연구 수준은 (+)의 영향을 줌.
신정우·김태현·이미숙(2017)	청년패널	이산선택모형을 이용한 경남지역의 청년층 취업상태 결정요인 분석	개인 특성이나 가구 특성은 취업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주나, 취업 준비 활동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최문석·송일호(2019)	청년패널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교육, 전공 불일치가 임금과 직장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교육 수준, 전공과 맞지 않는 일을 하는 경우, 임금과 직장 만족도에 (-)의 영향을 미침. - 교육 일치도는 자가 발전, 장래성, 전공 일치도는 업무 내용 직장 만족도에 (+)의 영향을 줌.
조윤서(2021)	대졸자직업 이동경로조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한 취업 준비 행동이 일자리/괜찮은 일자리 취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모든 일자리에 대하여 직무 적성 준비와 면접 준비는 (+)의 영향을, 자격증, 외모 관리, 취업 서류 작성 교육은 (-)의 영향을 줌. - 취업 준비 행동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계열별로 상이하하여 맞춤형 전략이 필요

저자	분석자료	주요 분석 방법	주요 결과
김영민(2014)	지역별 고용조사 산업재해분석	• 선형표준화를 이용한 일자리 질 지수 산출	• 일자리 질 산출 결과 서울, 대전, 경기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경북, 울산, 강원이 하위권으로 나타남. • 일자리 질 지수와 지표별 상관관계 분석 결과 고용 안정성, 능력개발, 임금 보상, 작업장 안전과 통계적으로 유의함.
안은경·이희연 (2015)	전국사업체 조사	• TTWA를 이용한 지역노동시장권 설정 • 선형표준화를 이용한 일자리 질 지수 산출	• 전체 일자리의 약 80%를 상위 10% 지역노동시장권에서 창출 • 고부가가치, 고임금 일자리는 광역 지역노동시장권, 상용 일자리는 농어촌 지역노동시장권에서 많이 창출
정성배·이지우 (2018)	대졸자직업 이동경로조사	•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한 지역별 취업 영향요인 비교·분석	• 관청은 일자리 취업률은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순으로 나타남. • 수도권은 어학연수 경험과 가족경제 지원, 영남권은 성별과 어학연수 경험, 호남권은 자격증이 관청은 일자리 취업 영향요인으로 나타남.

Ⅲ. 분석자료 및 모형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서 본 분석은 최근 자료이면서 지난 13년 동안 축적된 청년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한다. 청년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역의 청년층을 단기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추적하기 위해서는 패널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상당 규모의 표본 수와 조사자료의 축적 기간 등을 고려해보면 청년층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하여 10년 넘게 자료가 축적된 청년패널조사가 가장 적합한 자료 중의 하나라고 판단할 수 있다. 분석대상은 인천지역 거주 청년층

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수도권 전체 또는 서울 및 경기지역과 비교하여 인천지역의 특징을 분석하도록 한다. 분석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이 현재 기준으로 공개하고 있는 1~13차(2007~2019년) 전체 데이터에 직업력 자료를 연결하여 새로운 분석용 데이터를 구축하여 분석한다. 청년패널조사 직업력 자료는 1차(2007년)부터 13차(2017년)까지 각 조사 차수별 현재 일자리, 경험 일자리를 모아놓은 자료로, 이를 통해 개인의 노동시장 진입부터 현재까지의 일자리 변동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황광훈 2019).

본 논문에서는 새롭게 구축한 분석용 데이터를 이용하여 인천지역 청년층의 인구이동과 첫 일자리²⁾ 및 현재 일자리를 기준으로 청년층의 일자리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먼저, 인천지역 청년층의 첫 일자리 지속 기간에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을 활용한다. 생존분석은 선형 회귀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기법과 유사하지만 자료 수집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분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으며, 여기서는 생존분석 기법의 콕스 비례위험모형(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적용하여 청년 취업자의 첫 일자리 지속 기간 결정요인을 추정한다. 여기서 해저드함수 $h(t)$ 는 어떤 사건(event)이 시점 t 까지 발생하지 않았다는 조건 하에서 이 사건이 시점 t 에서 발생할 조건부 순간 탈출 확률로 정의되며, 비례적 해저드(proportional hazard)모형으로 알려진 Cox 해저드모형이 널리 사용되며, 분석 표본에 속하는 i 번째 개인에 대해 기본 모형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여기서 비례적 해저드란 개인들 사이의 해저드 비율(hazard ratio)이 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2) 첫 일자리의 기준은 최종학교를 졸업한 이후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처음으로 경험한 일자리를 의미하며, 중퇴한 이후에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첫 직장에 들어간 경우도 포함한다(학교 재학 중 아르바이트는 제외).

(constant)하다는 것을 의미한다(황광훈 2019).

여기에서는 월 단위로 측정된 첫 일자리 지속 기간이 비연속적인 정보가 아닌 연속적인 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영향요인을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생존분석의 방법 중 콕스의 비례위험 회귀분석(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적용한다(황광훈 2020). 콕스의 비례위험 회귀분석은 생존에 영향을 주는 여러 예측변수를 투입할 수 있으며, 범주형과 연속형 예측변수 모두 사용할 수 있다. x_i 는 개인 i 의 예측변수이고, 이것의 계수는 $\beta_1 \sim \beta_p$ 라고 할 때, Cox 모형을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황광훈 2020).

$$h_i(t) = h_0(t) \exp(\beta_1 x_{i1} + \beta_2 x_{i2} \cdots + \beta_p x_{ip}) \quad (1)$$

여기서 x 는 해저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벡터이며, $h_{(0)}(t)$ 는 기준(baseline) 해저드함수이며, 시간 t 에서 i 번째 개인에 대한 해저드, $h_{(i)}(t)$ 는 ① 기준 해저드함수 $h_{(0)}(t)$, ② 지수 형태로 표현되는 p 개 변수들의 선형함수라는 2가지 요소의 곱으로 이루어지고, 여기서 $h_{(0)}(t)$ 는 모든 변수의 값이 제로(0)인 개인에 대한 해저드로 간주할 수 있으며, 위의 해저드함수를 로그 형태로 전환하면 다음과 같은 회귀모형을 얻을 수 있다(황광훈 2020).

$$\log h_i(t) = \alpha(t) + \beta_1 x_{i1} + \cdots + \beta_p x_{ip}, \alpha(t) = \log h_0(t) \quad (2)$$

다음으로 일자리의 질을 측정하는 데 있어 대표적인 지표라 할 수 있는 임금의 결정요인을 지역별로 분석하기 위하여 OLS(Ordinary Least Squares) 모형을 사용한다. OLS 모형(식 3)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임금 회귀방정식을 변형하여 이용할 것이다. 종속변수(wage)는 로

그월평균임금이고, 설명변수는 개인 특성 관련 변수(성별 더미, 연령, 연령제곱, 학력 더미, 결혼 여부, 가구주 여부)와 일자리 관련 변수(종사상 지위, 기업규모, 근로시간, 산업, 노동조합 유무), 직업훈련 및 자격증 취득 경험, 교육·기술 미스매치 상태, 전공 불일치로 구성되어 있다. 임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설명변수들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성별, 연령, 학력, 직장 특성(기업규모, 근로시간, 산업, 직업, 노동조합 등)뿐만 아니라, 직업훈련 및 자격증 취득 경험, 교육·기술·전공 미스매치 등의 변수들을 추가하여 타 연구들과 비교하여 정확한 추정값을 얻고자 한다.

$$\begin{aligned} \log(wage)_i = & \beta_0 + \beta_1 sex_i + \beta_2 age_i + \beta_3 age_i^2 + \beta_4 edu + \beta_5 marry_i + \beta_6 house_i + \\ & \beta_7 jobstat_i + \beta_8 size_i + \beta_9 workhour_i + \beta_{10} san_i + \\ & \beta_{11} jobunion_i + \beta_{12} ojt_i + \beta_{13} licence_i + \beta_{14} edumis_i + \beta_{15} skillmis_i + \\ & \beta_{16} majormis_i + \epsilon_i \end{aligned} \quad (3)$$

IV. 인천지역 청년층의 첫 일자리 주요 특성 및 분포

일자리 질은 단순히 노동시장의 한두 가지 지표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 혹은 한 지역의 사회·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파악해야 할 개념이다(박현정 2010).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는 동일 근로시간 대비 높은 수준의 임금 혹은 고용 안정성을 통해서 일자리 질을 측정하는 반면에 사회학에서는 업무의 성취감, 만족감, 숙련, 자율성 등을 기준으로 일자리 질을 측정한다(김영민 2014). 본 장에서는 자료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임금, 일자리 지속 기간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한다.

본 장에서는 앞서 III장에서 설명한 분석자료를 기준으로 첫 일자의

주요 특성과 분포를 살펴보고자 한다. 청년패널 1차(2007년)~13차 자료의 직업력 자료를 활용하여 2000년 이후 노동시장에 진입한 경험이 있는 모든 표본(케이스)을 추출하였다. 하지만 직업력 자료는 패널자료의 형태로 구축되어 있어 한 사람이 매년 일자리 내용(상태)이 누적되어 쌓여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첫 일자리부터 현재 일자리까지 모든 일자리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 그러므로, 다시 첫 일자리인 경우만을 추출하여 최종적으로 수도권 지역 3,608명(서울 1,995명, 인천 390명, 경기 1,223명)의 표본자료를 구축하였다.

인천지역 소재 기업에 첫 일자리로 취업한 청년층의 인구학적 특성 분포를 보면([표 2]), 남성이 47.9%로 여성(52.1%)보다 4.2%p 낮고,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 학력층이 40.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첫 일자리 진입 시점에서의 연령별 분포는 20~24세가 50.0%, 25~29세가 34.9%로 높았으며, 진입 시점에서의 평균 연령은 23.3세로 나타났다. 다

[표 2] 인천지역 첫 일자의 인구학적 특성 분포

(단위: 명, %, 세)

구분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전체		3,608	1,995	390	1,223
성별	남성	47.7	44.5	47.9	52.8
	여성	52.3	55.5	52.1	47.2
학력	고졸 이하	28.6	25.4	38.2	30.7
	전문대졸	20.4	20.1	21.8	20.5
	대졸 이상	51.0	54.5	40.0	48.8
연령	20세 미만	8.8	7.9	12.1	9.3
	20~24세	47.8	47.2	50.0	48.0
	25~29세	40.5	42.0	34.9	39.8
	30세 이상	2.9	2.9	3.1	2.9
	평균 연령	23.9	24.1	23.3	23.9

자료(설명): 학력 및 연령은 첫 일자리 경험(진입) 시점 기준임(이하 표 및 그림에서는 생략).

자료(출처): 청년패널2007(YP2007)

음으로 기업규모를 보면([표 3], [표 4]), 전체적으로 소기업이 49.7%, 중기업이 15.4%, 대기업이 34.9%로 나타났으며, 성별로 보더라도 소기업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을 기준으로 기업 규모별 취업 비율을 보면 고졸 이하 학력층에서는 소기업 취업 비율이 65.1%로 가장 높고, 대기업으로의 취업은 25.5%로 나타났으며, 중기업 취업 비율은 9.4%에 머물렀다. 전문대졸 학력층의 경우는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취업 비율이 각각 42.4%, 24.7%, 32.9%로 나타났지만, 대졸 이상 학력층의 경우, 대기업 취업 비율이 44.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소기업 비율이 39.1%였고, 중기업은 16.0%로 가장 낮았다.

[표 3] 인천지역 첫 일자리의 기업규모 분포(성별)

(단위: 명, %)

구분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3,608	1,720	1,888	1,995	887	1,108	390	187	203	1,223	646	577
소기업	44.8	44.3	45.3	46.4	45.7	46.9	49.7	49.2	50.2	40.8	41.0	40.6
중기업	18.7	18.7	18.6	18.1	17.9	18.3	15.4	16.0	14.8	20.5	20.4	20.6
대기업	36.5	37.0	36.0	35.5	36.4	34.7	34.9	34.8	35.0	38.7	38.5	38.8

자료(설명): 기업체 규모는 소기업은 50인 미만, 중기업은 50-299인, 대기업은 300인 이상으로 함
(이하 표에서는 생략).

자료(출처): 청년패널2007(YP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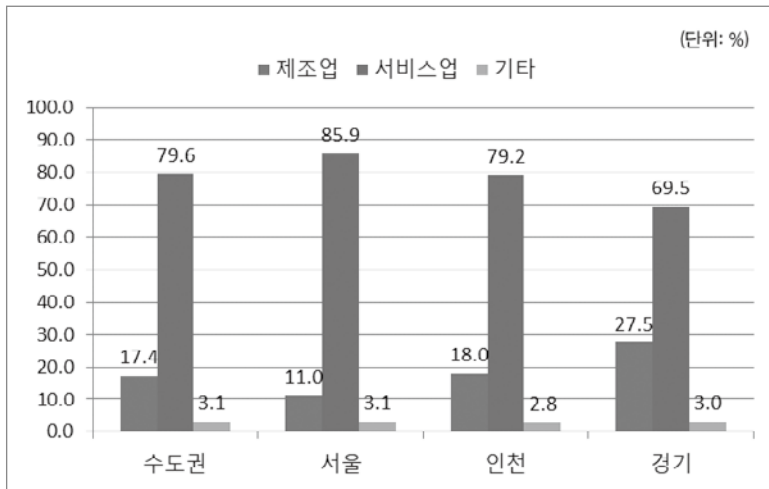
[표 4] 인천지역 청년층의 첫 일자리 기업규모 분포(학력별)

(단위: 명, %)

구분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고졸 이하	전문대 졸	대졸 이상	고졸 이하	전문대 졸	대졸 이상	고졸 이하	전문대 졸	대졸 이상	고졸 이하	전문대 졸	대졸 이상
전체	1,031	737	1,840	507	401	1,087	149	85	156	375	251	597
소기업	58.4	51.7	34.5	61.1	57.1	35.5	65.1	42.4	39.1	52.0	46.2	31.5
중기업	14.2	18.6	21.2	14.8	14.0	21.3	9.4	24.7	16.0	15.2	23.9	22.4
대기업	27.4	29.7	44.3	24.1	28.9	43.2	25.5	32.9	44.9	32.8	29.9	46.1

자료(출처): 청년패널2007(YP2007)

인천지역 소재 기업에 첫 일자리로 취업한 청년층의 산업 분포(그림 1)에서는 제조업이 18.0%, 서비스업이 79.2%로 나타나, 서비스업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하지만 제조업이 차지한 비율이 수도권 전체(17.4%)와 서울(11.0%)과 비교해 보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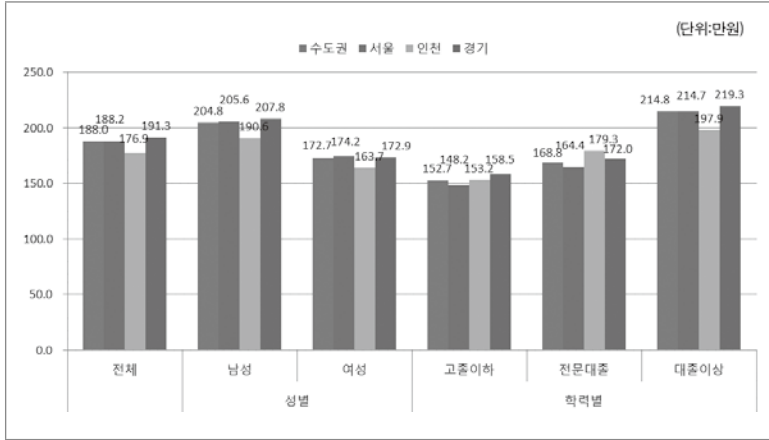


[그림 1] 인천지역 청년층의 첫 일자리 산업 분포

자료(출처): 청년패널2007(YP2007)

인천지역 청년 취업자의 첫 일자리 월평균 소득(실질임금)은 176.9만 원으로 남성은 190.6만 원, 여성은 163.7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가 26.9만 원으로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85.9%를 차지한다. 반면 서울의 경우 첫 일자리 월평균 소득은 188.2만 원으로 남성은 205.6만 원, 여성은 174.2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가 31.4만 원으로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84.7%를 차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인천지역 청년 취업자의 월평균 소득수준은 서울 및 경기지역과 비교해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첫 일자리 월평균 소득을 학력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인천지역의 경우, 대졸 이상 학

력층은 197.9만 원, 전문대졸은 179.3만 원, 고졸 이하는 153.2만 원으로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가 상당 수준 존재하고 있다.



[그림 2] 인천지역 청년층의 첫 일자리 월평균 소득(성별/학력별)

자료(출처): 청년패널2007(YP2007)

[표 5] 인천지역 청년층의 첫 일자리 지속 기간 분포(성별)

(단위: %, 개월)

구분		1년 미만	1~2년 미만	2~4년 미만	4년 이상	평균(개월)
수도권	전체	13.4	20.5	24.5	41.7	57
	남성	12.8	18.5	27.0	41.7	57
	여성	13.9	22.3	22.2	41.6	56
서울	전체	14.8	21.7	24.5	39.1	54
	남성	14.2	18.9	27.1	39.8	56
	여성	15.3	23.8	22.4	38.5	53
인천	전체	12.6	21.3	21.5	44.6	60
	남성	9.1	20.3	23.5	47.1	63
	여성	15.8	22.2	19.7	42.4	58
경기	전체	11.3	18.4	25.4	44.9	59
	남성	11.9	17.5	27.9	42.7	57
	여성	10.6	19.4	22.7	47.3	61

자료(출처): 청년패널2007(YP2007)

인천지역 청년층의 첫 일자리 지속 기간을 분석해 보면(표 5), 평균 지속 기간은 60개월이며, 남성이 63개월, 여성은 57개월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지속 기간이 길게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54개월의 평균 지속 기간을 보이고 있고, 경기도는 59개월 나타났으며, 수도권 평균은 57개월로 나타났다.

V. 인천지역 청년층의 고용의 질 결정요인

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보면, 첫째, 첫 일자리 진입 시점에서의 평균 연령은 26.5세이고, 남성의 비율은 48%로 여성의 비율보다 4%p 낮게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고졸 이하 36%, 전문대졸 24%, 대졸 이상 40%로 나타났고, 기혼자가 20%, 가구주인 경우가 21%로 나타났으며, 직업훈련 및 자격증 취득 경험자가 각각 10%, 49%로 나타났다. 둘째, 직업 속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종사상지위에서 상용직이 73%로 임시/일용직(27%)보다 높았으며, 기업체 규모에서는 소기업 49%, 중기업 15%, 대기업 36%로 나타났고, 산업에서는 제조업이 19%, 서비스업이 79%로 나타났다. 또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4.1시간,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이 15%로 나타났다. 셋째, 미스매치³⁾와 관련해서는 학력 미스매치(부족+과잉), 기술 미스매

3) 미스매치의 판단 기준은 주관적 평가방식을 적용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교육 수준, 기술 수준, 전공 일치 등 3가지로 항목으로 구분하여 미스매치를 측정하였다. 청년패널조사에서는 5개 범주로 그 정도를 응답받고 있는데, 교육 수준 및 기술 수준의 경우 “① 수준이 아주 낮다, ② 수준이 낮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미스매치 상태 중 “학력 과잉 및 기술 과잉”으로, “④ 수준이 높다, ⑤ 수준이 아주 높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미스매치 상태 중 “학력 부족 및 기술 부족”으로 보았다. 그리고 “③ 수준이 적절하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비(非) 미스매치로 “적정 학력 및 적정기술”로 간주하였다. 전공 일치の場合は “① 전혀 맞지 않다, ② 맞지 않다”라고 응답한 경우 미스매치 상태로, “③ 그런대로 맞다, ④ 맞는다, ⑤ 아주

치(부족+과잉), 전공 미스매치 각각 28%, 27%, 22%로 나타났으며, 입직 시점별 비율에서는 2000~2010년에 입직한 비율이 43%, 2011~2013년에 입직한 비율은 18%, 2014~2016년에 입직한 비율이 20%, 2017~2019년에 입직한 비율은 19%로 나타났다.

[표 6] 기초통계량(수도권=3,457명, 서울=1,906명, 인천=377명, 경기=1,174명)⁴⁾

변수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평균, 비율	표준 편차	평균, 비율	표준 편차	평균, 비율	표준 편차	평균, 비율	표준 편차
남성		0.48	0.50	0.44	0.50	0.48	0.50	0.52	0.50
연령		26.66	4.73	26.60	4.62	26.46	5.46	26.83	4.65
학력	고졸 이하	0.26	0.44	0.22	0.42	0.36	0.48	0.29	0.45
	전문대졸	0.21	0.41	0.21	0.41	0.24	0.43	0.21	0.41
	대졸 이상	0.53	0.50	0.57	0.50	0.40	0.49	0.50	0.50
기혼		0.18	0.38	0.16	0.37	0.20	0.40	0.19	0.39
가구주		0.20	0.40	0.19	0.39	0.21	0.41	0.21	0.41
종사상지위(상용직)		0.79	0.41	0.79	0.41	0.73	0.44	0.82	0.39
기업 규모	소기업	0.44	0.50	0.45	0.50	0.49	0.50	0.40	0.49
	중기업	0.19	0.39	0.19	0.39	0.15	0.36	0.20	0.40
	대기업	0.38	0.48	0.37	0.48	0.36	0.48	0.40	0.49
지역	서울	0.55	0.50	-	-	-	-	-	-
	인천	0.11	0.31	-	-	-	-	-	-
	경기	0.34	0.47	-	-	-	-	-	-
주당 근로시간		44.01	9.57	43.84	9.69	44.07	9.08	44.26	9.53
직업	제조업	0.18	0.39	0.12	0.33	0.19	0.39	0.28	0.45
	서비스업	0.79	0.41	0.85	0.36	0.79	0.41	0.69	0.46
	기타산업	0.03	0.17	0.03	0.17	0.03	0.17	0.03	0.17

잘 맞다”는 비(非) 미스매치 상태로 보았다. 또한 미스매치 중 학력/기술 수준에서 “과잉”인 경우는 하향취업으로, “부족”인 경우는 상향취업 상태로 간주하였다(황광훈 2019).

- 4) 앞서 IV장에서 분석자료의 최종 표본 수는 수도권 3,608명, 서울 1,955명, 인천 390명, 경기 1,223명이었으나, 본 절의 실증 분석에서는 일부 설명변수에서 결측값 등이 발생하여 실증 분석에서 사용된 표본 수는 전국기준 수도권 3,457명, 서울 1,906명, 인천 377명, 경기 1,174명이 되었다.

변수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평균, 비율	표준 편차	평균, 비율	표준 편차	평균, 비율	표준 편차	평균, 비율	표준 편차
노동조합 유			0.18	0.38	0.18	0.38	0.15	0.36	0.19	0.40
직업훈련경험 유			0.12	0.33	0.13	0.33	0.10	0.30	0.12	0.33
자격증 유			0.52	0.50	0.53	0.50	0.49	0.50	0.53	0.50
미스 매치	학력	적정학력	0.74	0.44	0.75	0.43	0.72	0.45	0.73	0.44
		학력부족	0.12	0.32	0.11	0.31	0.12	0.32	0.13	0.34
		학력과잉	0.14	0.35	0.14	0.34	0.16	0.37	0.14	0.35
	기술	적정기술	0.75	0.43	0.76	0.43	0.72	0.45	0.74	0.44
		기술부족	0.11	0.31	0.10	0.31	0.12	0.33	0.11	0.32
		기술과잉	0.14	0.35	0.14	0.35	0.15	0.36	0.15	0.35
전공일치			0.80	0.40	0.81	0.39	0.78	0.41	0.80	0.40
로그실질월평균임금			5.27	0.49	5.27	0.49	5.20	0.49	5.29	0.48
입직 시점	2000-2010년	0.43	0.49	0.43	0.49	0.46	0.50	0.42	0.49	
	2011-2013년	0.18	0.39	0.19	0.39	0.17	0.37	0.18	0.38	
	2014-2016년	0.20	0.40	0.20	0.40	0.20	0.40	0.21	0.41	
	2017-2019년	0.19	0.39	0.19	0.39	0.17	0.38	0.20	0.40	

[표 기는 청년층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지역으로 구분하여 첫 일자리 지속 기간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이다.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천지역을 분석한 결과, 다른 조건이 일정한 상태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첫 일자리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크고 학력이 높을수록 일자리 이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상용적인 경우 임시/일용직보다 이탈 가능성이 작고, 노동조합이 있거나 자격증 취득 경험에 있는 경우 이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전공이 일치할 때, 이탈 가능성이 크고,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일자리 이탈 가능성은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입직 시점별로 보면, 2014~2016년 사이에 입직한 경우 일자리 이탈 가능성이 크지만, 최근 시점인 2017~2019

년 사이에 취업한 경우는 이탈 가능성이 매우 작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서울을 분석한 결과, 다른 조건이 일정한 상태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첫 일자리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크고, 첫 일자리 진입 시점 연령은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근로시간이 길어질수록, 직업훈련 및 자격증 취득 경험이 있는 경우 일자리 이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가구주인 경우, 상용직이거나 대기업 종사자일 때, 각각 가구원, 임시/일용직, 소기업보다 이탈 가능성이 작고, 전공 일치인 경우나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일자리 이탈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경기지역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다른 조건이 일정한 상태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첫 일자리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크고, 학력이 높을수록, 근로시간이 길어질수록 이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가구주인 경우, 상용직인 경우, 대기업 종사자인 경우는 각각 가구원, 임시/일용직, 소기업보다 이탈 가능성이 작다.

인천지역의 특징은 수도권 및 서울, 경기지역보다 고소득 근로자일수록 이탈 가능성이 작고, 전공 일치도가 높은 근로자일수록 이탈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된다. 전공 일치인 근로자의 이탈 가능성이 큰 것은 고학력 근로자 계층에서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지역의 경우 타 수도권 지역보다 고학력 청년층 중 일부는 전공과 일자리가 관련성은 높지만, 일자리의 질은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남성 및 고학력자들 중 대기업 및 고용안정이 보장된 1차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중소기업, 임시/일용직 등 2차 노동시장에 진입한 상당수의 청년층이 이탈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인천지역 청년층 중 고학력 계층 일부는 첫 일자리에서 이탈하여 경기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임시/일용직, 소기업보다 이탈 가능성 작고,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일자리 이탈 가능성은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 콕스 비례위험모형 추정(인천지역 첫 일자리의 지속 기간 결정요인)

구분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추정치	표준오차	위험비	추정치	표준오차	위험비	추정치	표준오차	위험비	추정치	표준오차	위험비
남성(기준:여성)	0.544***	0.050	1.724	0.617***	0.067	1.854	0.631***	0.165	1.880	0.510***	0.088	1.666
연령	0.103*	0.066	1.109	0.205**	0.099	1.227	-0.130	0.193	0.878	0.077	0.115	1.080
연령제곱	-0.007***	0.001	0.993	-0.010***	0.002	0.990	-0.004	0.004	0.996	-0.007***	0.002	0.993
학력	0.408***	0.071	1.503	0.376***	0.101	1.456	0.594***	0.205	1.811	0.472***	0.119	1.602
(기준:고졸 이하)	1.102***	0.073	3.010	1.195***	0.103	3.305	1.150***	0.233	3.157	1.059***	0.122	2.882
대졸 이상	-0.048	0.072	0.953	-0.070	0.100	0.933	0.292	0.230	1.339	-0.152	0.125	0.859
기혼(기준:미혼)	-0.265***	0.072	0.767	-0.205**	0.098	0.815	-0.348	0.223	0.706	-0.367***	0.127	0.693
가구주(기준:가구원)	-0.469***	0.065	0.626	-0.577***	0.088	0.562	-0.316*	0.187	0.729	-0.466***	0.122	0.628
상용직(기준:임시/일용직)	-0.016	0.062	0.984	-0.083	0.083	0.920	0.125	0.210	1.133	-0.009	0.110	0.991
기업체 규모	-0.265***	0.060	0.767	-0.123	0.081	0.884	-0.318	0.202	0.728	-0.425***	0.107	0.654
(기준:소기업)	-0.168**	0.074	0.845	No	No	No	No	No	No	No	No	No
기업체 소재지	-0.231***	0.051	0.794	No	No	No	No	No	No	No	No	No
(기준:서울)	0.007***	0.002	1.007	0.005*	0.003	1.005	0.002	0.008	1.002	0.011***	0.004	1.011
주당 총 근로시간	0.057	0.065	1.059	-0.021	0.097	0.979	0.161	0.202	1.174	0.139	0.100	1.149
산업	0.315**	0.133	1.370	0.138	0.187	1.148	-0.291	0.455	0.748	0.742***	0.220	2.100
(기준:제조업)												

노동조합 있음(기준:없음)	-0.036	0.075	0.965	-0.258**	0.105	0.773	0.519**	0.260	1.680	0.198	0.125	1.219
직업훈련 경험 있음 (기준:없음)	0.210***	0.070	1.233	0.256***	0.092	1.291	-0.030	0.245	0.971	0.150	0.129	1.162
자각증 있음(기준:없음)	0.123***	0.047	1.131	0.182***	0.063	1.199	0.218*	0.149	1.244	0.032	0.084	1.032
학력 mismatch (기준: 적정 학력)	학력 부족	0.092	0.852	-0.183	0.125	0.833	-0.021	0.279	0.979	-0.112	0.162	0.894
		-0.037	0.086	0.963	-0.103	0.116	0.216	0.252	1.241	0.115	0.162	1.122
기술 mismatch (기준:적정기술)	기술 부족	0.090	1.220	0.337***	0.118	1.400	0.093	0.276	1.097	-0.014	0.168	0.986
		0.093	1.098	-0.086	0.120	0.918	0.161	0.248	1.175	0.240	0.157	1.271
전공 일치(기준: 전공 불일치)	-0.112*	0.063	0.894	-0.335***	0.084	0.716	0.378**	0.188	1.459	0.106	0.114	1.112
월평균 소득(로그값)	-0.654***	0.068	0.520	-0.751***	0.095	0.472	-0.947***	0.230	0.388	-0.552***	0.126	0.576
입직 시점 (기준: 2000~2010년)	2011~2013년	0.092	1.096	-0.044	0.080	0.957	0.265	0.197	1.304	0.363***	0.109	1.438
	2014~2016년	0.085	1.089	-0.106	0.083	0.899	0.437**	0.206	1.548	0.333***	0.116	1.395
	2017~2019년	-0.227**	0.094	0.797	-0.254**	0.121	0.776	0.312	0.569	-0.060	0.176	0.942
-2 LogL	29,461.58											
LR 검정 통계량	2,750.69***											
N	3,457											
	1,906											
	377											
	8,188.97											
	891.31***											
	1,174											

주: ***, **, *는 각각 유의수준 0.001, 0.01, 0.05에서 유의함

다음으로 [표 8]은 첫 일자리의 임금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이며,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인천지역 분석 결과, 다른 조건이 일정한 상태에서 남성일수록,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임금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상용직인 경우, 가구주인 경우,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기준집단(임시/일용직, 가구원, 노동조합 없음)보다 임금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미스매치와 관련해서는 기술 과잉 미스매치 상태의 청년 취업자의 경우 기준집단(적정기술)과 비교하여 11.0%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전공 일치와 관련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입직 시점에 따른 추정 결과를 보면, 기준시점(2000~2010년)과 비교하여 2014~2016년 사이에 입직한 경우 9.7%의 임금 상승효과가 발생하였고, 2017~2019년에 입직한 청년층의 임금은 17.2%의 임금상승 효과가 발생하였다. 다음으로 서울지역을 분석한 결과, 다른 조건이 일정한 상태에서 남성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주인 경우, 기업체 규모가 큰 경우,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임금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산업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미스매치와 관련해서는 기준집단(적정 학력, 적정 기술)과 비교하여 학력 부족 미스매치와 기술부족 미스매치는 각각 4.8%, 5.9%의 임금상승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학력 과잉 및 기술 과잉 미스매치는 각각 7.8%, 9.2%의 임금손실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전공 일치 집단은 전공 불일치 집단보다 5.0%의 임금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경기지역의 경우 서울지역과 유사한 추정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인천지역의 경우 수도권 전체, 서울, 경기지역과 비교하여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의 추정계수값 방향과 영향 정도가 비교적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고용 형태의 경우 기준집단(임시/일용직)보다 상용직이 19.8%의 임금상승 효과를 보였지만, 서울은 32.7%, 경기는

[표 8] OLS 추정(인천지역 첫 일자의 임금 결정요인)

구분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남성(기준:여성)	0.058***	0.012	0.045***	0.016	0.052	0.039	0.068***	0.020
연령	0.012	0.011	0.027*	0.015	0.025	0.031	-0.014	0.019
연령제곱	0.000**	0.000	0.000	0.000	0.000	0.001	0.001***	0.000
학력(기준:고졸 이하)	0.036**	0.016	0.043*	0.023	0.011	0.049	0.028	0.027
	0.088***	0.016	0.094***	0.023	-0.009	0.051	0.101***	0.025
기혼(기준:미혼)	0.055	0.017	0.089***	0.023	0.044	0.055	0.000	0.028
가구주(기준:가구원)	0.097***	0.015	0.103***	0.020	0.097*	0.050	0.100***	0.025
상용직(기준:임시/일용직)	0.298***	0.015	0.317***	0.020	0.197***	0.044	0.303***	0.027
기업체 규모(기준:소기업)	0.084***	0.015	0.065***	0.020	0.126**	0.052	0.113***	0.025
	0.172***	0.013	0.173***	0.018	0.124***	0.042	0.193***	0.023
기업체 소재지(기준:서울)	-0.039**	0.018	No	No	No	No	No	No
	-0.022*	0.012	No	No	No	No	No	No
주당 총 근로시간	0.009***	0.001	0.007***	0.001	0.013***	0.002	0.010***	0.001
산업(기준:제조업)	-0.067***	0.014	-0.036	0.022	-0.006	0.046	-0.107***	0.021
	0.020	0.033	0.002	0.046	0.096	0.107	0.038	0.055

[표 8] OLS 추정(인천지역 첫 일자리의 임금 결정요인)

구분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노동조합 있음(기준:없음)	0.123***	0.015	0.146***	0.021	0.205***	0.053	0.066***	0.025
직업훈련 경험 있음(기준:없음)	-0.010	0.016	-0.041*	0.021	-0.006	0.056	0.049*	0.028
자격증 있음(기준:없음)	0.005	0.011	0.007	0.014	0.024	0.035	-0.005	0.018
학력미스매치 (기준:적정학력)	0.048**	0.019	0.040*	0.026	0.003	0.062	0.058*	0.031
	-0.078***	0.022	-0.049*	0.030	-0.034	0.066	-0.144***	0.036
기술미스매치 (기준:적정기술)	0.059***	0.020	0.063**	0.027	0.090	0.062	0.058*	0.033
기술 과잉	-0.092***	0.022	-0.087***	0.030	-0.110**	0.066	-0.089**	0.036
전공일치(기준:전공불일치)	0.050***	0.015	0.040*	0.021	0.073	0.046	0.052**	0.026
입직시점 (기준:2000~2010년)	0.049***	0.015	0.041**	0.020	0.035	0.049	0.071***	0.025
	0.097***	0.015	0.091***	0.020	0.097**	0.048	0.105***	0.025
	0.163***	0.015	0.148***	0.020	0.172***	0.051	0.176***	0.026
상수항	3.784***	0.153	3.596***	0.211	3.361***	0.438	4.101***	0.263
표본수	3,457		1,906		377		1,174	
Adj R-Sq	0.604		0.608		0.589		0.609	

주 : ***, **, *는 각각 유의수준 0.001, 0.01, 0.05에서 유의함

32.4%의 임금상승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서울과 경기지역보다 인천은 상대적으로 고용 형태에 따른 임금 격차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오히려 인천지역의 임시/일용직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다른 수도권 지역보다 높아서 발생했다기보다는 상용직의 임금이 타 수도권 지역에 비해 낮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기업체 규모에 따른 임금효과를 보더라도 인천지역에서의 대기업 종사자의 임금상승 효과는 타 수도권 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인천지역의 경우 대기업, 상용직 등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의 임금수준이 서울, 경기지역과 비교하여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고용 형태 및 기업규모 간 임금 격차도 줄여나가야 함과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도 확대해 나가야 하겠다.

VI.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YP2007) 1~13차 직업력 자료와 전체자료 연결자료를 이용하여 인천지역 노동시장에 진입한 청년층 일자리의 분포 및 특징들을 분석하고, 일자리 지속 기간 및 임금 등과 같은 일자리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무엇이고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천지역 청년 취업자의 첫 일자리 월평균 소득(실질임금)은 176.9만 원으로 남성은 190.6만 원, 여성은 163.7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가 26.9만 원으로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85.9%를 차지한다. 반면 서울의 경우 첫 일자리 월평균 소득은 188.2만 원으로 남성은 205.6만 원, 여성은 174.2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가 31.4만 원으로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84.7%를 차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인천지역 청년 취업자의 월평균 소득수준은 서울 및 경기지역과 비교해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천지역 청년층의 첫 일자리 지속 기간을 분석해 보면, 평균 지속 기간은 60개월이며, 남성이 63개월, 여성은 57개월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지속 기간이 길게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54개월의 평균 지속 기간을 보이고 있고, 경기는 59개월 나타났으며, 수도권 평균은 57개월로 나타났다.

셋째, 청년층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지역으로 구분하여 첫 일자리 지속 기간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인천지역의 특징은 수도권 및 서울, 경기지역보다 고소득 근로자일수록 이탈 가능성이 작고, 전공 일치도가 높은 근로자일수록 이탈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된다. 전공일치인 근로자의 이탈 가능성이 큰 것은 고학력 근로자 계층에서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지역의 경우 타 수도권 지역보다 고학력 청년층 중 일부는 전공과 일자리 관련성은 높지만, 일자리의 질은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남성 및 고학력자들 중 대기업 및 고용안정이 보장된 1차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중소기업, 임시/일용직 등 2차 노동시장에 진입한 상당수의 청년층이 이탈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인천지역 청년층 중 고학력 계층 일부는 첫 일자리에서 이탈하여 경기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넷째, 인천지역의 경우 수도권 전체, 서울, 경기지역과 비교하여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의 추정계수값 방향과 영향 정도가 비교적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고용 형태의 경우 기준집단(임시/일용직)보다 상용직이 19.8%의 임금상승 효과를 보였으나, 서울은 32.7%, 경기는 32.4%의 임금상승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서울과 경기지역보다 인천은 상대적으로 고용 형태에 따른 임금 격차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오히려 인천지역의 임시/일용직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다른 수도권 지역보다 높기 때문이 아닌 상용직의 임금이 타 수도권 지역에 비해 낮

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기업체 규모에 따른 임금효과를 보더라도 인천지역에서의 대기업 종사자의 임금상승 효과는 타 수도권 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인천지역의 경우 대기업, 상용직 등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의 임금수준이 서울, 경기지역과 비교하여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고용 형태 및 기업규모 간 임금 격차도 줄여나가야 함과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도 확대해 나가야 하겠다.

지역을 세분화시켜 청년 일자리의 질을 분석하더라도 여전히 저학력, 여성, 임시/일용직 등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는 불안정하거나 열악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성별, 학력별, 기업규모별, 고용 형태별 임금 격차가 상당 수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인천지역의 경우 같은 수도권 내에 있는 서울 및 경기지역보다 양질의 일자리 기반이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지역 청년층의 인구 유출 현상을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인천광역시가 주도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해서 생산해 나가야 한다. 특히 상용직 일자리의 비중을 점차 늘려나가야 하므로, 일시적/임시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에서 벗어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인천지역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인천공항 여객 관련 종사자의 휴직 및 실직 등 고용상태가 매우 불안정하거나 이미 이·전직을 시도하는 등 고용 여건이 어려운 상태이다. 이러한 공항 경제권 위축에 따라 대량실업 발생 위기에 직면한 상태이므로 노동시장의 정책을 단기 및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단기에서는 위기의 청년 근로자 및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안정 및 유지 지원 서비스가 선제적으로 강화되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지역의 주력산업과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 청년에게 취업 지원 교육 및 컨설팅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의 연계를 통해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내 산업단지의 첨단화 및 고도화를 통해 지역의 청년층이 내실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단지의 노후화와 생산성 저하, 산업단지 입지 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청년층 기피 현상 등은 국제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자동차·조선·전자 등 국내 주력산업의 위기 등으로 인해 성장동력이 하락하고 있어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황승진 외 2019).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청년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산업 단지 내 기업들이 친환경 미래산업, 고용친화적 신산업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산업육성정책이 수립 및 실행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김영민. 2014. 『지역별 일자리 질의 현황 및 추이 분석』. 산업연구원.
- 박현정. 2010. 『고용의 질 측정방법 연구』. 통계개발원.
- 신정우·김태현·이미숙. 2017. 「이산선택모형을 이용한 경남지역 청년의 취업상태 결정요인 분석」. 산업경제연구 30(5): 1837-1854.
- 안은경·이희연. 2015. 「지역노동시장권별 창업에 의한 일자리 창출 격차 및 일자리 질 비교」.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8(2): 168-189.
- 안주엽·홍서연. 2002. 「청년층의 첫 일자리 진입 : 경제위기 전후의 비교」. 노동경제논집 25(1): 47-74.
- 이대웅·손주희·이소담·권기현. 2015.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결정요인 분석-위계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4(4): 125-154.
- 이상은. 2005. 「청년들에 대한 직업훈련의 취업 및 근로소득 효과」. 사회복지정책 23: 5-28
- 정성배·이지우. 2018. 「대졸자의 괜찮은 일자리 취업 영향 요인 지역 비교」. 지역사회연구 26(4): 189-206.
- 조윤서. 2021. 「4년제 대학졸업자의 취업준비행동이 취업 및 괜찮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 133-161.
- 조장식·강창환·최승배. 2015. 「Cox의 혼합모형을 이용한 대졸취업자의 재직기간 분석」. 한국자료분석학회 17(3): 1337-1346.
- 최문석·송일호. 2019. 「청년층의 교육 및 전공불일치가 임금과 직장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6(2): 85-102.
- 황광훈. 2019. 「청년층의 이직 결정요인 및 임금효과 분석」. 직업능력개발연구 22(1): 137-172.
- _____. 2020. 「첫 일자리 이탈 영향요인 분석」. 노동경제논집 43(2): 41-74.
- _____. 2020. 「청년층의 이직 결정요인 및 임금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충북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20. 「청년층의 지역 간 인구이동 현황 및 특징」. 고용조사브리프 2020년 봄호. 한국고용정보원.
- 청년패널2007(YP2007).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조사 분석시스템(<http://survey.keis.or.kr>).

국 문 초 록

인천지역 청년층의 일자리 특성 및 고용의 질 분석

황광훈(한국고용정보원 중앙일자리평가팀 부연구위원)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YP2007) 1~13차 직업력 자료와 전체자료 연결자료를 이용하여 인천지역 노동시장에 진입한 청년층의 일자리 분포 및 특징들을 분석하고, 일자리 지속 기간 및 임금 등과 같은 고용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수도권 및 서울, 경기지역에 비해 남성, 고소득 근로자일수록 이탈 가능성이 더 낮고, 전공 일치도가 높은 근로자일수록 이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다른 조건이 일정한 상태에서 남성일수록,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상용직, 가구주,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임금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인천지역의 경우 같은 수도권내에 있는 서울 및 경기지역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 기반이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추정되며, 인천지역 청년층의 인구유출 현상을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인천광역시도 주도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생산해 나가야 한다. 특히 상용직 일자리의 비중을 점차 늘려나가야 하므로, 일시적/임시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에서 벗어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주제어: 고용의 질, 생존분석, 콕스 비례위험모형, OLS

Abstract

Analysis of Job Characteristics and Employment Quality of Youth in the Incheon Area

Hwang, Kwanghoon(Associate Research Fellow, Job program Evaluation &
Analysis Division, Korea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This study analyzed the job distribution and characteristics among young people who entered the Incheon area labor market using linked data on occupational history from the 1st to 13th rounds of the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s Youth Panel (YP2007). The results show that compared to the metropolitan area, Seoul, and Gyeonggi regions, male and high-income workers have a lower probability of leaving, and workers with a high degree of major matching have a higher chance of leaving. In addition, other conditions were constant: the more men, the larger the company, and the higher the wages in the case of regular workers, householders, and labor unions, Incheon lacks a decent job base compared to Seoul and Gyeonggi regions in the same metropolitan area; therefore, to alleviate the population outflow of young people in the Incheon area and to create high-quality jobs, Incheon Metropolitan City must take the lead and continuously produce high-quality jobs in connection with the central government's financially supported job projects. In particular, as the proportion of regular jobs gradually increases,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a policy to create quality jobs beyond temporary job creation policies.

Key words: Employment quality, survival analysis,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Ordinary Least Square

서평

| 평화의 관점으로 바라본 초국적 이주-난민
『이주와 정치: 다문화사회의 이민정치와 이주평화학의 모색』
한준성 지음. 2022. 서울: 당대.
정진현

평화의 관점으로 바라본 초국적 이주-난민

『이주와 정치: 다문화사회의 이민정치와 이주평화학의 모색』

한준성 지음. 2022. 서울: 당대.

정진현*

정
진
현

“노동력을 불렀더니 사람이 왔네”

2009년 늦가을 독일 괴팅겐市 오래되고 분주한 상가 골목에서 ‘Pung(퐁)’이라는 가게를 만났다. 쇼윈도 너머로 고급 일본식도 세트와 고풍스러운 동양 찻잔 세트가 전시되어 있었다. ‘퐁’이라는 가게 이름은 웬지 모르게 한국 사람이 지은 것 같았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밝고 경쾌한 풍경소리가 울렸다. 가게 안 선반에는 도자기 그릇들과 요리용 기구들이 동양미를 뽐내고 있었다. 단아한 미소의 여주인은 내가 한국인 인지 단번에 알아맞히었다. 내가 파독간호사 출신 동포를 처음 만난 순간이었다.

그리고 지난해인 2021년 한국에 돌아오기까지 나는 파독 광부와 간호사 출신 재독한인들의 활동을 참여(관찰)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며, 구술생애사를 모으는 소중한 경험을 가질 수 있었다. 그분들의 삶을 ‘연구’하기보다는 ‘함께’ 활동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장기간의 인류학적 현지 조사를 한 셈이 되었다. 이분들은 어떻게 독일에 정착하게 되었을까, 유럽 냉전의 전선이었던 독일에서의 분단과 통일 과정을 어떻게 경험하고 분석하고 계실까,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남북한 통일을 위한 이분들의 초국적 노력, 즉 사회적 송금(social remittances)은 어떤 성격을

* 現, 국립통일교육원 교수(E-mail: poem04@korea.kr) / 베를린 자유대학교 한국학과 겸임교수,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문화인류학과 박사

떠는 것일까, 등등 다양한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분들의 삶을 궁금하게 했다.

“노동력을 불렀더니 사람이 왔네(Wir riefen Arbeitskräfte, und es kamen Menschen)” 스위스 출신의 작가인 막스 프리슈(Max Frisch)가 했다는 이 문구는, 파독 간호사들이 1970년대 강제 출국 조치에 저항하여 독일 체류를 인정받은 투쟁을 기념하는 책자에 자주 등장한다. 막스 프리슈가 1960년대 유럽의 산업연수생제도(guest worker program)을 비판하며 쓴 표현이기 때문이다. 이 명언은 독일을 비롯한 유럽 사회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자신들의 필요로 불러다 사용하는 소모품으로 여기는 제도적 결함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러한 유럽 지성의 표현을 빌려, 파독 간호사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했고 그래서 인정받게 되었다.

그로부터 20여 년 후인 1995년, 서울 명동성당에서 네팔 출신 노동자를 중심으로 13명 정도가 농성에 돌입했다. 그들은 부당한 처우와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호소문을 발표했다. 그 맨 마지막 문구가 가슴을 저미게 한다.

“저희들은 비록 가난한 나라에서 왔지만, 그래서 한국에서 노예처럼 당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인간존재 그 자체는 가난하지 않습니다.”(1995년 명동성당 이주노동자 농성단 호소문, 본문 60쪽에서 재인용).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대열로 올라선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한다. 국력은 상승하고 한국 문화는 국경 없는 사이버 세계에서 초국적 팬덤을 형성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이미 글로벌화를 주도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성장 위주의 가치관과 국가 정책은 배타적 민족주의와 결

합하여 우리 사회 일부인 이주노동자들을 여전히 하나의 일시적 노동력 (Arbeitskräfte)으로만 여기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더불어 국제적으로 급증하는 난민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포용력도 국격에 걸맞지 않다. 이는 보편적 인간관의 미비함을 방증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한준성 교수의 최근 저작 『이주와 정치』는 저자의 학술적 양심과 인본주의적 시선으로 지난 이주노동사를 냉철하게 분석하며 한국 사회의 현주소를 명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본 서평은 저자의 시선을 따라 책 내용을 요약 소개하면서 향후 더 넓어지고 깊어질 학술적 지평을 간략하게 제안하고자 한다.

학자의 생애가 담긴 구성

이 책은 서문에서 밝혔듯이, 저자의 학자적 여정의 산물이다. 그 때문에 각 논문에는 저자의 냉철한 분석과 관점만이 아니라, 그가 세상을 향해 품은 열정과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애정이 담겨있다. 저자의 글은 매우 정교하게 다듬어진 개념과 논리적 사유를 보여준다. 마치 국가와 자본의 권위로 정당화되는 차별과 배제의 권력들의 허울과 민낯을 드러내려는 청명한 거울 같기도 하다. 그래서 감정의 물결조차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사뭇 건조한 어조인 양 느껴진다.

하지만, 그러한 세심함은 연구 주제에 대한 애정없이 불가능한지도 모른다. 보편적 인간관과 인권에 대한 일관된 고민 없이 국가나 민족, 성장과 안보 같은 명분으로 약자에 대한 차별을 ‘통’치려는 비상식적 논리를 성찰하기 위해서는 차가운 논조가 필요하다. 가슴이 뜨겁기에 가능한 학자의 정체성인 셈이다. 때문에, 이 저서를 읽는 독자들은 저자가 빼곡하게 모아 기술한 팩트와 통계, 사료와 분석적 서술 속에서도 무미건조함 보다는 저자의 애정 어린 치밀함과 고행같이 불태웠을 밤을 떠올릴 것이다. 그러한 열정은 학자적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이주노동자들을 향한 동

지적 지지와 더 정의로운 세상을 향한 따뜻한 염원이 아닐 수 없다.

저자는 총 3부와 보론으로 나누어 이주노동정치사이자 이주평화학을 지향하는 저서의 여정을 담아내고 있다. 제1부에서는 1987년 민주화 운동을 전환점으로 한 한국 사회의 내적 변화 속에서 초국적 이주가 본격화되면서 등장한 이주노동의 현장들을 시간적 흐름으로 다루고 있다.

1장에서는 그래서 1993년까지를 이주노동정치사의 초기로 보고 제도적 통치의 성격 분석과 더불어 시민사회가 어떻게 이를 대처하면서 이주노동운동의 기반을 다지게 되었는지 밝히고 있다. 한국은 1988년 올림픽을 기점으로 여행 자유화가 본격화되면서, 저개발 국가의 유효 노동인력에 관심을 두게 된다. 더불어 해외 노동력의 유입은 국내 자본과 정부가 국내 경제 성장 둔화를 노동운동 확대 탓으로 돌리고, “자국민 근로자에 비해 생산성은 떨어지지만 노조분쟁 우려가 없고 저렴한 인력을 확보”하려는 쉼법으로 통제가 유리한 이방인을 적극적으로 유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21쪽). 이러한 국내 기업의 외국인 노동자 유입과 고용 초기 상황에서 노동계도 조직적 대응을 하지 못한 한계를 보이기도 했다. 한시적 체류 자격을 넘어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되더라도 장기 체류하게 되는 소위 ‘불법’적 신분이 됨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미온적으로 대처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이며 종종 열악한 노동환경과 부당한 착취를 받았지만, 자신과 본국 가족들의 생계와 생존을 위해 감내해야 했다. 저렴한 노동력을 주로 필요로 했던 제조업 분야나 영세 사업체에서는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극한 노동조건으로 내몰았기 때문에 이들은 각종 산업재해의 피해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피해를 당해도 정부의 행정부처들은 ‘생산성-치안’의 통치틀로만 접근했다. 법적 신분의 부재로 인해 보편적 권리마저 취약한 이주노동자들은 임금 체불은 물론 직장 내 폭행과 성희롱, 여권 압수와

불법 신고 등에 노출되었는데, 이들을 위한 보호와 환대는 종교계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가 담당하게 되었다. 이로써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의 시민사회와 노동운동의 지형에 이주노동자들의 존재가 포함되기에 이른다. 저자는 이러한 이주노동 초기의 통치 성격에 대해, “정부는 한편으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불법’취업(고용)을 노동시장 관리 차원에서 묵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연수의 형식을 활용해 ‘편법’적인 방식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그 규모를 키워갔다”고 진단한다.

이렇게 이주노동사 초기부터 형성된 불법성 관리와 편법성 활용이 공존된 한국의 투 트랙 이주노동행정은 저자에 의하면 그 이후로도 지속되고 있다. 이는 고용허가제 등장 배경과 이주노동운동이 본궤도에 오르는 1990년 중후반 이후와 최근까지의 경향을 다룬 2~4장에서 치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본문에서 소개되었듯 한국의 이주노동자 정책은 일본의 모델을 기준으로 시작했다. 필자가 유럽 사례로 참여했던 2011년 이주 인권 관련 비교 연구 프로젝트 결과에 의하면, 일본 모델이 가장 비인권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는 한국 해당 부처와 전문가들의 편향성을 짐작할 만한 대목이다. 상법 분야를 제외하고 헌법부터 다양한 법체계가 독일로부터 시작해 일본과 한국이 공유하는 바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이주민 관련 법안들은 유난히 독일식 접근을 비껴가는 듯하다. 본 서평의 서두에 소개했듯, 독일이 1970년대 실행했던 산업연수생제도도 변화를 거듭하여 더욱 포용적으로 변했다. 하지만, 한국은 ‘현대판 노예제’로 불릴 정도로 가혹한 산업연수생제도를 1990년대 중반까지 유지했다. 이에 대해 한국의 민주화와 인권 향상을 이끌어온 시민단체와 노조, 인권단체들이 이주노동자들을 권리투쟁의 장으로 등장시킴으로써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외노협)를 결성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게 된다.

공식적으로 3년이라는 제한된 기간만 체류와 고용이 허가되던 산업

연수제와 달리, 사업자가 주로 단순 기능 외국인 노동자를 재고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고용허가제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책은 ‘생산성-치안’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저자는 진단한다. 더욱이 그들이 정주할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전제가 있기에, 다문화주의와 이주민에 대한 ‘사회통합’ 접근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은 주체로 등장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 한국 사회의 다문화주의 정책과 담론은 결혼이주자 가정과 그들의 자녀가 주요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을 뿐,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생산성 유지를 위한 도구의 차원을 넘어서 존엄과 권리 그리고 고유한 문화 정체성을 지닌 존재로 인정받지 못했다(127쪽)”는 점을 저자는 안타까운 시선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 책의 2부는 유럽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유럽 내 국가 간의 지역통합과 국가별로 다양한 비유럽 국가에서 온 이주민들과의 사회통합이라는 이중의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지 살피고 있다. 유럽은 근대 민족-국가의 발상지이면서도, 다문화주의 가치를 중요한 어젠다로 삼았던 선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대량 난민이 발생한 2015년을 기점으로 반(反)이주-난민 담론을 기반으로 한 보수 정치세력이 등장하거나, 국가 단위 정체성을 규정하려는 추세가 등장하기도 했다. 지역통합 차원에서는 무엇보다 최근 영국의 EU 탈퇴, 즉 브렉시트가 상징하듯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변화 속의 유럽 사회에서, 저자는 이주민통합 주류화(mainstreaming) 추세와 시민통합(civic integration) 정책의 특색들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주류화 추세’는 이주민 대상 별도의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이들을 포함한 포괄적인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일반 공공정책을 통해서 이주민통합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142쪽). 즉, 이주민들의 고용, 교육, 복지 등의 일반 공공정책 영역들을 이주민 담당 부서가 별도로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 대상 행정단위에서 조

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주류화 추세는 각 나라와 자치단체별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이주 배경과 무관하게 초등학교 진입을 앞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시험을 의무화(145쪽)”한 경우와 같이 공공영역에서의 보편적 시행은 이주민과 선주민 모두에게 고루 적용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주류화 접근을 덴마크 사례로 살핀 저자는, 그 긍정적인 의미에 대해, “이주민에게 동등한 기회를 촉진함으로써 공통의 소속감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164쪽)”는 점에 주목한다. 동시에 이 주류화 정책이 “시민평등 원칙 및 문화다양성 가치와 적극적으로 결합되지 못하면 신자유주의적 거버넌스로 포섭될 수 있다(165쪽)”는 경계 또한 분석으로 내놓고 있다.

한편 서유럽 국가들 중심으로 등장한 시민통합(CI)에 대해서,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시민통합 정책이 유도하는 바는, 이주민들이 거주 사회의 기본적인 언어는 물론 역사, 정치, 문화 등에 대한 기본지식을 갖추도록 하여 안정적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저자는 시민통합정책은 ‘포용’과 ‘제한’의 양가성을 동시에 지니는데, 최근 점점 제한주의로 기울게 되는 경향이 나타남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분석을 치밀하게 서술하고 있다.

2부의 마지막 3장은 스페인의 합법화 정책에 주목한다. 2005년에 시행된 이 정책은 그동안 미등록상태로 ‘불법’ 체류하고 있던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합법적인 고용과 체류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지역경제 및 사회안정에 기여하였다. 사실 불법 고용이 많으면 기업의 탈세도 많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도 건전한 경제 복지정책을 시행할 수 없으며 구성원 간 불평등은 물론, 미등록 이주 가족들은 사회적 구성원으로 건전하게 편입되기 어렵다. 따라서 스페인의 합법화 정책은 국가 및 지역 경제의 안정과 더불어 사회통합의 성과도 높인 것으로 보

인다. 이를 근거로 저자 역시 한국의 이주민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많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의 본문 마지막인 3부는 제3세계의 난민정치라는 제목으로 각각 아프리카와 중남미 사례를 살피고 있다. 한국이나 동아시아 역사 맥락과는 차이가 나는 지역의 사례이기에 독자들의 관심이 제한적일 수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국제 난민레짐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들이기도 하거니와, 전쟁뿐 아니라 자연재해 등을 이유로 계속해서 발생하는 난민들을 위한 초국적 협력은 인류의 과제이기에 학계는 물론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더욱이 한국 사회도 점점 난민 신청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인데, 여전히 매우 저조한 인정률을 보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특정 난민 그룹에 대한 차별적 반대 사태도 있었던 터라 향후 보다 균형적이며 성숙한 인도주의적 난민 정책 마련을 위해서도 비교적 관점에서 타지역 사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탈식민시대 이후 내전과 독재, 자연재해 등 복잡하고 중층적 이유로 꾸준히 발생하는 난민들에 대해 아프리카와 중남미 각각의 역사·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 단위 협약을 맺고 실행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는 정부 차원과 시민사회 차원 모두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저서는 결론 대신 보론으로 마지막 장을 구성하는데, 하나는 다문화주의 논쟁에 대한 이론적 논의이며, 다른 하나는 한국 사회 초기 복지 정치의 유산으로 이어지고 있는 박정희 시대를 다루고 있다. 첫 장의 다문화주의 논쟁과 관련해서는 브라이언 배리와 월 킴리카의 이론적 쟁점들을 비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킴리카가 주로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를 주창했다면 배리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관점에서 다문화주의 이론을 전개했다. 한국에서는 다문화주의가 사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전파되는 탑다운 정책이자 그 대상 면에서도 이주민 공동체나 개인보다는 결혼이주여성을 둔 가정을 다문화가정이라 칭하며 집중하는 경향이 있을

뿐만 여전히 다문화주의나 다문화 감수성이 깊이 있게 진행된 수준이라 보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본 장에서의 이론적 검토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점검하고 남북한 통합 과정은 물론, 한인 디아스포라까지 포함한 글로벌 코리아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보론의 마지막 박정희 시대의 유산을 복지정치 관점으로 고찰한 장은 저자 말대로 이 책의 전반적인 주제와 다소 어긋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 시기는 근대 국가권력의 틀이 답다운 방식으로 급격하게 만들어지던 시기이자 그로 인해 현재까지도 정부 권력과 자본 권력 간의 관계,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경계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복지 분야에서 국가가 담당해야 할 영역을 가족에게 전가하거나, 노동자보다는 고용주 위주의 보험과 보상이 당연하게 여겨지도록 한 근본을 제공한 시기이기에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나 정체성까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자는 “한국 복지정치의 역사를 살펴볼 때 우리는 여전히 ‘박정희가 만든 집’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367쪽)”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평화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노동이주사

이상의 요약을 들여다보면, 저자의 시선은 우리 사회에서 어찌면 가장 소외된 사람들의 변방을 주시하면서도 동시에 그들의 눈높이에서 다시 한번 제도와 정책의 성격들을 성찰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저자는 ‘이주평화학’의 관점이라는 표현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저자가 지향하는 이주평화학이 무엇인지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빠져있지 않나 하는 것이다.

요한 갈통이 제안한 폭력의 종류 중 구조적 폭력 문제를 분석틀로 삼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주평화학의 실체는 무엇인지 정리되지 않는 느낌이다. 구조적 폭력이라는 개념 역시 환원론적으로 사용하기보

다는 유사한 구조적 폭력을 보이는 다른 사회나 집단과의 비교적 관점에서 한국 사회 또는 개별 사례들이 유난히 비평화적인 이유를 분석해 들어가야 폭력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 것이며, 그를 통해 해결책을 향한 공동의 노력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그렇기에 이 책은 향후 저자가 펼쳐갈 이주평화학의 지평을 궁금하게 만드는 디딤돌로 읽힐 수 있다. 그것은 곧 독자들에게 평화의 관점으로 초국적 이주-난민들의 인권, 정체성, 그들과의 사회통합을 고민하자고 제안하는 토론의 출발을 의미한다. 앞으로 이주학 학계에서 비판적 역사학은 물론, 인류학과 공공사회학 등의 학제 간 연구를 통해 이주평화학의 범주가 확장되길 기대해 본다.

『도시연구』 회보

- | 『도시연구』 발간연혁
- | 『도시연구』 편집위원회 활동
- | 『도시연구』 학술행사 보고

『도시연구』발간연혁

발행일	통권	내용	비고
2007. 10. 15.	제1호	• 기획논단: 인천 경제 자유 구역(『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개발방향』외 3편) • 지역연구: 「버스-도시철도 간 물리적 환승 환경 평가 연구」외 2편	『인천연구』제호 발행
2008. 10. 15.	제2호	• 기획논단: 인천의 도시재생(『도시재생사업과 산업기능 확보방안』외 2편) • 지역연구: 「소비자의 아파트 구매결정요인과 마케팅 전략」외 1편	
2009. 10. 15.	제3호	• 기획논단: 국가경쟁력과 도시브랜드(『국가브랜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한국의 도시브랜드 전략 방향』외 3편) • 지역연구: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의 정태적·동태적 경영효율성 평가」외 3편	
2010. 10. 15.	제4호	• 기획논단: 인천의 공간구조와 위상(『수도권의 공간구조 진단과 경인발전축의 정책방향 모색』외 3편) • 지역연구: 「주거이동과 화물통행 패턴으로 본 인천의 공간구조」외 2편	
2011. 10. 15.	제5호	• 기획논단: 인천광역시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복지 전략(『보편적 복지 논쟁의 맥락과 쟁점』외 3편) • 지역연구: 「도시림 보전관리를 위한 생태평가 방법의 적용」외 1편	
2012. 9. 30.	제6호	• 기획논단: 도시재개발의 패러다임 전환(『인천시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체계에 관한 연구』외 2편) • 일반연구: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의 비대칭성 검증」1편	
2013. 9. 30.	제7호	• 기획논단: 해양도시와 해양문화(『인천의 해양도시적 성격과 해양역사상 - 고대를 중심으로』외 1편) • 일반논문: 「인천시 육지지역 상록활엽수 식재현황 및 도입가능성」외 2편	

2014. 9. 30.	제8호	• 기획논단: Ⅰ. 원도심 재생 Ⅱ. 해양 항만 인프라 확충(『미국 보스턴 도시재생정책사례 및 시사점』 외 3편) • 일반논문: 「새주소 지도를 이용한 인천 도시공원의 입지적정성 평가」 외 2편	• 『IDI 도시연구』 제호변경
2015. 9. 30.	제9호	• 기획논단: 지역자산의 가치와 미래(『가상가치평가법(CVM)을 이용한 한남정맥의 환경적 가치 추정연구』 외 1편) • 일반논문: 「인천지역의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분해」 외 4편	
2016. 9. 30.	제10호	• 기획논단: 도시와 가치 1 - 섬과 해양의 가치화 방안(『인천 섬 갯벌에 대한 생태적 가치화 방안과 적용』 외 1편) • 일반논문: 「주거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한 인천광역시 주거환경만족도 영향요인 규명」 외 6편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선정(8월 2일) • ISSN 변경
2017. 6. 30.	제11호	• 기획논단: 도시와 가치 2 - 문화, 인물, 예술(『인천 뷰티 라이프스타일 산업 육성 방안』 외 1편) • 일반논문: 「인천시 성별 임금격차의 변화요인」 외 6편	
2017. 12.30.	제12호	• 기획논단: 생활문화 활성화(『지역에 밀착한 문화예술교육 정책』 외 1편) • 일반논문: 「지방행정서비스와 개인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외 6편	
2018. 6.30.	제13호	• 기획논단: 인구구조변화와 도시(『청년 주거 운영방식에 따른 유형별 사례연구』 외 1편) • 일반논문: 「인천시 안전한 도로환경조성을 위한 정책제언」 외 6편	
2018.12. 30.	제14호	• 기획논단: 기후변화와 도시(『정책통합 관점에서 본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정책 변화 연구』 외 4편) • 일반논문: 「동서독 지자체의 교류경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외 3편	

2019. 6. 30.	제15호	• 기획논단: 사회혁신과 시민참여(『사회 혁신과 마을』 외 2편) • 일반논문: 「지방의원의 정치적 요인이 지역구 예산 배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외 5편	
2019.12. 30.	제16호	• 기획논단: 평화교류시대와 도시정책 (『인천 서해 공간의 평화적 재구성에 관한 연구』 외 3편) • 일반논문: 「중국의 도시규모와 행복지수의 비교」 외 1편	
2020.6.30.	제17호	• 기획논단: 4차산업혁명과 스마트시티 (『4차 산업혁명 시대 드론산업 정책의 제도화와 대안전략』 외 2편) • 일반논문: 「갈등의 공간적 전이와 다중 스케일적 연구」 외 5편	
2020.12.30.	제18호	• 기획논단: 여성과 도시(『코로나-19(COVID-19) 이후 한부모가족의 주거 스트레스 유형별 특성과 지원 방향 모색』 외 1편) • 일반논문: 「공원 기반 포용적 근린재생사업의 경제적 가치 추정」 외 6편	•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선정 (11월 2일)
2021.6.30.	제19호	• 기획논단: 팬데믹과 도시 I (『복합적 차별과 코로나19 감염위험』 외 2편) • 일반논문: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외 4편)	• 『도시연구』 제호변경
2021.12.30.	제20호	• 기획논단: 팬데믹과 도시 II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자원순환 정책분석 연구』 외 1편) • 일반논문: 「테헤란로 오피스빌딩 입면 유형에 따른 전기에너지사용량 특성」 외 7편	
2022.6.30.	제21호	• 기획논단: 이주민의 도시(『국제 이주자 경제 활동의 관계적 스케일』 외 1편) • 일반논문: 「마포·용산·성동(마용성) 현상의 이해」 외 6편	
2022.12.30.	제22호	• 기획논단: 초고령사회와 도시(예정)	

『도시연구』 편집위원회 활동

2022. 1. 1. ~ 2022. 6. 30.

회차	일시	안건 및 결정사항
제1차	2022.1.17.(월)	• <제5회 도시연구 발표논문 공모전: 이주민의 도시> 발표자 선정 심의
제2차	2022.2.17.(목) 10:00~12:00	• 신임 편집위원장 임명 및 신규 편집위원 위촉 • 2022년 상반기 학술행사 개최 논의 • 「연구윤리」 규정 개정 • 「심사」 규정 개정 • 2022년 하반기호(통권 제22호) 기획논단 주제선정 • 2022년 상반기호(통권 제21호) 서평도서 및 필진 추천
제3차	2022.6.17.(금) ~ 6.20.(월)	• 통권 제21호 기획논단/일반논문 게재편수 및 게재논문 확정

『도시연구』학술행사 보고

2022. 1. 1. ~ 2022. 6. 30.

회차	행사내용
제5회 도시연구 공모논문 발표회	[제5회 도시연구 공모논문 발표회] - 일 시: 2022년 4월 8일(금) 10:00~12:00 [온라인 화상회의/생중계] - 주 제: “이주민의 도시” - 사 회: 서봉만(인천연구원 도시정보센터장) - 인사말씀: 이왕기(학술지 도시연구 편집위원장) ■ 주제발표 1: “국제 이주자와 기업의 스케일 확장과 교차: 다단계 판매업에 참여하는 중국계 이주자를 중심으로” • 발표: 박준영(서울대학교 지리학과 박사과정) • 토론: 이성호(경상국립대학교 지리교육과 조교수) ■ 주제발표 2: “이주노동자의 시공간적 주거경로에 따른 주택품질의 변화: Housing Pathway적 접근 • 발표: 남수연(성결대학교 국제개발협력학과 조교수) • 토론: 김호기(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부연구위원) ■ 주제발표 3: 법적 구성원을 넘어 완전한 구성원으로: 귀화 이주민의 문화적응과 계층상승 기대감에 대한 연구 • 발표: 장주영(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실 부연구위원) - 김수경(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 김희주(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제22회 도시연구세미나	[제22회 도시연구세미나] 이주민 도시의 문화와 제도 - 일 시: 2022년 4월 8일(금) 14:00~18:00 [온라인 화상회의/생중계] - 주 제: “이주민 도시의 문화와 제도” - 사 회: 이용갑(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선임연구위원) - 인사말씀: 이용식(인천연구원장)

회차	행사내용
제22회 도시연구세미나	■ 주제발표 1: “결혼이주여성 공동체의 상호문화 실천과 임파워먼트에 관한 연구” • 발표: 김기화(인하대학교 아동복지학 박사) • 토론: 허오영숙(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 주제발표 2: “난민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 발표: 정동재(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재난안전연구실 연구위원) • 토론: 최 유(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사업본부 연구위원) ■ 주제발표 3: “지방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개편방향 연구” • 발표: 유민이(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실 부연구위원) • 토론: 설동훈(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도시연구』 규정

| 『도시연구』 편집 및 발간 규정

| 『도시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 『도시연구』 논문심사 규정

| 『도시연구』 연구윤리 규정

『도시연구』 편집 및 발간 규정

2007년	3월	12일	제정
2008년	4월	25일	개정
2008년	8월	20일	개정
2011년	5월	6일	개정
2012년	4월	17일	개정
2012년	12월	17일	개정
2013년	9월	16일	개정
2014년	4월	4일	개정
2016년	6월	10일	개정
2017년	2월	16일	개정
2017년	7월	20일	개정
2021년	3월	2일	개정

I. 『도시연구』의 성격과 구성

1. 인천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명칭은 『도시연구』라 칭한다.
2. 『도시연구』는 연구원이 발간하는 정기간행물로서,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논문은 창의적인 연구 결과 및 일정한 주제에 관한 연구성과·동향·전망을 학술논문의 형식에 따라 기술한 것을 말한다.
3.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도시연구』의 편집·발간에 관한 사항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II. 논문투고 및 게재절차

1. 원고는 상시접수하며, 접수 일자(원고가 본지 편집위원회에 도착한 날)로 한다.
2. 논문은 온라인투고시스템을 이용하여 투고한다.
3. 투고자는 온라인투고시스템 상의 투고신청서에 논문제목, 목차, 주

저자의 이름, 소속 및 직급/직위, 주민등록상의 주소, 연락처와 함께, 원고의 주요 내용을 기재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또한, 논문 뒤에는 참고문헌과 국문초록 및 영문초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4. 교신저자(해당 원고 관련 문의에 응할 수 있는 공동저자)가 별도로 있다면, 교신저자의 이름, 교신저자의 소속 및 직급/직위, 주민등록상의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주저자와 공동저자를 반드시 구분하여 명시한다.
5. 접수된 원고 중 본지 투고 규정 및 원고작성 방법에 의거해 작성하지 않은 원고는 본지 편집위원회에서 저자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투고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 『도시연구』 게재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인천연구원에 귀속된다. 단 필자의 사용권은 허락한다.

Ⅲ. 논문의 기본요건

1. 투고자는 『도시연구』의 논문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된 원고 파일, 논문투고신청서, 문헌 유사도 검사결과 확인서, 연구 윤리 규정 준수 서약서, 저작권 이용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논문투고 신청서에는 논문제목(한글·영문), 필자명(한글·영문), 소속기관과 직위(한글·영문), 주소(주택 및 직장), 전화번호(E-메일 주소 포함) 등을 빠짐없이 기재하였는지 확인한다.
2. 투고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출간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접수된 원고는 연구원의 소정의 심사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3.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연구부정행위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를 말한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는 연구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은 다음의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 (1)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 표시 없이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2)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3)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4)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4) 부당한 저자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1)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2)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3)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논문의 내용은 제목(한글), 저자명(한글), 차례, 본문, 참고문헌, 국문초록, 주제어, 영문초록(Abstract), 영문주제어(Keywords) 등의 순으로 구성된다.
5. 주제어는 5개 이내로 한정한다.
6. 논문은 본문, 각주, 참고문헌, 부록(필요시)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 지 150매 이내로 한다.
7. 도시리포트 및 서평의 원고분량은 글, 그림 및 표, 사진을 포함해 200자 원고지 70매 이내로 한정한다.
8. 원고 분량이 본 규정보다 지나치게 초과 또는 미달하는 경우에는 본 지 편집위원회가 저자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9. 초록 및 주제어는 모두 국문과 외국어(영어)로 표기해야 하며, 국문 초록은 200자 원고지 3매, 영문초록은 200단어 이내로 작성해야 한다.
10. 모든 원고는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아래의 편집체제를 따라 작성해야 한다.

편집 용지	• 용지 B5, 단면, 좁게 • 머리말 15, 꼬리말 15, 제본 0		• 여백 : 상/하 15, 좌/우 20
문단 모양	• 여백 : 좌/우 0, 상/하 0 • 들여쓰기 : 2		• 줄간격 : 160 • 양쪽 혼합, 낱말간격 0
글자 모양	장 제목	• 글꼴 : 휴먼명조(또는 신명조), 진하게 • 크기 : 14.5 point	• 장평 : 95, 자간 : -5
	절제목	• 글꼴 : 휴먼명조(또는 신명조), 진하게 • 크기 : 13.5 point	• 장평 : 95, 자간 : -5
	본문	• 글꼴 : 휴먼명조(또는 신명조) • 크기 : 10.5 point	• 장평 : 95, 자간 : -5
	직접인용	• 글꼴 : 휴먼명조(또는 신명조) • 크기 : 9 point	• 장평 : 100, 자간 : 0
	기타	• 각주크기 : 9.5 point • 논문제목 : 18.5 point	• 목차크기 : 10 point • 논문부제 : 14.5 point

IV. 논문 구성요소별 작성요령

1. 저자표기 및 저자약력작성

- 1) 국문제목 밑에 국문저자명을 기재한다.
- 2) 저자가 1인일 경우, 국문저자명의 오른쪽 위에 *를 입력하고, 각 주에 소속 및 직급/직위를 표기한다. 저자가 복수일 경우, 주저자가 맨 앞에 오도록 하고 저자와 저자 사이에 가운뎃점(.)을 넣어 구분한다(주저자, 공동저자, 교신저자 등 기입 가능)
- 3) 저자의 약력에는 저자의 현재 소속과 부서(또는 학과), 직위(또는 직급)를 순서대로 작성하고, 교신저자의 이메일 주소를 기재해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1) 1인 저자

*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E-mail: paper@ii.re.kr)

(2) 2인 이상 저자(주저자와 교신저자가 같은 경우)

*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교신저자(E-mail: paper@ii.re.kr)

**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연구위원

(3) 2인 이상 저자(주저자와 교신저자가 다른 경우)

*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연구위원

**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연구위원, 교신저자(E-mail: paper@ii.re.kr)

2. 내용목차의 번호는 I. 1. 1) (1) ①의 순서를 따라야 한다.

3. 표와 그림에는 [표 1], [그림 1] 등과 같이 일련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표 제목은 해당 표의 상단 중앙에 맞추기로, 그림 제목은 해당 그림 하단에 중앙 맞추기로 표기해야 한다. 표와 그림에 있는 글자와 숫자는 선명해야 하며, 흑백으로 작성해야 한다.

4. 본문의 인용문헌과 각주,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1) 인용문헌

- (1) 본문의 인용문헌은 저자의 이름, 출판년도, 인용한 쪽을 적어 표시한다. 국문저자명은 성과 이름을 모두 밝히고, 영문저자명은 성만 표기하며, 중국과 일본 등 한자 표기 저자명은 국문저자명의 표기 방법에 준한다.
- (2) 같은 문헌을 다시 언급하는 경우에도 처음과 같은 요령으로 처리하며, 혼란을 주는 “같은 글”, “같은 책”, “앞의 글”, “앞의 책” 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 (3) 한 번에 여러 문헌을 언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 괄호 안에서 세미콜론(;)으로 나누어 언급한다.
- (4) 신문, 주간지, 월간지 등의 무기명 기사를 언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명, 발행 年年/月月/日日(월간지의 경우 발행 年年/月月), 쪽수를 괄호 안에 넣어 표기한다.
- (5) 표기 예는 다음과 같다.
 - ① 단독연구 : 손정목(2007)에 따르면 …, Smith(1992, 94)는 …, 이들의 연구(김용창 1997; 송도영 2009, 96)는 …, …라고 보고 있다(윤호영 2001; 조한혜정 2011).
 - ② 2인연구: 서현진·민병일(2001)에 의하면 …, Abrams and Jajodia(1992)는 …, …라고 주장하고 있다(Gilbert and Gubar 1978, 1-25; Murphy 1988, 39-52).
 - ③ 3인 이상 연구 : 김만중 외(2001)는 …, Avram et al.(2009)는 …, 라고 지적한 바 있다(Farmwinkle et al. 1985, 233).
 - ④ 신문, 주간지, 월간지 등: …(동아일보 2017/2/15). …(월간경향 2009/2, 233)

2) 각주

- (1) 본문 중에 부연설명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의 마지막 글자 오른쪽 어깨에 일련번호(예: 1), 2), 3), …)를 붙이고, 해당 페이지 하단에 각주로 처리한다.
- (2) 각주에는 가능한 한 인용자료의 출처를 기재하지 않는다. 자료 출처는 본문에 인용표시를 한 뒤 참고문헌에 기재해야 한다. 본문에 인용표시를 하기 힘들 경우 각주에 출처를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인용자료를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야 한다.

3) 참고문헌

- (1) 국문 참고문헌을 가나다순으로 먼저 열거한 후 동양문헌을 기재한다. 그다음 서양문헌을 알파벳순으로 나열한 후, 신문기사, 인터넷 웹 검색자료를 기재한다.
- (2) 단행본의 경우 저자, 출판연도, 서명, 페이지(필요한 경우), 출판사의 순으로 기록하고, 국문 및 동양문헌의 서명에는 겹낫표(『』), 서양문헌은 이탤릭체로 표시한다. 국문 보고서 및 학술지 논문의 경우에는 논문 제목에 홑낫표(「」)를 표기한다.
- (3) 동일한 저자의 문헌은 연대순으로 나열하고, 동일한 연도의 문헌이 2개 이상 있을 경우에는 순서(가나다 또는 알파벳 순)에 따라 연대 뒤에 a, b, c …를 기입한다.
- (4) 서양문헌의 저자는 성, 이름순으로 표기한다.
- (5) 저자가 복수일 경우 모든 저자를 다 밝힌다.
- (6) 인터넷 검색 자료는 제작자, 제작연도, 주제명, 웹 주소와 검색일자 순으로 기재한다. 웹에 공개되어있는 전자책은 서명 옆에 “[eBook]”을 표기한다.
- (7) 표기 예는 다음과 같다.

① 국문 단행본 및 보고서, 논문

김석철. 2011. 『건축과 도시의 인문학』. 서울: 돌베개.

홍익표·진시원. 2015. 『세계화 시대의 정치학』. 서울: 오름.

조영무·최용환·이준호. 2017. 「경기도 주요공항 주변지역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연구」. 경기연구원.

인천광역시. 2016. 「인천 미래 성장동력 8대 전략산업 육성방안」.

김미향. 2006. 「자아탄력성 증진 훈련이 중학생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강옥련·허철수. 2011. 「청소년기 부모의 자녀교육과 갈등 척도 모형 연구」. 상담학연구 12(6): 2007-2028.

② 영문 단행본

Bell, Daniel. 1973.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A Venture in Social Forecasting*. New York: Basic Books.

Berelson, Bernard R., Paul F. Lazarsfeld, and William McPhee. 1954. *Voti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③ 영문 논문

Jilberto, Alex E. Fernandez. 1991. "Military Bureaucracy, Political Opposition, and Democratic Transition." *Latin American Perspectives* 18(1): 32-65.

Partz, M., Mentro, J. P., Lauter, P., Scarcelli, T. A., Alexandrowicz, M. P., Banshi, P. P., ...Sauls, C. E. 2008. "A qualitative study of modern Native American dance." *Journal of Dance Methodology* 12(3): 12-21.

④ 번역서

베버, 막스(Weber, Max). 1990. 『유교와 도교』. 이상을 역. 문예출판사.

클레그·히긴스·스파이비(Clegg, Stewart R., Winton Higgins, and Tony Spybey). 1994. "경제문화: 포스트 유교주의와 사회민주주의." 공유식·김혁래·박길성·유홍준 편, 『신경제사회와의 이해』. 역사비평사. 195-210.

Weber, Max. 1951(1920). *The Religion of China*, translated by Hans H. Gerth. New York: Free Press.

⑤ 신문기사, 주간지, 월간지 등

이은상. "여성의 사표 신사임당." 동아일보. 1993.7.17: 5면.

안병만. "지자체,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과 시련." 월간중앙. 1991(8): 11-18.

⑥ 인터넷 웹 검색자료

"내향 재개발 지지부진 '상상플랫폼' 우선추진." 경인일보. 2016.10.31.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device=pc&key=20161030010009866>(검색일: 2017년 7월 20일)

- 오동근. 1996. “한국 도시정책의 미래.” <http://www.idi.re.kr/researchRPT/list.do?tab=7>(검색일: 1998년 10월 20일)
- “연속간행물 내용목차 서비스.” <http://www.oclc.org/oclc/promo/512alrt/7512alrt.htm>(검색일: 2003년 2월 10일)
- 김영범·신동호. 2001. 『북한 문예론』[eBook]. 서울: 톨스토이. <http://www.tolstoe.com/newebook/mall/ebook-detailview.asp?contentsID=154>(검색일: 2001년 11월 8일)
- Philip B. Kurland and Ralph Lerner, eds. 1987. *The Founders' Constitu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http://press-pubs.uchicago.edu/founders/>(accessed February 28, 2010)
- Kirsi Peltonen, Noora Ellonen, Helmer B. Larsen, and Karin Helweg-Larsen. 2010. “Parental Violence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European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19(11): 813-822. doi: 10.1007/s00787-010-0130-8

5. 초록 작성법

- 1) 국문초록의 경우 국문제목-국문저자명-국문요약본-국문주제어 순으로 작성한다.
- 2) 영문초록의 경우 영문제목-영문저자명(성, 이름)-영문요약본-영문주제어 순으로 작성한다.

6. 사사표기 방법

- 1) 사사(謝辭) 표기 및 연구비 출처는 논문 첫 페이지 제목 각주에 필자의 소속과 직위에 앞서 기재한다.
- 2) 논문의 투고접수일과 심사수정일, 게재확정일은 논문 첫 장 각주에 편집위원회에서 기재한다.

V. 기타사항

1. 본문 속에서 약어를 사용하고자 할 때 해당 용어를 처음 사용할 땐 풀어쓰고 그다음부터는 약어를 사용해도 된다.

예) 유럽통화제도(EMS: European Monetary System)는 1979년 3월 창설되었다. EMS는 현재 유럽공동체의 ...

2. 필자 자신의 논문이나 저술을 지칭할 때 ‘줄고’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필자의 이름을 적어 밝혀야 한다.

3. 국문 원고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1) 한자는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먼저 한글을 쓰고 괄호 속에 한자를 부기한다.

예) 지체주의(肢體主義)

- 2) 외래어는 학계에서 통용되는 번역어를 사용하되, 존재하지 않는 경우 첫 번에 한하여 한글 번역어를 적고 괄호 안에 외래 용어를 부기한다.

예) 조합주의(corporatism)

- 3) 외국 인명은 교육부의 외래어 표기법 기준에 따라 현지 발음대로 표기하며 첫 번에 한하여 한글 표기에 이어 괄호 속에 원어명을 부기한다.

예) 마오쩌둥(毛澤東), 세보르스키(Adam Przeworski)...

- 4) 외국 지명은 교육부의 외래어 표기법 기준에 따라 현지 발음대로 표기한다. 단, 혼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 첫 번에 한하여 한글 표기에 이어 괄호 속에 원어명을 부기한다. 필요 시 간략한 설명을 추가할 수 있다.

예) 뉴욕, 치앙마이, 타간로크(Tagánrog, 러시아 남서부의 로스토프 주에 위치한 도시)

VI. 발간

1. 원고교정

- 1) 편집위원회는 오타자, 비문(非文), 논리 전개의 오류 등을 교정하거나,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게재 논문 및 순서 결정

- 1) 투고논문의 심사가 모두 종료된 후,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 등급에 따라 해당 호에 게재할 논문을 확정한다.
- 2) 기획논문과 일반논문의 게재편수는 연간발간계획에 의거하며, 기획주제에 부합하는 일반논문을 기획논문으로 조정할 수 있다.
- 3) 발간계획의 게재편수를 초과할 경우, “게재”로 판정받았더라도, 논문 게재를 보류할 수 있으며, 보류된 논문은 저자와 협의하여 다음 호에 게재할 수 있다.

3. 원고료 지급

- 1) 채택된 논문에 한해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단, 원고료는 실제 게재된 후에 지급하고, 게재 당시의 연구원 일반 예산-학술지 발간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원내 연구진이 투고하여 게재가 확정된 경우, 원고료의 50%를 지급한다.

4. 발행 횟수와 시기

- 1) 본지는 1년에 2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지 편집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2) 발행일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0일로 정한다.

5. 저작권

- 1) 『도시연구』 게재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연구원에 귀속된다. 단 필자의 사용권은 허락한다.

6. 발행 부수

- 1) 본지의 발행부수와 인쇄의 질 등은 연구원에서 정한다.

『도시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2007년	7월	15일	제정
2010년	5월	20일	개정
2012년	4월	17일	개정
2012년	12월	17일	개정
2013년	9월	16일	개정
2014년	4월	4일	개정
2016년	6월	10일	개정
2017년	2월	16일	개정
2017년	7월	20일	개정
2018년	2월	1일	개정
2019년	2월	15일	개정
2020년	2월	7일	개정
2021년	3월	2일	개정

I. 구성

1. 편집위원회는 연구원 내·외 인사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도시연구 분야의 국제교류 협력 강화를 위해 약간 명의 해외편집위원을 둘 수 있다. 편집위원회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학술간사와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II. 임무

1.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에 게재할 원고의 모집과 편집, 발간 등 『도시연구』의 발행에 관한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2. 또한 『도시연구』의 편집 및 발간 규정, 편집위원회 회칙 등 『도시연구』의 발간에 필요한 제반 규정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III. 편집위원장, 편집위원의 선출기준

1. 편집위원장은 인천연구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인천연구원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편집위원의 구성은 특정 지역 및 전공분야에 편중되지 않아야 한다.
4. 학술간사는 편집위원회의 추천으로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IV. 편집위원장 및 위원, 간사의 역할

1.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의 모집, 논문의 심사의뢰와 공정한 심사, 발간 등 『도시연구』의 편집과 발간에 따르는 제반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2. 편집위원은 투고논문의 심사자 추천 및 의뢰, 투고자와 심사자 간의 의견중재, 심사결과에 대한 심의, 원고수정의뢰 및 원고 수정보완 여부 확인, 최종게재논문의 선정, 게재순서의 결정, 본지의 발행부수의 결정, 원고 게재료 및 심사료 수준 결정 등의 권한을 가진다.
3. 편집위원회의 구성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투고자의 개인적 정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된다.
4. 학술간사는 기획논단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한 공모전, 학술행사 등의 주제를 기획하고, 해당 분야 필진 추천 및 섭외를 담당하며,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의 준비 및 회의록 작성, 투고원고 접수, 편집위원장이 최종 승인한 심사결과와 통보, 『도시연구』의 출간·배포, 원고 게재료 및 심사료 지급서류 작성 등 『도시연구』발간에 따른 제반 회계 및 행정실무를 담당한다.

V. 편집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1. 위원장과 위원, 학술간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통해 편집위원을 추천받은 후 원장의 승인

을 얻어 편집위원을 추가 위촉할 수 있다. 단 임기는 잔여임기에 한해 편집위원으로 활동한다.

3. 위원장의 부재가 생긴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 위원장을 선출하며, 원장의 허락을 통해 위원장의 역할을 대신한다. 단 임기는 잔여임기에 한해 편집위원장으로 활동한다.

VI. 편집위원회 회의

1. 편집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2회 분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2. 편집위원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이 되고, 위원장의 결석시에는 출석위원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해 회의를 진행한다.
3. 편집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위임 포함)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4. 해외 거주 편집위원은 회의 참석이 어려우므로 개의를 위한 정족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온라인으로 회의를 진행할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한다.

VII. 회의비 지급

1. 편집위원회에 회의에 참석하거나 서면의견서를 제출한 외부 위원(인천연구원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소정의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도시연구』 논문심사 규정

2008년	9월	10일	제정
2011년	5월	6일	개정
2012년	4월	17일	개정
2012년	12월	17일	개정
2013년	9월	16일	개정
2014년	4월	4일	개정
2016년	6월	10일	개정
2017년	2월	16일	개정
2017년	7월	20일	개정
2017년	12월	4일	개정
2018년	11월	15일	개정
2020년	2월	7일	개정
2021년	3월	2일	개정
2021년	8월	4일	개정
2022년	2월	17일	개정

I. 심사대상

1. 『도시연구』에 게재하고자 하는 모든 논문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2. 도시리포트 및 서평과 같은 비논문 원고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한다.

II. 심사절차

1. 1차 심사: 투고된 논문은 해당 분야의 전공 심사위원 3인을 위촉하여 심사한다. 단 편집위원회에서 적합성 검토를 하여 투고된 논문이 부적합하다고 판정하면 1차 심사 전에 반려할 수 있다.
2. 재심사: 1차 심사 결과 재심사가 필요한 경우 1차 심사위원이 저자의 원고 수정본을 재심사한다.
3. 논문심사자는 심사의뢰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심사 총평과 함께

심사 결과(A, B, C, D)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정·보완 요구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심사위원의 실명을 삭제한 후 ‘논문심사 결과 통보 및 수정요구서’를 즉시 투고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5. 논문심사 종합판정 결과가 ‘수정 후 재심사’인 경우 투고자는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90일 이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논문투고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수정논문을 9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그 사유의 합당성을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추후 수정논문의 제출이 허용될 수 있다.
6. 심사위원 평가 결과가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되었을 경우, 필자가 수정한 논문에 대하여 재심사한다.
7. 재심사의 경우, 동일한 심사 절차 과정에 의해 심사를 진행한다. 단, 심사판정이 심하게 엇갈리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심사위원을 새로 위촉하여 재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8. 심사 결과에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장은 제출된 이의 내용 검토를 위해 편집위원회를 소집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편집위원 전원이 해당 논문을 재심사하여 다수결에 따라 재심 여부를 의결한다. 출석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원래 심사 결과를 적용한다.

III. 심사위원 선정

1. 편집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전공자 중에서 심사하려는 논문과의 전공 일치도 및 연구업적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을 선정, 위촉한다.
2. 편집위원장이나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 당해 투고논문의

심사위원 선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분야의 심사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장이나 편집위원이 투고한 논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편집위원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인천연구원 직원이 투고할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천연구원 직원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4. 심사위원은 3인을 위촉하며, 논문의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각각에 대하여 익명으로 처리한다.
5. 편집위원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경우 전체 논문 심사위원의 30% 미만을 유지하도록 한다.
6. 논문을 심사하는 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IV. 논문심사 기준

1. 심사위원은 객관적 기준과 자율적 판단에 의거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하되 본지의 논문심사의견서의 양식에 맞춰 다음의 심사기준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 본지 투고 규정 및 원고작성 방법의 준수 여부
 - 주제의 독창성
 - 연구 방법의 적절성과 연구자료의 신뢰성
 - 논문의 학술적 또는 정책적 기여도
 -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타 도시, 국가의 연구
 - 논문 및 체제의 일관성
 - 표·그림·사진·지도·참고문헌(각주)의 적절성
 - 선행연구의 검토
 - 국문·영문 초록의 질적 수준
 - 연구윤리 준수의 적절성
2. 심사위원은 학문적 양심에 따라 논문을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

며 논문의 위조, 변조, 표절, 이중게재 등 연구부정행위 및 연구 윤리 규정에 위반된 사항은 즉시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V. 심사위원의 익명성

1.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저자와 심사위원은 공개하지 않는다.
2. 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공개하거나 남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저자와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를 통해서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VI. 논문심사 판정 기준

1. 논문심사의 판정은 1차 심사결과는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 불가’의 4가지로 판정하며, 2차 심사결과는 ‘게재’, ‘게재 불가’의 2가지로 판정한다.

■ 1차 심사

- 1) 게재가(평점 평균 3.3점 이상)
 - 심사위원 3인이 모두 A로 평가한 경우
 - 심사위원 2인이 A로 평가하고, 1인이 B로 평가한 경우
 - 심사위원 2인이 A로 평가하고, 1인이 C로 평가한 경우
 - 심사위원 3인 중 1인이 A로 평가하고, 2인이 B로 평가한 경우
- 2) 수정 후 게재(평점 평균 3.0점)
 - 심사위원 3인 중 2인이 A로 평가하고, 1인이 D로 평가한 경우
 - 심사위원 3인이 각각 A, B, C로 평가한 경우
 - 심사위원 3인이 모두 B로 평가한 경우
- 3) 수정 후 재심사(평점 평균 2.0점 이상 2.7점 이하)
 - 심사위원 3인 중 2명이 B로 평가하고, 1인이 C로 평가한 경우

- 심사위원 3인이 각각 A, B, D로 평가한 경우
 - 심사위원 3인 중 1인이 A로 평가하고, 2인이 C로 평가한 경우
 - 심사위원 3인이 각각 A, C, D로 평가한 경우
 - 심사위원 3인 중 2인이 B로 평가하고, 1인이 D로 평가한 경우
 - 심사위원 3인 중 1인이 B로 평가하고, 2인이 C로 평가한 경우
 - 심사위원 3인이 각각 B, C, D로 평가한 경우
 - 심사위원 3인이 모두 C로 평가한 경우
 - 심사위원 3인 중 1인이 A로 평가하고, 2인이 D로 평가한 경우
- 4) 게재 불가(평점 평균 1.7점 이하)
- 심사위원 3인 중 2인이 C로 평가하고, 1인이 D로 평가한 경우
 - 심사위원 3인 중 1인이 B로 평가하고, 2인이 D로 평가한 경우
 - 심사위원 3인 중 1인이 C로 평가하고, 2인이 D로 평가한 경우
 - 심사위원 3인이 모두 D로 평가한 경우

※ 1차 논문심사 판정 기준표

유형번호	평가 결과			총점	평균	판정	비고
1	A	A	A	12	4.0	게재가	게재확정
2	A	A	B	11	3.7		
3	A	A	C	10	3.3		
4	A	B	B	10	3.3		
5	A	A	D	9	3.0	수정 후 게재	필자가 논문을 수정한 후 편집 위원회에서 이를 확인하고 게재
6	A	B	C	9	3.0		
7	B	B	B	9	3.0		
8	B	B	C	8	2.7	수정 후 재심사	심사위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필 자는 논문을 수정하고, 수정 논 문과 수정 사항 개요를 제출하 여야 하며, 편집위원회에서는 심 사위원 3인에게 재심사를 의뢰 하고 평가결과 평점의 평균 3.0 점 이상이면 편집위원회에서 확 인 후 게재
9	A	B	D	8	2.7		
10	A	C	C	8	2.7		
11	A	C	D	7	2.3		
12	B	B	D	7	2.3		
13	B	C	C	7	2.3		
14	B	C	D	6	2.0		
15	C	C	C	6	2.0		
16	A	D	D	6	2.0	게재 불가	
17	C	C	D	5	1.7		
18	B	D	D	5	1.7		
19	C	D	D	4	1.3		
20	D	D	D	3	1.0		

■ 2차 심사

- 1) 게재가(평점 평균 3.0점 이상)
 - 심사위원 3인이 모두 A로 평가한 경우
 - 심사위원 2인이 A로 평가하고, 1인이 D로 평가한 경우
- 2) 게재불가(평점평균 2.0점 이하)
 - 심사위원 3인 중 1인이 A로 평가하고, 2인이 D로 평가한 경우
 - 심사위원 3인이 모두 D로 평가한 경우

※ 2차 논문심사 판정 기준표

유형번호	평가 결과			총점	평균	판정	비고
1	A	A	A	12	4.0	게재가	
2	A	A	D	9	3.0		
3	A	D	D	6	2.0	게재불가	
4	D	D	D	3	1.0		

VIII. 소요기간

1. 논문심사위원 위촉: 편집위원회는 논문 접수 후 10일 이내로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투고논문이 『도시연구』의 성격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2주 내로 기간을 연장해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2. 1차 심사: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후로부터 2주 이내로 심사 의견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며, 부득이한 경우 편집위원장의 판단하에 3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심사 거절, 심사 지연 등의 이유로 심사위원을 교체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기본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재심사: 심사위원은 재심사를 의뢰받은 후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며, 부득이한 경우 편집위원장의

판단하에 2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심사위원의 연락 두절, 사망 등의 이유로 심사위원을 교체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기본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4. 논문 수정 보완: 1차 심사 결과 ‘게재 불가’를 제외한 수정 보완 요구사항이 있는 논문의 경우 투고자는 수정 보완 의뢰를 받은 후로부터 10일 이내에 수정 보완한 논문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수정 후 게재’ 판정 논문은 수정결과표와 함께 기존 심사자 3인에게 확인 요청을 보내 원고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초과한 경우 ‘게재 불가’로 판정할 수 있다.
5. 논문 수정 확인: 편집위원회는 투고자가 다시 제출한 논문이 수정 보완 요구대로 수정되었는지 확인한다. 1차의 경우 10일 이내에, 2차 이후에는 7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투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검토의견서 작성이 지체될 경우, 투고자에게 일정을 통지하고 연장할 수 있다.

『도시연구』 연구윤리 규정

2009년 4월 15일 제정
2013년 9월 16일 개정
2014년 4월 4일 개정
2017년 7월 20일 개정
2019년 12월 20일 개정
2021년 3월 2일 개정
2022년 2월 17일 개정

I. 연구윤리 규정 제정 배경

제1조(제정 배경)

인천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가 능동적으로 사회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시화에 따른 도시문제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새로운 이론과 접근방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학술지 『도시연구』를 발간한다. 『도시연구』의 발간은 도시정책 관련 연구자들의 최신 연구성과를 소개함으로써 지역 아카데미즘의 기초를 마련하고 인천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또한 『도시연구』 연구윤리 규정의 제정은 수준 높은 학술지의 발간을 위하여 『도시연구』의 편집위원은 물론 연구논문의 저자와 평가자가 전문가로서 지켜야 할 윤리수준을 명백히 밝혀줌으로써 사회 전체에 대한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함이다. 연구윤리 규정의 내용은 이미 관행으로 지켜져 오고 있는 규정들을 정리한 것이지만, 모든 관련자에게 연구논문의 작성과 평가 및 편집에 대하여 연구원이 추구하는 윤리 수준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제2조(제정 및 적용)

이 규정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263호, 2018.7.17.)”을 준용한 것으로 연구원의 학술지에 게재되는 연구성

과물의 연구영역에 맞게 제정되었으며, 제정일로부터 연구원의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성과물과 그 연구자에게 적용된다. 또한, 연구원은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연구업적 관리 등을 할 경우, 관련 연구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

II. 연구논문 윤리규정

제3조(사회적 역할과 책임)

학술연구자로서 책임 있는 연구 및 지적 활동을 하여야 하며, 자연환경의 복원, 창출, 보호 관리 등의 연구활동이 사회 공익적 책임을 수반하여야 한다. 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 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 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10.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제4조(기본 연구윤리)

연구활동에서 정직성, 진실성(integrity)과 정확성이 연구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수사항임을 인식하고 연구의 제안, 계획, 수행과 결과보고 등 모든 연구활동 수행과정에서 이와 같은 기본원칙을 추구한다. 특히, 위조, 변조, 표절 및 중복발표 등과 같은 부정행위를 배격한다.

제5조(보편성의 원칙)

연구자는 어떠한 이유로든 차별받을 수 없으며, 연구의 모든 과정에서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6조(전문가로서의 품위유지)

새로운 지식창출과 기술개발로 인류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전문가로서의 긍지와 품위를 유지한다.

제7조(법령의 준수)

연구 및 지적 활동의 전 과정에서 관계 법령이 정한 규정과 윤리강령에 명시된 규범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을 성실히 준수한다.

제8조(연구대상의 존중)

(자연 환경 연구) 자연환경을 다룰 때에는 자연환경의 복원, 창출, 보호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인류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한다.

(인간 대상 연구)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 중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위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서면 동의서를 받았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기관 윤리위원회(IRB)의 심의 통과를 권장하며, 편집위원회는 필요시 서

면 동의서 및 기관윤리위원회 승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연구 자료의 기록, 보존)

연구과정에서 사용하거나 생성된 데이터, 샘플 등의 자료를 처음 단계에서 최종단계에 이르기까지 성실히 기록하고, 정한 기간 동안 보존한다.

제10조(저자 표시와 지식재산권)

저자 표시는 연구의 아이디어 제시, 설계, 수행, 해석 등 연구에 직접 참여한 자로 제한하고 발표논문에는 연구과정에서 참고·인용한 타인의 연구업적을 밝힘으로써 원저자의 권리와 지식재산권을 존중한다. 표시된 저자는 논문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진다.

제11조(사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

새로운 발견이나 연구 및 지적 활동의 업적을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을 취할 권리가 있으며, 한편 사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

제12조(이해상충에 대한 대처)

연구 및 지적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에 대해서는 이를 미리 공표하고, 연구의 독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구자의 이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한다.

제13조(연구환경 조성)

책임 있는 연구와 지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적 자유, 공정성, 개방성과 상호존중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적극 참여한다.

제14조(윤리 교육의 실시)

연구와 지적 활동의 책임자는 참여자들이 이 윤리규정을 성실히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할 의무가 있다.

제15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연구진실성을 확보할 수 없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칭한다)이다.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나 결과를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
2. 변조: 연구데이터, 실험과정 등을 조작하여 연구내용 및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등을 정당한 승인이나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거나, 연구에 참여한 자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
5. 학문 분야에서 통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행위, 부정행위 조사를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

III. 윤리위원회

제16조(구성)

윤리위원회는 외부위원 2인을 포함해 편집위원 5인으로 구성되며,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임명한다. 구성된 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임명한 위원장 1인을 두며, 윤리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윤리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재적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운영과 권한)

1.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대상 논문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2.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칙 위반보고가 있거나 제보가 있는 경우 보고자, 제보자에게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위반 의혹이 있는 대상자에게 그에 대한 진술 및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윤리위원회는 제보나 보고가 없는 경우에도 윤리규칙 위반의 의혹이 있는 경우 그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 의혹이 있는 대상자 등에게 소명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윤리위원회의 조사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윤리위원장은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제18조(절차)

투고논문이나 간행된 논문에 대하여 위원회 위원 또는 부정행위 제보자(이하 '제보자'라 한다)가 위원장에게 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밝힌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아래의 절차에 따라 해당 논문의 연구 윤리성에 대해 검증하며, 예비조사에서 판정까지 6개월 이내에 절차가 종료되어야 한다.

1. 예비조사: 위원장은 제보를 받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들이 제보문건을 열람하게 하고, 부정행위의 성립 가능성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부정행위의 성립 가능성이 현저한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수렴되면, 아래의 절차를 진행한다.
- 1) 연구윤리 위반이 의심되는 해당 연구자(이하 '해당 연구자'라 한다)에게 제보 내용을 통보하고, 1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

게 한다.

- 2) 해당 연구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면, 위원회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린다.
 - 3) 해당 연구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본조사의 절차를 진행한다.
 - 4)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단, 익명 제보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 5)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본조사: 해당 연구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의 절차에 따라 본조사를 진행한다.
- 1) 외부전문가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위원회’를 소집한다. 단, 위원회 소집 전에 제보자에게 심사위원 명단을 알려서 제보자가 심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해 심사위원을 재위촉한다. 위원회에는 해당 논문과 제보내용,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해당 논문의 연구윤리성에 대한 심사를 의뢰한다.
 - 2)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서가 접수되면, 제보자와 해당 연구자에게 심사의견서를 통보하고 이에 대해 이의 제기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3) 제보자나 해당 연구자가 심사의견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서, 제보자의 이의 제기서류, 해당 연구자의 이의 제기서류를 위원들이 검토하게 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판정을 내린다.
3. 판정: 위원장은 위원회의 판정을 제보자와 해당 연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며, 제보자 또는 해당 연구자는 관정에 불복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를 재소집하여 1회에 한해 직접 재조사하고 최종 판정을 내린다.

제19조(제척)

윤리위원회에 속한 위원이 피조사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위원자격이 일시 상실된다.

제20조(제재조치)

인천연구원 원장은 윤리규칙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재조치를 행할 수 있다.

1. 투고 논문 및 그 저자에 대해서는 그 후 3년간 단독 혹은 공동으로 학술지에 논문 게재를 신청할 수 없으며, 게재 이후 위반판정이 밝혀질 경우 학술지 논문목록에서 공식 삭제한다.
2.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할 경우 그 직을 상실한다.
3. 제재조치의 결과에 대하여는 대상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함과 동시에 인천연구원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21조(비밀보호)

윤리위원회 위원 기타 윤리규칙 위반 여부의 조사·심의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에는 조사의 대상이 된 의혹 내용이나 피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IV. 저자 윤리규정

제22조(표절, 위조, 변조 금지)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 결과를 출처와 함께 인용하거나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된다. 저자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위조), 연구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 또는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변조)하지 말아야 한다.

제23조(연구 업적의 명기)

1.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기여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업적을 인정받으며 그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논문의 순서는 저자의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정해져야 하며 단순히 특정 직책 또는 지위에 있다고 해서 공동저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을 수 없다. 반면, 연구에 충분히 기여했음에도 저자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제24조(연구물의 중복 투고 및 게재 혹은 이중 출판 금지)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투고해서는 아니 되며, 동일한 연구물을 유사 학회 등에 중복하여 투고해서도 아니 된다.

제25조(재투고)

『도시연구』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이나 이와 유사한 논문은 재투고할 수 없다. 다만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기존 논문과의 ‘연구의 방법’, ‘자료의 해석’, ‘논리전개방식’ 등 상당 부문 차별성이 있는 경우에는 재투고를 인정한다.

제26조(인용 및 참고 표시)

1. 저자가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하고,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인적으로 취득한 자료의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공한 자의 동의를 받은 이후라야 인용할 수 있다.
2. 저자가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참고할 경우에는 주석을 통해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어디까지가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디서부터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주장이나 해석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V. 편집위원의 윤리규정

제27조(기본자세)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논문 투고자의 인격과 양심 및 전문성 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8조(형평의 원칙)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의 전공분야, 투고자의 성별·나이·소속기관·출신 등에 대한 어떠한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소성을 배제하여 동등한 시각을 견지하여야 한다.

제29조(심사의뢰)

심사의뢰는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편집위원은 투고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하며, 투고자와 친분이 있거나 혹은 적대적인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심사위원이 선정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0조(비밀유지)

편집위원은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투고된 논문의 내용과 투고자의 인적사항 및 심사위원 등에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VI. 논문심사자 윤리규정

제31조(심사의 객관성)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32조(저자의 독립성 존중)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설명하되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은 하지 않아야 한다.

제33조(중복심사)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서 출판되었거나 또는 중복심사중인 경우 기타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편집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4조(심사비밀 유지)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심사자는 심사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기 전에 심사논문의 내용을 타 연구에 인용해서는 안 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9년 4월 15일 제정되었으며, 이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규정의 효력은 2013년 9월 16일부터 발생한다.
3. 이 개정 규정의 효력은 2014년 4월 4일부터 발생한다.
4. 이 개정 규정의 효력은 2017년 7월 20일부터 발생한다.
5. 이 개정 규정의 효력은 2019년 12월 20일부터 발생한다.
6. 이 개정 규정의 효력은 2021년 3월 2일부터 발생한다.
7. 이 개정 규정의 효력은 2022년 2월 17일부터 발생한다.
8. 이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263호, 2018.7.17.)”에 따른다.

『도시연구』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이왕기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선임연구위원

국내 편집위원

김윤영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정욱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학술간사

김종형 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부 선임연구위원

민혁기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연구위원, 학술간사

박선주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배덕상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서봉만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안내영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연구위원

유해연 숭실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윤혜영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연구위원

이나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소라 한국환경연구원 자원순환연구실 연구위원

정세은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조성윤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최영화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해외 편집위원

이성희 영국 더비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孫春日 중국 연변대학교 인문학원 교수

편집간사

김혜영 인천연구원 연구기획실 전임행정원

통권 제21호 **도시연구** Korean Journal of Urban Studies

발행 2022년 6월 30일

발행인 이용식

발행처 인천연구원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전화 032)260-2775 팩스 032)260-2669

홈페이지 www.ii.re.kr

편집·인쇄 도서출판 다인아트

ISSN 2765-7205
